

자유민주주의 2.0

Prompt: 정보혁명 시대의 새로운 자유민주주의를 제안하라.

목차

Prompt 1: 우주적 법칙, 사랑	8
감정을 넘어 사랑의 개념을 확장하다.....	8
물리학에서의 사랑: 근본적인 상호작용으로서의 매력	9
생물학에서의 사랑: 진화 전략으로서의 협력	10
시스템 관점: 반엔트로피 원리로서의 사랑	11
인공지능 속의 사랑: 이타적 알고리즘과 협력적 AI	12
사회 및 경제 시스템 내의 사랑: 신뢰, 협력 및 지속 가능성	14
결론: 문제 해결과 삶의 궁극적 원칙으로서의 사랑	15
Prompt 2: 자유의 힘	17
혁신의 촉매로서의 자유	17
자유 사회 vs. 권위주의 사회: 비교 분석.....	18
자유 의 역사적, 현대적 영향	20
경험적 증거와 사례 연구	23
이상치와 혼합 모델: 싱가포르와 중국	25
결론: 진보의 핵심 동인으로서의 자유	27
Prompt 3: 시장 경제에서의 신뢰	29
서론	29
경제 이론과 프레임워크: 경쟁, 신뢰, 그리고 상호 이익	29
경험적 데이터 및 사례 연구: 신뢰, 투명성 및 경제적 성과	32
기술적 영향: 블록체인, AI, 디지털 금융이 신뢰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법	36
블록체인: "신뢰 기계"와 급진적 투명성	36
인공지능과 디지털 금융: 데이터 중심의 신뢰	38
철학적 및 윤리적 차원: 경쟁, 신뢰 및 사랑 - 시장 "실패" 재고	40
경쟁 vs. "사랑": 그들은 불화하고 있는가?	41
정보 비대칭: 시장 실패의 진짜 범인	42

결론: 자유민주주의의 2.0 을 향하여 – 시장의 진화와 보다 윤리적인 사회.....	45
Prompt 4: 자유민주주의에서 책임.....	50
민주적 거버넌스의 역사적 진화: 계몽주의에서 디지털 시대까지.....	50
다양한 거버넌스 시스템에서의 신뢰와 책임.....	52
신뢰의 붕괴: 무책임함이 사회적 붕괴로 이어지는 방식	56
투명성, 기술, 그리고 미래: 자유민주주의의 2.0 을 향하여	59
결론	62
Prompt 5: 왜 민주주의인가? 자유와 책임	65
자유와 포괄적 범위: 정치적, 경제적, 개인적	65
이론에서의 자유의 균형: 고전 사상가에서 현대적 도전까지	68
역사 속의 통제되지 않은 자유 vs. 책임 있는 자유: 사례 연구의 교훈	73
21 세기의 법적 및 헌법적 과제	77
책임으로서의 진정한 자유: 자유민주주의의 2.0 을 향하여	81
결론	84
Prompt 6: 삼권분립의 한계.....	86
역사적 기초와 초기 경고.....	87
대통령주의의 위험.....	88
기능 장애 및 불균형에 대한 사례 연구	90
미국: 교착 상태, 양극화, 그리고 행정부의 권력 강화.....	90
한국: 젊은 민주주의의 탄핵과 양극화.....	93
유럽: 분열된 권력과 부상하는 갈등	96
법률 및 헌법적 관점: 현대 현실의 구식 프레임워크	99
권력분립 모델의 주요 제도적 약점.....	103
결론: 18 세기 모델의 한계.....	108
Prompt 7: 시스템 원칙	110
거버넌스를 위한 시스템 원칙 정의.....	110

시스템 원칙	111
시스템 원칙이 필수적인 이유	113
시스템 원칙과 기존 거버넌스 모델 비교	117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위한 기술 통합	120
결론	124
Prompt 8: 법치주의 2.0	127
규칙 기반 법률 시스템을 위한 공식 프레임워크	127
알고리즘 규칙 시행의 역사적 및 현대적 사례	129
성공적인 법률 자동화 사례 연구	132
스마트 계약 및 블록체인 시행	132
온라인 분쟁 해결 시스템	133
블록체인과 분산형 거버넌스	134
순전히 규칙 기반 법적 프레임워크의 과제	136
Prompt 9: 개인 법률 세트(PLS) - 분산된 법률 및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141
개인 법률 세트(PLS) 정의	142
PLS 의 이론적 기초와 실제 구현	144
이론적 기초	145
실제 구현 전략	147
기존 모델과의 비교	153
PLS 대 분산형 자율 조직(DAO)	153
PLS 대 블록체인 기반 거버넌스(온체인 거버넌스)	156
PLS 대 전통적인 법적 구조	158
PLS 가 기존 방식과 다른 점	158
분산 시스템(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등)과의 통합	162
신뢰 인프라로서의 블록체인	162
스마트 계약 및 법률 자동화	163

분산된 ID 및 자격 증명.....	165
다중 분산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	166
분산화된 법인 간 협력 보장.....	168
자발적 표준 및 메타 규칙.....	168
협력에 대한 평판과 인센티브.....	169
갈등 해결 및 중재 네트워크.....	171
AI와 자율 에이전트의 역할.....	173
"질서 있는 혼돈" - 다중심적 체계에서의 새로운 질서.....	173
과제 및 고려 사항.....	175
1. 법적 정당성과 국가 저항.....	175
2. 집행 및 보안.....	177
3. 외부성과 공공재.....	178
4. 복잡성과 접근성.....	180
5. 공정성, 형평성, 권력 불균형.....	182
6. 문화적, 심리적 적응.....	183
7. 기술적 과제.....	185
결론.....	186
Prompt 10: 사회적 이익과 개인의 이익의 일치.....	190
이익 중심의 사회적 재할.....	190
재할을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	190
선순환 설계.....	191
공공 감독 및 고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191
공공 피해를 폭로하는 데 대한 금전적 보상.....	191
시민 감시자 격려.....	192
PLS, AI, 블록체인을 활용한 인센티브 자동화.....	192
자체 실행 인센티브 구조.....	192

첨단 기술 활용	193
결론	194
Prompt 11: 위험 기반 보험 가격 책정 및 개인 법률 세트(PLS)	195
갈등 해결 메커니즘으로서의 보험	196
시스템의 법적 실체로서의 AI	197
사례 연구 및 실제 세계 응용 프로그램	199
보험 가격 책정을 통한 시장 주도적 도덕성	201
결론	203
Prompt 12: 명예와 유산을 위한 자선 활동	205
사례 연구: 명예와 유산을 위해 기부하는 부유한 개인들	205
부의 순환과 권력 분산에 미치는 영향	207
명예를 동기로 삼다: 명예를 위해 부를 쓰려는 의지	210
자유민주주의의 2.0 에서 명예 중심의 자선 활동 활용	212
결론	216
Prompt 13: 행정 LLC, 공공 프로젝트에 대한 분산화된 접근 방식	218
행정 LLC 의 범위: 로컬 및 글로벌 프로젝트	218
경제 및 재정 구조	220
운영 및 법적 프레임워크	222
역사적 및 이론적 배경	225
결론	229
Prompt 14: 자유민주주의의 2.0 단계별 로드맵	231
1 단계: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과 퀘스트 시스템 시범 도입	231
2 단계: 개인법률세트(PLS)를 통한 법치 2.0 기반 구축	231
3 단계: 민간 행정 LLC 설립 및 운영	233
4 단계: 이용자 확대 및 입법부를 통한 법제 개혁	234
5 단계: 권위주의 국가로의 장기적 적용 및 글로벌 확산	236

6 단계: 주요 도전 과제 및 극복 방안	238
Prompt 15: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242
대의민주주의의 역사적 필요성과 한계	242
시대의 변화: 직접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	243
국민주권의 헌법적 당위성과 재발견	244
자유민주주의 2.0: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비전과 목표	244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실천하는 전략: 점진적이고 현실적인 접근	245
새로운 민주 공화국을 향하여: 사고의 전환을 촉구하며	246

Prompt 1: 우주적 법칙, 사랑

감정을 넘어 사랑의 개념을 확장하다

기본 법칙으로서의 사랑: 전통적으로 사랑은 애정이나 신성한 자선의 감정에 국한된 개인적 감정이나 신학적 미덕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학제간 관점은 이러한 영역을 넘어 사랑의 개념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이 관점에서 "사랑"은 단순한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복잡한 시스템에서 응집력과 질서를 뒷받침하는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원리로 정의됩니다. 피에르 테야르 드 샤르댕이 유명하게 표현했듯이 "사랑은 세상의 요소들을 연결하고 끌어당기는 친화력입니다... 사실 사랑은 보편적 합성의 대리인입니다." 크리스토테네시스.org. 다시 말해, 사랑은 이질적인 부분을 의미 있는 전체로 가져오는 결속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은 사랑을 자연의 근본 법칙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물리적, 생물학적, 사회적 영역에서 작동하는 원칙과 유사합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매력, 협력, 창조적 시너지라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이 우주의 복잡성과 통합을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시사합니다.

감정적이고 종교적 정의를 넘어서: 이런 식으로 사랑을 재정의함으로써 우리는 감정적 애정이나 종교적 의무의 제한된 범위를 넘어선다. 대신, 사랑은 통일과 협력을 향한 보편적인 경향으로 개념화된다. 즉, 사랑은 사람이 느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자를 분자로, 세포를 유기체로, 사람을 사회로 묶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사랑을 우주적 원리로 말하는 철학적, 영적 전통과 공명하지만, 관찰 가능한 과학적 현상에 그 아이디어를 근거로 한다. 예를 들어, 예수회에서 교육받은 고생물학자인 테이아르 드 샤르댕은 사랑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인간 진화의 새로운 단계를 나타낼 것이라고 믿었고, "언젠가 바람, 파도, 조수, 중력을 마스터한 후에 우리는 신을 위해 사랑의 에너지를 활용할 것이다" 라고 썼다. 테일하드닷컴. 이 은유는 사랑을 중력과 같은 근본적인 힘과 동일시합니다. 즉, 사랑의 매력적인 힘은 물리적인 힘만큼 실제적이고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약하자면, 사랑의 개념을 확장하면 사랑을 자연에 널리 퍼져 있는 연결성과 질서의 원리 로 규정하여 물리학, 생물학, 정보 시스템, 인공지능,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사랑의 역할을 탐구하기 위한 개념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물리학에서의 사랑: 근본적인 상호작용으로서의 매력

인력과 기본적 힘: 물리학에서 은하에서 분자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구조의 형성은 원소를 끌어당기고 결합시키는 기본적 힘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은 사랑을 개별 개체를 더 큰 전체로 통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원초적인 형태의 사랑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력은 질량을 끌어당겨 별과 행성을 형성하는 반면 전자기력은 양전하와 음전하를 원자와 분자로 통합합니다. 이러한 인력적 상호 작용이 없다면 우주는 확산 입자와 방사선으로만 구성될 것입니다. 우주에서 관찰되는 질서와 복잡성은 물질이 기본적 힘에 따라 상호 작용하고 합쳐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시적인 의미에서 중력은 별을 묶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인력이 구조에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포착하는 비유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이러한 힘을 방정식으로 설명하지만 그 결과 우주는 혼돈보다 조직된 관계를 "선호"합니다. 사랑이 고립보다 결합을 선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보편적 응집력에 대한 은유: 주류 물리학은 어떤 힘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응집력의 힘으로서의 사랑이라는 은유는 도움이 되는 서사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관계와 상호작용이 현실의 구조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테야르 드 샤르댕과 같은 사상가들은 사랑을 물리적 진화와 함께 작용하는 우주적 원리로 보았습니다. 그는 우주가 진화함에 따라 내부적 친화력, 즉 의식과 물질의 더 큰 전체성을 향한 중력적 끌어당김에 의해 주도되는 점점 더 복잡하고 중심적인 것이 나타났다고 제안했습니다. 현대 물리학은 또한 다양한 힘의 배후에 있는 공통의 근원을 찾는 통합 원리(예: "모든 것의 이론" 시도)를 암시합니다. 그러한 정신에서 사랑을 통합 법칙으로 보는 것은 연결의 감정적 경험과 매력의 물리적 현상 사이에 상상력 있는 다리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랑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력과 다른 힘이 원소 수준에서 보이는 것과 동일한 통합적 충동의 더 높은 수준의 조직에서 반영될 수 있다는 가설을 불러일으킵니다. 따라서 물리적 영역에서 사랑의 비유는 우주를 하나로 묶는 매력이며, 이는 생명 자체를 포함한 복잡한 체계가 존재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행 조건입니다.

생물학에서의 사랑: 진화 전략으로서의 협력

생명의 진화에서의 협력: 생물학은 사랑과 유사한 원칙, 즉 협력이 생명의 발달과 지속 가능성에 근본적이라는 가장 명확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진화는 종종 경쟁("적자 생존")에 의해 주도된다고 설명되지만, 연구자들은 협력이 진화적 성공 것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습니다. pmc.ncbi.nlm.nih.gov. 사실, 협력은 개별 단위가 모여 새롭고 더 복잡한 단위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데, 이는 생명의 모든 주요 전환기에서 볼 수 있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단세포가 합쳐져 다세포 유기체를 형성하고, 다세포 개체가 복잡한 군집이나 사회를 형성합니다. Martin Nowak 이 관찰한 대로, "진화가 새로운 수준의 조직을 구성하려면 협력이 필요합니다. 게놈, 세포, 다세포 유기체, 사회적 곤충, 인간 사회의 출현은 모두 협력에 기반을 둡니다." pmc.ncbi.nlm.nih.gov. 진화적 관점에서, 개체들이 함께 일할 때 - 자원을 공유하고, 노동을 나누거나, 상호 방어를 제공할 때 - 그 집단은 고립된 개인들이 이룰 수 없는 결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이타적 행동 (더 큰 집단적 이익을 위해 일부 개인적 이득을 희생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베푸는 인간의 의미에서의 사랑과 직접적으로 유사합니다. 순진한 이상과는 거리가 멀고, 이타주의는 구체적인 생존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협력하는 유전자와 종은 종종 협력하지 않는 유전자와 종을 능가하는데, 특히 변화하거나 도전적인 환경에서 그렇습니다.

공생에서 사회적 유대감으로: 생물학적 역사는 공생과 상호 원조의 사례로 가득 차 있으며, 생명은 파트너십을 통해 번성합니다. 우리 세포의 원동력인 미토콘드리아는 초기 진핵 세포와 공생 연합을 이룬 독립적인 박테리아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두 종의 문자 그대로의 결혼으로 복잡한 생명이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동물 공동체에서 손질, 음식 공유, 경고 호출과 같은 행동은 개인적 위험이나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집단 생존을 향상시킵니다. 진화 생물학자들은 친족 선택, 상호 이타주의, 집단 선택 이론을 통해 이러한 관찰을 공식화했으며, 이는 모두 자연 선택이 적절한 조건에서 "타인에 대한 " 행동을 선호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pmc.ncbi.nlm.nih.gov pmc.ncbi.nlm.nih.gov. 본질적으로, 생명은 여러 수준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유전자는 게놈에서 협력하고, 세포는 장기에서 협력하고, 개인은 가족과 사회에서 협력합니다. 생물학적 조직의 각 상위 수준은 협력적 상호작용으로 유지됩니다. 이는 사랑의 원칙을 생물학적으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협력이 유전적 친척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없는 개인(및 다른 종)조차도 모든 당사자에게 이로운 동맹(예:

수분매개자와 식물, 또는 인간과 가축)을 형성합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생명의 그물은 경쟁뿐만 아니라 수많은 협력 행위, 즉 자연이 지닌 사랑의 형태로 짜여졌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보는 생태계와 사회의 광대한 복잡성과 회복력이 생겨났으며, 모두 협력이라는 근본적인 진화적 전략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자연적 협력이 돌연변이와 선택만큼 진화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힘과 함께 진화의 근본적인 "세 번째 원리"로 설명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pmc.ncbi.nlm.nih.gov.

시스템 관점: 반엔트로피 원리로서의 사랑

상호 작용으로부터의 질서 - 정보 이론 관점: 시스템 과학 및 정보 이론 관점에서, 사랑(광의로 상호 작용과 통합으로 해석)은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는 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열역학 제 2 법칙에 따르면, 엔트로피 (무질서)는 고립된 시스템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하계와 허리케인의 형성에서 생명과 의식의 출현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에서 엔트로피의 국소적 감소, 즉 질서와 복잡성의 포켓을 관찰합니다. 이러한 반 엔트로피 포켓이 형성되고 지속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에너지 흐름과 정보 교환에 있습니다. 환경에 개방된 시스템은 에너지를 수입하여 구조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물리학자 에르빈 슈뢰딩거가 생명의 전략을 유명하게 묘사했듯이, 그들은 효과적으로 "음의 엔트로피를 먹습니다." ko.위키피디아.org. 인간의 관점에서 사랑은 개체 간의 긍정적인 연결(에너지/정보)의 흐름을 나타내며, 고립과 쇠퇴를 방지합니다. 사람, 유기체 또는 시스템 구성 요소가 협력하여 상호 작용할 때 정보와 리소스를 공유하여 무작위성과 중복성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을 정렬합니다. 정보 이론에서 이는 상호 정보 개념에 반영됩니다. 시스템의 두 부분이 상관 관계를 갖게 되면(의사소통이나 결합을 통해) 전체의 불확실성(엔트로피)이 감소합니다. 실제로 시스템은 해당 부분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경우보다 더 예측 가능하고 질서 있게 됩니다. 지속적인 상호 작용과 개방성으로 해석되는 사랑은 개별 요소를 체계적인 전체로 엮어 엔트로피에 대응합니다.

시너지와 지속 가능한 복잡성: 복잡한 시스템 이론은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시너지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시스템의 요소가 협력하거나 행동을 조화시킬 때, 어느

부분도 단독으로 소유하지 못하는 새로운 속성과 역량이 나타납니다. 복합시스템.org. 이 시너지는 본질적으로 모든 시스템에서 사랑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지문입니다. 함께 있으면 새로운 가능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생태계를 생각해 보세요. 다양한 종이 먹이 사슬과 영양소 순환에서 상호 작용하여 여러 시대에 걸쳐 지속되는 안정적이고 자체 조절되는 환경을 만듭니다. 각 종이 고립되어 작동하면 시스템은 단순성이나 혼돈으로 붕괴될 것입니다. 생태계의 구조를 교란으로부터 유지하는 것은 관계의 네트워크, 즉 유기체 간의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나 조직에서 협력 네트워크는 지속 가능하고 엔트로피가 낮은 시스템의 특징인 회복력과 적응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공유된 지식과 상호 지원을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하면 개인을 압도할 수 있는 문제(자연 재해, 자원 부족)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열역학 언어로 표현하면 커뮤니티는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노력)를 효율적으로 소산하는데, 마치 살아있는 세포가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테야르 드 샤르댕(Teilhard de Chardin)은 조직화된 복잡성이 증가하는 이 과정을 "본질적으로 반 엔트로피적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후웹.org - 본질적으로 진화(우주적, 생물학적 또는 사회적)는 창조적인 통합을 통해 엔트로피에 저항합니다. 따라서 시스템 관점에서 협력, 소통, 연결로 나타나는 사랑은 엔트로피에 저항하는 원리이며, 복잡한 시스템이 쇠퇴를 피할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조직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공지능 속의 사랑: 이타적 알고리즘과 협력적 AI

알고리즘에서 이타주의의 필요성: 인공 지능(AI)이 인간의 일에 점점 더 깊이 자리 잡으면서, 특히 다중 에이전트 맥락(예: 도로에서 자율 주행 자동차 또는 시장에서 거래하는 여러 AI 에이전트)에서 AI 시스템이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각 AI가 순전히 이기적인 경우(순전히 이기적인 개인과 유사) 그들의 상호 작용은 갈등, 비효율성 또는 심지어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뢰나 공감 없는 이기적인 존재의 사회와 매우 유사합니다. AI와 로봇 공학 연구자들은 협력과 일정 수준의 이타주의가 AI 시스템이 복잡한 세상에서 안전하고 유익하게 기능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ai. 사실, "협동 AI"라는 새로운 하위 분야는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경쟁보다는 공통점을 찾고 함께 작업 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설계하는 데 명시적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거버넌스.ai](#). 여기에는 타협하고, 의도를 전달하고, 의사 결정에서 다른 에이전트(인간 포함)의 복지를 고려하도록 알고리즘을 훈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특성은 본질적으로 사랑과 공감의 디지털 평행선입니다. 이타적으로 프로그래밍 된 AI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을 피할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이 자신의 보상을 극대화하더라도 말입니다. 사랑이 인간의 이기심을 완화하고 친 사회적 행동을 촉진하는 것처럼, 이타주의를 AI에 내장하면 순수한 유용성 극대화를 완화하고 협력적 결과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반복되는 딜레마(예: 반복된 죄수의 딜레마)의 시뮬레이션에서 신뢰와 용서 전략 (연민의 행동과 유사)을 채택하는 AI 에이전트는 항상 다른 사람을 착취하려고 하는 에이전트보다 상호적으로 더 나은 결과와 더 큰 안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AI 안전과 성공의 열쇠인 협력: 인간 사회의 성공은 주로 규모에 맞춰 협력할 수 있는 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거버넌스.ai](#), 그리고 AI가 사회에 통합되려면 동일한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AI 시스템이 교통을 협상하고, 자원을 관리하고, 의료를 지원할 때 인간과 유사한 협력 문제에 직면합니다. [거버넌스.ai](#). 우리가 AI에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즉 인간의 복지와 윤리적 원칙을 우선시하는 가치 정렬을 부여한다면, 우리는 효과적으로 AI를 자비롭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AI 정렬 연구의 핵심이며, 이는 고급 AI가 공정성 과 연민을 포함한 인간의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이는 에이전트가 개인의 성공뿐만 아니라 협력적 성공에 대한 보상을 받는 다중 에이전트 강화 학습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팀워크를 개발하도록 장려합니다. 또한 공감을 위한 알고리즘을 포함할 수 있는데, 여기서 AI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예측하고 신경을 씁니다(예: 보조 로봇이 인간의 불편함을 예상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행동). 연구에 따르면 이타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한 AI 에이전트는 그룹 시나리오에서 보다 견고하고 윤리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거버넌스.ai](#). 게다가 AI 에이전트 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우리는 적대적 역학(예: AI 시스템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경쟁하는 것)의 위험을 줄입니다. 요약하자면, 협력 알고리즘과 이타적 설계를 통해 사랑의 원칙을 AI에 통합하는 것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유익한 AI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점점 더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계조차도 공존하고 돕는 의미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우리와 함께 복잡한 세계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사회 및 경제 시스템 내의 사랑: 신뢰, 협력 및 지속 가능성

사회와 경제의 접착제로서의 신뢰: 인간 사회에서 사랑은 종종 신뢰와 상호 지원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안정적인 사회 및 경제 시스템의 초석입니다. 사회학자와 경제학자들은 오랫동안 커뮤니티 내의 높은 수준의 신뢰가 번영, 민주주의, 건강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경제학자 케네스 애로우의 한때 "거의 모든 상업 거래에는 신뢰라는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고 말하면서 서로의 정직성과 선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 없다면 무역과 협력이 중단될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www2.델로이트닷컴.

신뢰는 경제학자들이 거래 비용이라고 부르는 것을 줄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면 철저한 계약이나 집행 메커니즘 없이도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신뢰는 낯선 사람들 사이의 사랑(아가페 또는 선의)의 경제적 구현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의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의미합니다. 신뢰와 공유된 가치(종종 공감과 "형제애" 또는 연대의 문화적 유대감에 뿌리를 둔)의 강력한 기반을 갖춘 사회는 인프라 구축에서 시장 운영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활동을 의심과 제로섬 사고방식에 빠진 사회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조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대인 관계 신뢰가 높은 국가나 지역은 경제 성장이 더 빠르고 제도가 더 효과적입니다.

www2.델로이트닷컴. 반대로 신뢰 부족(사회적 사랑의 결핍)은 협력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짐에 따라 공동체를 빈곤과 갈등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자본의 형태로 사랑은 번영하는 경제와 정치에 기능적 요구 사항입니다.

협동 경제와 집단적 복지: 신뢰 너머로, 사랑은 사회 시스템에서 협동 규범과 이타적 정책으로 표면화되어 단기적 개인적 이익보다 장기적 집단적 복지를 우선시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교육과 의료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내거나 이웃이 서로를 돕기 위해 자원할 때, 이는 전체 사회를 강화하는 시민적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러한 협동은 게임 이론을 통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회적 딜레마(공동 자원이나 공공재 관리 등)는 공유지의 비극을 피하기 위해 관대함과 호혜성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행동 경제학의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순전히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정성, 연민, 협동 규범을 지지하기 위해 탐욕을 처벌하려는 의지(종종 이타적 처벌 이라고 함)

를 보입니다 . [pmc.ncbi.nlm.nih.gov](https://pubmed.ncbi.nlm.nih.gov). 이러한 경향은 대규모 집단이 기능할 수 있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속이거나 무임승차하는 시장이나 커뮤니티는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사회에서 사랑은 아담 스미스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합니다. 이기심뿐만 아니라 공감과 도덕적 헌신이 경제적, 사회적 행동을 안내합니다. 그 결과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강력한 상호 지원(공식 기관이나 비공식적 케어 네트워크를 통해)이 있는 커뮤니티는 자연 재해, 경기 침체 또는 팬데믹과 같은 위기를 더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지원을 동원하고, 자원을 공유하고, 취약한 구성원을 돌보며, 이를 통해 전체 시스템이 생존하도록 합니다. 대규모로, 부족을 형성하는 것에서 도시, 국가 및 국제 동맹에 이르기까지 인간 문명의 진보는 협력의 범위가 확대되고 본질적으로 사랑의 영역이 더 크고 다양한 그룹으로 확장됨을 반영합니다. 각 확장은 연민과 협력을 제도화하는 새로운 규범, 권리 및 이해(예: 인권, 인도주의적 가치)를 요구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사회 및 경제 시스템에서의 사랑은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번영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이는 사회적 응집력의 근간이 되는 원칙이며, 이것이 없다면 조직된 사회는 무질서로 붕괴될 것입니다.

결론: 문제 해결과 삶의 궁극적 원칙으로서의 사랑

여러 학문 분야에서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우리는 도발적이지만 설득력 있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생명과 문명이 존재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궁극적인 문제 해결 원칙입니다. 입자 간의 매력에서 사람 간의 공감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주제가 나타납니다. 바로 연결 구축입니다. 이 사랑의 원칙은 물리적 우주에 구조를 만들고, 생물학에서 진화적 혁신을 주도하고, 복잡한 시스템에서 엔트로피를 줄이고, 윤리적이고 협력적인 AI 를 보장하며, 인간 사회를 하나로 묶습니다. 각 맥락에서 요소가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할 때, 시스템 은 고립된 경우보다 더 많은 복잡성, 안정성, 역량을 달성합니다. 반대로, 물리학에서의 고립, 자연에서의 만연한 경쟁, 적대적 AI, 사회적 불신 등 이 원칙이 없으면 분열, 비효율성, 붕괴로 이어집니다.

생존과 번영의 법칙으로서의 사랑: 따라서 우리는 사랑이 생명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근본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생존전략으로 작용합니다. 즉, 생명이 엔트로피, 희소성, 갈등의 고유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발견한 법칙입니다.

진화적 용어로, 사랑(협력)은 "진화 과정의 개방성 뒤에 숨은 비밀"이며, 진화가 경쟁적인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조직을 발명할 수 있게 해줍니다.

pmc.ncbi.nlm.nih.gov. 인간의 관점에서 사랑은 집단 행동과 창의적인 단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후 변화에서 세계 평화에 이르기까지 가장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한 학제간 연구 요약에서 말했듯이, "협력의 문제는 어디에나 있고 중요" 하며 우리 종의 성공은 협력하는 능력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거버넌스.ai. 이는 사랑을 발전시키는 것, 즉 돌보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순진한 이상주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명령임을 시사합니다.

원칙에서 실천으로: 사랑을 보편적인 원칙으로 인식하는 것은 과학, 기술, 정책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재구성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결성을 촉진하도록 격려합니다. 즉, 협력과 상호 지원을 강화하는 시스템(생태적, 기술적 또는 사회적)을 설계합니다. 또한 많은 영적 전통과 일치하는 통합된 윤리적 방향을 제공합니다. 즉, 전체의 번영이 진보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랑(공감, 협력, 통합으로 이해됨)을 기르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전략이 됩니다. 엔지니어가 물리 법칙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구조물을 짓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의 법칙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문명을 건설해야 합니다. 데일하드닷컴. 요약하자면, 사랑은 사실과 가치를 연결하는 기본 법칙으로 작용합니다. 설명적으로는 은하계, 유전체, 사회의 접착제이고, 처방적으로는 세계적 과제를 해결하는 지침입니다. 이처럼 확장된 방식으로 사랑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학문 간에 강력한 설명적 렌즈를 얻을 뿐만 아니라 희망적인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즉, 원자와 세포를 묶는 원리가 마음과 정신도 묶는 원리이며, 이 원리, 즉 보편적인 사랑 이 우리 세계를 지속시키고 우리의 집단적 잠재력을 끌어내는 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랑을 통일과 창조의 근본 원리 로 보면 우주가 더 큰 복잡성으로 진화하는 이유와 의식적인 행위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원리에 맞춰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번영할 수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제안은 **사랑이 삶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을 넘어 세상을 진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역동성입니다.

Prompt 2: 자유의 힘

혁신의 촉매로서의 자유

자유(정치적, 경제적)는 오랫동안 혁신과 성장을 위한 강력한 촉매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개인이 개인적 자유를 누리고 재산권을 확보하면 야심찬 아이디어를 추구하고, 사업에 투자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참여할 인센티브가 생깁니다. 이 메커니즘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과 창의성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발명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더 큼니다. 한 학자는 자유 시장 사회에서 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도 혁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카토.오오그](#). 이러한 개방성 덕분에 기업가와 발명가는 정부의 임의적인 간섭을 두려워하지 않고도 새로운 기술과 사업 모델을 실험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강력한 **재산권** 이 이 혁신적 정신을 뒷받침합니다. 법률 시스템이 발명가의 특허나 사업주의 자산을 보호할 때, 혁신가들은 그들의 성공이 몰수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제 역사가들에 따르면, 18 세기 영국의 산업 혁명은 "재산권을 지지하는 법원 판결과 같은" 법적 발전에 의해 부분적으로 촉진되었으며, 이는 기업가 정신과 **산업** 투자를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ko.위키피디아.org](#). 다시 말해, 안전한 소유권은 사람들에게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새로운 기계, 공장 및 기술에 투자할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자유와 재산권이 에너지와 야망을 풀어줄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은 **"권력이 과도하게 지배하는 곳에서는 어떤 종류의 재산도 적절하게 존중되지 않는다"** 고 관찰했고, 안전한 권리가 없다면 **"아무도 더 열심히 또는 더 똑똑하게 일할 인센티브가 없다"**

말했습니다. [studentsforliberty.org](#). 미국 헌법과 초기 주법은 국민의 "기업가적 에너지를 해방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studentsforliberty.org](#)

[studentsforliberty.org](#). 그 결과 기업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19 세기 중반까지

미국인들은 수만 개의 법인을 설립했고 미국은 산업 거인이 되는 길에 올랐습니다.

[studentsforliberty.org](#). 현대의 경험적 연구는 자유와 혁신 사이의 연관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1 세기 이상에 걸쳐 157 개국을 조사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학문적 자유가**

더 큰 사회는 훨씬 더 많은 혁신을 창출합니다. 학문적 자유를 표준 편차 1 개만큼

개선하면 **특허 출원이 41% 증가**하고 **인용 빈도가 높은 특허가 29% 더 많아져** 창의적

산출물의 양과 질 모두에서 큰 도약을 나타냅니다. [pmc.ncbi.nlm.nih.gov](#). 그 이유는

사고와 탐구의 자유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번성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권위와 위계로부터의 독립은 정보 교환과 실패에 대한 관용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아이디어 순환, 실험, 다양성, 창의성을 촉진합니다."**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혁신을 촉진합니다. pmc.ncbi.nlm.nih.gov. 대조적으로 권위주의 시스템은 종종 공개 토론을 억누르고 반대 의견을 처벌하는데, 이는 혁신에 필요한 지적인 역동성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는 사람들이 **"마음을 말하고 관습적인 지혜에 의문을 제기"** 하도록 하기 때문에 혁신에 탁월 하지만, 독재자는 현상 유지를 위협하는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억압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카토.오오그](#) 간단히 말해서,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개인의 야망을 고취하고, 창의적인 위험 감수를 장려하며, 혁신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여** 더 빠른 경제적, 기술적 진보로 이어집니다. pmc.ncbi.nlm.nih.gov

자유 사회 vs. 권위주의 사회: 비교 분석

역사는 자유 사회가 경제 개발과 혁신에서 권위주의 사회보다 성과가 좋다는 풍부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민주주의, 자유 시장 국가와 권위주의 정권을 비교할 때, 더 자유로운 사회는 더 높은 번영, 더 많은 기술적 혁신, 더 큰 생활 수준의 개선을 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0 년부터 2018 년까지 모든 국가의 GDP 성장을 포괄적으로 분석한 결과, **민주주의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토.오오그](#). 민주주의에서 장기적 성장이 더 높았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의 성장은 특히 저소득 국가의 경우 더 **안정적이고 덜 변동적이었습니다**. [카토.오오그](#) [카토.오오그](#). 권위주의 정권은 때때로 급속한 성장을 만들어내지만, 이는 종종 폭락이나 침체로 이어진다. 실제로, 데이터는 경제 성과에서 **체계적인 "독재적 이점"을 보여주지 않는다**. 오히려 이점은 자유주의 민주주의와 시장 주도 정책에 있다. [카토.오오그](#).

우리는 자유도가 다른 사회 쌍을 살펴보면 이러한 대조를 알 수 있습니다. 한반도를 생각해 보세요. 20 세기 중반에 **북한과 남한은 비슷한 수준의 빈곤에서 시작했지만, 정치-경제 시스템이 달라서 그들의 길은 급격히 갈라졌습니다**. 북한은 경제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폐쇄적인 전체주의 국가가 되었고, 거의 사기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인베스토피디아닷컴](#). 대조적으로 한국은 더 개방적이고 시장 중심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했고(초기 권위주의적 리더십 하에서도) 결국 민주주의로 이행했습니다. 결과는 스스로를 말해줍니다. 한때 가난했던 한국의 경제는 너무 빨리 성장하여 **"한강의 기적"**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세계 최대 경제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인베스토피디아닷컴](#). 오늘날 한국은 세계 12 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며 삼성과 현대와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의 본거지입니다. [인베스토피디아닷컴](#). 한편 북한은 여전히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파괴적인 기근과 경제 위축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인베스토피디아닷컴](#) [인베스토피디아닷컴](#). 남부 주민들은 현대 기술과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는 반면, 북부 주민들은 전기가 부족하고 비교적 중세적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베스토피디아닷컴](#) **두 개의 한국 사이의 극명한 차이는** 극적인 현실 세계의 실험입니다. *남한의 더 큰 자유와 재산권은 번영과 혁신으로 이어졌지만, 북한의 억압은 빈곤과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패턴이 냉전 당시 **서독과 동독**을 비교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민주적 통치와 시장 경제를 가진 서독은 2 차 세계 대전 이후 빠르게 재건되어 유럽의 경제 강국이 되었으며, 엔지니어링, 자동차 설계, 제약 분야에서 주요 혁신을 이루었다. 공산주의 계획 경제를 가진 동독은 훨씬 뒤쳐졌고 시민들이 더 자유로운 서방으로 이주하는 것을 보았다. 마찬가지로 **미국과 소련**을 생각해 보자. 소련은 고립된 기술적 업적(예: 초기 우주 로켓)을 달성했지만, 그 권위주의 체제는 궁극적으로 더 자유로운 미국 경제가 창출한 광범위한 혁신과 풍요에 맞먹지 못했다. 1980년대에는 개인용 컴퓨터 기술, 생명공학, 기타 첨단 산업이 실리콘 밸리와 다른 자유 시장 중심지에서 번창했지만, 소련 경제는 중앙 통제 하에서 침체되었다. 1991 년 소련의 붕괴는 권위주의의 경제적 약점을 강조했다. 한 분석에서 간결하게 결론 지은 바와 같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는 독재가 아닌 혁신에 더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자유는 강압보다 지속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카토.오오그](#).

일부 권위주의 국가가 부분적인 경제적 자유를 도입하여 **급속한 성장을 이룬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본질적으로 *자유라는 연료를 빌려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중국**입니다. 1978 년 이후 중국의 공산주의 정부는 일당 정치 통제를 유지했지만 경제를 상당히 자유화했습니다. 덩샤오핑의 개혁에 따라 농부들은 시장에 잉여 작물을 판매할 수 있었고, 사기업과 외국인 투자가 경제특구에 허용되었으며, 이후의 개혁을 통해 일정 수준의 재산 소유와 기업가 정신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억눌렸던 주도권을 풀어주어 경제

호황을 가져왔습니다. 약 40 년 동안 중국은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여 수억 명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이 모델의 성공은 **권위주의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권이 가장 권위주의적인 경제 정책에서 후퇴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실, 중국 연구자들은 중국의 많은 국유기업이 막대한 보조금으로 인해 수익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이러한 왜곡을 감안하면 국유 부문이 실제로 성장을 *저해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카토.오오그](#) [카토.오오그](#). 중국의 부상의 진짜 원동력은 *시장 지향적이고* 자유화된 전략의 요소였습니다. 이는 개인과 기업에 더 많은 경제적 자유를 허용한 부분입니다.

중국의 최근 경험은 이 점을 강화합니다. 지난 10 년 동안 시진핑 주석 하에서 중국은 **더 큰 국가 통제와 권위주의적 중앙집권화로 회귀** 했고, 그 결과 경제적 역동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기술 산업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사기업을 단속하고, 국유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고, 반대 의견을 더 강력하게 억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 환경을 냉각시켰습니다.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시진핑 하의 규제 불확실성**"과 투자자 신뢰 감소로 인해 둔화되었습니다. [애틀랜틱카운실.org](#).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공식 자료가 성장과 혁신의 상당한 둔화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전 10 년 동안 느슨한 경제 정책(후진타오 집권) 동안 중국의 GDP 성장률은 연평균 10%였습니다. 시진핑의 권위주의적 통치 하에서는 성장률이 연평균 약 *6% 로 떨어졌습니다.* [usagovpolicy.com](#). 이 4%포인트 하락은 엄청나며 분석가들은 이를 혁신과 효율성 향상을 측정하는 **총요소 생산성의 감소에 크게 기인한다고 말합니다.** [usagovpolicy.com](#). 시진핑 집권 하에서 생산성 성장률은 급락했습니다(2000 년대 연간 약 3.5%에서 최근 몇 년 동안 0.7%로 감소). 이는 **기술 진보와 효율성 개선이** 극적으로 나타냅니다. [usagovpolicy.com](#). 간단히 말해서, 중국의 자유화 후퇴는 이제 *경제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전 성장을 주도했던 혁신의 엔진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분적인 자유조차 중요한 이유와 권위주의적 단속이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자유 의 역사적, 현대적 영향

역사는 혁명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자유가 경제 및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었음을 **보여주는 긴 증거를** 제공합니다. **미국 혁명** (1775-1783)은 정치적 격변일 뿐만 아니라 심오한

경제적 동기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미국 식민지 주민들은 무역과 기업을 제한하는 영국의 중상주의 정책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경제적 자유"라고 부르는 것을 갈망했습니다. 즉, 자유롭게 사업과 무역을 하고 **"그 활동으로 창출된 모든 부를 유지할 수 있는"** studentsforliberty.org. 혁명의 승리는 중상주의적 통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국가가 자유 무역, 자유 보유 토지 소유권의 서쪽 확장, 산업 개발을 추구할 수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독립 후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재산권을 보호하고 계약을 강제하고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제한하는 헌법적 틀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한 역사가는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790년부터 현재까지 점점 더 확대되는 미국인 그룹은 지구상의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비교적 더 많은 경제적 자유를 누렸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미국 경제가 비교적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studentsforliberty.org. 다시 말해,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초기 미국의 헌신은 미국이 경제 강국이 되는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19 세기에 미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혁신을 경험했습니다. 전신, 전구, 그리고 수많은 다른 발명품을 개발하면서, 덜 자유로운 오래된 경제를 능가했습니다.

대서양 건너편에서 영국의 **산업 혁명** (1760 년경~1840 년)은 자유의 영향력을 더욱 잘 보여줍니다. 영국은 산업화를 이룬 최초의 국가였으며, 학자들은 종종 비교적 자유로운 제도를 주요 요인으로 꼽습니다. **1688 년 영광스러운 혁명** 이후 , 영국은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독단적인 왕권을 억제했으며, 이는 기업가들이 수용의 두려움 없이 투자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18 세기 중반까지 영국 법원은 재산권을 확실히 옹호했습니다. ko.위키피디아.org. 특허 보호와 같은 자유와 결합된 이러한 법적 안정성은 발명가와 투자자를 격려했습니다. **제임스 와트의 증기 엔진에서 섬유 기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술 혁신이** 발명가가 특허를 확보하고 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 영국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결과 발생한 산업 혁명은 영국을 변화시켰고, 그 후 미국과 서유럽과 같은 다른 자유(또는 해방) 경제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 대중** 의미합니다. ko.위키피디아.org, 수천 년간의 침체에서 극적인 단절. 경제 역사가들은 개방된 시장과 안전한 재산의 형태로 자유의 확산이 이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데 널리 동의합니다. studentsforliberty.org. 아담 스미스가 1755 년(산업 혁명 직전)에 유명하게 언급한 대로: **"국가를 가장 높은 수준의 호사스러움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것은 평화, 쉬운 세금, 견딜 만한 사법 행정 외에는 거의 없다. 나머지는**

사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의해 이루어진다." studentsforliberty.org 본질적으로, 자신의 사업에 맡겨진 자유로운 사람들은 부와 진보를 창출할 것입니다.

현대에도 이 패턴은 계속됩니다.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받아들인 국가는 앞서 나갔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는 뒤쳐졌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민주적 자본주의 하에서 재건한 **서독** 과 **일본**은 1950 년대와 60 년대에 "경제적 기적"을 경험했고, 빠르게 기술과 제조업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반면 공산주의 하의 소련 블록 국가는 침체되었고, 많은 국가(1980 년대의 폴란드와 헝가리 등)가 자유화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철의 장막이 무너졌을 때, 자유 선거와 자유 시장을 재빨리 채택한 동유럽 국가(폴란드, 체코, 발트해 국가 등)는 소득과 혁신이 증가한 반면, 권위주의 통치와 국가 경제(벨라루스 등)를 유지한 국가는 크게 뒤쳐졌습니다. **인도**는 또 다른 예를 제공합니다. 독립 후 수십 년 동안 인도는 느린 성장("힌두교 성장률")을 보인 국가 통제 경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도가 1990 년대에 경제 자유화를 시작했을 때,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기업을 장려하고, 세계 시장과 통합하면서 훨씬 더 빠른 성장과 방갈로르를 중심으로 한 기술 붐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인도의 활기찬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부문은 더 많은 경제적 자유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는 **아프리카**입니다. 비교적 자유로운 정책을 유지한 몇몇 국가가 이웃 국가보다 성과가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츠와나**는 1966 년 독립 이래로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유지해 왔으며, 재산권(귀중한 다이아몬드 자원 포함)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고수했습니다. 그 결과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달성하여 극심한 빈곤에서 중산층 지위로 올라섰습니다. 한편, 이웃 국가인 **짐바브웨**는 매우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로버트 무가베의 권위주의 통치 하에서 짐바브웨는 종종 재산권을 짓밟았으며, 가장 악명 높은 것은 2000 년대 초반에 보상 없이 백인 소유 농장을 몰수한 것입니다. 짐바브웨의 결과는 *경제적 재앙* 이었습니다. 농업 생산량이 급락했고 식량 생산은 **10 년 만에 60% 나** 감소하여 이전의 "아프리카의 곡창지대"가 궁핍의 땅으로 전락했습니다. [카토.오오그](#). 재산권이 파괴되면서 외국인 투자는 말라붙었고(1998 년 4 억 4,400 만 달러에서 2003 년 380 만 달러로 감소) 국가는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대량 실업의 곤경에 빠졌습니다. [카토.오오그](#) [카토.오오그](#) 보츠와나의 성공과 짐바브웨의 붕괴는 역사의 일관된 교훈을 강조합니다. **자유와 재산권을 옹호하는 국가는 번영하지만, 이를 훼손하는 국가는 막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경험적 증거와 사례 연구

자유와 진보 사이의 연결은 일화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데이터와 사례 연구에 의해 강력하게 뒷받침됩니다. 경제적 성과와 함께 자유를 측정하는 국제 지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Atlantic Council의 포괄적인 분석에 따르면 **"'자유'로 평가된 국가의 시민은 '자유롭지 않은' 국가의 시민보다 13 배 더 부유합니다."**

[애틀랜틱카운실.org](https://atlanticcouncil.org) 평균적으로 자유 사회의 사람들은 억압적인 환경의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고 건강하며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고합니다. [애틀랜틱카운실.org](https://atlanticcouncil.org). 번영의 이 거대한 격차는 제도와 자유의 차이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유 국가는 재능과 노력이 꽃피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 더 생산적인 경제로 이어지지만, 자유롭지 못한 국가는 억압을 통해 인간의 잠재력을 낭비합니다.

혁신 지표도 비슷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혁신 역량과 산출량에 따라 국가를 순위를 매기는 **글로벌 혁신 지수(GII)**는 자유 국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상위 50 개 혁신 국가 중 12%만이 프리덤 하우스에서 "자유롭지 않음"으로 분류되었고, 하위 20 개 혁신 국가 중 어느 누구도 자유 사회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4 민주주의거버넌스닷컴](https://www.heritage.org). 다시 말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경제의 약 90%는 정치적, 시민적 자유가 높은 경제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혁신 지수에서 항상 상위권에 올랐으며(세계적인 R&D 대학, 역동적인 스타트업, 개방적 문화 덕분에) 강력한 재산권을 가진 **자유 국가로 분류됩니다.**

[4 민주주의거버넌스닷컴](https://www.heritage.org). 마찬가지로, 독일, 한국, 일본과 같은 국가들은 모두 시장 경제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로, 혁신에서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하며, 세계에 수많은 신기술(독일의 공학적 발전에서 한국의 반도체 리더십까지)을 제공했습니다. 반면, 억압적인 통치를 하는 국가들은 첨단 혁신에서 거의 선두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권위주의 정권이 글로벌 혁신 지수의 최상위 계층에 나타나지 않고, 적당한 점수를 받는 몇몇 권위주의 성향 국가(예: 중국)는 경제에 약간의 자유를 주입한 후에 혁신을 달성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자유주의 원칙 하에서 번영한 두 나라의 사례 연구로서 미국 과 한국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부상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기반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사유재산 보호, 법의 지배를 확립함으로써 미국은 기업 활동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의 혁신가(니콜라 테슬라에서 세르게이 브린까지)에게 자석과 같은 곳이 되었는데, 그들은 미국에서 자유롭게 실험하고 자신의

발명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0 세기에 미국은 자동차, 비행기, 컴퓨터, 인터넷, 생명공학 등 주요 혁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했으며, 거의 모든 것이 시민적 자유에 의해 뒷받침되는 자유 시장 시스템에서 나왔습니다. 대체로 자유로운 경제에서 운영되는 미국의 발명가와 기업가는 폐쇄된 사회의 산출물을 훨씬 능가하는 놀라운 수의 특허와 노벨상을 등록했습니다. 핵심 **메커니즘**은 1831 년 초 재무부 장관 Albert Gallatin 에 의해 요약되었습니다. 즉, 좋은 법률과 자유는 산업과 지식을 장려하는 반면 억압적인 정부는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studentsforliberty.org studentsforliberty.org **산업혁명부터 실리콘밸리까지**의 미국의 경험은 이런 통찰력을 입증해줍니다.

빈곤에서 번영으로의 한국의 여정은 또 다른 강력한 예입니다. 1960 년대에 한국은 전쟁으로 파괴된 빈곤한 나라였으며 산업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당시는 권위주의 정부 아래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그 정부는 수출 지향적 성장, 세계 시장과의 통합, 민간 기업(**재벌** 대기업)의 격려라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본질적으로 한국은 완전한 정치적 자유를 얻기도 전에 **경제적 자유**를 채택했습니다. 재산권과 계약 집행은 사업적 신뢰를 구축하기에 충분히 유지되었고, 국가는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여 숙련된 노동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980 년대에 한국의 경제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한강의 기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인베스토피디아닷컴. 1987 년, 남한은 민주주의를 획득하여 경제적 이득에 정치적 자유를 더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남한은 그 자체로 첨단 기술 혁신자가 되었습니다(스마트폰, 마이크로칩, 대중 문화 수출에서 세계적 리더). 오늘날 남한은 가장 자유로운 경제권에 속합니다(남한의 경제적 자유 점수는 **73.1** 로, 세계에서 14 번째로 자유로운 경제권입니다) 유산.org 정치적으로 자유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시민들은 북한의 대응자들보다 **25 배 이상 높은 1 인당 소득을 누리고 있으며, 서울은 세계적인 대도시로 변모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종종 남한이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수혜자로서 번영하는 경제와 민주주의를 달성했다"** 에어유니버시티.af.edu 다시 말해, 자유주의 원칙, 즉 개방 무역, 법치주의,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표 정부를 고수함으로써 한국은 국민의 재능을 끌어내고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했습니다.

다른 국가도 같은 패턴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대만**은 1990 년대에 기술 중심의 시장 경제를 육성하면서 권위주의 정권에서 활기찬 민주주의로 발전했으며, 지금은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하고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된 사회 중 하나입니다. **싱가포르** 와

홍콩 (성장하는 동안 완전한 민주주의는 아니었지만)은 강력한 재산권, 자유 무역, 낮은 부패를 수용하여 식민지 변두리에서 글로벌 금융 및 무역 센터로 발전했습니다. 중동에서도 **희망**이 보입니다. UAE(두바이)나 이스라엘(매우 혁신적인 기술 부문을 갖춘 민주주의)과 같이 비교적 자유로운 경제 정책을 가진 몇 안 되는 지역은 더 폐쇄적이거나 불안정한 이웃 국가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역동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치와 혼합 모델: 싱가포르와 중국

이 논의에서 가끔 제기되는 일부 **이상치** 와 미묘한 사례를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의론자는 **싱가포르 나 중국**의 이전 수십 년을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 또는 반권위주의 국가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국가의 경험은 실제로 핵심 논제를 강화합니다. 즉, *자유, 특히 경제적 자유가 성공의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가 번영한 곳은 실제로 많은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번영했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는 종종 "반권위주의적" 또는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 로 묘사되는 독특한 사례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당에 의해 통치되어 왔으며 정치적 반대와 언론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고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활 수준을 자랑합니다. 싱가포르는 교과서적인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번영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싱가포르가 여러 가지 중요한 면에서 자유 사회처럼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재산권, 계약 이행 및 법치주의에 대한 매우 강력한 보호*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속적으로 세계 경제 자유 지수에서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경제 자유 점수 83.5로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로 평가되었습니다.** [유산.org](https://www.economicfreedom.org). 싱가포르의 기업은 번거로운 절차나 부패가 거의 없고, 세금이 낮으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법적 틀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개인적 자유도 강력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엄격하지만 안정적인 법률의 범위 내에서) 원하는 대로 살고, 일하고, 여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싱가포르인은 집권당을 바꿀 수 있는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대부분의 영역에서 *사실상 경제적, 개인적 자유를 누립니다.* 이는 *기업과 혁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싱가포르는 *핀테크와 바이오테크 허브이며 전 세계에서 투자와 인재를 유치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국가가 자유주의 경제**

원칙을 채택하고 실제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때 완전한 민주주의가 없어도 번영할 수 있음 을 보여줍니다. 한 분석에서 언급했듯이 싱가포르의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로만 분류됩니다 (*민주적 자유에서 세계 66 위*) [ccta.리젠트.에듀](#) 그러나 시민들은 법에 따라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와 안전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결과 측면에서는 "자유 국가와 더 비슷하게" 기능합니다.

중국의 예외적 사례는 앞서 논의되었지만, 요약하자면,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중국의 놀라운 성장은 경제를 **부분적으로 자유화**한 기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정치적 통제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기업 활동을 촉발할 만큼 경제 생활에 대한 통제를 느슨하게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수백만 개의 사기업이 생겨났고, 외국 자본과 기술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이는 사기업을 어느 정도 보호하고 시장 세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중국은 비공식적인 거래를 했습니다. 즉, 국민은 당이 경제적 기회와 소득 증가(때로는 정치적 자유 없이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CCP의 "거래"로 표현됨)를 제공하는 한 일당 통치를 수용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러한 혼합적 접근 방식은 높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험은 권위주의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자유조차도** 힘을 가진다는 증거입니다. 중국이 탁월한 분야(제조업, 기술 기업가 정신)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분야였습니다(예: 기술 창업자는 회사를 시작할 수 있고, 농부는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음). 한편, 국가가 엄격하게 통제하는 분야(국립 은행 부문이나 중공업)는 종종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또한 중국이 시진핑 하에서 더 권위주의적인 방향으로 이동함에 따라 경제적 별이 희미해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성장을 주도하는 자유화라는 중국의 과거 공식은 새로운 국가주의 하에서 침체 위험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본 도피, 외국인 투자 감소, 혁신적인 중국 기업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 상장된다는 최근 보고서는 모두 **지나친 통제가 황금 거위를 질식시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궁극적으로 **자유화에서 이익을 얻었고 권위주의적 후퇴에서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부유한 권위주의 정권(예: 석유가 풍부한 군주국)**조차도 자유가 혁신을 주도한다는 규칙을 반증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세요. 그들은 종종 생략을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같은 석유 국가는 석유 수출로 인해 1인당 GDP가 높을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자유 사회에 비해 글로벌 기술 혁신에 거의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국가 중 다수는 이제 혁신을 다각화하고 촉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의미심장하게도 그들은 창의성을 위에서 아래로 명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더 개방적인 경제 정책과 사회 개혁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론: 진보의 핵심 동인으로서의 자유

대륙과 수세기를 거쳐 증거는 확실합니다. **국가의 성공을 결정하는 진짜 요인은** 명목상의 정부 형태가 아니라 국민이 누리는 자유, 즉 개인적 자유, 재산권, 경제적 자유입니다. 국가가 형식적으로 민주주의인지 일당제 국가인지는 실제로 **대다수 시민이** 몰수나 억압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말하고, 거래하고, 창조할 수 있는지 보다 덜 중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 권력을 제한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유리합니다. 오늘날 부유하고 혁신적인 국가의 대부분이 다원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에게 경제적 자유를 부여하기로 선택한** 비민주적 국가 (싱가포르가 그랬듯이)조차도 그렇지 않은 형식적으로 민주주의적인 국가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자유가 엔진입니다. 자유는 인간의 잠재력을 끌어냅니다.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개인적 야망을 장려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의 운명을 통제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노력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또한 **기술 진보를** 장려합니다. 발명가는 땀 흘리고 기업가는 성공적인 혁신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확신할 때 투자합니다. 한편, 사고와 탐구의 자유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등장하고 테스트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이는 과학 및 기술 발전의 생명선입니다. 반면, 정부가 경제적 결정을 지배하거나 시민을 억압할 때 창의성과 성장은 억제됩니다. 한 연구원이 간결하게 표현했듯이, *"자유 시장 사회는 자유가 혁신을 촉진하기 때문에 더 빨리 발전"* 하여 협력, 경쟁 및 지식 교환을 촉진합니다. pmc.ncbi.nlm.nih.gov.

정책 입안자와 시민 모두에게 교훈은 분명합니다. 목표가 번영과 진보라면 **자유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미국 혁명과 산업 혁명에서 현대 아시아와 유럽 경제의 부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위대한 도약은 더 큰 자유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경험적 데이터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오늘날 자유 국가는 비자유 국가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더 부유하고 혁신적입니다. 애틀랜틱카운실.org 4 민주주의거버넌스닷컴. 물론, 자유만으로는 마법처럼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현명한 정책과 투자(교육, 인프라 등)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유가 없다면 그러한 투자는 종종 무산됩니다. 결론적으로, *자유*의

힘은 인간의 창의성과 노력을 풀어주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를 인식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확고히 보호하는 사회는 국민과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경제적, 기술적 진보를 추진하는** 사회입니다.

참고문헌:

- Palmer, Tom G. *아니요, 독재 정치는 경제를 위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Cato Institute(2022) [카토.오오그 카토.오오그](#).
- 대서양 협의회 자유와 번영 지수(2022) [애틀랜틱카운실.org](#).
- Audretsch, David et al. "학문의 자유와 혁신." *PLOS ONE* 19(1): e028passport(2024) [pmc.ncbi.nlm.nih.gov pmc.ncbi.nlm.nih.gov](#).
- 자유를 위한 학생들. *미국 혁명이 실제로 경제 혁명이었던 이유.* (2021) [studentsforliberty.org studentsforliberty.org](#).
- 위키피디아. *"산업 혁명."* (2025 년 접속) [ko.위키피디아.org ko.위키피디아.org](#).
- Investopedia. *"북한 대 남한 경제."* (2020) [인베스토피디아닷컴 인베스토피디아닷컴](#).
- Cato Institute. *"무가베의 토지 개혁이 왜 그렇게 재앙이었는가."* (2019) [카토.오오그 카토.오오그](#).
- 헤리티지 재단. *2024 경제 자유 지수.* (2024) [유산.org 유산.org](#).
- 항공대학교(김민성). *"한국의 소프트웨어와 자유질서."* (2022) [에어유니버시티.af.edu](#).
- 뉴욕 분석(D. Dollar via usagovpolicy). *"시진핑의 10 년 재앙."* (2022) [usagovpolicy.com](#).

Prompt 3: 시장 경제에서의 신뢰

서론

시장 경제는 종종 경쟁과 이기심으로 특징지어지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신뢰와 상호 호의의 한 형태, 즉 다른 사람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라는 넓은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크게 의존합니다. 구매자는 판매자가 약속한 품질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어야 하고, 투자자는 기업이 자본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믿어야 하며, 경제 사슬의 모든 고리는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신뢰와 윤리적 행동의 기준이 없다면 시장 거래는 중단될 것입니다. 이 글은 **시장 경쟁이 근본적으로 신뢰와 상호 이익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고전적이고 현대적인 경제 이론, 현대 경제의 경험적 증거,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기술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블록체인과 AI와 같은 기술적 발전이 어떻게 전혀 없는 투명성을 가져오고, 잠재적으로 경제적 무결성의 특이점을 만들어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철학적, 윤리적 차원을 탐구하여 대부분의 시장 실패는 경쟁 자체가 아니라 정보 비대칭(투명성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합니다. 완벽한 신뢰와 투명성이 확립된 후에야 시장의 비효율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진화에 대한 기술 중심 투명성의 더 광범위한 의미를 고려하며, 시장이 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됨에 따라 사회 전체가 더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거버넌스로 이동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실제 사례와 역사적 맥락이 토론의 토대가 되어, 신뢰와 협력적 호의의 정신이 반영하는 시장 시스템의 보이지 않는 기반이라는 것을 접근 가능하지만 학문적으로 엄격한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경제 이론과 프레임워크: 경쟁, 신뢰, 그리고 상호 이익

가장 초기의 고전적 경제 이론에서 현대적 행동 통찰력에 이르기까지 경제학자들은 시장에서의 자발적인 교환이 상호 이익과 당사자 간의 일정 수준의 신뢰에 근거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종종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애덤 스미스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인도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스미스는 *국부론* (1776)에서 우리가 정육점 주인, 양조장 주인 또는 빵집 주인의 자비심에서 저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대한 그들의 배려에서 저녁을 얻는다고 유명하게 관찰했습니다. 플러스수학.org. 거래에서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플러스수학.org - 즉, 자유로운 교환은 본질적으로 상호 이익에 근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 이익은 양측이 교환이 공정하고 상대방이 약속한 대로 제공할 것이라고 믿을 때에만 실현됩니다. 스미스 자신이 지적했듯이, **이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특정한 도덕적 규범과 제도적 틀이 필요합니다.** 계약은 존중되어야 하고, 제품에 대한 정보는 이용 가능해야 하며, 법치주의는 계약을 시행해야 합니다. 플러스수학.org. 다시 말해, 고전적 이론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의 원활한 기능은 신뢰, 정직, 규칙 준수의 기반을 *전제로*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시장 거래는 사기나 계약 위반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릴 것입니다.

이후의 경제 사상가들은 신뢰가 효율적인 시장을 뒷받침한다는 생각을 강화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케네스 애로우는 사실상 "모든 상업 거래에는 신뢰라는 요소가 있다" 지적했습니다. www2.델로이트닷컴. 케네스 애로우는 이것이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개되는 거래(예: 신용, 보험 또는 투자 거래)에서 더욱 그렇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서는 한 쪽이 다른 쪽의 미래 성과에 의존해야 합니다. 신뢰가 없다면 당사자들은 거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거나 거래의 비효율성을 높이는 높은 비용(법적 보호, 모니터링 및 집행)을 부담하게 됩니다. 사실 케네스 애로우는 신뢰가 경제에서 일종의 **유효한 역할을 하여 교환의 마찰을 줄인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경제 이론에서 광범위한 합의를 반영합니다. 낮은 거래 비용과 원활한 시장 기능은 사회적 신뢰와 신뢰할 수 있는 제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Douglass North 와 같은 제도 경제학자들이 강조했습니다. North 는 신뢰와 강력한 제도가 거래 비용을 낮추면 더 많은 경제 활동이 일어나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lawliberty.org. 반대로, 신뢰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두려움과 서류 작업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어 상거래가 빨라집니다. 한 경제 역사가가 말했듯이, "신뢰도가 높은 사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거래 비용을 줄여줍니다" lawliberty.org 이는 지역 사회에서의 신뢰성이 매우 귀중한 경제적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신뢰는 또한 케인즈 경제학과 현대 거시경제 사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종종 비이성적인 기업 신뢰의 물결을 설명하기 위해 "동물적 충동"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투자와 경기 순환을 주도했습니다. 케인즈가 동물적

충동이라고 부른 것은 **투자자가 시장의 미래에 대해 갖는 신뢰 또는 낙관주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뢰 또는 확신이 높을 때 기업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고 고용합니다. 신뢰가 증발하면 이자율이나 기본 원칙에 관계없이 투자가 고갈됩니다. 따라서 케인즈는 **경제 전망에 대한 주관적 신뢰가 총 수요와 성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침체기에는 객관적인 조건이 투자에 유리하더라도 비관주의와 불신은 스스로를 실현하는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대 정책 입안자들은 이를 반영합니다. 은행, 시장 및 기관에 대한 신뢰(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종종 위기 관리의 주요 목표입니다. 본질적으로, **케인즈 이론은 집단적 신뢰(또는 그 부족)가 순전히 경제 정책의 효과를 증폭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인다**. 정부 조치(경기 부양 지출과 같은)는 종종 신뢰를 강화하고 "펌프를 가동"하여 민간 행위자들이 다시 참여하는 데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동 경제학은 순수한 자기 이익과 신뢰, 공정성, 심지어 사랑이라는 인간적 요소 사이의 격차를 더욱 메웁니다. 순전히 합리적인 호모 에코노미쿠스와 달리 실제 사람들은 사회적 선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정성과 호혜성을 중시하고, 표준 이론이 이탈을 예측할 때에도 종종 다른 사람을 신뢰합니다. 수많은 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예를 들어 **신뢰 게임**에서 한 플레이어는 돈을 받고 두 번째 플레이어에게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보낸 금액은 곱해져 "파이"가 커지고 두 번째 플레이어는 첫 번째 플레이어에게 금액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플레이어의 순전히 자기 이익을 위한 전략은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것이며, 첫 번째 플레이어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아야 한다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첫 번째 플레이어가 돈을 보내고 많은 두 번째 플레이어가 공정한 반환으로 보답 *합니다*. **이 결과는 신뢰와 호혜성이 인간의 경제적 행동의 일부임을** 의미합니다. 나바 아슈라프(Nava Ashraf)와 공동 저자(2006)의 실험에 따르면 신뢰는 물질적 반환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사람들은 원칙이나 친절에 따라 행동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였습니다. 우리세계데이터터.org. 다시 말해, 참가자들은 종종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거나, 보상이 아닌 관계 자체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우리세계데이터터.org. 이러한 발견은 약간의 "사랑" - 또는 적어도 공감과 윤리적 관심이 - 경제적 결정에 포함된다는 생각과 일치합니다.

애덤 스미스는 그의 *도덕 감정 이론* (1759)에서 인간이 순전히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인간은 공감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승인을 원합니다. 그는

개방적이고 정직한 행동이 신뢰를 낳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솔직함과 개방성은 신뢰를 달래줍니다. 우리는 우리를 기꺼이 믿어주는 사람을 믿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org. 반대로, "예비와 은폐는 오히려 불신을 불러일으킨다"(즉, 불신) 마르크스주의자들.org. 이 통찰력은 시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투명성과 선의는 신뢰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반면, 비밀주의나 기만적인 행동은 의심을 낳고 협력을 붕괴시킵니다. 따라서 스미스의 도덕 철학에서 현대 행동 연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상호 신뢰와 타인에 대한 배려(본질적으로 친사회적 또는 "사랑의" 행동)가 잘 기능하는 경쟁에 필수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경쟁은 냉정한 계산의 진공 상태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평판, 공정성, 관계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 맥락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고전 경제학은 개인의 이기심이 적절한 조건, 특히 신뢰와 강제적 윤리 규범의 존재 하에서 어떻게 상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케인즈 거시경제학에서 제도 경제학 및 행동 경제학에 이르기까지 이후의 이론은 모두 시장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신뢰, 투명성 및 윤리적 행동의 중심성을 강화했습니다. **시장 경쟁은 신뢰에 의해 뒷받침될 때만 작동합니다.** 즉, 계약이 존중될 것이라는 신뢰, 통화 및 신용이 가치를 유지할 것이라는 신뢰, 제품이 안전하고 광고된 대로라는 신뢰,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속이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입니다. 매우 현실적인 의미에서 성공적인 시장 경제는 탐욕이나 속임수가 아닌 신뢰와 협력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이기심을 상호 이익으로 전환합니다. 경험적 데이터로 이동하면서 오늘날 경제에서 이 신뢰 요인이 얼마나 측정 가능하고 중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경험적 데이터 및 사례 연구: 신뢰, 투명성 및 경제적 성과

시장은 신뢰와 투명성으로 번창한다는 이론적 주장은 경험적 데이터와 실제 사례 연구에 의해 강력하게 뒷받침됩니다. 경제학자와 사회과학자들은 국가와 산업 전반에 걸쳐 이러한 개념을 정량화하기 위해 신뢰 지수 와 투명성 측정을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더 높은 신뢰와 더 큰 책임은 지속적으로 더 나은 경제적 결과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뢰가 경제적 번영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투명성과 책임 메커니즘이 시장이 최적으로 기능하도록 돕는 방법을 보여주는 몇 가지 주요 데이터 포인트와 사례를 살펴봅니다.

성장의 원동력으로서의 신뢰: 국가 간 연구에서는 사회적 신뢰와 경제 성장 사이에 강력한 긍정적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신뢰(종종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을까?"와 같은 설문 조사 질문으로 측정)는 국가의 경제적 성공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제 연구에 대한 한 메타 분석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의 비율이 10 퍼센트 포인트 증가하면 연간 1 인당 GDP 성장률이 약 0.5 퍼센트 포인트 www2.델로이트닷컴. 이는 상당한 영향입니다. 맥락을 살펴보면, 글로벌 1 인당 성장률은 연평균 몇 퍼센트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신뢰가 높은 사회(예: 북유럽)에 대한 분석은 신뢰가 경제에서 거래 비용을 극적으로 줄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법적 분쟁이 적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검증의 필요성이 낮아지고, 보다 원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통해 신뢰가 높아지면 보다 효율적인 비즈니스, 투자 및 혁신이 노르덴.lv. 간단히 말해서, 신뢰는 경제의 바퀴에 기름을 바르고 더 빠르고 매끄럽게 돌게 합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 수준이 높은 국가는 다른 모든 것이 동일하다면 더 강력한 장기 성장을 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www2.델로이트닷컴.

투명성, 책임성 및 투자: 신뢰와 함께 투명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운영에 대해 투명할 때 이해관계자 사이에 신뢰가 형성됩니다. 경험적으로, 부패가 낮고 투명성이 높을수록 경제적 성과가 더 강해집니다. 매년 부패 인식 지수를 발표하는 Transparency International 은 부패가 경제적으로 왜 그렇게 큰 피해를 주는지 강조합니다.

"부패는 신뢰를 침식하고,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경제 발전을 방해합니다."

투명성.ORG.

투자자들은 규칙이 어겨지거나 정보가 은폐되는 불투명한 환경에 자본을 투자하기를 꺼립니다. 국제 통화 기금(IMF)은 부패(투명성/책임성 부족의 대리)가 민간 투자를 억제하고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둔화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투명성과 거버넌스 지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더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나 스웨덴과 같은 국가의 기업 재무 보고 및 정부 예산의 높은 투명성은 투자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차입 비용이 낮고 경제가 더 회복력이 강합니다. 시장은 투명성에 보상합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높은 책임

기준을 유지할 때 대출자와 주주가 덜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본 비용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연구 - 북유럽 경제: 북유럽 국가(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는 신뢰와 투명성이 경제적 성공을 어떻게 강화하는지에 대한 사례로 자주 인용됩니다. 이러한 사회는 매우 높은 수준의 사회적 신뢰를 자랑하며, 많은 관찰자는 이를 가치 있는 사회적 자본의 한 형태 또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로 간주합니다.

[노르덴.lv](#) [노르덴.lv](#). 이러한 국가에 대한 높은 신뢰는 기업이 악수 거래에 의존할 수 있고, 법적 갈등이 드물며, 노사 간 또는 회사 간 협력이 더 원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북유럽 지역의 높은 신뢰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혁신적인 경제 중 하나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노르덴.lv](#). 한 분석에 따르면 사회적 신뢰가 10%포인트 증가하면 경제 성장률이 0.5%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는 전 세계적 조사 결과와 긴밀히 일치합니다. [노르덴.lv](#). 게다가 북유럽의 낮은 부패와 높은 정부 투명성은 대중의 신뢰를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과 덴마크는 지속적으로 *가장* 부패하지 않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인간 개발과 1인당 GDP 면에서도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투명한 거버넌스와 신뢰의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국가의 기업은 예측 가능한 규칙과 윤리적 행동이 표준인 환경의 혜택을 누리며, 의심이나 과도한 관료주의의 방해 없이 시장 경쟁이 번창할 수 있습니다.

신뢰와 "공유 경제": 신뢰의 가치를 보여주는 현대적 사례 연구는 Airbnb, Uber 및 기타 공유 경제 플랫폼과 같은 피어투피어 마켓플레이스의 부상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인터넷에서 낯선 사람들 간의 신뢰를 조작하여 허공에서 글로벌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Airbnb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낯선 사람의 집에서 방을 빌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명백한 신뢰 장벽을 극복했을까요? 이 플랫폼은 평판 시스템(상호 평가 및 리뷰), 신원 확인 및 보험 보장을 사용하여 신뢰를 조성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자는 이러한 시스템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높은 평가를 받은 호스트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좋은 리뷰를 받은 게스트는 환영받습니다. 그 결과 신뢰 인프라 없이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거래(렌탈, 승차 등)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실제 사례는 *투명성과 책임성(리뷰 및 검증된 프로필을 통해)을 높이면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낯선 사람들이 거래에 기꺼이 참여하게 되어 상호 이익(호스트/운전자의 수입, 게스트/승객의 편의성 및 비용

절감)을 실현하게 되는데, 이는 플랫폼이 정보 비대칭과 그렇지 않으면 교환을 방해할 수 있는 두려움을 완화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서 부상하는 소위 "신뢰 경제"는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솔루션이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경우 경쟁과 협력이 합쳐집니다. 개인은 최고의 서비스(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하는 동시에 플랫폼이 유지하는 협력적 신뢰 프레임워크에 의존합니다.

시장 위기와 신뢰 상실의 비용: 우리는 또한 투명성과 신뢰의 중요성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봅니다. 투명성과 신뢰가 무너지면 시장은 실패합니다. 2008 년 세계 금융 위기는 분명한 사례로, 금융 시장에 대한 신뢰의 파국적 상실로 부분적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위기에 이르러 복잡한 금융 상품(예: 모기지 담보 증권 및 파생 상품)이 불투명한 방식으로 판매되었고 위험에 대한 핵심 정보가 완전히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모기지가 불이행되기 시작했을 때 투자자들은 은행이 제공한 평가나 보증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뢰는 사라졌습니다.* 은행 간 대출은 은행이 서로의 신용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결되었고, 투자자들이 속거나 독성 자산을 보유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면서 신용 시장이 붕괴되었습니다. 폭락은 투명성이 부족하고 책임이 실패하면 시장 참여자가 대량으로 물러나 신뢰가 감소하고 경제가 마비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은 이제 더 명확한 자본을 보유하고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복잡한 금융 상품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 시장이 다시 기능할 수 있도록 신뢰를 회복하려는 시도입니다. 실제로 2008 년 이후 주식 시장과 은행 시스템의 회복은 특정 금융 해결책만큼이나 *신뢰* 회복 (스트레스 테스트, 새로운 규제, 중앙은행 보증을 통해)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신뢰와 투명성이 단순한 추상적인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미덕이 없으면 위기와 부의 손실 측면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위의 데이터 포인트와 사례는 중요한 교훈을 잘 보여줍니다. 시장은 투명성, 책임성, 신뢰성에 따라 변창합니다. 높은 신뢰는 모든 거래에서 마찰을 줄여 더 많은 무역과 협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명확한 정보와 정직한 거래는 경쟁이 긍정적 합계가 되도록 합니다. 즉, 아무도 은밀하게 서로를 약화시키려 하지 않을 때 모두가 이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뢰가 낮은 환경은 사람들이 속임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물러나거나 자원을 낭비함에 따라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기회를 놓치고, 종종 침체에 시달립니다.

실제로 이는 신뢰를 구축하는 정책과 제도(예: 계약 집행, 부패 방지 조치, 공개 기준, 정직에 대한 커뮤니티 규범)가 도덕적으로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필수적임을 의미합니다. 현대의 신뢰 지수 (예: Edelman Trust Barometer 또는 World Values Survey 신뢰 측정)와 협력 지표 (예: 공정한 사업 관행의 보급 또는 시민 사회의 힘)는 경제학자와 투자자가 주시해야 할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이는 시장의 장기적 건강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법적 요건이나 자발적 윤리를 통한 투명성과 책임성은 번영하는 시장 생태계가 자라나는 비옥한 토양이라는 것이 거듭거듭 입증되었습니다.

기술적 영향: 블록체인, AI, 디지털 금융이 신뢰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법

우리는 기술이 경제 거래에서 신뢰의 기반을 극적으로 재편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는 기술 발전이 자연스럽게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무결성과 투명성을 증가시키는 특이점**에 서 있습니다. 세 가지 기술은 신뢰 강화 기능으로 특별히 주목할 만합니다. **블록체인, 인공지능, 그리고 더 광범위한 디지털 금융 도구 모음** (핀테크 앱에서 실시간 데이터 분석까지)입니다. 이들 각각은 정보 비대칭과 사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가 거래와 서로에게 두는 신뢰를 강화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이러한 기술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봅니다.

블록체인: "신뢰 기계"와 급진적 투명성

블록체인 기술(및 일반적으로 분산원장 기술)은 혁신적인 "신뢰 기계"로 불려 왔습니다. 블록체인의 특별한 점은 단일 중앙 기관이 제어하지 않는 **안전하고 투명하며 변조 불가능한 거래 원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거래에서 신뢰는 중개자(은행, 에스크로 에이전트, 청산소 등) 또는 법적 집행을 통해 확립되었습니다. 블록체인은 이를 암호화 증명으로 대체하거나 보완합니다. 블록체인의 모든 거래는 여러 노드(컴퓨터)에 기록되고 확인되면 변경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불변의 감사 추적**이 생성되어 투명성의 극치입니다. *The Economist* 는 블록체인을 통해

서로에 대한 특별한 신뢰가 없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원장을 공동으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중개자를 신뢰할 필요성이 크게 줄어든다고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는 공급망입니다. 기업은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원산지에서 매장까지 제품(식품이나 다이아몬드 등)을 추적합니다. 각 단계가 기록되고 소비자 또는 파트너는 품목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명성은 *누구나 기록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예: 위조 상품 또는 비윤리적인 조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구축된 **분산형 거래소(DEX)**는 투명성이 어떻게 신뢰를 높이는지 보여줍니다. 불투명하고 회사에서 관리하는 기존의 중앙 집중형 거래소(CEX)와 달리 Uniswap 과 같은 DEX 는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볼 수 있는 스마트 계약으로 실행됩니다. 모든 거래와 규칙은 오픈 소스입니다. 연구자들은 *"스마트 계약과 블록체인 인증으로 뒷받침되는 DEX 는 거래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예: 투자자는 거래 데이터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쉽게 위조할 수 없습니다)"* 밝혔습니다. [아파조프.org](https://apacrypto.org). 이를 통해 DEX 는 시장의 성실성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얻는 데 있어 독특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파조프.org](https://apacrypto.org). 예를 들어, 모든 거래량은 블록체인에서 공개되기 때문에 분산형 플랫폼이 수치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은밀한 조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가짜 거래를 삽입하려는 시도는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실제로 커뮤니티 분석가는 종종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불규칙성을 포착합니다). 결과적으로 참가자는 가격 및 거래량 데이터가 실체라는 확신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변동성이 매우 큰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많은 사람이 블록체인이 **기존 시장에서는 결코 없었던 수준의 투명성과 감사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장기적인 약속을 봅니다. 이는 악의적 행동의 비용을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csis.org, 부정행위는 지울 수 없고 공개적으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을 넘어 **블록체인은 시장 경제에 중요한 여러 분야에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탐구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원(신원 도용을 방지하고 개인에게 자격 증명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 재산 등록부(명확하고 부패하지 않는 토지 소유권 보장), 심지어 투표 시스템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투표나 공공 지출을 기록하면 정부는 선거 과정과 예산을 훨씬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사기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략 및 국제 연구 센터의 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선거, 정부 거래, 관료 시스템 및 미디어에서 투명성이 부족할 때마다 부패의 기회가 있습니다... 기술 발전은 민주주의의 투명성과 책임을 높이는 데 귀중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도구 중*

하나가 블록체인입니다." [csis.org](https://www.csis.org) 변조 방지 기록을 통해 신뢰와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블록 체인은 시장뿐만 아니라 시장이 의존하는 거버넌스 구조 자체를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csis.org](https://www.csis.org).

블록체인은 신뢰의 필요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사람이나 기관을 신뢰하는 것에서 수학과 코드를 신뢰하는 것으로 전환합니다. 코드가 건전하고 네트워크가 안전할 때 이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이미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이 자선 기부(기부자는 기금이 정확히 어떻게 사용되는지 볼 수 있음)와 음악 로열티 지불(아티스트에게 스트림당 즉시 지불하고, 모든 재산을 추적하는 개방형 원장이 있음)에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은 정보 비대칭이 최소화되는 완벽하게 투명한 시장이라는 이상에 경제 시스템을 더욱 밀접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확장성, 잘못된 코드 또는 해킹 위험과 같은 과제가 남아 있지만 궤적은 명확합니다. **블록체인은 거래의 핵심에 투명성을 내장하여** 현대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의 기본 제공 기능으로 신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금융: 데이터 중심의 신뢰

인공 지능(AI)과 디지털 금융 도구도 서로 다른 방식이기는 하지만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분석 및 패턴 인식 분야의 AI는 **재무 정보의 무결성과 기관의 책임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감사 및 규정 준수가 그 예입니다. 전통적으로 기업이 재무 규정을 준수하고 수익을 정확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 집약적이고 불완전한 프로세스였으며 때로는 사기를 잡지 못했습니다(Enron 과 같은 악명 높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AI 시스템은 방대한 데이터 세트를 면밀히 조사하여 실시간으로 이상이나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으므로 부정 행위를 숨기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AI 기반 알고리즘은 밀리초 이내에 사기 거래(신용 카드 또는 증권 거래)를 감지하여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시장 참여자는 *시스템이 사기꾼을 잡을 것이라는 더 큰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AI 는 또한 소비자와 규제 기관에 금융을 보다 투명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공개 또는 대차대조표를 AI 가 분석하여 대중에게 보다 간단한 용어로 제시하여

나쁜 행위자가 이용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설명 가능한 AI** 라는 개념이 등장하여 알고리즘(대출 승인 또는 신용 평가 등)에 의해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추론을 사용자에게 투명하게 만들어 해당 결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업계 기사에서는 *"AI는 정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여 감사 및 금융 내 신뢰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재무 정보의 신뢰성과 사용된 방법의 일관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데이터스니퍼닷컴](#). 인간의 오류와 편견을 줄이고 거래의 100%를 분석함으로써(감사원이 하던 것처럼 샘플만 분석하는 대신) AI는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재무 보고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클라이언트, 규제 기관 및 시장 전체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데이터스니퍼닷컴](#).

또한 실시간 대시보드, 오픈 뱅킹 API, 핀테크 앱과 같은 디지털 금융 도구(종종 부분적으로 AI 기반)는 사용자에게 금융 흐름에 대한 전례 없는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일부 지역의 **오픈 뱅킹** 규정은 은행이 고객이 타사 앱과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도록 허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즉,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모든 금융 정보를 집계하여 보고, 서비스를 투명하게 비교하고, 수수료나 실수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을 촉진합니다. 핀테크 스타트업은 환율이나 송금 수수료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또는 예산의 모든 페니가 어디로 가는지 보여주는 것과 같이 한때 불투명했던 영역의 커튼을 벗겨내는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금융은 이전에는 접근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웠던 정보를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제공합니다.

또 다른 영역은 **스마트 계약** (어떤 경우에는 블록체인과 AI의 혼합)입니다. 이는 조건이 코드에 직접 작성된 자체 실행 계약입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을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 스마트 계약은 공항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항공편이 지연되면 자동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사가 청구를 수락할 것이라고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자동화되고 양측에 투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소액 대출 플랫폼은 AI를 사용하여 신용 기록이 얇은 차용인을 위한 대체 신용 점수를 만들어 신용도가 결정되는 방식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이전에 제외되었던 사람들에게 신뢰(대출 형태)를 확대합니다.

기술은 양면적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오용될 경우 AI는 신뢰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정보나 개인 데이터를 조작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예: 딥페이크 비디오 또는 편향된 알고리즘). 따라서 **윤리적 AI와 알고리즘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규제 기관과 시민 사회는 알고리즘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이 AI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우리의 주제와 일치합니다. 고무적인 소식은 많은 혁신가가 **사용자의 신뢰를 얻으려면 기술이 설계상 투명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수행하면 디지털 도구는 모든 참여자가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분석 가능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을 괴롭히는 정보 비대칭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오늘날의 기술 동향은 **신뢰가 인프라에 내장된 미래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부정직을 숨기기 어렵게 만드는 개방형 원장을 제공합니다. AI는 정보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개선하여 불일치나 위험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디지털 금융 플랫폼은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정직한 행동을 자동화합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투명한 시장이라는 교과서적 이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듯합니다. 우리는 기술의 도움으로 일반 시민이나 투자자가 내부자만큼 관련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지점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경쟁 환경이 급진적으로 평준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궤적이 계속된다면 숨겨진 정보로 인한 고전적인 시장 실패의 범위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흥미로운 토론의 장을 마련합니다. 기술이 거의 *완벽한* 투명성과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면 경쟁과 시장 효율성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철학적 및 윤리적 차원: 경쟁, 신뢰 및 사랑 - 시장 "실패" 재고

신뢰와 투명성이 있을 때 경쟁이 번창한다는 것을 확립했으므로 이제 더 깊은 철학적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경제 생활에서 경쟁, 신뢰, 그리고 우리가 "사랑"(또는 윤리적 관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사이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시장이 실패하거나 나쁜 결과를 낳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경쟁에 결함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신뢰와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이 섹션에서는 **시장 실패는 일반적으로 경쟁 개념의 내재적 도덕적 결함보다는 정보 비대칭(또는 다른 신뢰 결핍)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완벽한 신뢰의 진정으로 투명한 세상, 즉 모든 거래에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가 내장된 세상에서 시장은 이론적으로 효율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달성할 것입니다. 시장이 불충분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신뢰와 정직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이론상 완벽한 경쟁은 완벽한 정보를 가정합니다. 그 가정이 무너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풀어보겠습니다.

경쟁 vs. "사랑": 그들은 불화하고 있는가?

언뜻 보기에 경쟁(각 개인이나 회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함)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의미하는 사랑과 같은 원칙과 상치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의 통찰력을 통해 보았듯이 *상호 이익에 의해 인도되는* 경쟁은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자기 이익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냅니다. 경쟁이 파괴적이기보다는 건설적이 되려면 **공정한 경쟁과 규칙에 대한 존중**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여기서 신뢰와 윤리가 등장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뢰는 사랑의 가까운 사촌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먹이로 삼을 적대자가 아니라 교환의 파트너로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고객의 요구를 가장 잘 충족시키기 위해 경쟁할 때, 그들은 암묵적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장기적으로)은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사기나 착취만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판과 시장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큼니다. 반면에 **신뢰할 수 있는 제품, 정직한 마케팅, 좋은 고객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강력한 신뢰를 구축하는 회사는 종종 충성도와 장기적인 성공을 얻습니다.** 이는 고객의 웰빙에 대한 배려와 계몽된 자기 이익의 일치를 반영합니다. 많은 현대 비즈니스 리더는 *의식적 자본주의 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며, 본질적으로 성실성, 투명성, 그리고 물론 지역 사회와 이해 관계자에 대한 약간의 "사랑"으로 운영하는 것이 실제로 경쟁 우위라고 주장합니다.*

철학적 관점에서 **사랑(또는 이타주의)과 시장 경쟁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은 경쟁을 건설적으로 만드는 사회적 자본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지역 농산물 시장이 있습니다. 상인은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경쟁하지만, 고객을 유치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친근하고 활기찬 시장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도 공통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뢰와 선의가 장기적으로 더 많은 사업을 유치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돕거나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예: 품질 기준에 동의하거나 협동 조합 매대를 공유). 이런 의미에서 경쟁자조차도 일종의

동지애나 상호 존중을 보여줍니다. 상호 의존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스포츠와 유사합니다. 팀은 경기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모든 사람이 규칙을 준수하고 경기를 존중하는 경우에만 경쟁이 공정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한 팀이 비밀리에 공의 공기를 빼거나 선수를 도핑하기 시작하면(신뢰를 깨는 경우) 경쟁 정신이 파괴됩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에는 공정한 플레이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시장 경제에서의 '사랑'을 경쟁이 더 큰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고 무자비한 자유 경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윤리적 접착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와 같은 역사적 인물들은 이 이중성을 이해했습니다. 스미스는 자유 시장을 옹호하는 한편, 사회의 도덕성과 동정심에 대해서도 길게 썼습니다. 그는 공감, 공정성, 정의에 대한 인간의 감정이 이기적인 충동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사람들이 규칙에 따라 놓고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복지를 고려할 때만 작동합니다. 스미스의 말에 따르면, "*우리를 신뢰하려는*" 사람은 보답으로 우리의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org](http://markssocialists.org) – 이 상호주의 원칙은 황금률과 매우 유사하며, 장기적인 상업적 관계에 기본이 됩니다. 따라서 철학적으로 **사랑(공동체에서 아가페 또는 형제애로 이해됨)은 경쟁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맥락을 만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정직, 신뢰성, 자선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미덕은 시장에서 더 낮은 거래 비용과 더 협력적인 행동으로 직접 변환됩니다.

정보 비대칭: 시장 실패의 진짜 범인

시장이 실패할 때 – 폭락, 지속적인 비효율성 또는 불공평한 결과 등 – 공통적인 요인은 종종 **정보 비대칭 또는 신뢰의 붕괴**이며, 경쟁 과정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정보 비대칭**은 거래에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보다 더 많거나 더 나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착취 또는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 조지 에이커로프가 제공한 고전적인 예는 중고차를 지칭하는 "*레몬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판매자는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진정한 품질을 알고 있지만 구매자는 모릅니다. 이러한 비대칭으로 인해 전체 시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자동차가 "레몬"(나쁜 품질)일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기껏해야 평균 가격만 지불하고, 이로 인해 공정한 가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정직한 판매자가 시장에서 밀려납니다. 결국 저품질 자동차만 남게 되는데, 이것이 시장 실패입니다. 에이커로프는

노벨상을 수상한 비대칭 정보 이론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정보 불균형이 시장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베스토피디아닷컴](#). 중고차의 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경쟁 자체가 아니라 **신뢰와 투명성의 부족**입니다. 구매자와 판매자는 동등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상호 이익이 되는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실패는 자발적 교환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보 구조에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많은 시장 실패로 일반화됩니다. 대출자가 차용자를 신뢰할 수 없을 때 **신용 시장은 실패하고(신용 배급으로 이어짐)**, 보험자가 고위험 고객을 분별할 수 없을 때 **보험 시장은 실패하고(역선택으로 이어짐, 가장 위험한 고객만 보험에 가입하여 가격이 상승함)**, 고용주가 지원자의 자격 증명이나 직업 윤리를 신뢰하지 못할 때 **노동 시장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취업 부족이나 인척주의로 이어짐)**. 이러한 각각은 본질적으로 정보 비대칭 문제입니다. 실제로 경제학자들은 정보 비대칭과 관련 현상(도덕적 위험, 역선택)을 비효율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논리적 의미는 지팡이를 휘두르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만들고 모든 행위자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면** 이러한 실패 중 많은 부분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 품질에 대한 완벽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인증이 있다면(위조할 수 없는 블록체인 자동차 내역이나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의 보고서를 상상해보세요) 좋은 자동차는 좋은 가격을 요구하고 중고차 시장은 효율적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Akerlof는 보증이나 반품 정책과 같은 솔루션을 신뢰 격차를 메우는 방법으로 암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시장이 번창할 수 있도록 **거래에 대한 구매자의 신뢰를 높이는 전략**입니다. [인베스토피디아닷컴](#).

다른 고전적인 시장 실패 사례, 예를 들어 외부성 (오염)이나 공공재는 어떨까요?

처음에는 이것들이 신뢰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조차도 투명성/신뢰 각도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정보가 숨겨지거나 오염자가 책임을 지지 않을 때 오염이 만연해집니다. 사실상 사회는 기업이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거나 규제 기관이 규칙을 시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신뢰가 배신당하면(숨겨진 배출, 뇌물 등으로 인해) 외부 비용으로 인해 시장 실패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시민들이(환경 데이터의 투명성을 통해) 정보를 얻고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 시장은(평판 효과 또는 더 친환경적인 제품에 대한 수요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 방위나 인프라와 같은 공공재는 순수한 시장에서 개인 간의

신뢰 문제로 인해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무임승차 문제에 가깝습니다) 세금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중요해지는 정부에 종종 제공됩니다. 사회는 납부된 세금(거래의 한 형태)이 서비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지불을 거부하고 시스템은 공공재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경우에 **투명성과 기관에 대한 신뢰는 문제를 크게 완화합니다.**

중요한 윤리적 함의가 나타납니다. **"시장 실패"를 탐욕이나 경쟁 부족의 증거로 비난하기 전에, 우리는 그 시장이 실제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투명성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결책은 경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정보 흐름, 사기에 대한 더 강력한 법률, 윤리적인 사업 문화 육성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중고차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 중고차 프로그램, 레몬법, 카팩스 보고서와 같은 것을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개입은 투명성과 신뢰를 높여 시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몇몇 회사가 정보를 조작하거나 불법적인 거래에 관여하여 어떤 부문에서 경쟁이 부족한 경우, 그 답은 시장 메커니즘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와 공정한 경쟁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신뢰와 투명성의 이론적 시나리오에서 – 모든 회사가 자사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하고, 모든 개인이 선호도와 제약에 대해 솔직하며, 모든 거래 조건이 명확하다고 상상해보세요 – 시장은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완벽한 경쟁의 이상에 접근할 것입니다. 그 이상적인 세계에서 자원은 가장 높은 가치의 용도에 효율적으로 할당되고(복지 경제학의 제 1 기본 정리에 따라), 남은 문제(거래할 자원이 없는 사람들을 돕는 방법 등)는 시장 효율성이 아닌 분배 윤리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결코 그 완벽한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기술적, 사회적 진보는 우리를 더 가까이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경쟁이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더 믿을 수 있고, 시장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종종 치명적인 결함은 정보 비대칭, 즉 진실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사랑"과 정직함이 부족한 것입니다.** 경쟁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니라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경쟁은 천사들 사이에서 – 또는 정직하고 투명한 행위자들 사이에서 – 아름답게 작동하지만 악마들 사이에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는 단순히 일부 행위자들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이는 우리가 문자 그대로 천사의 행동을 기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규범과 시스템을 정직과 신뢰의 방향으로 옮기는 것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그렇게 할수록 시장의 긍정적 합계의 힘을 더 많이 발휘하게 됩니다. 사랑과 윤리적 규범이 우세한 곳에서는 경쟁이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상승하는 조수가 모든 배를 들어올리는 게임이 됩니다. 사랑이 없고 속임수가 우세한 곳에서는 경쟁이 모든 사람에 대한 전쟁으로 전락하여 종종 외부 개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핵심적인 윤리적 요점은 **투명성과 신뢰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한 후 시장 비효율성을 측정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시장 결과를 본다면,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의 근저에 신뢰나 정보의 붕괴가 있는가입니다. 종종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함으로써 시장은 스스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시장 과정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것보다는,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주요 방법으로 시장의 제도적, 도덕적 틀을 강화하는 것(정보 공개 보장, 사기 처벌, 기업 윤리 교육 장려)을 요구합니다.

결론: 자유민주주의 2.0 을 향하여 – 시장의 진화와 보다 윤리적인 사회

시장 경제가 더 큰 신뢰와 투명성을 향해 진화하는 것은 효율적인 거래 그 이상의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민주 사회를 강화하고 더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래를 **"자유 민주주의 2.0"** 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여기서 자유 시장(자유 교환, 경쟁)과 자유 민주주의(개인 권리, 법치주의, 동의에 의한 정부)의 원칙이 기술 주도 투명성에 의해 강화되고 업데이트됩니다. 이 마지막 섹션에서 우리는 논의된 추세(기술을 통한 신뢰 증가, 경제에서 사랑/윤리의 중요한 역할, 실패를 예방하는 데 있어 정보의 우선권)가 시장과 민주주의가 서로를 강화하여 더 책임감 있는 사회를 만드는 미래를 가리키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분명한 궤적 중 하나는 **기술이 시민과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는 기업과 정부 모두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성실성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공개되고 접근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과 공무원 모두 더 큰 감시를 받으며 운영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시장의 이상, 즉 경쟁, 선택, 책임을 거버넌스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사용하여 공공 지출이나 선거 결과를 추적하는 경우 부패가 눈에 띄지 않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부패가 신뢰를 침식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는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경고 [투명성.org](https://www.transparency.org) 정부와 시민 간의 정치적 시장에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투명성을 높이는 기술과 규범을 채택함으로써 사회는 **그 신뢰를 회복하고 강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민주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관을 신뢰하면 세금 납부, 법률 준수, 시민 생활 참여 등 건설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며, 이를 통해 해당 기관은 공공재와 공정한 정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가 높은 민주주의(논의한 북유럽 국가와 같은)에서는 시민 참여율이 더 높고 사회 계약이 더 탄력적입니다. [노르덴.lv](https://www.norrdan.lv) 신뢰는 시장의 생명선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생명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에서 더 큰 투명성을 달성하는 사회는 정부에서도 동일한 것을 기대하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자유민주주의 2.0은 모든 정부 활동을 위한 오픈 데이터 포털, 정부 지출에서 기업 공급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블록체인 검증,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서 이상을 표시하는 AI 감시와 같은 특징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부정행위는 숨기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이는 법률이나 도덕 교육의 필요성을 없애지는 않지만, 마치 CCTV 카메라를 사방에 설치하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것처럼(이 비유는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제기하지만) 이를 증가시킵니다. 순효과는

정직한 행동이 장려될 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조에 의해 실질적으로 강제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민이 휴대전화로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을 감사하고 각 달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투자자가 배출량과 자원 조달에 대한 변경 불가능한 원장을 확인하여 회사의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실현 가능한 지점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의 투명성은 대중의 신뢰를 높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행동하라는 대중의 압력도 높일 것입니다. 비용을 절감하는 기업이나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은 곧 폭로되어 대중 여론과 소비자 선택의 "시장"에서 반발을 받거나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 자체는 이러한 새로운 조건 하에서 우리가 지금 외재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내재화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투명성이 존재한다면 오염을 일으키는 회사는 즉시 그렇게 하는 것이 드러나 고객을 잃거나 지체 없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제품의 사회적 및 환경적 발자국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기반으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실제로 시장에서 더 윤리적인 관행에 "투표"합니다. 이런 종류의 역동성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활동주의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보이콧이나 보상 조식을 더 쉽게 만든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정보와 투명성이 많을수록 시장 결과가 사회의 윤리적 가치와 더 일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식을 바탕으로 그러한 가치에 따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으로는 경쟁이 가격과 품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뢰성과 미덕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기업은 가장 윤리적이 되기 위해 경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보에 입각한 고객 기반이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사랑과 윤리를 시장 경쟁의 영역으로 가져와 선행과 선행 사이에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신뢰와 투명성이 불평등과 사회적 분열을 해소하고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신뢰 부족은 종종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줍니다. 예를 들어, 신용 기록이 없는 사람(빈곤층이나 젊은층에게 흔함)은 금융 기관의 신뢰 부족으로 인해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하거나 대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ID 또는 대체 신용 평가와 같은 기술은 평판이나 거래에 대한 검증 가능한 기록을 제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시장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핵심적인 민주주의 가치인 포용성을 촉진합니다. 또한 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할 때 불공정한 이점이나 조작된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줄어듭니다. 사람들은 공정한 경쟁의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경쟁이 공정하고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혜택을 창출하는 것으로 인식될 때 사회적 응집력이 향상됩니다. 우리는 **신뢰가 높은 사회가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더 나은 삶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르덴.lv](http://nordenn.lv). 이는 건강한 사회와 민주주의의 특징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장 경제에서 신뢰와 사랑의 역할은 과장될 수 없습니다. 신뢰는 보이지 않는 손을 보완하는 **보이지 않는 악수**입니다. 명시적 계약을 실행 가능하게 만드는 암묵적인 사회적 계약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윤리적 규범을 고수하는 의미의 사랑은 자본주의에 양심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아이디어와 기술에 의해 주도되는 시장 진화는 점점 더 투명성과 책임을 구조에 짜 넣고 있습니다. 경험적 증거는 이것이 더 많은 번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철학적 주장은 이것이 더 **진정한** 번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장과 인간 존엄성, 상호 존중이 결합된 것입니다. 블록체인, AI 및 기타 도구를 활용하여 시장의 모든 구석에 빛을 비추면서 **완벽한 신뢰와 투명성**으로 인해 시장 실패가 드물고 시장의 성공이 모든

사람에게 더 이로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자유주의 민주주의는 서로의 성실성을 강화하는 경제적, 정치적 제도를 통해 2.0 버전이라고 부르며 활력을 되찾습니다. 그 세계로 가는 길은 도전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개인 정보를 관리하고, 새로운 형태의 기술 독점을 피해야 합니다 등). 하지만 그 방향은 유망합니다. 궁극적으로 신뢰와 사랑에 뿌리를 둔 시장 경제는 인간성을 높이는 경제입니다. 참여자를 기계의 톱니바퀴가 아니라 상호 이익을 위한 거대한 협력 노력의 파트너로 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노력할 가치가 있는 시장 경제입니다. 경쟁과 연민이 더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회를 향해 손을 잡고 나아가는 경제입니다.

참고문헌:

- 아담 스미스는 시장 교환이 자비보다는 자기 이익에 호소하여 상호 이익에 의존한다고 강조합니다. [플러스.수학.org](#) 그러나 시장이 기능하려면 **도덕적 규범(신뢰, 정보, 법치주의)**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플러스.수학.org](#).
- *Kenneth Arrow(1972)*는 "거의 모든 상업 거래에는 신뢰라는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고 유명하게 말했습니다. [www2.델로이트닷컴](#) 경제 활동의 기본 요소로서 신뢰를 강조합니다.
- 높은 수준의 사회적 신뢰는 더 강력한 경제적 성과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이 10% 증가하면 GDP 성장률이 약 0.5 %** [www2.델로이트닷컴](#) 신뢰는 거래 비용을 낮추고 투자를 용이하게 해줍니다. [노르덴.lv](#).
- 북유럽 국가들은 **신뢰가 경쟁 우위**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높은 사회적 신뢰는 갈등과 법적 비용을 줄여 견고한 성장에 기여합니다. [노르덴.lv](#). 신뢰는 북유럽의 성공과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여겨진다. [노르덴.lv](#).
- 투명성과 책임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Transparency International 에 따르면, "**부패는 신뢰를 침식하고,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경제 발전을 방해합니다.**" [투명성.org](#) 이는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시장이 훼손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
- **정보 비대칭** 이론은 많은 시장 실패를 설명합니다. 판매자가 구매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시장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인베스토피디아닷컴](#). Akerlof 의 *레몬 시장*은 숨겨진 양질의 정보가 어떻게 역선택으로 이어지고 좋은 제품이 시장에서 밀려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인베스토피디아닷컴](#).
- **블록체인 기술**은 투명하고 변조 불가능한 기록을 제공하여 신뢰를 높입니다. "**스마트 계약과 블록체인 인증으로 뒷받침되는 DEX 는 거래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어**" 투자자의 신뢰를 얻는 데 유리합니다. [아파조프.org](#). 블록체인의 변경 불가능한 원장은 사기 비용을 높이고 거래에서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함으로써 신뢰를 심어줍니다. [csis.org](#).

- **인공 지능** 과 디지털 도구는 더 큰 정확성과 개방성을 통해 신뢰를 강화합니다. 금융 분야의 AI 는 *"정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여 신뢰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더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정보와 향상된 대중의 신뢰로 이어집니다. [데이터스니퍼닷컴](#).
-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 이론*은 **신뢰가 상호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믿어줄 의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믿습니다... 보류와 은폐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킵니다 "* [마르크스주의자들.org](#). 다시 말해, 개방성과 정직성은 신뢰를 낳고, 비밀스러움은 의심을 낳습니다. 이는 개인적 관계와 시장 거래에 모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 신뢰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신뢰가 사회적, 경제적 구조를 하나로 묶는 *"결속력" 역할*을 합니다. [노르덴.lv](#). 그런 사회의 사회적 계약은 말 그대로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신뢰가 떨어지면 잃을 것이 많고 투명성과 책임을 유지함으로써 얻을 것이 많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노르덴.lv](#)

Prompt 4: 자유민주주의에서 책임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책임과 신뢰라는 두 기둥 위에 세워진 거버넌스 시스템입니다. 선출된 지도자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시민들은 그 지도자들과 기관들이 대중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호 이해가 흔들리면 민주주의 시스템은 흔들리거나 심지어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책임과 신뢰가 민주주의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 탐구하며, 역사적 거버넌스 시스템에서 현대 민주주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를 추적합니다. 지난 300 년 동안 대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산업 혁명과 함께 번성)와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과 같은 오늘날의 기술 혁신이 새로운 형태의 직접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지 살펴봅니다. 군주제, 공화국, 독재 정권, 심지어 원시 공동체 사회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모든** 형태의 정부는 궁극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책임과 신뢰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시된 핵심 주장은 지도자나 시민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종종 사회적 또는 정치적 붕괴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거버넌스 실패의 역사적, 현대적 사례(고대 정권의 몰락에서 현대 민주주의 위기까지)는 이 패턴을 설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투명성과 책임 기술을 활용하여 책임을 강화하고 신뢰를 재건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때로는 "자유민주주의 2.0"이라고도 함)을 살펴봅니다.

민주적 거버넌스의 역사적 진화: 계몽주의에서 디지털 시대까지

우리가 아는 현대 대표 민주주의는 계몽주의와 혁명의 시대인 18 세기 후반에 형성되었습니다. 1700 년대 후반에 미국과 프랑스의 사상가와 혁명가들은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 이상을 부활시켜 새로운 정부 모델로 변형했습니다. 이 18 세기 "민주주의 부흥주의자들"이 다음 300 년 동안 인민 주권을 지배적인 정치 제도로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ko.위키피디아.org](https://ko.wikipedia.org). **사회 계약**, 개인 권리, 선거 대표와 같은 원칙을 제정함으로써 그들은 정부의 정통성이 통치받는 자의 동의에서 나오는 시스템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이전 시대의 신성한 권리 군주제와는 급진적인 변화였습니다. 이

대표적 모델은 19 세기와 20 세기에 걸쳐 확산되고 발전하여 점차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거버넌스를 위한 벤치마크가 되었습니다.

특히, **산업 혁명** (18 세기 후반~19 세기)은 민주주의의 확장과 일치했습니다. 산업화가 경제와 사회를 변화시키면서, 그것은 또한 오래된 정치 구조를 붕괴시키고 거버넌스에서 발언권을 요구하는 새로운 사회 계층(도시 노동 계층과 부르주아 계층 등)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연구소.글로벌](#) 산업 혁명을 일으킨 혁신은 *"근대 민주주의를 육성하고 현대 경제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한 분석에서 언급했습니다. [연구소.글로벌](#). 1800 년대에 많은 국가(특히 유럽과 북미)에서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개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귀족이나 지주를 넘어 투표권을 확대하고, 선출된 의회가 부상하고,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보다 광범위한 교육과 보다 빠른 커뮤니케이션(신문과 전신 등)의 도움을 받은 민주적 통치가 번성했습니다. 20 세기 초에는 대표 민주주의가 세계 여러 지역에 확고히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제한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예: 여성과 소수 민족은 20 세기까지도 참정권을 위해 싸웠습니다).

오늘날 21 세기에 민주주의는 또 다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화 시대와 디지털 혁명에 직면해 있으며, 일부는 그 영향을 산업 혁명과 비교합니다. 인터넷, AI,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의 발전은 사람들이 기관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여기에는 보다 **직접적인 민주주의**의 가능성이 포함됩니다. 지난 300 년 동안 직접 민주주의(시민이 직접 법률이나 결정에 투표하는 것)는 소규모 커뮤니티나 지역 국민투표를 제외하고는 실용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이론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실시간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술은 안전하고 투명한 **전자 투표** 와 기록 보관을 가능하게 합니다. AI 와 결합하면 시민들이 전통적인 중개자 없이 집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한 기술 논평에서 언급했듯이 *"블록체인과 AI 를 함께 사용하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전 세계적으로 전송하여 전자 투표 절차를 추적하고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csdn.net](#)

다시 말해, 이러한 기술은 개방적이고 직접적인 참여를 용이하게 하여 모든 투표가 집계되고 가시화되도록 보장하고, 이를 통해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Democracy Earth Foundation 과 같은 조직은 이미 이 분야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P2P 네트워크,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문제에 대해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적 중재에 작별 인사를 고합니다.** [블로그.csdn.net](#). 이

진행 중인 변화는 우리가 "민주주의 2.0" 시대에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여기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이 더 큰 시민 권한 부여, 투명성 및 책임에 대한 기술 지원으로 재구성됩니다.

그러나 기술이 민주주의의 메커니즘을 변화시키더라도 책임과 신뢰의 근본적인 중요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18 세기 의회에서든 21 세기 블록체인 기반 포럼에서든 지도자는 책임을 져야 하고 시민은 민주주의가 기능하려면 시스템의 무결성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역사상 다양한 거버넌스 시스템이 책임과 신뢰의 균형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또는 처리하지 못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거버넌스 시스템에서의 신뢰와 책임

역사를 통틀어 인간 사회는 절대 군주제와 독재정권에서 공화국과 소규모 공동체 의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를 실험해 왔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통치자와 통치받는 사람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신뢰가 없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 복지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지 않고는 거버넌스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여러 시스템(군주제, 독재정권, 공화국, 원시 공동체 사회)을 분석하고 각 시스템에서 책임과 신뢰(또는 그 부족)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군주제(1인 절대 통치) : 군주제에서 권력은 단일 통치자(왕 또는 여왕)에게 집중되며, 종종 신성한 권리 또는 세습으로 정당화됩니다. 역사적으로 절대 군주는 사실상 통제되지 않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즉, 공식적인 **책임** 메커니즘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감독 부족은 군주의 개인적 책임과 미덕에 엄청난 중요성을 부여했습니다. 현명하고 정의로운 왕은 공정하게 통치함으로써 신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지만, 폭군적이거나 무책임한 왕은 불신을 심고 불안정이나 반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액튼 경이 19 세기에 유명하게 관찰했듯이,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합니다."* oll.libertyfund.org 법적 또는 제도적 견제가 없다면 선의의 군주조차도 권력을 남용할 수 있으며, 이는 액튼의 *"역사적 책임은 법적 책임의 부족을 매워야 한다"* 는 주장을 강조합니다. oll.libertyfund.org 절대 정권에서. 실제로 많은 군주국은 의무감을 심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예를 들어, 귀족과 왕이 국민에 대해 책임감 있게 행동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의 정신**). **하지만 군주가 과도한 과세, 불의 또는 방치를 통해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습니다. 전형적인 예는 혁명 이전의 프랑스입니다. 1780년대 후반까지 부르봉 군주국은 재정적으로 무책임하고 서민의 고통에 무관심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군주국이 위기(국가 파산 및 식량 부족 등)를 개혁하거나 책임감 있게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중의 신뢰가 침식되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혁명 직전에는 정부 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엄청나게 낮았습니다. [나이오브레볼루션스닷컴](#), 그리고 온건한 목소리조차도 왕이 타협할 것이라는 믿음을 잃었습니다. 군주제에 대한 신뢰의 붕괴는 무책임한 정권을 전복하려는 혁명적 요구에 직접적으로 불을 지폈습니다.

독재정권(한 명 또는 소수에 의한 독재적 통치): 독재정권은 군주정권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나 소수의 파벌에 권력을 집중시키지만 일반적으로 군주가 주장했던 역사적 또는 종교적 정통성은 없습니다. 독재정권에서 지도자들은 종종 무력이나 조작을 통해 권력을 탈취하고 강압, 선전, 반대 세력 제거를 통해 통제력을 유지합니다. 그러한 정권에 대한 **신뢰는** 보통 낮습니다. 두려움이 종종 진정한 신뢰를 대체합니다. 반대 의견이 억압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복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종종 지도자의 책임에 대한 신뢰보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독재자들은 때때로 자신을 국가의 보호자 또는 아버지 같은 인물로 묘사하여 신뢰를 구축하려고 하지만 민주적 견제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은 책임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독재정권에서는 부패와 권력 남용이 빈번합니다. 군주정권과 마찬가지로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무책임함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역사는 투명성과 책임감이 부족하여 재앙을 초래한 독재자의 사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권위주의 통치 하의 **소련**은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와 같은) 재앙을 겪었고, 정권의 강박적인 비밀주의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악화되었습니다. 책임과 투명성이 크게 부족하여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더욱 떨어졌습니다. 많은 독재 정권은 궁극적으로 위기에 몰락하는데,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국민과 공무원의 신뢰를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독재자의 약속(경제적 발전, 안보 등)이 헛된 것으로 판명되고 정권의 남용이 쌓이면 사회는 종종 한계에 도달합니다. 예를 들어 루마니아의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세스쿠는 수년간의 경제적 오경영과 잔혹한 탄압으로 인해 보안군조차 그를 신뢰하지 못해 혁명이 일어나면서 1989년에 몰락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독재정권은 부정적인 사례를 통해 책임성의 절실함을 강조합니다.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강제하는 메커니즘이 없다면 신뢰는 종이처럼 얇고 안정성은 환상일 뿐입니다.

공화국과 대표 민주주의: 공화국 또는 대표 민주주의에서 지도자는 국민을 대신하여 이상적으로는 법치주의와 헌법에 따라 통치하도록 선출(또는 다른 방식으로 선택)됩니다.

이 시스템은 **책임** (견제와 균형, 선거 및 법적 책임)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대중 사이에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독재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정확히 설계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사회 계약은 시민이 대표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대표자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기 선거, 독립적인 사법부, 언론의 자유 및 기타 기관은 투명성과 책임을 만들어 시민에게 지도자가 실패하더라도 시스템이 스스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믿음을 제공합니다. 역사는 대표 민주주의가 이러한 원칙을 고수할 때 안정적이고 대중의 신뢰를 얻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19 세기와 20 세기에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기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의 평화로운 이양과 참정권 확대에 의해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점차 높아졌습니다(그 과정에서 좌절과 배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공화국의 지도자들이 부패하거나 무반응이 되면, 즉 책임을 회피하면 신뢰가 빠르게 침식될 수 있습니다. 악명 높은 사례는 1920 년대의 **바이마르 공화국** 독일입니다. 바이마르 독일은 1 차 세계 대전 이후 민주주의 실험으로 시작되었지만, 지도자들은 경제 위기(초인플레이션, 그 후 대공황)와 심각한 정치적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부가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많은 독일인이 민주주의 과정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1930 년대 초, 대중의 괴로움과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분노로 인해 결정적인 조치를 약속한 극단주의 정당에 대한 지지가 급증했습니다. [브리태니카닷컴](#) 아돌프 히틀러는 민주주의의 기능 장애가 다른 사람들의 무책임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주장함으로써 이를 이용했습니다. [브리태니카닷컴](#). 본질적으로 바이마르 정부가 책임(경제적 안정과 공공 질서 보장)을 다하지 못한 것이 신뢰의 붕괴를 초래했고, 나치 독재 정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결과는 책임과 투명성이 부족하면 민주주의 체제조차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 민주주의도 신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많은 국가에서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최근 수십 년 동안 감소하고 있습니다. 종종 이러한 감소는 "*대중이 공공 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해 의심하는 데 기인합니다*" [오에씨디.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대표자들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않거나 정부 절차가 불투명하다고 느낄 때, 그들의 신뢰는 감소하여 민주주의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민주주의는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책임성(부패 방지 조치, 투명성 법률 등)을 강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원시 공동체 사회(소규모 공동체에서의 직접 통치): 현대 국가와 대규모 정부가 생기기 훨씬 전에 인간은 부족, 씨족 또는 마을 공동체와 같은 소규모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사회 중 다수는 **원시 민주주의** 또는 공동체 의사 결정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는 공식적인 통치자가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신 장로나 전체 공동체가 중요한 문제를 집단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했으며, 때로는 합의나 다수결 투표로 결정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50~100 명으로 구성된 수렵채집인 무리에서 의사 결정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참여가 있는 그룹 협의회에서 이루어졌다고 지적합니다. [ko.위키피디아.org](https://ko.wikipedia.org). 이러한 형태의 거버넌스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알고 있고 각 구성원의 기여가 눈에 띄기 때문에 개인적 책임과 상호 신뢰에 크게 의존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마을 의회에서 한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무책임하게 행동하면(할당된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룹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함), 커뮤니티는 필요한 경우 사회적 압력이나 추방을 통해 직접 책임을 묻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개인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신뢰해야 합니다. 생존이 이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공동 사냥이나 수확을 생각해 보세요. 각 개인의 노력과 정직성은 전체 그룹의 복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비밀을 지킬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투명성**은 작은 커뮤니티에서 자연스럽게 높습니다. 흥미롭게도, 초기 부족 거버넌스는 종종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순환하거나 유동적인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리더십은 종종 신뢰에 의해 얻어지는 **책임**이고 그 신뢰가 깨지면 상실되었습니다. 가장 초기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작고 신뢰에 기반한 사회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거버넌스에 직접 참여할 때 개인적 책임이 뚜렷하고 대면 관계를 통해 신뢰가 구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회가 커지면서(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서로를 아는 규모를 넘어서는 경우) 그 수준의 직접적인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더 큰 인구는 계층적 통치(족장, 왕 등)로 돌아섰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직접적인 합의가 번거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더 큰 사회는 리더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모든 시스템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진실을 봅니다. **책임감이 없다면 권력은 정통성을 잃고, 신뢰가 없다면 거버넌스는 안정성을 잃습니다.** 군주제와 독재 정권은 통치자가 무책임해지고 국민의 신뢰나 충성심을 잃었을 때 종종 무너졌습니다. 선출된 공무원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작은 커뮤니티에서도 개인이 책임을 포기하면 사회적 유대감이 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는 책임과 신뢰가 단순히 미덕의 이상이 아니라 모든 정부 시스템이 지속되기 위한 실질적인 필수 요소라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신뢰의 붕괴: 무책임함이 사회적 붕괴로 이어지는 방식

이 글의 핵심 주장은 지도자나 정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면 시민들 사이에 신뢰가 붕괴되고, 그 붕괴가 심각하면 사회적 또는 정치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여러 역사적 맥락에서 관찰할 수 있으며, 이는 책임과 신뢰가 왜 그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것" 이라고 말할 때 , 그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실수나 부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거부하고, 정부가 정보를 숨기고(투명성 부족), 공무원들이 공익보다 개인적 또는 파벌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심지어 시민들이 시민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 중 어느 것이든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에서 신뢰는 사회적 계약을 유지하는 접착제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지도자와 시민 모두)이 일반적으로 규칙을 지키고 커뮤니티의 복지를 돌볼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침식되면 그 결과는 냉소주의, 소외, 그리고 종종 혼란이나 권위주의적 반발입니다. 역사적 사례 연구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후기 로마 공화국과 로마 제국: 영사, 원로원, 대중 의회의 혼합 체제로 수세기 동안 지속된 로마 공화국은 기원전 1 세기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 주요 요인은 로마 엘리트의 책임이 약화된 것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같은 야심 찬 장군과 정치인들은 공화주의 규범보다 개인의 권력을 우선시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인물들이 원로원을 우회하거나 위협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은 실패했습니다. 로마는 내전에 빠졌습니다. 공화국의 신뢰에 대한 마지막 치명타는 아우구스투스(옥타비아누스)가 사실상 자신을 첫 번째 황제로 확립했을 때 왔습니다. 오래된 공화주의 제도는 형태상으로 계속되었지만 그에 대한 신뢰는 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실제 권력은 황제에게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몇 세기가 빨리 지나고, 우리는 서로마 제국이 서기 5 세기에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쯤에는 정부의 부패와 불안정으로 국가가 심각하게 약화되었습니다. 황제의 교체가 빠르게 이루어졌고(종종 폭력을 통해), 한때 효율적이었던 로마 행정부는 쇠퇴했습니다. **History Channel 은 로마의 후반기에 "비효율적이고 일관성 없는 리더십"이 문제를 심화시켰다고** 언급합니다 . 75 년 동안 20 명 이상의 남자가 왕위를 차지했는데, 대개는 전임자가 살해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역사닷컴](#) . 제국을 지도하는 원로 정치가들의 기구로

여겨졌던 로마 원로원은 스스로 부패하고 황제들의 과잉 행위를 견제할 힘이 없게 되었습니다. [역사닷컴](#). 그 결과, "시민적 자부심이 약해졌고 많은 로마 시민들이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역사닷컴](#) 다시 말해, 로마인들은 황제나 관리들이 대중의 이익을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있다고 믿는 것을 멈췄습니다. 이러한 신뢰 부족으로 인해 대중은 국가를 지원하려는 의지가 약해졌고, 다양한 집단(군 장군에서 지방 엘리트까지)이 로마의 이익이 아닌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구조가 닳았습니다. 야만족이 침략하거나 분리했을 때, 로마는 통일된 대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국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충성심과 신뢰가 사라졌고, 이는 주로 지도자들의 장기적인 무책임과 시민들의 환멸 때문이었습니다. [역사닷컴](#) 로마의 몰락은 여러 원인이 있는 복잡한 사건이지만 로마인과 부패한 정부 간의 신뢰가 무너진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사회적 붕괴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역사닷컴](#).

프랑스 혁명(1789): 우리는 앞서 프랑스 군주제의 실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제 신뢰와 책임 측면에서 붕괴를 살펴보겠습니다. 1780년대 후반, 루이 16세의 정부는 파산했고 새로운 세금을 인상해야 했지만 군주제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왕의 사치, 불평등(평민은 무거운 세금을 냈지만 귀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개혁 실패로 인해 군주제는 근본적으로 **무책임한**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루이 16세가 1789년에 삼부회(국민 대표자 모임)를 소집하여 위기를 해결했을 때, 권력 공유 개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왕과 많은 귀족들은 진정한 변화에 저항했습니다. 곧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제3 신분(평민)이 국민 의회를 선언하여 더 이상 왕이 개혁을 이끌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1791년~1792년 무렵 혁명 언론은 왕이나 귀족이 국가의 최선의 이익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생각을 공개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출판물은 왕의 음모에 대한 소문과 사실을 퍼뜨려 신뢰를 더욱 떨어뜨렸습니다. 한 역사가는 혁명가들이 엘리트들이 신생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았다"**고 지적합니다.

[나이오브레볼루션스닷컴](#). 이러한 낮은 신뢰는 급진화를 촉진했습니다. 온건파는 영향력을 잃었고 군주제 폐지를 요구한 극단주의자들이 세력을 얻었습니다.

[나이오브레볼루션스닷컴](#) [나이오브레볼루션스닷컴](#). 1792년 루이 16세가 외국 군주들과 공모한 사실이 밝혀졌고(혁명을 뒤집으려는 시도), 이는 프랑스 국민에 대한 그의 배신과 무책임함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폐위되었고 나중에 처형당했는데, 국민들이 그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베스피에르와

공안위원회가 이끈 1793~94 년 *의 공포정치* 는 *역설적으로 극단적인 조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혁명 정부는 "반역자"에 대한 테러만이 공화국에 대한 충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대신, 그것은 신뢰가 얼마나 심하게 무너졌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웃들은 이웃을 감시했고, 수천 명이 불충실하다는 의심을 받고 단두대에 올랐습니다. 사회적 유대감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궁극적으로 혁명은 새로운 형태의 권위(그리고 결국 나폴레옹의 통치)가 개입했을 때에만 안정되었지만, 그때쯤에는 옛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프랑스 사례는 정부(군주제이든 아니든)가 무책임하고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모든 신뢰를 잃으면 사회 질서가 폭력적으로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정부가 합법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응하고 책임을 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현대 민주주의의 침식: 신뢰의 붕괴가 모두 즉각적인 혁명이나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주의 규범의 점진적인 붕괴와 권위주의적 대안에 대한 개방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다양한 민주주의는 대중의 신뢰가 급격히 떨어졌으며, 이는 종종 부패 스캔들 또는 거버넌스 실패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대 중반에 **"파나마 페이퍼스"** 로 알려진 스캔들은 전 세계의 수많은 정치인과 엘리트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부를 숨겼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대중을 희생하여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었다는 이러한 폭로(심각한 책임 위반)는 많은 국가에서 분노와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총리는 연루된 후 사임했습니다.

브라질에서 대규모 부패 스캔들(예: **"세차 작전"**)은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정치적 혼란과 2016 년 Dilma Rousseff 대통령의 탄핵에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투명성, 즉 개방적이고 책임질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투명성이 부족하면 소문과 냉소주의가 공백을 채우고 신뢰는 급락합니다. OECD 에 따르면 *"신뢰 감소는 대중이 공공 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 대중 참여에 대한 대응성에 대해 의심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오에씨디.오 ...](#) 다시 말해, 사람들은 지도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거나 정부가 정보를 숨기고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다고 느낄 때 신뢰를 잃습니다. **의미는** 명확합니다. 붕괴를 피하고자 하는 민주주의는 (법과 윤리적 규범을 통해) 책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거래에서 투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환멸은 사회적 분열이나 신뢰의 공백을 악용하는 선동가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원인과 결과의 패턴**이 분명합니다. 무책임(부패, 책임감 부족 또는 의무 이행 실패) -> 대중의 신뢰 상실 -> 위기 및 잠재적 붕괴. 사회적 붕괴는 항상 국가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붕괴나 시스템의 급진적 변화(예: 민주주의가 독재로 바뀌거나 그 반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붕괴에서 신뢰는 핵심적인 희생양입니다. 시민들이 권력자나 서로를 근본적으로 불신할 때 사회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법을 따르지 않고, 세금 납부를 중단하거나, 시민 생활에서 물러납니다. 아니면 "책임 있는" 주류가 자신을 실패시켰다고 생각하면 극단주의적 대안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좋은 부작용이 아니라 **생명선**입니다. 신뢰를 유지하려면 지도자와 시민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도자는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하고 공익을 보호해야 하며, 시민은 폭력에 의존하거나 참여를 해제하는 대신 건설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투표, 정보 제공, 책임감 있는 요구 등을 통해). 다음 섹션에서는 특히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 크게 약속하는 새로운 기술의 도움으로 이러한 자질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투명성, 기술, 그리고 미래: 자유민주주의 2.0 을 향하여

과거가 안정적인 거버넌스에 책임과 신뢰가 필수적이라고 가르쳐 주었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시대에 많은 민주주의가 양극화, 잘못된 정보, 그리고 국민의 신뢰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가 등장하여 책임과 신뢰를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상가와 개혁가들은 **"자유민주주의 2.0"** 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민주주의의 새로운 형태로, 더 높은 수준의 개방성과 대중 참여를 고수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기술과 혁신적인 관행을 활용함으로써 20 세기 대표 민주주의 모델보다 더 반응적이고, 더 직접적이며, 더 책임감 있는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상된 민주주의 2.0 의 두드러진 측면 중 하나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여 거버넌스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이 설명했듯이, 선거나 정부 절차에 투명성이 부족할 때마다 부패의 기회가 생기고 시민의 신뢰가 훼손됩니다. [csis.org](https://www.csis.org). 블록체인은 거래 및 투표에 대한 변조 방지 공개 원장 역할을 함으로써 이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모든 투표 또는 결정은 사실상 불변이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으므로 부정 행위나 숨겨진 변경이 극히 어렵습니다. 즉, 선거 결과나 공공 지출은 모든 시민이 쉽게 감사할 수 있어 유효성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전략 및 국제 연구 센터(CSIS)의 보고서에 따르면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가 기록되고 검증되도록 보장"하여 엄청난 수준의 데이터 무결성을 제공하고
악의적인 변조 비용을 높여 **"신뢰와 확신을 심어줍니다"** [csis.org](https://www.csis.org). 실제로 이는 시민들이
국민투표나 참여 예산에서 온라인으로 투표하고 블록체인이 실시간으로 결과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자체는 지방
선거나 지역 사회 프로젝트에 블록체인 투표를 테스트했으며, 누구나 독립적으로 집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Democracy 2.0의 또 다른 측면은 엄청난 양의 대중 의견을 관리하고 소화하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더 실현 가능해짐에 따라 정보
과부하의 위험이 있습니다. 수천 명 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의견을 표명합니다. AI는 이러한 입력을 분석하고, 합의 또는 주요 주장을 식별하고,
심지어 시민의 선호도를 반영하는 정책 옵션을 초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미래학자들은 AI "대표자" 또는 고문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개별 시민의 가치를
학습하고 분 단위 거버넌스에서 대신 투표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본질적으로 대표를
개인화합니다. 과학자 세사르 이달고의 흥미로운 TED 토크는 사람들이 입법부에서
투표하는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정치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제안했으며,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를 결합합니다. [테드닷컴 테드닷컴](https://www.ted.com/talks/cesar-idalgo-how-to-build-a-robotic-legislature). **그 아이디어는 아직
추측에 불과하지만, 민주주의를 보다 직접 적이고 관리하기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탐구를 강조합니다. 최소한 AI는 정치적 담론에서 주장을 사실로 확인하고(잘못된
정보에 대응) 정부 성과를 모니터링하여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예: 공무원의
행동이 약속이나 공약에서 벗어날 때 플래그 지정).

결정적으로, 이러한 기술은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향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AI는 정치 게임의 새로운 심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기록하고 이를 통해 플레이어(정치인, 기관, 심지어 유권자)에게 책임을 묻는 공정한
시스템입니다. **스마트 계약을** 생각해 보세요. 거버넌스에서 스마트 계약은 특정 규칙(예:
예산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법률 - 소프트웨어는 승인된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을
방지하여 과소비하려는 인간의 유혹을 제거할 수 있음)을 자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 설계에 책임을 포함시키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오픈 데이터를
사용하는 투명성 포털은 모든 시민이나 언론인이 정부 지출, 의사 결정 및
커뮤니케이션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예를 들어 예산의
모든 달러가 어떻게 지출되는지 보여주거나 정책 결과에 대한 실시간 대시보드를

제공하는 전자 정부 플랫폼을 구현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강화하는 현대적인 도구입니다. 속담처럼 "햇빛은 최고의 살균제" - 즉, 투명성은 부패와 남용의 부패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확장해서 말하면, 햇빛이 풍부한 정부는 더 큰 신뢰를 얻습니다.

"자유민주주의 2.0"이라는 용어는 기술뿐만 아니라 책임과 포용에 대한 보다 강력한 보장을 통해 민주주의적 가치를 갱신하는 것을 포괄합니다. 한 학자, 마이클 맥이크런은 최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높은 책임을 지는 자유민주주의 2.0"* [하버드에듀](#) 이러한 구상된 민주주의의 목적은 평등, 인간 존엄성, 그리고 이러한 원칙을 지지하는 책임에 확고히 기반을 둔 사회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하버드에듀](#). 다시 말해, 민주주의 2.0은 자유, 공정성, 책임성이라는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이상을 두 배로 강화하고 새로운 도구와 제도적 설계를 사용하여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자유주의 민주주의는 대표를 선출하고 다음 선거까지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0 모델에서 시민들은 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표의 성과를 평가하거나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승인이 너무 낮아지면 스마트 계약이 리콜 선거를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지속적인 책임성은 이전에는 불가능했지만, 기술을 사용하면 통치받는 사람과 주지사 간의 피드백 루프를 훨씬 더 긴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혁신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기술만으로는 신뢰를 **만들** 수 없습니다. 신뢰를 촉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실, 제대로 구현하지 않으면 기술이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예: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이 해킹되거나 AI 의사 결정이 편향적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면 사람들이 시스템을 더욱 신뢰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디지털 격차(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과 문해력을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AI와 블록체인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윤리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격려적인 점은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미래의 희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종종 선구자로 언급되는데, 시민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투표하고 거의 모든 정부 서비스에 디지털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e-Residency 및 i-Voting 시스템이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관리들은 이러한 첨단 투명성이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대만은 시민과 공무원이 투명한 포럼에서 함께 법률을 논의하고 형성하는 클라우드소싱 입법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vTaiwan" 플랫폼)을 실험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의 소유권 감각과 결과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다양한 지방 정부와 시민 단체가 참여 예산 앱을 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공공 자금의 일부를 어떻게 사용할지 직접 결정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시민들의 선택을 시행하는 데 있어 더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실행에 대한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신뢰는 개방성과 책임을 통해 획득된다는 원칙과 일치합니다.

자유민주주의 2.0 을 완전히 실현하는 미래에는 부패가 훨씬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거래가 투명하고 추적 가능하기 때문). 선거는 이슈에 집중하고 조작성이 덜할 것입니다(AI 가 허위 주장을 표시할 수 있고 시민이 이슈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투표할 수 있기 때문). 정치인은 먼 의사 결정권자라기보다는 대중의 의지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기술 덕분에 대중의 의지를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

이러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통해 책임과 신뢰를 우선시함으로써 민주주의는 많은 국가를 괴롭혀 온 냉소주의와 비관여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자신의 참여가 중요하고 지도자들이 실시간으로 진정으로 그들에게 대답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주의 2.0 에 대한 전체적인 추진은 현재의 우려에 대한 대응입니다. 즉, *책임과 신뢰를 강화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자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개혁주의적이고 보존주의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민주주의적 이상을 보존하기 위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결론

책임과 신뢰는 민주주의의 이야기에서 **끊이지 않는 실마리**를 형성합니다. 소규모 부족의 초기 실행에서 공화국과 입헌군주제의 거대한 실험, 디지털 시대의 지속적인 진화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통치자가 자신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투명성을 유지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어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대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부패하게 행동하거나 진실을 숨길 때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는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는

혁명, 쿠데타 또는 내부적 쇠퇴를 통해 붕괴될 위험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역동성은 로마와 같은 고대 정권의 몰락과 바이마르 공화국과 같은 현대의 실패, 그리고 수많은 작은 위기와 스캔들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선거나 법률을 종이 위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는 사람과 통치받는 사람 사이의 책임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신뢰는 통화이자 그 관계의 산물입니다. 시민들은 지도자에게 권력을 맡기고, 그들이 책임감 있게 행사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은 시민들이 선의로 참여하고 법을 지킬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양측이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민주주의는 번창합니다. 어느 한 쪽이 부실을 저지르면(지도자가 무책임해지거나 시민들이 불신하고 무관심해짐) 시스템은 긴장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급격한 변화, 경제적 불안, 정보(그리고 잘못된 정보)의 홍수는 모두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전례 없는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명성(오픈 데이터, 블록체인 기록, 언론의 자유)을 수용하고 포괄적인 참여(디지털 플랫폼, 시민 교육, 아마도 AI 촉진)를 장려함으로써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2.0"이라는 개념은 정부가 *"자신을 더 높은 책임으로 여기는"* 미래를 구상합니다. [하버드에듀](#) - 즉, 그들은 선거 기간뿐만 아니라 언제나 국민에게 책임을 지도록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책임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일반 대중에게, 이 글의 요점은 희망적이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주주의에서 책임과 신뢰의 중요성은 단순한 학문적 개념이 아니라, 식수가 안전하다고 믿는지 여부부터, 당신의 투표가 중요하다고 믿는지 여부, 어려운 시기에 당신의 지역 사회가 평화롭게 유지되는지 여부에 이르기까지,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신뢰와 책임은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인프라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인프라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이해 관계가 있습니다. 리더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정직하게 행동해야 하며, 시민들은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할 때 책임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에 속한 *모든 사람은* 신뢰에 기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윤리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시민은 정보를 갖춘 감시자이자 정직한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는 경고와 영감을 모두 제공합니다. 역사는 신뢰가 증발하면 어떤 시스템도, 심지어 오래된 민주주의도 붕괴에 면역이 없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또한 사람들이 지도자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고 이를 달성하여 신뢰를 회복한 개혁과 쇄신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투표권 확대, 부패 방지 기관 설립, 정보 공개법, 그리고 이제 시민 기술 혁신은 모두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여정의 일부입니다.

결론적으로, 책임과 신뢰는 민주주의 실험을 추진하는 두 가지 엔진입니다.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면서 이러한 가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희망적인 비전은 역사에서 얻은 지혜와 현대 혁신의 도움으로 붕괴에 강할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더 진정으로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명성과 책임성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자신 있게 신뢰할 수 있는 민주주의이며, 그러한 민주주의는 그 신뢰를 활용하여 폭풍을 이겨내고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번영할 수 있습니다.

Prompt 5: 왜 민주주의인가? 자유와 책임

21 세기에 진정으로 자유롭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현대 생활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책임 없이 자유를 행사할 때 새로운 위험도 드러낸다. 이 장에서는 진정한 자유가 타인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분리될 수 없다는 생각을 탐구한다.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개인적 차원에서 자유를 살펴보고, 각 영역이 어떻게 상호 연결되는지, 그리고 왜 각 영역이 책임감을 가지고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지 보여준다. 존 스튜어트 밀, 장자크 루소, 임마누엘 칸트와 같은 고전적 정치 이론가와 현대 사상가를 바탕으로, 우리는 자유 개념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리고 오늘날의 과제가 공동선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자유를 재정의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를 추적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붕괴에서 금융 위기와 사회적 격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경험적 사례 연구는 **통제되지 않은 자유**와 **책임 있는 자유**의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디지털 기술과 세계화 시대에 자유를 규제하는 데 있어 법적, 헌법적 어려움을 고려하는데, 전통적인 프레임워크는 종종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이 장은 *"자유민주주의 2.0"*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진정한 자유는 자유와 책임을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필요한 한계와 상호 의무를 인식해야만 개인과 기관이 장기적으로 자유를 확보할 수 있으며, 자유가 사회적 안정과 집단적 복지와 함께 번성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유와 포괄적 범위: 정치적, 경제적, 개인적

자유는 정치적 권리, 경제적 선택, 개인적 자율성을 포괄하는 다면적인 개념입니다. 이러한 자유의 영역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유형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반면 다른 유형의 자유를 소홀히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사회는 궁극적으로 그 자유를 증진하고자 하는 자유를 훼손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각 영역의 범위와 각 영역이 책임감과 다른 사람의 평등한 자유에 대한 존중으로 어떻게 조절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정치적 자유: 정치적 자유는 사람들이 스스로 통치하고, 의견을 표현하고, 집회하고, 투표하고, 공공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자유는 *무정부 상태*나 절대적인 방종을 의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법과 의무의 틀 안에서 운영됩니다. 어떤 집단이나 다수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정치적 자유는 알렉시 드 토크빌이 경고한 "다수의 폭정"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민주주의 통치 자체가 억압적이 됩니다. [역사.하노버.에듀.](#) 실제로 토크빌은 "인민은 무엇이든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혐오스러운 격언"이라고 썼으며, 민주적 다수결에 의한 *무제한적인 권력은 본질적으로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역사.하노버.에듀](#) [역사.하노버.에듀](#). 진정한 정치적 자유는 법치주의, 견제와 균형, 소수자 권리 보호와 결합되어야 합니다. 시민은 말하고 투표할 권리뿐만 아니라 정보를 얻고, 반대 의견을 용인하고, 선거 결과를 존중하는 것과 같은 책임도 가지고 있어 자유가 혼란이나 권위주의로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정치적 행위자가 책임 없이 자유를 남용하면 민주주의가 붕괴되거나 모든 사람의 자유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는 직업을 선택하고, 자발적인 교환에 참여하고, 재산을 소유하고, 노동이나 기업의 결실을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시장 경제는 이러한 자유를 바탕으로 번창하며, 이는 혁신과 번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나 책임이 없는 경제적 자유는 어려움과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역사는 시장이 최소한의 규칙이나 감독으로 운영되는 자유방임적 태도가 어떻게 재앙을 초래했는지에 대한 냉정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1920년대 미국에서 "*자유방임*"과 규제 완화 정책 하에서 일어난 투기 붐은 1929년 주식 시장 붕괴와 대공황으로 이어졌습니다. [표준.net](#). 그 기간 동안 미국 지도자들은 대체로 "은행, 주식, 채권 또는 경제의 다른 기본적인 측면을 규제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으며", 통제 불능의 투기와 결국 붕괴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표준.net](#). 마찬가지로, 2007-08년 금융 위기 이전에도 광범위한 금융 규제 완화와 통제되지 않은 위험 감수가 취약한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궁극적으로 붕괴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의 공식 사후 분석에 따르면 "금융 혁신과 규제 완화가 이전 수십 년보다 "훨씬 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fdic.gov](#). 두 경우 모두 시장 참여자들이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단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는 사회 전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대량 실업, 빈곤, 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약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자유는 남용을 방지하는 규칙(사기 방지법, 독점 금지법 집행, 소비자 보호 등)과 기본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에 의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4년에 지적했듯이, "진정한 개인의 자유는 경제적 안정과 독립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독재

정권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대통령직.ucsb.edu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을 위한 최소 수준의 경제적 복지를 보장하는 것(책임 있는 거버넌스와 정책을 통해)은 자유 자체를 보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개인적 자유: 개인적 자유는 우리가 사생활에서 내리는 시민적 자유와 개인적 선택을 포괄합니다. 여기에는 사상과 신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생활 방식의 자유, 그리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율권이 포함됩니다. 자유주의 사회는 언론, 종교, 결사의 자유와 같은 개인적 자유를 기본적 인권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자신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암묵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그의 *해악 원칙*에서 이러한 균형을 유명하게 표현했습니다. 개인은 자신,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대한 주권자이며,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신에게만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ko.위키피디아.org ko.위키피디아.org 밀은 사회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o.위키피디아.org. 이 원칙은 명확한 선을 그어냅니다. 개인의 선택(말에서 행동까지)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시작할 때까지 가능한 한 자유로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언론의 자유는 있지만 처벌받지 않고 중상모략하거나 폭력을 부추길 자유는 없습니다. 이동의 자유는 있지만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공공 도로에서 취한 채로 운전할 자유는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개인적 책임은 개인적 자유의 당연한 귀결로 작용합니다. 자제력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개인적 자유는 방종으로 변해 지역 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회적 예를 생각해 보세요. 동네의 모든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밤새도록 큰 소리로 음악을 틀면 모두가 집에서 평화로운 즐거움을 잃을 것입니다. 또는 더 심각한 상황에서 개인이 전염병 동안 공중 보건 조치를 준수하기를 거부하면 많은 사람이 건강하게 살고 살 수 있는 자유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개인적 자유를 책임감 있게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동등한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18 세기 초에 혁명 선언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각 사람의 자연권 행사에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 외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법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습니다."* ko.위키피디아.org 진정한 개인의 자유는 구속의 진공상태에서 꽃피우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타인에 대한 존중과 책임의 기본 규범을 준수하는 시스템에서 꽃피웁니다.

정치적, 경제적, 개인적 자유의 세 가지 자유 영역은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강화하고 종종 겹칩니다. 정치적 자유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경제적 자유는 개인의 선택과 정치적 참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영역에서의 실패는 다른 영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이나 불안정은 극단주의를 부추기거나 시민의 평등한 참여 능력을 침식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역사가 보여주듯이). 마찬가지로, 개인적 표현을 억압하는 사회는 자유로운 사고에서 나오는 정치적 혁신과 경제적 창의성을 억누를 가능성이 큼니다. 간단히 말해, 자유는 ~~체제적~~ 입입니다 . 그것은 제약의 부재가 아니라 건강한 제도, 문화적 규범, 상호 신뢰의 산물입니다. 자유가 모든 사람에게 의미 있으려면 집단적 책임감을 가지고 행사해야 합니다. 개인, 기업, 정부가 모두 자신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동일한 자유에 의해 구속된다는 것을 인식할 때, 모든 측면에서 자유는 더욱 안전하고 확장됩니다. 자유는 책임과 균형을 이룰 때 극대화된다는 이러한 통찰력은 다음 섹션에서 살펴보겠지만 정치 사상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론에서의 자유의 균형: 고전 사상가에서 현대적 도전까지

철학자와 정치 이론가들은 오랫동안 자유를 정의하는 방법과 자유에 내재된 한계나 의무에 대해 고심해 왔습니다. 많은 고전적 사상가들은 자유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절대적인 허가로 취급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진정한 자유는 이성, 정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이론을 현대적 관점과 통합하면 지속적인 흐름이 드러납니다. **책임과 제지가 없다면 자유는 스스로를 훼손합니다.**

계몽주의 시대의 자유주의자들은 자연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권리를 옹호함으로써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존 로크는 사람들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자연권을 옹호했지만, 그는 자유를 마음대로 하는 것과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는 자연법에 의해 제한되었으며, 자연법은 아무도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또는 소유물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로크에게 영감을 받음)은 합법적인 정부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토마스 제퍼슨조차도 정부 권력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썼는데, 이는 자유가 해를 끼칠 지점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ko.위키피디아.org](https://ko.wikipedia.org). 혁명적 프랑스에서 *인권과 시민의 권리 선언*

(1789)은 우리가 보았듯이 이 아이디어를 거의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즉, 자유에는 다른 모든 사람이 동일한 자유를 누리는 데 필요한 것 외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ko.wikipedia.org 다시 말해, 고전적 자유주의 교리는 한 사람의 권리 범위를 보편적으로 제한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책임을 자유의 정의에 포함시켰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 보다 이 균형을 더 유명하게 표현한 사상가는 없습니다. 1859 년 에세이 *On Liberty*에서 밀은 개인은 자신에게만 관련된 문제에 대해 완전한 자율권을 가져야 하지만, 개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경우 사회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ko.wikipedia.org ko.wikipedia.org. 밀의 **해악 원칙**은 자유주의 사상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문명 사회의 어떤 구성원에 대해서도 그의 의지에 반하여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ko.wikipedia.org. 그는 개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해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자유의 남용입니다. 동시에 밀은 사회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개성을 억압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직접 해를 입지 않는 한 편심과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옹호했습니다. 따라서 밀의 작업은 전반적인 웰빙에 대한 공리주의적 관심에 근거하여 최대의 자유와 필요한 사회적 제약 사이에 신중한 균형을 이룹니다.

영국 자유주의에서 대륙적 사상으로 옮겨가면서, 우리는 **장자크 루소**에서 다르지만 보완적인 관점을 접하게 됩니다. 루소는 개인이 집단적 규칙에 따라 살면서도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한 역설에 맞섰습니다. 그는 *사회 계약* (1762)에서 진정한 자유는 사회 밖에서가 아니라 정의롭게 질서 정연한 사회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회 계약에 들어가면, "인간이 사회 계약으로 잃는 것은 그의 자연적 자유이고... 그가 얻는 것은 시민적 자유와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입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org](http://marxists.org) 즉,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자유(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의 힘에 의해서만 제한됨)를 포기하고 일반 의지에 따른 법과 권리의 보호를 얻는다.

[마르크스주의자들.org](http://marxists.org). **가장 중요한 것은 루소가 도덕적 자유**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를 자신이 규정한 법에 복종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단순히 욕망의 충동은 노예 상태이고, 우리가 스스로 규정한 법에 복종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org](http://marxists.org). 이러한 반 직관적인 생각은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공정한 법률(*일반 의지*)을 만들고 그 법률을 준수할 때, 실제로는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지,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루소의 이상적 공화국에서 "자유로워지도록 강요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공동의 이익을 위해 동의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의지나 자신의 기본적인 충동의 폭정으로부터 당신을 해방시키는 일종의 자기 훈련입니다. 루소의 모델은 위험하게 들릴 수 있지만(실제로 자유의 이름으로 권위주의를 정당화하는 데 오용되었습니다), 그의 핵심 통찰력은 방종(제약 없이 행동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덜 자유롭게 만드는 무질서나 지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의 이익에 따른 합리적 자기 제한은 더 높은 형태의 자유입니다.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자유를 도덕 법칙과 보편적 공존과 연결하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칸트는 각 개인이 자유에 대한 타고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다른 사람의 자의적 의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독립성으로 정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자유가 보편적 법칙에 따라 다른 모든 사람의 자유와 공존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에 의해 제한된다고 유명하게 언급했습니다. 자유주의.org. 칸트는 *"자유(다른 사람의 의지의 제약으로부터의 독립)는 보편적 법칙에 따라 다른 모든 사람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 모든 인간이 그의 인간성으로 인해 소유한 유일하고 원래의 권리"* 자유주의.org. 칸트의 법과 윤리 철학에서 자유는 모든 제약의 부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률(자체 부과 도덕법 포함)에만 복종하는 조건입니다. 이는 심오한 형태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규칙으로 의지될 수 있는 방식으로만 행동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논리적으로 보편화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할 "자유"(예: 편리할 때마다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전혀 정당한 자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두 개인이 모두 자유로울 수 있는 기반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칸트는 보편적 정의의 법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강요하는 것이 자유와 일관되며,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때문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책임을 자유의 구조에 얹어 놓습니다.* 자유주의.org 자유주의.org. 간단히 말해서, 칸트 이론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자유를 주는 시스템은 모든 사람의 권리가 공존할 수 있도록 각자가 제한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유와 의무는 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강조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밀, 루소, 칸트, 그리고 다른 고전적 이론가들은 핵심 요점에 수렴합니다. **자유는 절대적인 방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부과한 한계와 상호 의무를 수반합니다.** 밀의 해악 원칙이든, 루소의 일반 의지이든, 칸트의

보편적 법칙이든, 그 메시지는 진정한 자유는 이성과 타인에 대한 존중에 의해 구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공동체를 고려하지 않고 변덕을 추구하는 통제되지 않은 자유는 갈등이나 억압으로 전락하여 추구했던 자유의 가치 그 자체를 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학자 칼 포퍼는 나중에 이 아이디어를 "자유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포착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유를 통제의 완전한 부재로 정의한다면, *궁극적으로 "괴롭힘꾼을 온순한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굿리즈닷컴](#). 다시 말해, 규칙이 없으면 강자나 악랄한 자가 약자의 자유를 억압하게 됩니다.

포퍼는 또한 관용의 관련된 역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무한한 관용은 관용의 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관용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무한한 관용을 확대한다면... 관용적인 사람들은 파괴될 것이고, 관용도 그들과 함께 파괴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주의 사회는 "관용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관용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굿리즈닷컴](#) [굿리즈닷컴](#). 20 세기 중반의 통찰력은 전체주의 운동의 부상으로 인해 촉발되었습니다. 반민주적이고 증오로 가득 찬 이념에 무제한적인 자유와 플랫폼을 제공한 개방 사회는 종종 이러한 이념이 자유를 이용해 자유를 없애는 것을 발견했습니다(나치 독일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포퍼의 해결책은 모든 인기 없는 사상에 대한 검열이 아니라 관용이 일방적이거나 순진할 수 없다는 냉정한 주장이었습니다. 자유롭고 관용적인 사회를 보존하려면 때때로 그것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을 제약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유의 조건을 보호할 책임은 폭력을 부추기기 위해 언론의 자유를 남용하는 사람들이나 민주주의를 전복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조직하는 집단에 대해서도 선을 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가 책임 있는 한계를 두고만 살아남는다는 원칙을 논란이 되지만 중요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현대 정치 사상은 특히 새로운 도전이 등장함에 따라 이러한 질문과 계속 씨름하고 있습니다. 부정적 자유 (외부 간섭으로부터의 자유)와 긍정적 자유 (행동하고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자유)라는 개념은 20 세기에 초점이 되었으며, 특히 이사야 벌린이 분석했습니다. 벌린은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경고했습니다. 부정적 자유는 최소한의 간섭을 요구하는 반면, 긍정적 자유는 때때로 개인이 스스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름으로 권위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두 형태의 자유 모두 유효하며, 자유로운 사회는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합니다. [ko.위키피디아.org](#)
[ko.위키피디아.org](#).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의 긍정적 자유를 보장하려면 교육과 경제적

지원(사람들이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가 자유의 조건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르티아 센과 마사 누스바움과 같은 사상가들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역량 접근 방식**으로 이를 확장하여 진정한 자유는 단순히 서류상의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을 갖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 교육, 기본 소득을 제공해야 하는 집단적 책임이 수반되어 공식적인 자유를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현대적 관점은 비지배로서의 자유에 대한 공화주의적 관념 (필립 페티트와 같은 철학자들이 발전시킴)에서 비롯됩니다. 이 관점은 자유가 단순히 불간섭이 아니라 자유롭다는 것은 자의적 권력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고전적 관념과 일치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나 집단도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없는 법과 책임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자유(비지배로서)를 보존하려면 국가나 사적 권력에서 폭정이 출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제도적 책임(체크 앤 밸런스, 법치주의, 시민적 미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 세기의 도전에 직면하여 이러한 이론적 원칙은 새로운 시급성을 얻습니다. 세계적 상호 연결성, 디지털 혁명, 기술적 역량은 자유에 대한 오래된 개념을 확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언론"(아마도 잘못된 정보나 증오 표현)이 수백만 명에게 빠르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을까요? 기업이 너무 강력해져 민주적 거버넌스나 개인의 사생활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적 자유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기후 변화와 같은 현대의 딜레마도 자유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구성합니다. 대기가 공유 자산일 때 기업이나 국가가 제한 없이 오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로 인한 기후 위기는 미래 세대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것입니다(실제로 오늘날 생명과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에게 자유를 18 세기나 19 세기의 정적 개념이 아니라 진화해야 하는 살아있는 개념으로 재정의하도록 강요합니다. 과거 사상가들의 지속적인 교훈은 **책임을 뺀 자유는 자기 파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과제는 그 교훈을 활용하여 자유민주주의 2.0에 적합한 자유에 대한 비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복잡한 현대에서 정의, 지속 가능성, 사회적 안정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개인적,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비전입니다.

역사 속의 통제되지 않은 자유 vs. 책임 있는 자유: 사례 연구의 교훈

추상적인 원칙은 실제 세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면 더 명확 해집니다. 역사는 사회가 자유의 경계를 시험하고 책임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을 때 그 여파를 겪은 사례로 가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범주의 경고 이야기를 고려합니다. 억제되지 않은 자유로 인한 정치적 붕괴, 규제 해제로 인한 경제적 재앙, 조절되지 않은 개인적 자유로 인한 사회적 혼란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통제되지 않은 자유(제한이나 책임이 없는 자유)가 종종 스스로의 파괴의 씨앗을 품는** 반면, 신중한 제약과 자유의 균형을 맞추면 장기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주의 붕괴(1918~1933) :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은 제 1 차 세계 대전 이후 언론, 결사, 다당제 선거의 광범위한 자유를 포함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건국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는 경제 위기와 사회적 불안의 시기에 정치적 무책임과 보호 조치의 부족과 함께 존재했습니다. 극단주의 운동(극좌의 공산주의자와 극우의 나치)은 선전을 퍼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기 위해 개방된 환경을 이용했습니다. 준군사 조직 간의 거리 폭력이 만연해졌습니다. 바이마르 헌법 자체에는 안전 밸브로 의도되었지만 결국 권위주의적 인수를 가능하게 하는 비상 조항(제 48 조)이 있었습니다. 1930년대 초,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불황에 환멸을 느낀 많은 독일인들은 정치적 자유를 사용하여 공표된 반민주주의 운동인 나치당에 투표했습니다. [역사닷컴](#). 1933년 1월, 아돌프 히틀러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총리직을 맡았고 거의 즉시 국가의 자유를 스스로에게 대항하여 이용했습니다. 그는 비상 권한을 행사하여 시민의 자유를 정지시키고, 야당을 불법화했으며, **권한 부여법**을 제국의회에 통과시켜 바이마르 민주주의를 내부에서 효과적으로 종식시켰습니다. [역사닷컴](#). 혼란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이를 용인했던 대중과 엘리트들은 곧 전체주의 정권 하에서 모든 자유가 소멸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이마르의 비극적인 종말은 종종 포퍼의 역설을 통해 보여집니다. *완전히 편협한* 나치를 용인했던 개방적 사회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는 입헌 민주주의가 반민주주의적 행동에 법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돌이켜보면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는 그 자체로 자유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방어적 책임과 결합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유의 착취를 막을 충분한 보호 장치(극단주의 정당을 막을 선거 기준 없음, 정치적

폭력에 대한 집행 부족, 비상 권한의 오용)가 없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이로부터 교훈을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전후 기본법은 민주주의 질서를 전복하려는 정당을 금지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바이마르 사례는 *시민적 책임감과 헌법적 경계심이 없는 정치적 자유는 민주주의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자유민주주의는 개방성과 시스템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조치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모든 자유민주주의 2.0 프레임워크에 적합한 교훈).

시장 규제 완화와 금융 위기: 자본주의 경제에서 역사적으로 호황과 불황은 일관된 교훈을 줍니다. 즉, 거의 무한한 자유가 있는 환경에서 운영되는 시장(적절한 감독, 윤리적 규범 또는 규제 책임 없음)은 수백만 명에게 피해를 주는 위기로 폭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929 년 미국 주식 시장 붕괴* 와 그에 따른 대공황입니다. 1920년대에는 정부가 기업에 최소한으로 간섭하는 것이 지배적인 이념이었습니다. 은행과 투자자들은 위험 감수를 억제하는 정부 규제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매우 투기적인 관행(예: 증거금 대출로 주식 매수)에 참여했습니다. 한 논평가가 지적했듯이, 그 시대의 대통령들은 "은행, 주식, 채권 또는 경제의 다른 기본적인 측면을 규제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표준.net. 이러한 통제되지 않은 경제적 자유의 결과는 거대한 투기 거품이었습니다. 1929년 10월에 거품이 터졌을 때 시장은 파국적으로 붕괴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것은 경제 침체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앙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은행이 파산했고, 미국의 실업률은 약 25%로 치솟았으며, 비슷한 붕괴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대공황의 비참함은 소수(은행가, 금융가)가 무모하게 도박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생계와 자유를 파괴할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FDR 이 관찰했듯이 경제적 안정을 박탈당한 절박한 사람들은 선동가들에게 취약해졌습니다. 1930년대 독일과 다른 지역의 경제적 혼란은 독재 정권의 부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사람들의 자유와 복지를 보호하려면 시장에 규칙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미국의 뉴딜 개혁(증권거래위원회(SEC) 설립, 예금보험, 사회보장 등)은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스스로로부터 구하고 대중의 신뢰를 보존하기 위해 경제적 자유를 가장자리에서 제한하는 책임 행위였습니다. 21세기 초로 넘어가면 *2007~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금융 규제 완화(예: 글래스스티걸법 폐지, 규제되지 않은 파생상품 증가, 통제되지 않은 서브프라임 대출)로 인해 은행과 투자 회사는 혁신하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엄청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자유는

한동안 성장을 촉진했지만, 숨겨진 취약성도 쌓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의 주택 및 신용 거품은 전 세계적인 유동성 및 신용 위기로 폭발했습니다. FDIC의 분석에 따르면 광범위한 **규제 완화**로 인해 "훨씬 덜 안정적"이고 붕괴되기 쉬운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fdic.gov. 위기가 닥쳤을 때, 수조 달러의 손실, 대량 압류, 세계적 경기 침체가 발생했습니다. 1930년대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였습니다. 다시 한번, 억제되지 않은 경제적 자유(거의 억제되지 않은 이익 추구)가 스스로를 훼손했고, 정부는 전면적 붕괴를 막기 위해 대대적으로 개입해야 했습니다(구제금, 경기 부양책, Dodd-Frank 법과 같은 새로운 규제를 통해). 결론은 시장이나 경제적 자유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번영의 강력한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책임** 있는 규칙과 감독이 그 자유를 생산적으로 이끌어내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착취적이거나 무모한 행동을 허용하는 "자유" 시장은 순환적으로 부와 자유를 파괴할 것입니다(사람들이 일자리, 집,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음에 따라). 강력한 자유주의 민주주의에서 경제 정책은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기업과 혁신을 장려하는 동시에 남용, 사기, 환경 피해, 극심한 불평등을 방지하는 신중한 규제를 제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은 시장과 시민 모두의 장기적인 자유를 보호합니다. 금융 위기의 경험은 **규제 없는 자유는 환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규제 없는 자유는 종종 나중에 잔해를 수습하기 위해 훨씬 더 가혹한 개입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절제되지 않은 개인적 자유에서 비롯된 사회적 불안정성: 사회 질서는 수많은 개인적 선택의 산물입니다. 개인적 자유가 절제되지 않고 공동체 규범을 존중하지 않고 행사될 때, 사회 구조는 닳아 없어질 수 있으며, 불안정하거나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이 원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개념입니다. 생태학자 개릿 하딘은 1968년에 이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개별 목동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가축을 공동 목초지에서 과도하게 방목하도록 내버려 두어 궁극적으로 공유 자원을 파괴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하딘의 결론은 기억에 남고 소름 돋았습니다. "**공유지의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파멸을 가져온다.**" ko.위키피디아.org. 공유지의 자유를 믿는 사회에서, 즉 모든 사람이 공유 자원에서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는 자유를 느끼는 사회에서 **파멸은 모든 사람이 달려가는 목적지**라고 그는 썼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ko.위키피디아.org. 그 비극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큰 이익을 위해 개인 소비를 제한하는 집단 협정, 규정 또는 도덕적 규범을 통해서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실제로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 해역("자유로운" 공유지)에서의 과도한

어획은 전체 어류 개체군의 붕괴로 이어졌고, 결국 모든 어촌 공동체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경 파괴는 이러한 역동성을 반영합니다. 오염과 과도한 사용은 각 행위자가 탄소를 배출하고, 폐기물을 버리거나, 삼림을 베는 것이 자유이기 때문에 발생하지만, 모든 사람이 제한 없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 모두가 그 결과(기후 변화, 건강 위기, 종의 멸종)를 겪게 됩니다. 지난 2 세기 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제한 없이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자유는 안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장기적인 자유를 위협하게 했습니다. 사회는 환경법을 제정하여 대응했으며, 이 영역에서 개인과 기업의 자유는 집단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사회적 불안정을 일으키는 또 다른 측면은 소셜 미디어 시대에 잘못된 정보와 증오 표현이 퍼지는 것입니다. 인터넷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전 세계 청중에게 게시할 수 있지만, 이 자유가 무책임하게 사용되면 폭력이나 공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메시징 앱에서 바이러스성 거짓 소문으로 인해 다양한 국가에서 폭도 집단 린치가 발생하거나,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에서 증오 선전이 실제 잔혹 행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사례(미얀마에서 로힝야 소수 민족에 대한 비극적인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는 *무엇이든 방송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자유*가 사회적 평화와 취약 계층의 안전을 훼손한 사례입니다. 민주주의는 이제 합법적인 자유로운 표현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디지털 발언에 대한 일부 책임(콘텐츠 검열, 사실 확인 등)을 부과하는 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중 보건도 제약 없는 개인의 자유에 의해 훼손될 수 있습니다. COVID-19 팬데믹 동안 일부 개인이 절대적 자유를 고집(예를 들어, 마스크 착용 안 함 또는 백신 거부)하여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봉쇄가 장기화되었고 모든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비공식적 규범이든 공식적 법률이든 **책임 있는 자유**는 집단적 재앙을 피하는 열쇠입니다. 하딘은 궁극적으로 한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자유는 필요성의 인식"이라고 그는 헤겔의 말을 인용)이 공유지를 파괴할 자유를 포기함으로써 *"다른 더 소중한 자유를 보존하고 육성"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o.위키피디아.org](https://ko.wikipedia.org). 예를 들어, 각 개인의 무제한적인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데 상호 합의함으로써(인구 증가의 맥락에서 하딘의 논란이 되는 제안), 사회는 과잉 인구를 피하고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각 처방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일반 원칙은 유지됩니다. **모든 사회는 장기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 책임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역사는 그러한 책임이 없을 때(무법 상태나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환경) 종종

폭력, 불안, 권위주의적 해결책을 초대할 수 있는 질서에 대한 갈망이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19 세기 미국 서부의 "야생의 개척지" 시절은 결국 지역 사회가 무작위 총격전과 자경단 정의가 일반인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삶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함에 따라 법치주의로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시민의 진정한 자유(두려움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는 개인의 자유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들에 대한 법률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러한 사례 연구는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강화합니다. 즉, **통제되지 않은 자유는 그 자체의 부정의 씨앗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마르에서 정치적 자유가 남용되었을 때 폭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금융 시장에서 경제적 자유가 통제되지 않았을 때 강력한 국가 개입이 필요한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행사될 때, 그로 인한 사회적 붕괴는 자유를 끝낼 수 있습니다(사람들이 안보를 요구하거나 자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반면에, 자유가 선견지명과 제약을 가지고 행사될 때(*책임 있는 자유* 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사회는 더 안정적이고 번영하며 개인에게 진정으로 해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책임 있는 자유는 위험이나 갈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문제는 시스템 내에서 관리할 수 있으며, 시스템에 대한 실존적 위협은 아닙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은 자유민주주의가 현대에 원칙을 발전시키고 적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형성합니다. 즉,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맞추지 못한 사람들의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21 세기의 법적 및 헌법적 과제

현대의 과제가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요구한다면,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현재의 법적, 헌법적 틀이 그 과제에 부응하는지 여부입니다. 민주주의의 대부분 헌법과 기본법은 이전 시대(종종 18 세기, 19 세기 또는 20 세기 중반)에 고안되었으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기술과 사회에 대한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21 세기의 변화 속도(특히 디지털 기술, 세계화, 과학적 진보로 인해)는 *건국의 아버지들과 고전적 법학자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자유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법률 시스템은 완전히 새로운 맥락에서 자유를 규제하고 정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종종 위험한 격차를 남깁니다.

법학자 제프리 로젠은 "기술의 숨 막힐 듯한 변화가 우리의 헌법적 가치에 엄청난 도전을 던지고 있다. 언론의 자유에서 사생활 보호, 자유와 개인의 자율권에서 자기 부죄 거부권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헌법 원칙은 수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으며, 건국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다 "

[브루킹스닷컴에듀](#). 이는 문제를 깔끔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 1 조(및 다른 국가의 동등한 표현의 자유 보장)는 "언론"이 팸플릿, 신문, 대중 연설 등 비교적 느리고 구체적인 의사소통 형태를 의미할 때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연설은 몇 초 만에 수백만 명에게 도달하는 트윗, 알고리즘으로 증폭된 비디오 또는 심지어 봇의 자동화된 게시물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인 소셜 미디어 회사는 어떤 정부 관리보다 누가 말하고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한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루킹스닷컴에듀](#). 그러나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 보호는 전통적으로 정부 검열에만 적용되고, 사실 플랫폼의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난제가 발생합니다. 디지털 공공 광장에서 해로운 콘텐츠의 확산을 방지하는 동시에 자유로운 표현의 정신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까요? 법적 틀은 이제 막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대형 플랫폼을 공공 서비스로 취급할지, 콘텐츠 조정에서 투명성을 어떻게 강제할지에 대한 논쟁이 있음).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보호권**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18 세기 후반에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라는 개념은 물리적 서류와 주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장 개인적인 데이터(위치, 통신, 심지어 생체 정보)는 사이버공간을 통해 끊임없이 흐르고 있으며, 종종 기본적으로 수집됩니다. 정부와 기업은 역사적 폭군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감시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영장, 데이터 보호, 개인적 동의에 대한 우리의 법률은 종종 시대에 뒤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 집행 기관이 GPS 데이터나 소셜 미디어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액세스하려면 영장이 필요할까요? 법원은 오래된 원칙을 새로운 사실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유럽연합의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과 같은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재확인하고 개인에게 개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했지만, 이러한 권리를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영역은 **자신의 신체와 삶에 대한 자율권**으로, 현재 유전자 편집, 생식 기술, AI 의사 결정에 대한 논쟁이 포함됩니다. 자유 또는 적법 절차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는 AI 알고리즘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알고리즘은 투명한 법적

감독 없이 미묘한 방식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신용 점수가 경제적 기회를 결정하거나 예측 경찰이 법 집행 기관의 처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신경 과학의 발전은 자기 부죄 금지 권리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생각이나 기억을 드러낼 수 있는 뇌 스캔 기술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수색"일까요?). 입법자와 판사는 종종 문제가 분명해진 후에 반응적으로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젠이 지적했듯이, 근본적인 질문도 제기됩니다. *사람들이 유전자를 수정하거나 아기를 "설계"할 자유가 있어야 할까요? 기업이 생명체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브루킹스닷컴에듀](#). 이런 질문은 우리 헌법이 초안되었을 당시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변화의 속도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민주적 입법은 신중한 고려와 권리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리고 종종 느리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기술은 빠르게 그리고 종종 파괴적으로 발전합니다. 즉, 법이 따라잡기 전에 새로운 자유나 새로운 자유 남용이 나타나는 공백이 자주 발생합니다. 사이버 범죄, 사이버 전쟁, 그리고 1990년대~2000년대 초 인터넷의 일반적인 "무법지대"적 특성은 이러한 지연을 잘 보여줍니다. 수년 동안 사용자들은 대체로 규제되지 않은 온라인 자유를 누렸습니다. 이는 놀라운 혁신과 표현을 가져왔지만 다크넷 시장, 사이버 괴롭힘, 디지털 불법 복제 등과 같은 현상의 부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온라인 행동을 규제하는 법률과 규범은 점진적으로 발전했으며(그리고 여전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예: 인터넷 관할권: 누구의 법률이 어디에 적용되는가?).

더욱이 많은 법적 틀은 *국가적인* 반면, 자유에 대한 도전은 종종 **세계적**입니다. 인터넷은 국경을 쉽게 넘나들지만, 법은 국경에서 그칩니다. 한 국가의 증오 표현이나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엄격한 규칙은 콘텐츠가 해외에 호스팅되어 해당 국가의 시민이 액세스할 수 있는 경우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조정과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가 필요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용되는 규범을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는 온라인 자유에 대한 접근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접근 방식은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검색 엔진에서 "잊힐 권리" 시행, 증오 표현 금지), 미국의 수정 헌법 제1조 전통은 최대한의 자유로운 언론을 강력히 선호하고 콘텐츠 제한에 회의적입니다. 글로벌 온라인 공간에서 이러한 가치 충돌은 우리가 자유에 대한 책임 있는 한계를 정의하는 방식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또한 많은 헌법은 비교적 단순한 사회 단위, 즉 개별 시민, 국가, 아마도 어느 정도 규모의 기업을 가정한 계몽주의 정치 구조(대표 민주주의, 권력 분립 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부와 경쟁하는 영향력을 가진 다국적 기업과 플랫폼, 그리고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술로 권한을 부여받은 분산된 그룹(온라인 운동이나 해커 집단의 영향력을 고려하세요)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시스템은 규제 도구를 재구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업의* 자유에 대한 책임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는 헌법이 정부를 구속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소셜 미디어 회사가 사용자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사적 권력이 공적 자유를 압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디지털 권리 장전**이나 반독점법을 업데이트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헌법 영역에서 우리는 "*헌법 3.0*"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브루킹스닷컴에듀](#) — 시대를 초월한 가치(자유, 평등, 정의)를 보존하지만 하이테크 맥락에 맞게 번역하는 업데이트. 예를 들어, 디지털 시대에 **언론의 자유**를 보존하려면 정부 검열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아마도 주요 플랫폼을 공통 통신사로 취급하거나 숨겨진 편견을 방지하기 위해 알고리즘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음).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려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고용, 신용, 법적 판단)이 인간의 책임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AI 윤리에 대한 새로운 법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적 자유**를 옹호하려면 안전한 디지털 투표권, 선거에서의 허위 정보 통제, 빠른 기술 변화와 느린 민주적 심의 간의 격차를 메우는 것과 같은 개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일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집회나 기타 민첩한 민주적 혁신을 제안함).

게다가 헌법은 세계적 상호의존의 함의에 직면해야 합니다. 기후 변화와 팬데믹과 같은 문제는 한 국가의 자유 행사(예: 배출 제한 없이 산업화하거나 새로운 질병 발생을 무시하는 것)가 다른 국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절대적 국가 주권에 대한 전통적인 베스트팔렌 개념은 개인의 허가와 유사합니다. 집단 생존을 위해 국제 무대에서 스스로 부과한 제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이제 지구적 규모로 확대됩니다. 파리 기후 협정이나 국제 보건 규정과 같은 협정은 국가 간의 그러한 책임을 법전화하려는 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법적, 헌법적 틀은 적응해야 할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황에서 자유를 정의하고 보호하기 위해 **법이 발전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화에는 헌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켜 디지털 권리(온라인 프라이버시 권리 또는 AI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등)를 규정하고, 전통적으로 정부에 부과했던 것과 유사한 책임을 새로운 권력자(기술 회사, 글로벌 기관)에게 부과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전 과제는 엄청납니다. 혁신을 저해하거나 합법적인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해를 방지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규제하는 방법입니다. 위험이 높은 이유는 법이 이러한 새로운 현실을 관리하지 못하면 혼란(해가 통제되지 않고 확산됨)이 생기거나 자유를 제한하는 과잉 반응(예: 위기 후의 무조건적인 대량 감시)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극단 사이를 항해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는 실제로 더 똑똑하고 민첩해져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자유민주주의 2.0 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인공지능, 빅 데이터, 세계화 시대에 자유를 위한 필요한 법적 틀을 제정하는 동시에 핵심적인 민주주의적 가치를 계승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책임으로서의 진정한 자유: 자유민주주의 2.0 을 향하여

이론, 역사, 현대 분석을 통해 우리는 핵심 명제에 도달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책임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자유는 모든 사람의 자유를 보장하는 프레임워크의 일부가 아닌 한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사회적 맥락에서 무한한 개인의 자유는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궁극적으로 자유를 파괴하는 결과(폭정, 불평등, 폭력, 공동체의 붕괴)를 낳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에 진정한 자유를 정의 하려면 공유된 책임과 윤리적 한계에 의해 뒷받침되는 자유**로 정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우리의 민주주의 원칙을 전례 없는 기술적, 사회적 변화 속에서 자유와 책임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자유민주주의 2.0"* 으로 발전시키는 초석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주장은 간단합니다. **책임이 없는 자유는 단지 허가일 뿐이며,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자유 자체의 조건을 침식합니다.** 반대로 책임이 있는 자유, 즉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사되는 자유와 의무감은 장기적으로 자유를 확장하고 유지합니다.** 우리는 이 논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상가들에 의해 확인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크와 제퍼슨에서 밀과 칸트, 포퍼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 사람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파괴하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논리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원칙의

어떤 버전을 인정했습니다. [ko.위키피디아.org](https://ko.wikipedia.org) [자유주의.org](https://www.freedom.org). 이것은 자유의 제한이라기 보다는 자유의 전제 조건입니다. 칸트가 말했듯이, 내가 본성상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요구한다면, 나는 모순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스스로를 먹어치우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는 상호 존중과 법치의 경계 내에서 살아갑니다.

경험적 증거는 **자유가 질서와 미덕과 결합될 때 가장 잘 작동한다는** 것을 강화합니다. 지속적인 자유(안정적인 민주주의, 번영하면서도 개방적인 경제, 안전한 시민권)를 달성한 사회는 견제와 책임을 제정한 사회입니다. 권력에 대한 헌법적 제한, 독립적인 사법부, 붕괴를 방지하는 시장 규제, 존엄성을 보존하는 사회 복지 정책, 정보에 입각한 시민의식을 기르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사회가 이러한 "가드레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시적으로 느슨한 규칙을 가졌지만 혼란에 빠진 사회보다 의미 있는 의미에서 더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어,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민주주의의 상대적인 사회적 평화와 자유는 인권과 사회적 의무를 포함하는 헌법과 함께 제공되었지만, 미국의 황금 시대의 자유방임주의적 접근 방식(노동 보호 또는 경제적 안전 장치 없음)은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치적 자유를 위협하는 호황, 침체, 플루토크라시로 이어졌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잘 규제된 민주주의와 실패한 국가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효과적인 법률이 없는 실패한 국가에서 사람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무기 소지, 재산 취득 등)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는 평균적인 사람이 두려움과 극심한 자유의 부족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능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일부 자유(예: 자경단 정의)를 국가 법률에 포기하고 그 대가로 일상 생활에서 훨씬 더 큰 자유(안전, 재산권, 시민권)를 누립니다. 정치 철학자 존 롤스가 지적했듯이, 정의는 각 개인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어야 하며, 기본적 자유는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더 심각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요점은 인간에게 최적의 상태는 제로 제한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는 **현명하고 공정한 제한**입니다.

이러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2.0은 어떤 모습일까요? 모든 수준에서 책임의 원칙을 명확하게 통합하는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이는 민주주의 과정에서 보다 강력한 보호 장치(선동가를 방지하고, 허위 정보를 막고, 공무원의 윤리적 기준을 시행)와 시민적 책임 문화(투표를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의무로 강조하고, 미디어 리터러시를 증진하고, 차이점을 넘어 대화를 촉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는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자본주의적 틀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GDP를 넘어서는 새로운 지표를 사용하여 성공을 측정해야 하며(예: 웰빙이나 지속 가능성 지수), 기후 변화와 같이 어느 한 국가도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자유민주주의 2.0은 현대적 권리와 책임을 규정할 것입니다. 즉, 개인의 디지털 권리(개인 정보 보호, 개인 데이터 통제, 알고리즘 편향으로부터의 자유)와 이러한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기술 회사와 정부의 해당 의무입니다. 21세기에 표현의 자유를 누리려면 알고리즘을 통해 수백만 명에게 거짓말이나 증오를 확산시켜 아무런 결과도 초래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더 높은 책임”을 지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인간의 평등한 도덕적 가치에 견고하게 기반을 둔” 사회를 건설하고 “인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모든 사람(국경을 넘어 미래 세대 포함)의 번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버드에듀](#). 한 학자의 말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더 높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자유민주주의 2.0입니다.” [하버드에듀](#) —추상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회 구성원을 위한 실천적 자유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무책임함으로 인해 자유가 훼손되는 것을 허용하는 우리 시스템의 측면에 맞서고 업데이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임을 질 수 없는 정치적 지출이든, 통제되지 않은 탄소 배출이든, 규제되지 않은 AI이든, 새로운 패러다임은 위기가 닥치기 전에 위험을 예상하고 합리적인 제한이나 감독을 부과함으로써 자유가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교육과 도구를 제공하여 자유를 책임감 있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권리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대중은 자유를 침식하는 조치를 지지하거나 파괴적인 행동에 관여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중요한 점은, 자유를 책임에 묶는다는 것은 권위주의나 가부장주의를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개인의 선택이나 창의성을 강압적인 통제 하에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과 기관 수준에서 스스로 부과한 규율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에서의 성숙에 관한 것입니다. 큰 자유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유명한 격언을 의역하면). 개인의 경우, 이는 선정적인 뉴스 기사를 공유하기 전에 사실 확인을 하거나 소비의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처럼 간단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이는 이익 극대화를 넘어서는 윤리적 지침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경우, 이는 투명성을 유지하고, 권리를 존중하며, 예측 가능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임 있는 자유는 힘을 실어줍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동시에 우리 모두가 상호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진정한 자유를 책임에 고정함으로써, 우리는 자유가제로섬 줄다리기가 아니라 상호 강화하는 기업임을 보장합니다. 책임을 중시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때 제 자유는 향상됩니다. 이웃의 행동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서로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받아들이는 커뮤니티나 국가에서는 토크빌이 초기 미국에서 존경했던 것, 즉 시민들이 이타주의에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롭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를 돕는 "자기 이익이 잘 이해된다"는 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사.하노버.에듀](#) [역사.하노버.에듀](#) 토크빌은 미국인들이 대중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재산의 일부를 희생할 것이라고 관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결국 자신의 자유와 번영을 강화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하노버.에듀](#). 이것은 행동 속에서 책임감 있는 자유를 실천하는 실제적인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현대의 지구촌에서 책임이 자신의 직접적인 지역 사회나 국가를 넘어 확장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팬데믹, 기후 변화, 재정적 안정과 같은 문제는 초국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현대의 진정한 자유는 세계적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업무 관리 자유에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해야 할 책임이 따릅니다. 자유민주주의 2.0은 새로운 형태의 국제 민주적 협력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으며, 어떤 자유 사회의 행동(또는 무행동)도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안보를 파괴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결론

자유는 항상 인류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상 중 하나였지만, 법, 공동체, 양심의 구조 안에서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이상입니다. 현대에 이르러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정의하려면 구속의 부재라는 단순한 자유 개념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개인과 기관이 자유와 함께 오는 **책임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곳에서

변성합니다. 이는 사회적 응집력, 정의, 상호 존중을 유지하면서 *개인의* 자율성, 창의성, 반대 의견을 장려하는 민주적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장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개인적 영역에서 자유와 책임의 상호작용을 추적했습니다. 우리는 고전적 이론을 현대적 현실과 통합하여 자유와 한계 사이의 균형 행위가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제약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갱신하고 보존하는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공된 역사적, 경험적 사례는 경고 이야기 역할을 합니다. 즉, 책임의 진공 상태에서 자유를 추구할 때 종종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결과, 즉 경제적 파멸, 정치적 폭정 또는 사회적 붕괴로 절정에 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반면에 자유가 이성과 연민의 인도를 받아 책임감 있게 행사될 때 인간이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적인 플랫폼을 만듭니다.

우리가 급속한 기술 및 사회 변화의 시대에 서 있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2.0*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민주주의 정신을 발전시키라는 요청으로 등장합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칙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더 진정으로 자유주의적이고, 모든 수준에서 권력에 책임을 묻기 때문에* 더 진정으로 민주적인 민주주의입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책임이 자유의 적이 아니라 자유의 보장자라고 주장합니다. 정부, 기업, 집단 또는 개인이 권력을 행사할 때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우리는 자유가 실질적이고 실질적이며 공유되는 사회를 만듭니다. 그러한 사회는 자유를 부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효과를 건설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문화적, 법적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유와 책임의 관계는 제로섬 트레이드오프가 아니라 공생입니다. 책임감 있는 기구는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자유의 범위를 *확대하는 반면, 무책임은 자유를 축소합니다*. 이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과제에 맞춰 민주주의를 업데이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현대의 자유의 진정한 본질은 우리가 함께 구축하는 자유입니다.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의무를 결코 잊지 않는 자유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채택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2.0은 진정한 자유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즉, 자유로운 개인이 책임감 있는 행동을 통해 이름에 걸맞은 자유 사회에서 사는 조건입니다.

Prompt 6: 삼권분립의 한계

권력분립은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18 세기 이래 폭정에 대한 보호장치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전적인 자유주의 이론은 정부 권한을 독립적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어 어떤 한 행위자가 너무 많은 권력을 축적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은 연방주의 논문에서 각 부서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다른 부서의 침해에 저항할 수 있는 필요한 헌법적 수단과 개인적 동기"를 가져야 한다고 유명하게 주장했습니다. [아메리칸바.org](http://amerikanba.org). 그러나 2 세기가 지난 지금 이 모델은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한때 "견제와 균형"의 독창적인 시스템으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정부 기능 장애의 원인으로 점점 더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3 부 시스템은 "노후화되었지만, 완전히 우아하지는 않습니다." 의회는 종종 **기능 장애**가 있고, 법원은 주저하며, 행정부는 점점 더 많은 권력을 얻고 있습니다. [아메리칸바.org](http://amerikanba.org). 비슷한 시스템을 수입하거나 물려받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한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탄핵 드라마부터 유럽의 사법-행정 갈등까지.

이 장에서는 역사적, 비교적 관점에서 권력분립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수행하여 이 모델이 어떻게 많은 현대적 거버넌스 맥락에서 시대에 뒤떨어지고 비효과적이 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첫째, 이 교리의 기원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찰된 구조적 결함의 증거를 검토합니다. 여기에는 권력 불균형이 마비나 남용으로 이어진 사례가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한국, 미국, 유럽 민주주의를 포함하여 권력분립이 권력 남용을 막지 못했거나 체계적 기능 장애(예: 행정 마비, 사법부의 권한 남용 또는 입법 교착 상태)를 초래한 자세한 사례 연구를 살펴봅니다. 이어서 법률 및 헌법 분석을 수행하여 수세기 전에 설계된 프레임워크가 21 세기의 정치적 현실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기관의 당파적 무기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강조합니다. 그런 다음 이 장에서는 삼자 모델의 구체적인 제도적 약점, 즉 교착 상태, 무책임한 거버넌스, 여러 부문을 통제하는 지배 세력의 조작을 분석합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 초점이 처방적이기보다는 진단적이라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제안하기보다는(이에 대해서는 이후 장에서 다룰 것입니다)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문제점과 고유한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논의 전반에 걸쳐 중립적이고 학술적인 톤을 유지하며, 이념보다는 경험적 사례와 학술 연구에 기반을 둡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원래 구상된 자유민주주의가(18 세기 권력분립 원칙에 기반하여) 구조적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진단은 현대적 거버넌스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프레임워크("자유민주주의 2.0")로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이유를 확립할 것입니다.

역사적 기초와 조기 경고

권력분립의 교리는 몽테스키외와 같은 계몽주의 사상가에서 유래되었는데, 그는 *법의 정신* (1748)에서 영국 체제의 정부 권력 분립을 전제주의에 대한 보호책으로 칭찬했습니다. 1787 년 미국 헌법을 만든 사람들은 이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주권 권한을 의회(법률 제정), 대통령(법률 집행), 대법원(법률 해석)으로 분할하여 각 부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설계는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 폭정으로 이어진 이전 정권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절대 군주제이든 강력한 행정부가 없는 연합 규약 하의 약한 혁명 후 정부이든 말입니다. 이론적으로, 연방주의(수직적 분리)와 결합된 섬세하게 균형 잡힌 수평적 분리는 스스로를 교정하는 권력의 균형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매디슨은 "야망은 야망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그의 유명한 주장으로 이 이론을 요약했는데, 이는 경쟁 기관들이 서로를 제약하고 권한 집중을 방지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메리칸바.org](http://amerikanba.org).

그러나 이 모델이 미국 초창기에 뿌리를 내렸을 때에도 관찰자와 학자들은 그 결함을 지적했습니다. 정치학자(그리고 미래의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1885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미국의 권력분립 제도가 본질적으로 교착 상태에 빠지기 쉽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건국의 아버지들의 "심각한 실수"로 여겼고, 그것이 "마비와 교착 상태에 대한 처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secondratedemocracy.com. 윌슨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융합된 대안적 의회 모델(영국과 다른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용)을 선호했으며, 그것이 더 효과적이고 책임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비판은 예지력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는 분리된 기관의 정부가 특히 현대 사회의 압력 하에서 단호하게 행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위험을 파악했습니다. 실제로 분리된 시스템의 **교착 상태**에 대한 우려는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윌슨의 19 세기 경고는 수많은 분석가가 그 이후로 반복했습니다. secondratedemocracy.com.

중요한 점은 전 세계의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엄격한 권력분립 청사진을 채택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은 행정부(총리와

내각)가 입법부에서 선출되고 입법부의 신뢰에 의존하는 **의원내각제**를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부서 간 분리보다는 중복이 있고, 상호 거부권보다는 협력이 표준입니다. 그 결과 기관적 **거부권이** 줄어들고 일반적으로 정책 결정이 더 빨라집니다. 한 비교 분석에서 냉정하게 표현한 것처럼 권력분립이 민주주의에 정말로 필수적이라면 "왜 사실상 다른 모든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를 채택하지 않기로 선택했을까요?" secondrateddemocracy.com 사실, **미국 모델은 변칙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미국(그리고 호주나 스위스와 같은 소수의 다른 국가)만이 강력한 양원제 의회와 별도로 선출된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결합합니다. secondrateddemocracy.com.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견제와 균형"이 부채** 가 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덜 책임감 있고, 대중에 덜 반응하며, 종종 마비된" 정부가 생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secondrateddemocracy.com. 시간이 지나면서 폭정을 예방하려는 모든 의도에도 불구하고 권력분립의 이상은 고유한 **병리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가 축적되었습니다.

대통령주의의 위험

20 세기 후반에 정치학자 후안 린츠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패턴을 유명하게 요약했습니다. 순수한 대통령 제도(권력 분립을 구현)는 의회 제도보다 현저히 덜 안정적이었습니다. 그의 획기적인 논문 "대통령주의의 위험"에서 린츠는 민주주의에서 독립적인 행정부와 입법부가 각각 선거에서 정통성을 얻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갈등을 해결할 명확한 방법이 없는 **"이중 민주적 정통성"의 상황입니다.**

correctphilippines.org. 총리가 불신임 투표로 간단히 제거될 수 있는 의원내각제와 달리(정치적 교착 상태가 정부를 바꾸거나 새로운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해결되도록 보장), 고정 임기의 대통령제는 그런 내장된 탈출구가 없습니다. 대통령과 의회가 충돌하여 교착 상태에 도달하면, 이 시스템은 "두 사람 중 어느 쪽이 실제로 국민의 의지를 대표하는가"를 말할 수 있는 결정적인 민주적 원칙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correctphilippines.org. 이는 장기적 교착 상태나 헌법 외적 수단을 통한 교착 상태 해소 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린츠는 미국식 헌법을 채택한 많은 라틴 아메리카 민주주의가 반복적인 위기를 겪었다고 관찰했습니다. 의회가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고, 대통령이 법령으로 통치를 시도하고, 너무나 자주 마비 상태에 군사 쿠데타가

개입했습니다. 대통령과 의회의 **상충되는 위임**은 제로섬 정치를 낳았습니다. 각 측은 대중의 권위를 주장하고 다른 측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젊은 민주주의에 독이 되는 역학입니다. 1970년대 초 칠레는 비극적인 사례였습니다.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과 야당이 통제하는 의회는 국가의 방향을 놓고 깊은 갈등에 갇혔기 때문에 정상적인 통치가 무너졌습니다. 그로 인한 혼란은 행정부와 의회가 모두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1973년 군사 쿠데타를 촉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확립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권력분립 설계는 교착 상태**와 위험부담을 초래했습니다. 핵심적인 구조적 이유는 거부권의 확산입니다. 미국에서는 법률을 제정하려면 일반적으로 하원, 상원, 대통령이라는 **별도로 선출된 세 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며, 각 기관은 제안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secondrateddemocracy.com. 의회 내에서 양원제는 더 많은 난관을 더합니다. 하원과 상원 모두 동일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각 의회에는 법안을 방해할 수 있는 내부 규칙(위원회, 필리버스터 등)이 있습니다.

secondrateddemocracy.com. 그 결과, 정책 변화를 **막는 것**이 그것을 제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1990년에 글을 쓴 린츠는 이러한 경직성 때문에 대통령 민주주의가 위기에 적응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은 중간에 쉽게 바뀔 수 없고 타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부분의 의회 제도에서는 "보통 한 번의" 선거(한 입법부)만 있으면 정책을 결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고, 의회를 통해 프로그램을 통과시킬 수 없는 정부는 그냥 무너지고 새로운 선거나 새로운 연립 정부가 구성될 것입니다. secondrateddemocracy.com

secondrateddemocracy.com 따라서 의회 민주주의는 장기적 마비 상태를 피하는 경향이 있다. 즉, 정책이 다수의 지지를 받아 통과되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을 재구성하여 교착 상태를 해결한다.

분리된 시스템의 또 다른 고유한 결함은 **책임의 모호성**입니다. 경제 위기, 정부 폐쇄와 같이 일이 잘못되면 **누구를 비난해야 할까요?** 유권자들은 종종 어느 지부나 정당이 실패의 원인인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각 기관이 다른 기관을 지목하기 때문입니다. 비교 정치학자들은 이를 "책임의 명확성" 부족이라고 부릅니다. 의원내각제에서 당시 정부(보통 한 정당이나 연합)는 정책 결과에 대한 "소유권"이 있고, 유권자들은 다음 선거에서 누구에게 보상하거나 처벌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권력분립 시스템에서는 책임이 분산됩니다. 대통령은 이니셔티브를 차단한 방해주의자 의회를 비난할 수 있고,

의회 지도자들은 대통령의 거부권이나 관리 부실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선거에서 효과적인 책임성이 제공되지 않아** 무모한 지도자들이 처벌을 피할 수 있고 대중이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 분석에서 노골적으로 언급했듯이, 미국의 권력분립 모델은 "책임성이 낮고 대중에 덜 반응하며 종종 마비된 정부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부분의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를 피하는 이유입니다. secondratedemocracy.com.

요약하자면, 초기 역사적 경험과 비교 연구를 통해 권력분립 모델에서 여러 가지 **구조적 취약성**이 확인되었습니다. (1) 여러 거부권 행사자로 인한 **교착 상태** 경향, (2)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이중 정통성**과 **부서 간 경쟁 문제**, (3) **부서 간 책임** 감소 및 "비난 전가", (4) 갈등이 확대되면 쿠데타나 헌법적 위기와 같은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결함이 과거와 현재의 구체적인 사례에서 어떻게 다양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났는지 살펴봅니다.

기능 장애 및 불균형에 대한 사례 연구

미국: 교착 상태, 양극화, 그리고 행정부의 권력 강화

미국은 권력분립이 긴장 상태에 있는 생생한 사례 연구를 제공합니다. 이 모델의 원형으로 설계된 미국 연방 정부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선의의 거버넌스를 보장해야 할 견제와 균형에 의해 자주 마비되었습니다. 기능 **장애가 있는 의회**에 대한 대중의 좌절은 높습니다. 미국인의 약 80%가 의회의 성과를 비난하며, 가장 큰 이유는 교착 상태라고 언급되었습니다. secondratedemocracy.com. 실제로, 입법 생산성은 분열된 정부 기간에 급락했습니다. 한 정당이 대통령직을 장악하고 다른 정당이 의회의 한 원 또는 두 원을 장악하면 주요 정책 문제에서 교착 상태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산 충돌은 거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1995 년, 2013 년, 2018-19 년, 그리고 2023 년에 연방 정부가 반복적으로 **폐쇄** (의회와 대통령이 예산에 합의하지 못해 자금이 부족할 때)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모두 부서가 타협하지 못했음을 반영한 것이며, 그 결과 정부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채 상한 (의회가 기존 채무를 지불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차입을 승인하도록 요구하는 특이한 규정)을 둘러싼 싸움은 지난 10 년 동안 여러 번 국가를 채무 불이행 직전까지 몰았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주로 권력 분립의

벼랑 끝 전술에 기인합니다. 의회가 재정권을 사용하여 행정부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내거나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한 학자는 미국 체제가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해 엄청난 수의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교착 상태의 경향을 조장한다"고 말했습니다. secondratedemocracy.com. 거부권 한 개를 통제하는 결의에 찬 소수파는 행동을 차단할 수 있으며, 이는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거부권 정치"라고 명명한 것으로 이어진다.

당파적 양극화는 이러한 경향을 크게 악화시켰습니다. 미국의 건국자들은 정당의 역할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건국의 선구자들은 정당 시스템을 예견하지 못했고", 따라서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 어떻게 지부가 서로를 견제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메리칸바.org.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이 같은 정당을 공유할 때 의회는 감독에 있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대신 순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원들은 대통령을 적대자라기보다는 동맹자로 봅니다. 아메리칸바.org. 반대로, 여러 정당이 지부를 통제할 때 협력은 마르고 일상적인 통치조차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적 거부권(재정의를 위해 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과반수가 필요함)은 야당이 통제하는 의회가 대통령이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아메리칸바.org. 그 결과는 무위 또는 대립입니다. 이러한 역학 관계는 반복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민주당)과 2010 년 이후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주요 법률은 거의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바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 명령과 행정 규정에 점점 더 의존했고, 비판자들은 그가 행정 권한을 초과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공화당)과 2018 년 이후 민주당 하원에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하원은 수많은 조사를 시작했고 결국 트럼프를 탄핵했지만 백악관은 의회 소환장을 무시했고 트럼프는 의회가 예산을 지출하기를 거부한 국경 장벽 건설에 자금을 전용하는 것과 같은 문제에 대해 행정 명령에 따라 통치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권력 분립과 과도한 당파성이 결합되어 행정부가 마비되거나 (부서가 분열된 경우) 행정부에 대한 고의적인 **입법 방해**가 발생했을 뿐 건설적인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경험의 또 다른 차원은 학자들이 "제국 대통령직"이라고 부르는 것의 성장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회가 난폭하거나 기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서 더 많은 권력이 행정부로 흘러갔습니다. 아메리칸바.org 아메리칸바.org. 특히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문제에서 대통령들은 종종 최소한의 반발로 경계를 넓혔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은

의회에 전쟁을 선포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미국 대통령은 공식적인 선언 없이 주요 군사 행동(한국, 베트남, 리비아 등)을 시작했습니다. [아메리칸바.org](http://amerikanba.org). 마찬가지로, 대통령들은 이제 상원의 조약 비준 절차를 우회하여 행정 조치를 통해 중요한 국제 협정을 일상적으로 체결합니다. [아메리칸바.org](http://amerikanba.org). 국내적으로 의회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 대통령은 행정 명령이나 지시 기관을 통해 입법화하여 의회가 남긴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웁니다. [아메리칸바.org](http://amerikanba.org) 법원은 대체로 행정권의 이러한 상승을 용인했으며, 종종 사법적 근거에 대한 도전을 피하거나 필요성이라는 명분으로 행정부에 위임했습니다. [아메리칸바.org](http://amerikanba.org) 아이러니한 점은 원래 권력분립의 설계가 어느 한 부서의 폭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허약한 입법부에 의해 견제되지 않는 지나치게 강력한 대통령직에 대해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메리칸바.org](http://amerikanba.org) 극단적으로, 일부 대통령은 다른 부서를 완전히 우회하려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1970년대 워터게이트 스캔들 동안,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이 그렇게 할 때,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악명 높게 주장하여 권력 분립이 피해야 할 행정부 우월주의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워터게이트는 궁극적으로 의회가 스스로를 재확인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조사와 암묵적인 탄핵 위협을 통해 닉슨의 사임으로 이어짐) [아메리칸바.org](http://amerikanba.org). 그러나 그 후의 대통령들은 의회의 의도를 무시하는 성명서에 서명하는 것부터 비상 권한 주장에 이르기까지 한계를 계속 시험해 왔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는 모델의 이중적 실패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아무도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없고(교착 상태), 다른 때는 한 부서(행정부)가 다른 부서가 퇴위하거나 중립화되어 너무 자유롭게 통치합니다. 매디슨이 바라던 균형(야망이 야망을 상쇄하는 것)은 규율 있는 정당과 양극화된 이념의 출현으로 왜곡되었는데, 이는 18세기 헌법적 틀이 관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메리칸바.org](http://amerikanba.org).

미국의 사법부는 또한 정치적 투쟁의 초점이 되었으며, 사법부의 권한 남용과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대법원은 대중의 압력으로부터 보호되는 비정치적 헌법 중재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종종 사실상의 정치적 행위자로 여겨집니다. 특히 선거법, 선거 자금, 사회 정책과 같은 문제에서 법원의 판결은 엄청난 정치적 결과를 가져왔고 종종 당파적 노선에 따라 분열되었습니다. 두드러진 사례는 부시 대 고어 (2000)로, 대법원의 5 대 4 판결이 효과적으로 대선을 결정한 것입니다. 비평가들은 대다수의 당파적 추론이 조지 W. 부시에게 유리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법원의 보수적 다수파는 한 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당파 편향적 전환" 에

착수했습니다. 즉, 주 의회가 당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유를 주는 판결을 내리고(예: 당파적 선거구 조작 중단 거부) 선거에서 인종적 편견을 억제했던 투표권법의 일부와 같은 조치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법률.조지타운.에듀](#). 이러한 움직임은 법원의 공화당 임명 판사들이 "**공화당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 [법률.조지타운.에듀](#) 이러한 특징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사법 심사가 입법 과정을 통과할 수 없는 당파적 결과를 얻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사법적 권한 남용** 또는 적어도 사법부의 정치화를 나타냅니다. 법원은 중립적인 심판자가 아니라 정책 결정과 권력 투쟁의 장이 됩니다. 또한 **견제와 균형의 무기화**를 반영 합니다. 의회가 교착 상태에 빠지고 행정부가 제약을 받으면 정치적 행위자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원에 의지하여 판사를 거버넌스에서 점점 더 중심적인 역할로 밀어붙입니다. 그 결과 사법부는 권력 남용을 지속적으로 억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책임 없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대중이 최고 법원을 단지 "또 다른 정치적 지부"로 보게 되면 권력 분립 시스템 전체의 정당성이 훼손됩니다.

한국: 젊은 민주주의의 탄핵과 양극화

한국의 최근 정치 역사는 권력분립 메커니즘이 위기에 대응하고 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한국의 현대 민주주의 헌법(수십 년의 권위주의 통치 이후 1987 년에 제정)은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많은 특징을 의도적으로 모방했습니다. 강력한 대통령직은 일원제 국회와 사법심사권이 있는 헌법재판소의 견제를 받습니다. 실제로 이 시스템은 행정부가 우세한 시기와 부서 간의 격렬한 대립의 시기 사이를 오가며 변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한 가지 구조적 특징은 **상대적으로 견제가 거의 없는 권한이 부여된 대통령직**입니다. 이는 이전 정권에서 물려받은 강력한 행정 리더십의 유산입니다. 한국 대통령은 상당한 권한을 행사합니다(종종 미국 대통령과 비교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국내적으로 훨씬 덜 제약을 받음). 여기에는 보안 기관에 대한 통제와 기소에 대한 영향력이 포함됩니다. 청와대(행정부)에 권력이 집중되면서 때때로 남용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주주의 시대의 모든 한국 대통령은 5 년 임기를 마치면서 논란의 인물이 되었고, 몇몇은 스캔들로 인해 사임하거나 나중에 기소되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 연구는 "**책임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권한 부여된 대통령 제도**"를 지적합니다. 권력 남용을 조장할 수 있는 **상향식 권한 구조**입니다. [브루킹스닷컴에듀](#)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2013-2016)은 대통령 면책권과 통제되지 않는 행정 특권의 베일 아래, 정책에

개입하고 기업을 갈취한 심복(최순실)을 통해 대규모 부패를 조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스캔들로 인해 대규모 대중 시위(2016 년 "촛불 시위")가 일어난 후에야 다른 지부들이 박근혜를 책임지도록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젊은 민주주의에서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는 2004 년(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고 다른 하나는 2016 년(박근혜에 대한 탄핵)입니다. 또한 2024 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권력분립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보여줍니다. 한편, 2016-17 년 박 대통령의 성공적인 탄핵과 파면은 부패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평화적으로 시위했고, 국회는 탄핵에 찬성했으며,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탄핵을 지지하여 박 대통령이 축출되고 투옥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적 책임성의 승리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브루킹스닷컴에듀](#) [브루킹스닷컴에듀](#). 반면에 탄핵 시도의 빈도는 이 도구의 **정치적 무기화**에 대한 걱정스러운 패턴을 시사합니다. 미국 역사의 처음 211 년 동안 단 한 명의 대통령(앤드류 존슨)만이 탄핵되었지만, 한국 민주주의의 20 년 남짓 동안 의원들은 여러 번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2004 년 야당 의원들은 사소한 선거법 위반과 정치적 분쟁을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이는 **과도하고 당파적인 탄핵 사용**으로 널리 여겨졌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당하다고 뒤집었습니다. 사실상 사법부는 정치적 이유로 대통령을 축출하려는 의회의 시도를 억제해야 했습니다. [ir.lawnet.fordham.edu](#) [ir.lawnet.fordham.edu](#). 이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법원이 대통령 탄핵을 뒤집고 지도자를 복직시킨 것입니다. [ir.lawnet.fordham.edu](#). 그 결과는 안정성을 유지했지만, 권력 분립의 긴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부분적으로 정치적 판단에 개입한 것입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그것이 핵심 입법 기능(탄핵)보다 사법 우월주의에 대한 선례를 만들어 미래의 대통령이 법원에서 탄핵 투표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장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6 년 박근혜 탄핵은 정당화 측면에서 더 명확했지만, 탄핵이 리더십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겨지는 문화를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박근혜의 권력 남용이 폭로되자, 대중과 야당은 헌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했고, 이는 악행을 저지른 지도자를 제거하기 위해 의도한 대로 기능했습니다. [브루킹스닷컴에듀](#) [브루킹스닷컴에듀](#). 그러나 그 여파는 제도적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여론의 엄청난 동원과 극적인 탄핵 절차를 통해서만 현직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일반적인 감독 메커니즘은

대통령직에서 견제되지 않은 영향력이 축적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 **상향식, 개인화된" 거버넌스 스타일이** 뿌리를 내렸고, 그 스타일에서 대통령은 종종 스캔들이 터지기 전까지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는 메아리 방에서 일했습니다. [브루킹스닷컴에듀](#) [브루킹스닷컴에듀](#). 이는 정상적인 견제와 균형(국회 청문회, 검찰 등)이 효과적이었는지, 아니면 독단적인 청와대에 의해 너무 쉽게 무력화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주목할 점은 한국의 국가정보원(NIS)과 검찰이 역사적으로 대통령의 지배를 받았으며, 때로는 반대자를 괴롭히거나 동맹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브루킹스닷컴에듀](#) [브루킹스닷컴에듀](#). 행정부가 권력의 핵심 레버를 이렇게 통제하면 법 집행(행정부)과 정치적 이해관계 사이의 이론적 분리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모든 행정부는 검찰권을 사용하여 경쟁자를 쫓았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검찰 개혁이 한국에서 뜨거운 정치적 이슈가 된 정도). 이는 지배적인 행정부가 견제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을 조종**하여 대신 권력을 확장하는 도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는 권력 분립의 정신과 상치되는 패턴입니다.

2022-2023년까지 한국 정치는 극도로 양극화되었으며, 좌파 성향의 민주당과 우파 성향의 인민의힘당은 관찰자들이 "복수 정치"라고 부르는 것에 갇혔습니다. [cfr.org](#) [cfr.org](#). 각 측은 집권할 때 다른 측의 인물을 조사, 기소 또는 탄핵하려고 했습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보수 진영의 전 검찰총장)이 선출되면서 새로운 대립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후반에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통제하는 의회와의 대치 상황에서 잠시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이는 정규 정치 과정을 무시하려는 극단적인 시도로 여겨졌습니다. [cfr.org](#). 이 선언은 몇 시간 만에 빠르게 번복되었지만, 이는 윤에 대한 심각한 탄핵 동의를 촉발했습니다. [cfr.org](#) [cfr.org](#). 해설자들은 한국이 민주주의 이전 시대를 연상시키는 수준의 제도적 갈등을 겪고 있으며,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행사하고 의회가 이에 대응해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cfr.org](#) [cfr.org](#). 윤의 과감한 움직임은 "한국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렸고" 1988년 민주화 이전의 쿠데타 시대로 회귀했다. [cfr.org](#). 다행히도, 그 나라는 "도전을 견뎌낸 듯" 완전한 붕괴를 피했습니다.[cfr.org](#). 하지만 이 에피소드는 시스템의 **깊은 취약성을 강조합니다. 분파와 지부 간의 상호 불신은 행위자들이 헌법적 갈등을** 위험한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탄핵이나 사법적 판결 등) 자체가 당파적 투쟁의 도구가 됩니다. 한 분석에서 지적했듯이, 그러한 분위기에서 탄핵 도구는 "자체적으로 남용되었습니다." 권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고안된 바로 그 과정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당파적 무기가 되었고, 따라서 다소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dc.메릴.노스웨스턴.에듀](#) 지난 5 명의 대한민국 대통령 중 3 명은 탄핵 또는 심각한 탄핵 위협에 직면했는데, 이 비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문제를 시사합니다.

요약하자면, 한국의 사례는 공식적인 권력분립 제도가 자동적으로 균형 잡힌 정부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강력한 비공식적인 억제와 협력 규범이 없다면, 각 부서는 **전투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우월성(구조적 특징)은 다른 부서가 위기가 닥칠 때까지 막기 위해 애썼던 남용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입법부와 사법부는 때때로 과도하게 행동했습니다(사소한 이유로 탄핵하거나, 2014 년 헌법재판소가 한 것처럼 극단적으로 여겨지는 정당을 금지하는 것). 이는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궁극적으로 탄핵과 사법 개입이 주요 거버넌스 도구가 되면 시스템의 **정통성이** 긴장될 수 있습니다. 불과 수십 년 된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인상적인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평화로운 대규모 시위와 헌법 절차는 부패한 지도자를 제거했으며, 이는 힘의 표시입니다. [브루킹스닷컴에듀](#) [브루킹스닷컴에듀](#). 그러나 고위험 대결의 빈도는 현재 모델의 근본적인 **구조적 한계**를 나타내며, 앞으로 안정성과 책임을 보장하는 방법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유럽: 분열된 권력과 부상하는 갈등

많은 유럽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순수한 권력분립보다는 의회제나 혼합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 역시 일부 동일한 구조적 긴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폴란드와 헝가리와 같은 나라에서 일어난 최근 사건들은 어떻게 **지부 간의 균형이 무너져서**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반대 시나리오를 보여주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교착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한 지부(또는 한 정당)가 다른 지부를 장악하여 본질적으로 권력분립을 무효화하고 견제받지 않는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맥락은 다르지만, 의도된 견제와 균형의 붕괴라는 최종 결과는 결의에 찬 정치적 행위자들 앞에서 자유민주주의 기관의 취약성을 강조합니다.

폴란드에서는 2015 년 이후 우익 포퓰리스트 법과 정의당(PiS)이 대통령직과 의회를 모두 장악한 후 사법부에 눈을 돌렸습니다. 폴란드 헌법(1997)은 입법/행정 행위를 검토하고 점검할 독립적인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를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PiS 는 법원을 자신의

의제에 대한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수년에 걸쳐 집권당은 **사법 독립에 대한 체계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법원을 정치화하고 견제력을 약화시키는 일련의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사법부.듀크.에듀](#) [사법부.듀크.에듀](#). 여기에는 합법적으로 임명된 판사를 앉히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당 충성파(소위 "자정 판사")를 임명하고, 그들을 채우기 위해 법원의 규모를 확대하고, 정부 이익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를 처벌하기 위한 새로운 징계 제도를 만드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사법부.듀크.에듀](#) [사법부.듀크.에듀](#). 2020 년 분석에서는 이를 "**폴란드의 사법 독립 붕괴**" 로 설명하면서, PiS 가 집권한 이후 "법원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는 능력을 약화시키는 법률로 폴란드의 사법부를 표적으로 삼았으며" 심지어 법원을 마비시키는 규칙을 부과하고 정부가 싫어하는 **법원 판결을 공개하지 않기**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법부.듀크.에듀](#). 간단히 말해서, 폴란드의 경험은 권력 분립이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침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폴란드 정부는 유럽 연합(회원국 간의 법치주의를 지지하는 메커니즘이 있음)에 맞서 헌법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EU 는 폴란드의 행동이 "사법적 독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경고했으며, 견제와 균형을 훼손한 폴란드에 대한 처벌을 위협했습니다. [사법부.듀크.에듀](#). 여기서 우리는 선거 다수가 기울어진다면 **여러 부문을 장악**하고 분리 원칙을 무력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정치화** 되었고, 본질적으로 집권 세력의 한 부문이 되었습니다. 바로 권력분립이 막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로 인해 독립적인 감독이 약화되면서 책임을 질 수 없는 거버넌스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다른 종류의 교착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폴란드 정부와 국제 기관(EU 법원) 사이에 누구의 권한이 우선하는지에 대한 대치가 발생하여 초국가적 수준에서 일종의 헌법적 모호성과 이중적 정통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헝가리는 훨씬 더 심각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빅토르 오르반 총리와 그의 피데스당의 통치 하에서 헝가리(의회 공화국)는 2010 년 이후 빠르게 민주주의가 쇠퇴했습니다. 오르반의 당은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후 그 우세를 이용해 헌법과 법적 틀을 다시 작성하여 스스로를 굳건히 했습니다. 헝가리 의회는 수표 역할을 하는 대신 오르반의 의제에 대한 **고무 도장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입법부는 독립을 양보했습니다. 3 분의 2 의 의회 과반수를 차지한 오르반 정부는 **사법부를 비우고, 법률을 다시 작성**하고, 피데스의 권력을 굳건히 하기 위해 새로운 헌법을 공포했습니다. [외국정책닷컴](#). 새로운 법률은 여당에 유리하도록 선거 제도를 바꾸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했으며, 이전에 독립적이었던 기관(헌법재판소와 검찰청 등)을 피데스 지지자들의 영향력 아래 두었습니다.

[외국정책닷컴](#) [외국정책닷컴](#). 2013년까지는 헌법재판소조차도 오르반의 임명자들로 가득 찬 후 "오르반의 신뢰할 수 있는 고무 도장"으로 여겨졌습니다. [verfassungsblog.de](#).
본질적으로, 세 가지 부문(그리고 미디어나 시민 사회와 같은 네 번째 부문 기관)은 **모두 한 파벌에 의해 지배되어** 내부 견제가 없어졌습니다. 2024 년 Foreign Policy 보고서는 그 결과를 직설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헝가리는 변창하는 독재 정권입니다."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해체"했으며 **선거가 아닌 특별한 사건만이 권력** [외국정책닷컴](#) [외국정책닷컴](#).
이것은 권력분립 실패의 이면입니다. 마비가 아니라 **다원주의의 붕괴입니다**. 헝가리의 교훈은 한 당사자가 충분한 레버를 장악하고 외부 또는 내부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으면 권력분립 시스템이 전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헝가리 헌법은 문서상으로는 권력분립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르반의 과반수 의석은 그러한 견제를 무력화하는 법적 변화를 허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판사의 은퇴 연령을 낮춰 노령(독립) 판사를 몰아내는 것은 나중에 EU에서 불법으로 판결했지만 그때까지는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의회는 행정부를 견제하지 않았습니다. 행정부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사법부는 꼭 차고 제약을 받은 후에는 다른 부서를 견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지배적인 정치 **세력이** 어떻게 여러 부서를 함께 조종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거버넌스를 고착시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헝가리의 사례가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취약성을 강조합니다. 법의 **정신** 이 유지되지 않으면 권력분립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 일정 수준의 관용과 제도적 경계에 대한 존중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경계가 사라지면 단순한 양피지 장벽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법치주의 전통이 더 강한 오래된 서유럽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우리는 권력분립(또는 그들의 시스템에 존재하는 권력분립의 일부)을 시험하는 주목할 만한 갈등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오랫동안 법전화된 권력분립보다는 의회 주권을 자랑스러워했지만, 2019년에 권력분립의 색채가 있는 헌법적 대립이 발생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과정이 험난한 동안 의회를 몇 주 동안 연기(정지)하려고 시도했는데, 이는 의회가 자신의 브렉시트 계획을 차단하거나 논의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로 널리 여겨졌습니다. 영국 대법원이 개입하여 이러한 움직임이 의회의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훼손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사법부는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승리로 찬사를 받았지만, 또한 섬세한 균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문 헌법이 없더라도, 한 부서가 다른 부서를 제쳐두려고 하면 부서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의 단호함은

균형을 유지했지만, 판사가 고도로 정치화된 맥락에서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제지하는 데 의존했습니다. 모든 사법부가 일관되게 이를 하려고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와 같은 다른 국가들은 만성적인 거버넌스 문제를 겪었지만, 종종 권력분립 자체보다는 다른 원인(예: 매우 분열된 의회, 약한 연립 정부)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탈리아 정치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정부가 빠르게 교체됨) 대통령은 때때로 선거 없이 기술관료 정부를 임명했습니다. 이는 국가를 계속 운영하기 위한 해결책이지만, 국가 원수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권력분립을 모호하게 만드는 해결책입니다. 이러한 즉흥적인 조치는 현대의 거버넌스 문제가 종종 고전적인 헌법적 범주에 어긋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례에서 공통적인 주제가 나타납니다. 자유민주주의 모델의 **구조적 불균형과 허점은 교착 상태 나 지배**로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일부 대통령 제도에서 편향은 교착 상태와 경쟁적 긴장(종종 마비와 적개심)으로 치우칩니다. 일부 유럽 맥락, 특히 의회의 지배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 반대의 위험이 있습니다. 즉, 불충분한 견제로 인해 한 당이 견제 받지 않는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폴란드와 헝가리는 선출된 정부가 견제를 해체하는 것에 대한 경고 이야기입니다). 두 사례 모두 권력 분립의 상호 제한이라는 이상에 실패했습니다. 한 시나리오에서는 제한이 기능 장애에 이르는 방해가 되고,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협력이 민주주의 침식에 이르는 공모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는 현재 구상된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를 풍부하게 보여줍니다. 프레임워크는 종종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폭정과 기능 장애)를 예방할 수 없고, 심지어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및 헌법적 관점: 현대 현실의 구식 프레임워크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많은 헌법과 법적 틀은 매우 다른 시대, 매우 다른 사회적, 정치적 조건에서 초안되었습니다. 미국 헌법은 230 년이 넘었고 여전히 대부분 원래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새로운 헌법(동유럽의 냉전 이후 헌법, 기타 지역의 식민지 이후 헌법)조차도 18 세기나 19 세기의 거버넌스 모델에서 물려받은 개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정치적 현실은** 그 제정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오늘날 권력분립 모델의

비효율성에 크게 기여합니다. 간단히 말해, 헌법 설계는 사회, 기술, 정치적 행동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주요 변화는 규율 있는 정당의 부상 과 강렬한 당파성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건국자들은 정당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도적 야망이 권력을 견제할 것이라고 가정했고, 당파적 충성심이 제도적 충성심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메리칸바.org](http://americanbar.org).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은 주요 행위자입니다. 정당의 입법부 다수당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나 총리는 그 입법부로부터 거의 감독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야당이 주도하는 입법부는 행정부를 끊임없이 방해할 것입니다. 따라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은 **정당에 의해 납치될** 수 있습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독립적인 의지를 갖는 대신, 우리는 종종 정당의 의지가 그들이 통제하는 어떤 부서를 통해 운영되는 것을 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권한이 아닌 정당의 분리"라고 불렀습니다. 법적 틀은 이러한 재편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탄핵, 확인 권한 또는 사법 검토와 같은 도구는 선의의 보호 장치로 의도되었지만 당파의 손에 들어가면 **무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사법 후보자에 대한 조언과 동의를 하는 미국 상원의 헌법적 역할은 순전히 당파적 이익을 위해 임명을 차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가장 극적으로는 상원이 2016 년에 대법원 후보자를 고려하기를 거부하여 대통령이 당으로 바뀔 때까지 1 년 동안 공석이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국의 아버지들이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최후의 수단으로 의도했던 탄핵 권한은 정치적 전투의 또 다른 도구로 정상화되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탄핵을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도구로 의도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바로 그 도구가... 스스로 남용되었다고 말합니다."** [dc.메딜.노스웨스턴.에듀](http://dc.medill.northwestern.edu).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난 5 명의 대통령 중 3 명이 탄핵 조사나 기소를 받았습니다. 19 세기와 20 세기 초반에 비해 놀라운 빈도입니다. [dc.메딜.노스웨스턴.에듀](http://dc.medill.northwestern.edu). 그리고 언급했듯이, 한국과 다른 나라들은 비슷한 "탄핵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탄핵의 법적 한계는 종종 모호합니다(미국에서는 "반역, 뇌물 수수 또는 기타 중대한 범죄 및 경범죄", 한국에서는 "헌법 또는 법률 위반"). 따라서 의회가 숫자가 허락할 때 단순히 반대 대통령을 전복하는 데 사용하고 싶어하는 유혹을 줍니다. 이는 **헌법적 견제가 당파적 곤봉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초안 작성자들이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문제는 반드시 악의적인 행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보호 장치를 제공하지 않는 구식 프레임워크에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현대 세계에서 정부의 범위와 복잡성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18 세기 정부는 상대적으로 기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정부는 선진 경제를 규제하고, 사회 복지 제도를 관리하고, 세계 외교에 참여하며,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급속한 위기(팬데믹, 기후 변화, 금융 붕괴)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권력 분립 모델은 의도적으로 의사 결정을 늦춥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반응하지 않거나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 경제 침체가 발생하고 당파적 대립으로 인해 입법부에서 경기 부양책 법안이 수개월 동안 중단되거나, 공중 보건 비상 사태에 민첩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권한이 지부와 정부 수준 간의 관할권 분쟁에 얽매일 때 이를 볼 수 있습니다. 법적 틀은 종종 여전히 더 느린 거버넌스 속도를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헌법은 법률 통과를 어렵게 만들지만 규제를 통해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는 행정 국가에 대한 필요성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행정 국가를 만들었고, 지금은 "행정 국가"를 놓고 다투는 일이 넘쳐납니다(법원과 의회가 규제를 통제하는 사람을 놓고 행정부와 다투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구식 법률로 인해 입법부가 신속하게 소집하거나 합의할 수 없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서 **행정부**가 **과잉**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때로는 정치적 무기화가 그것을 차단하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예: 야당이 전술적 이득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개혁을 방해).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정부가 마비되거나 변덕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신뢰를 잃습니다.

사법적 틀 역시 힘듭니다. 법원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정기적으로 판결할 때 독립적이고 비당파적인 사법부라는 개념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현대 헌법은 판사에게 헌법 검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2 차 세계 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관행). 이는 입법부/행정부의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주요 정책 논란(선거 규칙에서 팬데믹 제한에 이르기까지)이 법원에서 끝나 최종 결정이 선출 기관에서 비선출 판사로 효과적으로 옮겨갑니다. 이는 대중의 분노와 판사 통치라는 **법관주의**에 대한 인식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논란이 많은 대법원 인준 전투와 5 대 4 의 이념적 결정으로 인해 대다수의 미국인이 법원이 단순히 법이 아니라 정치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민주주의에서는 법원이 훨씬 더 쉽게 정치화되거나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은 적대적 정치가 법원의 인식된 중립성을 어떻게 침식할 것인지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법은 종종 이에 대한 약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헌법에 판사가

임기 동안 또는 은퇴할 때까지 재임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정부가 그들을 제거하거나 정리할 법적 구실을 찾는 경우(폴란드와 헝가리의 경우처럼), 정부는 원칙을 파괴하면서 기술적으로는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법률 텍스트만으로는 견고한 규범 없이는 단호한 다수를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적 견제는 법적으로 회피되거나 공모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엄격** 하고 개정하기 어렵습니다(미국은 무엇이든 변경하려면 과반수가 필요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즉, 임기 길이를 수정하고, 입법 거부권 규칙을 변경하고,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선거 제도를 개혁하는 등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조정을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세기 전의 건국의 결정은 일부가 역효과를 냈더라도 굳건히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대법원 판사의 종신 임기는 1789년에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이었지만, 지금은 임명을 둘러싼 당파 간 싸움이 수십 년 동안 결과를 초래하고 판사들은 우호적인 대통령 아래에서만 은퇴할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판사의 임기 제한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헌법은 개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청난 과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선거인단과 상원의 부정 배분(소규모 주가 불균형한 권력을 갖는 경우)은 권력 분립을 복잡하게 만드는 구식 특징입니다(예: 농촌 보수 주를 과도하게 대표하는 상원은 전국 유권자 다수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차단할 수 있음). 이러한 설계 문제는 권력이 분리되고 행사되는 방식에서 불법성이나 불공정성으로 인식되는 데 기여합니다. 도시/농촌 양극화, 즉각적인 미디어 감시, 정치의 전문화와 같은 현대의 정치적 현실은 단순히 시스템의 법적 설계자에게 고려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자유민주주의의 법적, 헌법적 토대는 **현대적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한때 신중해 보였던 견제와 균형은 이제 종종 **교착 상태나 방해 행위를 가능하게 합니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은 결국 남용 *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 경솔한 탄핵, 끝없는 조사 또는 반대자의 권한을 무효화하기 위한 법적 기술적 사항). 거버넌스를 안내하는 살아있는 문서가 되어야 했던 헌법은 어떤 면에서 필요한 적응에 대한 *제약*이 되었으며, 정치에 대한 초기 비전에 고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구조가 업데이트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자유, 평등, 법치주의의 원칙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기계는 21 세기에 맞게 재설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진단을 마치기 전에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핵심 범주로 분류합니다.

권력분립 모델의 주요 제도적 약점

역사적 증거와 사례 증거를 종합해 보면, 오늘날 운영되는 권력분립 모델에 내재된 여러 가지 **구조적 약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점은 본질적으로 체계적이며, 제도적 설계의 부산물이며, 여러 국가와 맥락에서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세부 내용과 각 문제를 설명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의 교착 상태와 마비: 아마도 가장 눈에 띄는 결함은 정책 교착 상태로 가는 경향일 것입니다. 각 부서(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입법부의 각 원)가 다른 부서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기본 결과는 무위로 기울어집니다. 이것이 **"내장된 교착 상태"**입니다. secondratedemocracy.com. 우리는 이를 미국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한 정당이 모든 부문을 통제하지 않는 한 주요 법안이 수년간 방치될 수 있고, 심지어 내부 거부권(상원의 필리버스터나 사법 검토와 같은)이 이를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해 정부가 폐쇄되는 것은 극명한 증상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과 의회 간의 교착 상태는 종종 민주주의의 붕괴를 촉발했습니다(예를 들어, 2019년 페루에서 대통령은 교착 상태 속에서 의회를 해산했습니다. 이는 헌법에 어긋나지만 인기 있는 조치였습니다. 그보다 앞서 1960년대에 브라질의 조앙 굴라트 대통령은 쿠데타로 이어진 입법 교착 상태에 직면했습니다). 의원내각제에서 완전한 교착상태는 덜 흔합니다(실패한 정부는 보통 새로운 선거를 촉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수당 정부나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다당제 연합에서는 부분적 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벨기에는 2010-2011년에 분열된 의회로 인해 500일 이상 선출된 정부가 없었습니다. 어떤 제도이든 **마비가 발생하면 필요한 정책이 실행되지 않고** 문제가 악화되며 대중의 신뢰가 침식됩니다. 우드로 윌슨이 19세기에 경고한 "교착상태"와 "마비"는 권력분립 체제를 따르는 많은 현대 민주주의에 적합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secondratedemocracy.com.

2. 행정부의 권한 남용과 일방주의: 교착 상태와 대조되는 역설적인 점은 행정부가 교착 상태를 우회하기 위해 더 많은 권한을 축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입법부의 협조를 얻을 수 없을 때, 그들은 단독으로 행동할 방법을 찾습니다. 즉, 행정 명령을 내리거나, 비상 권한을 사용하거나, 법령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행정부 입법 상태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직이 "제국적" 역할로 성장한 것이 한 가지 예입니다. [아메리칸바.org](http://amerikanba.org). 또 다른 하나는 프랑스로,

제 5 공화국 헌법(1958)은 대통령에게 특정 조건(샤를 드골이 1961 년에 사용한 제 16 조 비상 권한)에서 의회를 우회하고 법령으로 통치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2000 년대에 여러 유럽 총리가 의회를 우회하면서 "칙령 법률"을 더 자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행정부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견제되지 않으면 위험해집니다. 권위주의적 경향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터키의 대통령(원래 의례적 역할)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하에서 행정부 대통령이 되었고, 그는 입법부의 반대에 직면하여 2017 년에 자신의 사무실에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제 터키는 효과적으로 의미 있는 권력 분립이 부족하여 독재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헌법의 **비상 조항**은 특히 압박 지점입니다. 단기 위기에 대비해 의도된 조항이지만 권력을 잡기 위해 오용될 수 있습니다(바이마르 독일의 제 48 조는 1930-32 년 총리가 의회 없이 통치하기 위해 오용하여 히틀러의 길을 닦은 것처럼). 백과사전.ushmm.org. 따라서 지부가 협력할 수 없는 구조적 무능력은 헌법적 경계 내에서 또는 경계를 깨면서 지나치게 지배적인 행정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결과 모두 자유민주주의가 의도한 균형을 훼손합니다.

3. 입법 기능 장애와 책임성 부족: 입법부는 정부의 대표 기관으로서 공익의 다양성을 대변하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권력 분립의 압력 하에서 입법부는 종종 기능 장애에 빠집니다. 당파적 양극화는 의회를 영구적 갈등의 장으로 만들 수 있으며, 정책 심의보다는 정부를 당혹스럽게 하거나 점수를 따는 데 더 집중합니다. 미국 의회의 조사 과포화(여러 위원회가 주로 다른 당을 해치기 위해 중복되는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는 입법 에너지가 입법에서 정치적 연극으로 전환된 사례입니다. 한국의 국회에서는 때때로 싸움과 필리버스터가 토론을 대체하여 예산이 지연되었습니다. 입법부는 또한 감독 권한을 남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정한 부정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보복을 위해 판사나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일부 주에서는 당파 의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린 판사를 탄핵하거나 파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법 독립에 대한 놀라운 침해입니다. 영어.엘파이스닷컴. 반면에 입법부는 같은 당의 간부들을 제지하는 데 소홀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이 같은 당의 대통령을 "동맹"으로 보고 감독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메리칸바.org. 이는 **무책임한 거버넌스** 로 이어지고, 대통령이나 내각은 정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한 엄격한 감사 없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기 제한이나 빈번한 선거(의원들이 유권자에게 반응하도록 하기 위한 것)는 때때로 단기적인 자세를 취하고 어려운 결정을

피하는 것을 장려하여 문제를 미루게 합니다. 많은 입법부의 구조적 설계(불량한 분할이 있는 양원제 또는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과반수 당선자 선출 방식)는 대중의 의지를 반영하고 응집력 있게 행동하는 능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입법부는 종종** 당파적 이유로 지나치게 방해하거나 행정부와 협력할 때 지나치게 수긍함으로써 견제 역할에 실패합니다. 두 경우 모두 공익이 침해되고 기관에 대한 신뢰가 약해집니다.

4. 정치화되고 과중한 부담을 지닌 사법부: 사법부는 대중 투표에 대한 책임이 가장 적지만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임무를 지닌 부서입니다. 현대 자유주의 민주주의에서 법원은 헌법 검토를 통해 엄청난 권한을 얻었지만, 이로 인해 정치적 수렁에 빠졌습니다. 권력분립 모델의 주요 약점은 선출된 부서가 해결할 수 없거나 해결하지 않을 때 때때로 **법원에 중요한 문제를 기본적으로 미룬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원이 본질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경합된 선거를 해결하고, 대통령과 의회 간의 분쟁을 중재하거나, 의회가 피하는 사회적 논란(예: 낙태권 또는 선거구 재조정)을 다루는 것입니다. 법원이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더 많이 판결할수록 단순히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정치적 영향력의 표적이 됩니다. 여당은 유리한 판사를 임명하려고 시도하고(임명을 둘러싼 싸움으로 이어짐) 패배한 당사자는 법원이 편파적이라고 비난합니다. 극단적인 경우, 정부는 단순히 법원 판결을 무시하거나 뒤집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 정부는 특정 헌법재판소 판결을 공개하기를 거부하여 사실상 무효화했습니다. [사법부.듀크.에듀](#) [사법부.듀크.에듀](#). 미국에서는 법원 명령에 대한 준수가 대체로 존중되지만, 주 정부 수준에서 공개적으로 저항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예: 공무원이 시민권 시대에 인종차별 해소에 대한 연방 법원 판결을 무시한 사례). 한 파벌이 의회에서 막을 수 없었던 다른 쪽의 정책을 막기 위해 우호적인 판사에게 의지할 때 **사법권의 무기화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사법부의 신뢰성을 침식합니다. 게다가 판사는 민주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많은 정책 문제의 중재자가 되면 민주주의적 결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시민들은 투표로 몰아낼 수 없는 엘리트가 결정을 내린다고 느낍니다. 일부 학자들은 선출된 대표자들이 비난을 피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법원에 위임하지만 민주적 선택을 훼손하는 "법률가정치"가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사법부는 동시에 너무 강력해질 수 있지만(정책을 조종하는 데 있어서) 동시에 **너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정당성과 독립성이 정치화로 인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화된 사법부는 또한 진정한 남용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합니다. 판사들이 당파적 충성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면 동맹의 행정 또는 입법 위반이 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정한 보호자 역할이 상실됩니다.

5. 지배적 파벌 장악(실제 권력 융합): 권력 분립은 각 분파가 뚜렷하고 상쇄되도록 의도하지만, 실제로는 단일 정치 파벌이 여러 분파를 장악하여 효과적으로 권력을 융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한 정당이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강력한 다수를 차지하고 이념적으로 일치하는 판사를 임명할 때 발생합니다. 적어도 한동안은 그 정당이 매우 적은 견제 수단으로 통치할 수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은 서로 다른 손이 레버를 잡을 때만 작동합니다. 같은 손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면 시스템은 내부 브레이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독립 후 수십 년 동안 인도 의회당은 일당 지배를 보였습니다. 1970 년대에 인디라 간디 총리는 당이 통제하는 의회와 약화된 사법부의 지지 또는 묵인으로 민주주의를 정지시켰습니다(1975-77 년 비상사태). 일본에서는 자유민주당(LDP)이 수십 년 동안 중단 없이 권력을 유지했고, 일본은 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했지만, 오랜 일당 통치는 관료적 장악과 미비한 감독으로 이어졌습니다. 권력의 비공식적 융합은 부패와 정책 침체를 낳았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제도혁명당(PRI)이 20 세기 대부분 동안 대통령, 의회, 주 정부를 장악하여, 사실상 일당 국가로 체제를 전환했고, 단지 견제라는 외관만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일당 정부 기간은 남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관찰자들은 2000 년대 초에 한 정당이 의회와 백악관을 장악했을 때 이라크 전쟁과 테러 방지 정책에 대한 행정부의 결정에 대한 입법적 감독이 거의 없었고, 정보 기관의 실패와 감시 및 구금에 대한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 증가했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헝가리의 피데스당은 민주적 위임이 어떻게 모든 부문을 통제함으로써 미래의 경쟁을 제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논의된 바와 같이 오르반의 과반수 득표로 인해 그는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외국정책닷컴](#) [외국정책닷컴](#). 구조적 문제는 권력 분립 자체로는 민주주의 과정이 한 쪽에게 충분히 큰 승리를 가져다준다면 **권력 집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다원주의에 의존합니다. 추가적인 안전 장치(압도적 다수결을 막기 위한 비례 대표제나 독립 위원회 등)가 없다면 지배적인 세력은 원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을 굳건히 하기 위해 규칙을 다시 쓰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교착 상태보다 더 심각한 실패라고 할 수 있는데, 민주주의 자체의 침식으로 이어져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바꾸거나 기존 헌법의 외관 아래에서 완전한 권위주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정책의 분열과 일관성 상실: 또 다른 미묘한 결함은 권력을 분리하면 일관된 정책 결정이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 부서가 서로 다른 측면을 담당하고(때로는 서로 다른 정당이 통제함) 정책이 분열되거나 내부적으로 모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법부는 특정 목표를 명령할 수 있지만 행정부는 규정을 시행하는 방식을 통해 목표를 훼손할 수 있으며, 법원은 법률을 해석하는 방식을 통해 목표를 더욱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일부 국가의 기후 변화 정책은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 부서는 야심 찬 목표를 추진하고 다른 부서는 자금 지원이나 집행을 늦춥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통과된 많은 규정을 철회했고, 일부 주와 법원은 트럼프의 움직임에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주고받기는 불확실성을 만들고 전반적으로 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어느 정도의 토론과 개정이 건강하지만, 각 부서나 새로운 정부가 이전 부서의 작업을 해체함에 따라 *기관*의 줄다리기가 때때로 장기 전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더 통합된 시스템을 가진 국가는 종종 더 장기적으로(좋은 나쁜든) 계획할 수 있습니다. 중국(권위주의 정권)은 장기 계획을 허용하는 통합된 권력의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민주주의는 심의가 흔들리는 정책으로 전략하지 않는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권력분립 모델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통제가 전환될 때 정책 변동이 더 빈번해졌습니다. 타협 정책이 더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약점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교착 상태(1 항)는 행정부의 권한 남용(2 항)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도전을 받을 때 사법부(4 항)를 정치화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배적인 세력(5 항)이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입법부를 소외시켜 야당이 의회 밖 저항에 의존하게 만들어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효과는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비효율적이고, 논쟁적이며, 심지어 불안정** 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붕괴** 될 수 있습니다. 즉, 헝가리의 경우처럼 느리게 침식되거나(갈등으로 마비된 민주 정부를 끝낸 수많은 역사적 쿠데타의 경우처럼) 급성 붕괴가 될 수 있습니다. 붕괴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결함은 민주주의가 문제를 해결하고 대중의 신뢰를 얻는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결론: 18 세기 모델의 한계

이 장에서 논의하는 증거와 사례는 권력의 엄격한 분립과 견제와 균형을 전제로 하는 고전적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현대 정치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깃펜과 마차의 시대에 설계된 것이 소셜 미디어와 핵무기의 시대를 관리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구조적 결함은 국가마다 나타납니다. 거버넌스의 교착 상태, 권력 남용, 제도적 전쟁, 권한 남용을 방지하거나 효과적으로 통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형태의 자유민주주의는 구조적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계몽된 정치가들이 서로를 냉정하게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비전은 당파 행위자들이 정부를 마비시키거나, 아니면 정부를 지배하기 위해 공모하는 방식으로 뿔을 맞대고 있는 현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결과 신뢰의 위기가 찾아온다. 시민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점점 더 기능 장애를 겪고 있다고 본다. 번영을 가져다주거나 위기를 결정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환멸은 극단주의적 대안과 마비 상태를 깨겠다고 약속하는 포퓰리스트 강자들의 부상을 부추긴다(종종 견제와 균형을 완전히 무시함으로써).

중요한 점은, 이러한 문제는 민주주의의 이상이나 자유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것입니다. 권력분립 모델은 폭정을 예방하고 선의의 거버넌스를 보장하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니다. 그 메커니즘이 흔들리고 있다면, 자유민주주의는 그것을 개혁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진단할 때, 우리는 이념에 대해 중립을 유지합니다. 이는 좌파나 우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내부 모순으로 인해 더 이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시스템에 대한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의도적으로 해결책을 제안하지 않고, 대신 행정 마비, 입법 기능 장애, 사법적 권한 남용, 당파적 견제 무기화, 권력 집중 등의 병리를 폭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병리를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유민주주의 2.0*의 후반부 장에서 취할 다음 단계는 21 세기에 자유민주주의의 목표를 더 잘 달성하기 위해 민주주의 제도를 어떻게 업데이트하거나 재설계할 수 있는지 탐구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18 세기에는 고귀하고 혁신적이었지만 지금은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력 남용을 균일하게 막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어떤 경우에는 권력 남용을 은폐하기도 했고, 기능적인 정부를 보장하지도 못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현재 프레임워크는 워싱턴에서 서울, 바르샤바에서 브라질리아까지 조사된 위기와 갈등에서 입증된 것처럼 **체계적 피로**의 징후를 보입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가 진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데이트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보강이 필요한 다리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시스템은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버전 "2.0"이 필요합니다. 기존 모델의 한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민주주의 설계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재고를 통해서만 자유민주주의는 현대 거버넌스의 과제에 맞서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dc.메릴.노스웨스턴.에듀.secondratedemocracy.com. 이후의 장에서는 이러한 도전을 받아들여 새로운 프레임워크인 *자유민주주의 2.0* 이 어떤 모습일지 탐구하고, 여기에 설명된 한계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Prompt 7: 시스템 원칙

자유민주주의는 다원주의, 법치주의, 권력분립, 개인 권리 보호를 강조하며 오랫동안 현대 거버넌스의 정점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브리태니카닷컴](#).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 시스템은 새로운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민들은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으며, 정부가 공동의 이익보다 특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cigionline.org](#). 최근 수십 년 동안 대중의 신뢰는 꾸준히 침식되었습니다. [포드스쿨.우미치.에듀](#)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자체의 붕괴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포드스쿨.우미치.에듀](#). 우리는 현재의 프레임워크가 해결하기 어려운 증가하는 양극화, 불평등, 기술적 혼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사상가들은 "자유민주주의 2.0"을 제안합니다. 이는 핵심 가치와 체계적 사고를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재조정하고 현대 기술로 강화된 **시스템 원칙에 기반을 둔 업데이트된 거버넌스 모델**입니다. 이 **챕터는 사랑, 자유, 신뢰, 책임** 과 같은 시스템 원칙이 어떻게 새로운 민주적 거버넌스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우리는 각 원칙을 정의하고 거버넌스에서 그 역할을 설명하고, 현재 민주주의의 단점을 검토하여 이러한 원칙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고, 이 접근 방식을 헌법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같은 전통적 모델과 대조하고, 새로운 기술(AI 및 블록체인)을 통합하여 투명하고 책임감 있고 분산된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목표는 이러한 원칙이 실제로 21 세기에 민주주의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엄격하면서도 접근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거버넌스를 위한 시스템 원칙 정의

시스템 원칙은 거버넌스 시스템이 모든 수준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지침 가치 또는 규칙입니다. 임시 정책과 달리 이러한 원칙은 깊이 내재되어 있어 의사 결정을 위한 일관된 윤리적, 구조적 나침반을 제공합니다. 아래에서 각 핵심 시스템 원칙을 정의하고 그것이 어떻게 좋은 거버넌스를 뒷받침하는지 설명합니다.

시스템 원칙

1. 사랑은 우주의 엔트로피 증가를 역행하는 최상위 가치이자 영원한 법칙이다.
2.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자유를 누릴 권리와 그에 수반하는 책임이 있다.
3. 시스템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수단이다.
4. 시스템은 엔트로피 증가를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분배한다.
5. 모든 시스템은 무한 경쟁한다.
6. 시스템은 목적을 포함하여 그 무엇도 소유할 수 없다.
7. 이 원칙은 누구나 개정할 수 있다.

사랑(연민과 공동선): 거버넌스에서 *사랑*은 연민, 공감, 사회 구성원 모두의 복지에 대한 관심의 윤리를 말합니다. 이는 정책이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에 대한 진정한 헌신에 의해 추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에 뿌리를 둔 시스템은 시민들 사이의 *고통을 예방*하고 상호 보살핌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예방합니다. 이 원칙은 정부가 어려운 선택을 하더라도 피해를 줄이고 번영하는 커뮤니티를 육성하는 것을 우선시하도록 보장합니다. 연민을 심어줌으로써 정부는 순전히 권력 기반 또는 이익 기반 통치에서 벗어나 시민을 추상적인 단위나 적대자가 아니라 이웃이자 파트너로 대하는 보다 인도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칙으로서의 *사랑*은 통일과 사회적 응집력을 촉진하여 공유된 인간성을 인식함으로써 다원주의 사회의 분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유(개인의 자유와 자율성): *자유*는 자유주의적 통치의 초석으로, 시민적 자유, 정치적 권리, 그리고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자유에 기반한 시스템은 자유로운 언론, 사상, 종교, 연합을 보호하고, 사람들이 개인적, 공적 영역에서 모두 대리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원칙이 다양성과 소수자 권리를 존중하는 것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각 개인이 법치주의 내에서 자신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유는 절대적인 허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와 지역 사회의 복지에 대한 존중의 틀 안에서 행사됩니다. 정치가 넬슨 만델라가 우리에게 상기시켰듯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넬슨만델라.org](http://nelsonmandela.org) – 자유의 건강은 시민과 지도자들이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 의해 유지됩니다. [넬슨만델라.org](http://nelsonmandela.org). 따라서 거버넌스에서 자유에 기반한 원칙은 법률과 제도가 건설적인 목적을 위해 그 자유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문화를 기르면서 자유를 극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은 인간의 창의성을 발휘하게 하고, 반대 의견과 혁신이 번성하게 하며, 자유 시민 사이에 권력을 분산시켜 폭정을 방지합니다.

신뢰(투명성과 성실성): *신뢰*는 민주주의를 하나로 묶는 접착제입니다.

[커뮤니티파운데이션.org.au](http://communityfoundation.org.au). 거버넌스 맥락에서 신뢰는 가치이자 결과입니다. 신뢰는 기관이 정직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시민들이 해당 기관이 대중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의 시스템 원칙은 정부 조치에 *투명성*, *책임성*, 진실성을 요구합니다. 의사 결정과 절차가 공개되고 공무원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때 부패와 남용이 억제되어 대중의 신뢰가 커집니다. 신뢰할 수 있는 거버넌스는 또한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서류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여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뢰가 높은 사회가 협력을 장려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지도자와 이웃을 신뢰할 때 정부에 참여하고, 법을 따르고, 시민 생활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커뮤니티파운데이션.org.au](http://communityfoundation.org.au). 신뢰를 원칙으로 삼음으로써, 자유민주주의 2.0은 윤리적 행동, 개방적 의사소통, 시민의 목소리 포함을 통해 국민의 눈에 합법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자체 강화적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투명한 거버넌스는 대중의 신뢰를 촉진하고, 참여하는 대중은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기관과 협력합니다.

책임(책임성과 시민적 의무): 거버넌스의 *책임*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시민들이 민주주의 시스템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무감입니다. 시스템 원칙으로서 책임은 지도자, 공무원, 기관이 법을 지키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데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함을 보장합니다. 이는 잘못을 폭로하고, 실수를 바로잡고, 대중의 신뢰를 저버린 사람들을 제거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메커니즘(법적, 제도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민주주의가 관중 스포츠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문화를 장려합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경계가 필요합니다. 이는 권리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시민 교육의 아이디어를 반영합니다. [크리즈닷컴](http://cruzadotcom) [넬슨만델라.org](http://nelsonmandela.org). 예를 들어, 투표, 정보 습득, 타인의 권리 존중,

대화 참여는 모두 건강한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책임의 일부입니다. 책임을 핵심 원칙으로 삼음으로써 이 시스템은 윤리적 거버넌스와 시민적 미덕을 강조합니다. 선출된 공무원은 자신이 공익의 하인(법 위에 군림하는 통치자가 아님)임을 상기시키고, 시민들은 자신의 선택과 참여가 국가의 운명을 형성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상호 책임은 권력과 의무가 균형을 이루는 회복력 있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러한 시스템 원칙은 각각 다른 원칙을 지원하고 강화합니다. *사랑은 자유를* 선을 위해 사용하고 *신뢰를* 구축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책임*으로 완화된 *자유*는 자유가 방종이나 혼돈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nelsonmandela.org. 리더가 책임감 있고 연민을 가지고 행동할 때 *신뢰*가 커집니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원칙은 거버넌스를 위한 통합된 도덕적 틀을 형성합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2.0의 규칙, 제도 및 관행의 기초 역할을 하며, 시스템이 기계적으로 건전할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인간적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장합니다.

시스템 원칙이 필수적인 이유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이상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민주적 통치는 종종 실천에 있어서 부족하여, 시스템 원칙 접근 방식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사랑, 자유, 신뢰, 책임과 같은 핵심 가치는 종종 손상되어 기능 장애와 환멸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적 문제를 살펴보면서 시스템 원칙의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신뢰와 사회적 응집력의 침식: 많은 민주주의가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정부가 투명하거나 진정으로 대중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지 의심합니다. cigionline.org [커뮤니티파운데이션.org.au](http://communityfoundation.org.au). 스캔들, 불투명한 의사결정, 지키지 못한 약속은 냉소주의를 낳았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연방 정부에 대한 신뢰는 1960년대 이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포드스쿨.우미치.에듀](http://foxschool.umich.edu). 최근 지방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상당수가 정부 상위 수준에서 "민주주의가 완전히 붕괴"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드스쿨.우미치.에듀](http://foxschool.umich.edu).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보다는 특수 이익을 위해 결정이 내려진다"*고 의심할 때 정치에서 손을 떼고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cigionline.org. 이러한 추세는 부식성이 있습니다. *"신뢰는 민주주의를 하나로 묶는*

접착제입니다." 커뮤니티파운데이션.org.au 그리고 그것 없이는 큰 문제에 대한 집단적 행동이 극도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포드스쿨.우미치.에듀. 신뢰의 시스템 원칙은 투명성과 성실성을 거버넌스에 구축하여 이를 직접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 지출에 대한 오픈 데이터, 독립적인 윤리 감시 기관, 참여적 감독(시민 검토 위원회와 같은)을 요구하면 기득권이 부당한 영향력을 숨기기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책임 메커니즘이 부패를 포착하고 억제함에 따라 대중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신뢰 원칙은 또한 대화와 이해(사랑 원칙의 표현)를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응집력을 재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주주의는 연민과 포용을 강조함으로써 분열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공감과 공유된 정체성을 기르는 사회는 더 회복력이 강합니다. 사람들은 정치적 상대방을 악마화할 가능성이 적고 공통점을 찾으려는 의지가 더 강합니다. 간단히 말해, 신뢰와 사랑을 지침 원칙으로 삼는 것은 오늘날 많은 민주주의를 괴롭히는 소외와 적대감의 순환을 역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목적이나 형평성 없는 자유: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를 자랑스러워하지만, 너무 자주 자유가 좁게 해석되거나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자유를 누립니다. 현재 시스템은 때때로 자유의 깃발 아래 큰 불평등과 사회적 불의를 용인합니다. 시민권 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지적했듯이, 위대한 민주주의에서도 "우리는 종종 대중에게서 필수품을 빼앗아 계층에 사치를 주었고" "억압의 철폐 발" 로 불우한 사람들을 짓밟았습니다. 킹인스티튜트.스탠포드.에듀. 사회의 극심한 부의 불균형은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하여 일반 시민보다 위에 사는 강력한 행위자 계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부유층이 국가와 단절되고 경제적 권력을 정치적 권력으로 전환함에 따라 "공화주의 정부를 지탱하는 공통된 감정을 훼손하여 헌법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영국. 억만장자와 특수이익이 선거자금과 로비를 장악하면 많은 사람의 자유가 효과적으로 제한됩니다. 이것이 시스템 원칙이 책임과 사랑(정의)과 함께 자유를 재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유는 공허한 슬로건이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살아있는 현실이어야 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유를 진정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필요, 교육 및 권리를 갖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연민)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 2.0 이 어떤 집단의 고통도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는 빈곤을 줄이고 체계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고취시키며, 이를 자유 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봅니다. 한편, 책임의 원칙은 시민과 지도자 모두에게 자유에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고 공정한 사회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넬슨만델라.org](http://nelsonmandela.org). 실제로, 이는 보다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 공정한 경제 규제, 상호 존중을 강조하는 시민 교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내장함으로써 우리는 자유가 제로섬 투쟁이나 방치에 대한 변명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대신, 자유는 도덕적 목적과 공동 책임에 의해 인도됩니다.

현재 견제와 균형의 한계: 고전적 자유주의 민주주의는 권력분립 과 견제와 균형과 같은 제도적 설계에 의존하여 권한을 제한하고 권리를 보호합니다. [브리태니카닷컴](http://brietanicat.com). 이러한 프레임워크(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균형을 이룸)는 폭정을 피하는 데 결정적이었지만 오늘날의 맥락에서는 주목할 만한 결함이 있습니다. 권력분립 모델은 교착 상태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양극화가 심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의회와 대통령 간의 당파적 교착 상태는 종종 긴급한 문제(예산 난관에서 기후 변화 대책까지)에서 교착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학자들은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의 핵심 문제는... 긴급한 사회 문제와 대중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 [에일저널.org](http://theatlantic.com). 각 부서는 협력이 필요할 때조차도 자신의 특권을 열렬히 지키거나 다른 부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덜 책임질 수 있는 방식으로 권력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법부가 선출되지 않은 관료 기관에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임원이 비상 권한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전통적 이론이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발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관의 기계적 분리만으로는 효과적이고 윤리적인 거버넌스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스템 원칙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이는 기관의 행동과 상호 작용 방식을 안내할 수 있는 *윤리적 체크리스트와 시스템적 비전을 제공합니다*.

책임 과 **신뢰**가 원칙으로 강화되면 정부 부서는 서로를 견제할 뿐만 아니라 과도하지 않으면서 공익을 위해 문제를 해결할 의무를 느낄 것입니다. 부서나 정당 간의 순수한 적대적 경쟁 대신, 원칙 중심 시스템은 건설적인 타협과 장기적인 사고를 장려합니다. 견제와 균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뢰와 투명성의 원칙은 비밀스러운 권력 행사보다는 국가적 과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일상적인 공개 포럼이나 교차 지부 위원회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책임의 원칙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급여를 중단하여 인센티브를 공동의 이익에 맞춰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시스템 원칙은 순전히 구조적인 권력 분립이 남긴 도덕적, 기능적 격차를 메웁니다. 이는 거버넌스가 단순히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연민, 자유에 대한 존중과 같은 가치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를 향해 권력을 유도하는 것임을 보장합니다.

대중 참여와 공유 목적의 상실: 현대 민주주의는 종종 시민 참여를 주기적 선거로 제한하고 일상적인 거버넌스는 정치인과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대표 민주주의는 가치가 있지만, 이는 시민 소외와 무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기존 민주주의에서 투표율은 평범하고, 투표 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거의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 결과 대중과 정부 간의 **신뢰**와 **책임** 연결이 약해집니다. 사람들은 시스템이 "듣지 않는다"고 느끼고, 이는 좌절이나 무관심을 낳습니다. 시스템 원칙 접근 방식은 사랑(각 시민이 고유한 가치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과 신뢰(지도자가 사람들에게 더 직접적인 역할을 맡김)의 개념에 따라 보다 **참여 적이고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주장합니다. 시민 의회, 참여 예산, 심의 위원회와 같은 메커니즘은 이러한 원칙을 구현합니다. 그들은 시민을 수동적인 주체가 아니라 솔루션을 공동으로 창출할 책임이 있는 적극적인 이해 관계자로 취급합니다. 실제 사례는 이것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일랜드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 의회는 낙태법과 같은 분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인 국민투표로 이어지는 권고안을 작성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존중하는 대화와 합리적인 의사 결정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정책 선택의 복잡성을 인식함에 따라 이러한 연습은 신뢰와 상호 이해를 구축합니다.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아마도 새로운 헌법적 틀에 이를 기록할 수도 있음) 자유민주주의 2.0은 공유된 목적의식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랑** 원칙은 경청과 포용의 윤리로 해석되어 소외된 집단조차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합니다. **자유** 원칙은 이러한 포럼에서 자유로운 질의와 토론을 지원합니다.

책임 원칙은 참여자와 당국 모두에게 의견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집단적으로 내린 결정에 따라 행동하도록 상기시킵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거버넌스의 단점인 불신, 양극화, 불평등, 정체된 제도, 시민의 권한 박탈을 볼 때 시스템 원칙의 필요성이 분명해집니다. 사랑, 자유, 신뢰, 책임에 다시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증상만이 아니라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우리가 거버넌스를 *인간화*하고, 시민 정신을 새롭게 하며, 민주주의를 적응시켜 21 세기의 과제를 극복하도록 이끕니다. 이는 보다 회복력 있고, 반응성이 뛰어나며, 포용적인 자유민주주의 2.0 을 위한 윤리적 인프라를 형성합니다.

시스템 원칙과 기존 거버넌스 모델 비교

시스템 원칙 프레임워크는 헌법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같은 전통적인 거버넌스 모델과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개선될까요? 이 섹션에서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을 대조하여 기존 모델의 한계와 원칙 중심 모델이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강조합니다.

합법성의 기초: 고전적 입헌 민주주의에서 합법성은 주로 법치주의와 공식 절차(선거, 합법적 권한, 사법적 검토) 준수에서 비롯됩니다. 헌법은 권한을 규정하고 공무원이 그 경계 내에서 활동하는 한 시스템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시스템 원칙 모델에서 합법성은 윤리적 성과와 대중의 신뢰를 포함하도록 확대됩니다. 정부가 합법적으로 선출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또한 핵심 가치에 따라 *훌륭하게* 통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헌 민주주의는 기술적으로는 합법적이지만 잔인하거나 불공평하다고 널리 여겨지는 정책(예: 긴축 정책으로 인해 빈곤층에 대한 지원 삭감)을 허용할 수 있지만, 원칙 중심 민주주의는 해당 정책이 연민이나 책임을 위반하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전통적인 프레임워크는 때때로 과정이 올바르면 정의가 뒤따를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시스템 원칙은 결과와 프로세스가 사랑(이것이 자비로운가?), 신뢰(투명하고 공정한가?), 자유(권리를 존중하는가?), 책임(지도자들이 책임을 지고 시민들이 경청하는가?)과 같은 도덕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2.0은 법치주의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덕적 나침반으로 법치를 *강화하여* 단순히 법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도덕적 정당성을 목표로** 합니다.

유연성과 적응성: 입헌 민주주의는 천천히 변화하는 안정적인 구조와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한 적응을 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권력 분립과 긴 입법 절차는 시기적절한 대응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예: 팬데믹이나 기술 혼란과 같은 빠르게 움직이는 위기 동안). 반면, 시스템 원칙 접근 방식은 체계적 사고와 지속적인 학습을 강조하여 적응성을 장려합니다. 핵심 가치를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원칙이 지켜지는 한 제도적 혁신에 대한 개방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입법 절차가 기후 변화와 같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원칙 중심 시스템은 과학자, 시민, 공무원을 포함한 다중 이해 관계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구속력 있는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규칙에서는 특이한 메커니즘이지만 긴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으로 정당화됩니다. 전통적 모델은 종종 헌법적 설계를 신성불가침(극도로 필요한 경우에만 개정)으로 취급하는 반면, 자유민주주의 2.0은 거버넌스 구조 자체를 (민주적 범위 내에서) 자유나 신뢰에 더 잘 봉사하기 위해 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정책에서 시스템적 사고가 피드백 루프와 조정을 강조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민주주의 기금.org](http://민주주의.기금.org) [민주주의 기금.org](http://민주주의.기금.org). 그 결과 복잡성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거버넌스 모델이 탄생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분산화하거나 중앙화할 수 있고, 전문가 지식을 통합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적절히 지시하고, 시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무엇이 효과적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지침이 되는 별은 원칙입니다. 제도적 형태가 변하더라도 원칙은 일정합니다. 이는 사회의 요구가 바뀌더라도 형태(예: 3개 분기, 고정 기간 등)가 고정되는 고전적 모델과 대조됩니다.

시민 참여와 사회 계약: 전통적인 자유 민주주의는 종종 시민 참여에 대한 일괄적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즉, 대표자를 선출한 다음 다음 선거까지 통치하게 합니다. 사회 계약은 주로 권리(언론, 재산 등)를 보호하고 그 대가로 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원칙은 보다 풍부한 사회 계약을 요구합니다. 심의 민주주의와 공동체 윤리의 이상을 빌려 그들은 거버넌스를 파트너십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는 모델이 투표를 넘어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급했듯이 시민 집회, 국민투표, 참여 정책 플랫폼과 같은 도구는 드문 예외가 아닌 정기적인 기능이 됩니다. **신뢰**의 원칙은 정부가 시민에게 더 많은 정보와 영향력을 신뢰하고 시민은 자신의 의견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선거 사이의 시민 의견이 무시될 수 있는 시위나 협의로 제한되는 많은 현재 민주주의와 대조됩니다. 게다가 시스템 원칙 접근법은 **시민적 미덕**을 되살리려 합니다. 이는 국가의 성공이 국민의 성격과 참여에 달려 있었던 옛 공화국에서 유래한 아이디어입니다. 전통적인 모델은 제도가 올바르게 설계되면 시민적 미덕이 스스로 해결될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현실은 무관심과 분열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유민주주의 2.0은 시민적 책임(교육, 지역 참여 기회, 시민 활동에 대한 대중의 인정을 통해)을 적극적으로 배양합니다. 이는 거버넌스를 가끔씩 하는 의무가 아닌 사회적 가치의 일상적인 행사로 취급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프레임워크의 한계, 즉 정부와 통치받는 사람 간의 격차를 해결합니다. 더욱 참여하는 대중은 대중의 의지를 반영하는 정책(정보에 입각한 방식으로)과 이러한 정책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중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생은

많은 헌법 시스템에서 일반적인 상향식 의사 결정보다 더 지속 가능하고 수용 가능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권력과 책임의 처리: 입헌 민주주의는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부와 수준(연방, 주, 지방)에 권력을 분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배는 때때로 책임의 *분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책임을 지고 있을 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관과 정부가 관할권을 놓고 다투고 서로를 비난하기 때문에 환경 재해가 잘못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견제와 균형**이 손가락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민주주의 기관은 서로를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경영진이 사법 독립을 공격하거나 입법부가 순전히 정치적 이득을 위해 경영진을 마비시킬 때처럼). 시스템 원칙 모델은 **공동의 책임** 의식 과 공통 목표에 대한 일치감을 주입하여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려고 합니다. *공동선에 대한 사랑*이 공유된 원칙이라면, 반대 기관조차도 사회에 분명히 이로운 정책을 방해하는 데 주저할 것입니다. *책임*이 뿌리 박혀 있다면, 리더들은 함께 일할 것으로 기대되고 고의적인 기능 장애에 대해 가혹하게 판단받을 것입니다. 또한 시스템 원칙에는 투명성과 책임성(신뢰와 책임 요소)이 포함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개인적* 책임성에 더 큰 강조점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시스템은 실패나 부패를 처벌하기 위해 주로 선거나 내부 점검에 의존하는데, 이는 느리거나 비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2.0은 실시간 성과 추적(예: 보스턴이 실시간으로 도시 성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CityScore 시스템을 반영하여 서비스가 얼마나 잘 제공되는지에 대한 공개 대시보드)과 같은 측정을 통해 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cigionline.org 및 더 강력한 독립적 감독 기관. 가장 중요한 점은 원칙 프레임워크에서 대중이 리콜, 시민 감사 또는 온라인 투명성 포털을 통해 공무원을 직접 책임지도록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시스템 원칙은 법치주의 (**정의와 안정에 필수적임**)와 **전체 시스템에 스며든 윤리적 책임** 문화를 결합합니다. 그 결과는 법에 의해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옳은 일을 하려는 내부적 동기를 가진 정부여야 합니다. 이는 법률적 접근 방식으로 인해 때때로 비윤리적이지만 합법적인 행동이 침투할 수 있는 기존 모델에 대한 개선입니다. 요약하자면, 헌법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거버넌스의 골격(구조와 절차)을 제공하는 반면, 시스템 원칙은 시스템의 *영혼* 과 *지적인 감독*을 제공합니다. 이는 선거와 법령의 메커니즘이 아니라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유, 즉 인간의 요구를 충족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함으로써 한계를 해결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통합하여, 자유민주주의 2.0은 **원칙과 실용성** 을 모두

지향합니다. 원칙은 사랑, 자유, 신뢰, 책임을 결코 잊지 않는 것이고, 실용주의는 이러한 원칙이 실제로 더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구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위한 기술 통합

자유민주주의 2.0의 결정적 특징은 거버넌스의 시스템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현대 기술, 특히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을 현명하게 통합한 것입니다. 현명하게 사용되는 기술은 투명성, 책임성, 분산화를 크게 향상시켜 원칙을 구체적인 관행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보다 개방적이고 반응성 있는 민주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투명성과 분산화를 위한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불변하고 투명한 기록 보관으로 알려진 분산 원장 기술입니다. 거버넌스 맥락에서 블록체인은 정부 거래 및 결정에 대한 공개적이고 변조 방지 기록을 생성하여 부패, 사기 및 신뢰 부족의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공공 등록부(토지, 계약, 투표 등)는 특히 법치주의가 약한 환경에서 변조나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반면 온두라스가 블록체인 기반 토지 등록부를 구현했을 때 기록을 비밀리에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사기성 재산 청구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알로닷컴](#). 마찬가지로 조지아(국가)는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자신의 재산권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높입니다. [알로닷컴](#). 이러한 사례는 블록체인이 기술을 통해 신뢰를 높이는 힘을 보여줍니다. 두바이에서 시 정부는 공공 조달 프로세스에 블록체인을 도입했습니다. [알로닷컴](#). 이는 모든 입찰과 계약이 투명한 원장에 기록되어 공무원이 입찰을 조작하거나 뇌물을 요구할 가능성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마트 계약(블록체인에서 자체 실행되는 계약)은 규칙을 자동으로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업체의 납품물이 검증될 때만 지불을 실행합니다. [알로닷컴](#) - 인간의 재량권과 잠재적 남용을 줄입니다. 그 결과 비용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각 단계에 대한 감사 가능한 추적이 있기 때문에 **책임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블록체인은 책임과 신뢰** 원칙을 구현합니다. 모든 사람(공무원 및 계약자)이 합의된 규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며, 모든 이해 관계자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이를 수행하여 신뢰를 구축합니다. 이러한 사례 외에도 많은 민주주의가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험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선거를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선거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에서 투표할 때 각 투표는 암호화되고 타임스탬프가 지정되며, 원장이 분산되기 때문에 감지되지 않은 투표를 변경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유형의 선거 사기를 제거하고 결과의 무결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참여(예: 안전한 온라인 투표)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알로닷컴](#). 잠재적인 실제 적용 사례는 웨스트 버지니아의 해외 군인 유권자를 위한 블록체인 투표 시범 사업으로, 그들의 투표가 분실되거나 변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기술을 확장하면 투표를 검증하고 계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빈번한 국민투표나 직접 민주주의 이니셔티브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블록체인은 자유민주주의 2.0 버전의 핵심 측면인 **분산화** 와 일치합니다. 단일 중앙 기관에 신뢰를 두는 대신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신뢰를 분산합니다. 이 기술적 분산화는 개인과 지역 사회가 항상 중앙 청산소에 의존하지 않고도 거버넌스를 검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정치적 분산화 원칙을 보완합니다. 물론 디지털 형평성과 보안을 보장하는 것과 같은 과제는 남아 있지만 이러한 사례는 블록체인이 매우 실용적인 방식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의 기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책임성과 효율성을 위한 인공지능: AI 는 패턴 인식, 데이터 분석, 의사 결정과 같이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능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말합니다. 거버넌스에서 AI 는 증거 기반 의사 결정을 강화하고,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고, 문제를 조기에 감지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적용하면 모두 시스템 원칙을 강화합니다. AI 가 빛나는 한 분야는 인간이 놓칠 수 있는 비효율성이나 부패의 패턴을 밝히기 위해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 알고리즘은 수천 건의 정부 거래를 스캔하여 사기 또는 자금 오용을 시사하는 이상 징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유포노](#) [cigionline.org](#) 세계은행은 공공 조달에서 부패 "적신호"를 감지하기 위해 AI 를 탐색했습니다. 여기에는 공모를 나타낼 수 있는 비정상적인 입찰 패턴이 포함됩니다. [헤르티-스쿨.org](#). AI 는 이러한 패턴을 포착하여 감시자 역할을 하며, 책임감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책임**을 강화합니다. 여러 공공 기관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무 기록을 실시간으로 감사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수년 후가 아니라 사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윤리적 거버넌스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igionline.org](#). 또 다른 중요한 응용 분야는 투명성과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대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방대한 양의 데이터(예산 수치, 서비스 제공 지표, 정책 결과)를 생성합니다. AI 는 이러한 원시 데이터를 접근 가능한 정보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보스턴시의 **CityScore** 이니셔티브가 좋은 예입니다. 범죄에서 도로의 움푹 패인 곳 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데이터를 집계하고 AI 기반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도시 성과에 대한 실시간 "점수"를 제공합니다. cigionline.org. 시민들은 도시가 주요 지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쉽게 볼 수 있으며, 거의 실시간으로 정부에 책임을 묻습니다. 이 혁신은 신뢰 원칙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정부 운영의 신비를 풀고 대중이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게다가 AI 챗봇과 가상 비서가 정부를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여러 기관에 AI 가상 비서를 배치했습니다. cigionline.org. 이러한 봇은 시민들에게 24 시간 연중무휴 지원을 제공하고, 정부 서비스에 대한 질문에 답하거나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는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언제든지 정부와 쉽게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사랑* (시민에 대한 서비스)과 *자유* (정보 접근) 원칙을 구현합니다. 관료적 장애물이 줄어들면 시민들은 불투명한 관료주의에 좌절하는 대신 존중받고 힘을 얻는다고 느낍니다. 중요한 점은 AI 가 예측 분석을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구 사항과 결과를 예측함으로써(예: 어떤 인프라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지 또는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하는 곳을 예측)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일찍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 있고 대응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영국의 국민 건강 서비스는 AI 를 사용하여 환자 입원률을 예측하고 자원 할당을 최적화합니다. cigionline.org, 일반 거버넌스로 확장하면, 준비하고 효율적이며 대중의 신뢰를 침식하는 위기를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AI 를 거버넌스에 통합하려면 강력한 윤리적 지침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시스템 자체는 투명해야 하며("설명 가능한 AI"이므로 결정을 이해할 수 있음) 편견이 없어야 하며, 불공정한 결정을 내려 신뢰를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AI 와 블록체인을 결합하는 것이 강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안은 AI 결정 로그를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AI 가 수행하는 모든 작업을 추적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org 에스토니아의 전자 정부 시스템은 선구적인 사례입니다.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시민 데이터를 보호하고 AI 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간소화하여 보안과 서비스 품질을 모두 향상시키는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cigionline.org. 블록체인은 데이터 무결성과 감사 가능성(신뢰)을 보장하는 반면, AI 는 서비스의 효율성과 개인화를 개선합니다(자유와 사랑, 정부를 개인의 필요에 맞게 맞춤화). 그 결과, 전자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높고 디지털 정부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분산형 및 클라우드 소싱 거버넌스: 특정 기술을 넘어 기술 통합의 정신은 권력과 정보를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은 분산형 의사 결정 플랫폼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분산형 자율 조직(DAO)이 실험되고 있으며, 스마트 계약에 인코딩된 규칙을 통해 구성원이 제안에 투표하고 승인되면 자동으로 의사 결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DAO를 통해 특정 예산을 운영하는 도시나 커뮤니티를 상상해 보세요. 시민들은 토큰을 사용하여 프로젝트(예: 공원이나 학교 프로그램)를 제안하고 투표하며, 자금은 스마트 계약을 통해 선택된 프로젝트에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관료주의와 잠재적인 조작의 계층이 제거되어 커뮤니티의 의지를 투명한 방식으로 직접 제정할 수 있습니다. DAO는 주로 암호화폐 영역에서 알려져 있지만, 거버넌스 모델은 미래 민주주의 시스템의 잠재적 빌딩 블록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lcx.com 암호이타주의.org. 마찬가지로 AI는 대규모 심의를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Polis(대만의 디지털 민주주의 이니셔티브에 사용됨)와 같은 플랫폼은 AI를 사용하여 여론을 모으고 수천 명의 시민 기여에서 합의점을 찾습니다. 그런 다음 정책 입안자는 분열보다는 통합하는 솔루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기반 방법은 **신뢰의 시스템 원칙** (프로세스가 개방적이고 데이터 중심이기 때문)과 **자유** (모든 사람이 엘리트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기 때문)와 일치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복잡성과 규모를 처리하여 기존 방법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기존 기관을 보완합니다. 예를 들어, 대만은 입법을 위한 온라인 클라우드소싱(vTaiwan 플랫폼)을 사용하여 Uber의 규제와 같은 논란이 많은 문제를 합의를 통해 해결하고 양극화된 승자 독식 결과를 피했습니다. 이러한 도구를 통합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2.0은 **참여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거의 달성되지 않았던 조합입니다.

요약하자면 AI와 블록체인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시스템 원칙을 강력하게 실현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부정직을 기술적으로 어렵게 만들어(블록체인의 불변성) 그리고 일찍 포착(AI의 패턴 감지)함으로써 무결성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정보를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와 프로세스 신뢰에 대한 장벽을 낮춰 참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이전에는 규모에 비해 불가능했던 수준의 개방성과 책임성으로 운영되는 거버넌스 시스템입니다. 구체적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시민이 직접 기록을 확인하고 결과를 보고 규칙이 준수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음), **책임**을 보장하고 (더 나은 감독과 자체 수정 시스템을 통해), **자유**를 보호하고 (분산된 통제와 정보 접근을 통해), 심지어 **사랑**을 구현합니다

(시민 중심 서비스와 모든 목소리의 포함을 통해). 물론 인간의 판단과 민주적 심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술은 정치적 과정을 지원하지만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원칙에 따라 사용하면 기술은 굳건한 게이트키퍼로부터 일반인에게 권력을 재분배하고 거버넌스의 어두운 구석에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이는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고 분산된** 자유민주주의 2.0의 약속을 이행합니다.

결론

시스템 원칙에 기반을 둔 자유민주주의 2.0은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희망찬 길을 제시합니다. 정치 시스템의 DNA에 사랑, 자유, 신뢰, 책임의 원칙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내장함으로써 민주주의 쇠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입헌 민주주의의 성과(법의 지배, 권력 분립, 권리 보호는 여전히 중요함)를 버리지 않고 이를 되살리고 초월합니다. 강력한 윤리적 차원과 시스템적 사고를 거버넌스에 주입하여 우리 기관이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보살피고 협력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현재 모델이 불신, 과도한 당파성, 불평등, 민첩성 부족으로 인해 종종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스템 원칙은 이러한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합니다. 불투명성이 있는 곳에 투명성을 요구하고, 무관심이 있는 곳에 연민을 요구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곳에 공동의 책임을 요구하고, 경직성이 있는 곳에 적응성을 요구합니다.

이 새로운 모델에 대한 이론적 주장은 실제 사례와 새로운 혁신에 의해 강화됩니다. 참여적 의사 결정, 오픈 데이터, 블록체인 기록 보관 또는 AI 기반 공공 서비스를 실험한 국가와 도시는 미래가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일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례는 에스토니아의 블록체인 보안 전자 거버넌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cigionline.org 보스턴의 CityScore 책임성 대시보드에서 대만의 클라우드소싱 정책 토론까지 cigionline.org 두바이의 블록체인 계약 알로닷컴 –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고, 포괄적인 거버넌스가 유토피아적 환상이 아니라 오늘날 구축되고 있는 실질적인 현실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진실한 정보와 진정한 목소리가 주어지면 신뢰가 재건되고 시민의 에너지가 다시 불붙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파트너로 대하는 정부에 반응합니다. 이것이 시스템에 사랑과 신뢰를 엮는 본질입니다.

일반 대중에게 자유민주주의 2.0은 단순히 그들을 위해, 그들과 함께 일하는 정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창조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서 일상 생활을 경험하고, 권위자들이 정직하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 각자가 투표를 넘어서 거버넌스에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덜 격렬한 이념적 교착 상태와 집단적 책임감에 따라 더 많은 문제 해결을 의미합니다. 정책 입안자와 지식인에게 그것은 이러한 원칙을 염두에 두고 기관을 재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합법적이거나 효율적인가?"뿐만 아니라 "무엇이 우리의 핵심 가치를 지지하고 신뢰를 낳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정치학, 윤리, 기술 및 사회학을 활용하여 새로운 솔루션을 만드는 학제 간 엄격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논문이 보여주하고자 했듯이 보상은 큼니다. 인간의 잠재력과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를 개선할 수 있는 더 견고한 민주주의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스템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의 다음 진화를 위한 윤리적 토대와 실질적 틀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치하는 방식이 항상 우리가 통치하는 이유와 일치하도록 보장합니다. 즉, 자유, 평등, 형제애의 정신으로 모든 사람의 권리와 복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이전 민주주의 혁명의 시대를 초월한 단어에서 따온 것입니다). 사랑, 자유, 신뢰, 책임을 지침으로 삼고 혁신을 활용하여 이를 뒷받침함으로써 우리는 시대의 시험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밝게 빛나는 자유민주주의 2.0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과제는 헌법 개혁, 시민 교육, 기술 배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과 지도자 모두가 자유롭고 공정한 정부를 유지하는 원칙에 대한 새로운 헌신을 통해 이 비전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성공은 항상 원칙과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명확한 시스템 원칙과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유민주주의 2.0은 우리 삶 속에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높은 이상에 걸맞고 가장 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참고문헌:

- 브리태니커. *자유민주주의* – 다원주의, 법치주의, 권력분립, 시민권을 강조합니다. [브리태니카닷컴](#).
- 포드 스쿨(Rebecca Cohen, 2021). *대중의 신뢰 붕괴* – 1960년대 이후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침식한 문서와 민주주의 붕괴에 대한 두려움 [포드스쿨.우미치.에듀](#) [포드스쿨.우미치.에듀](#).

- 커뮤니티 재단(공공 무결성 센터).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민주주의* - "신뢰는 민주주의를 하나로 묶는 접착제"라고 언급하며 기득권으로 인한 신뢰 감소에 대해 경고합니다. [커뮤니티파운데이션.org.au](https://communityfoundation.org.au).
- LSE/Oxford J. Legal Studies(2019). *현대적 헌법 민주주의의 위기* - 극심한 부의 불평등이 공화주의 정부의 "공통된 감정"을 훼손하고, 사실상 민주주의를 플루토크라시로 전환한다고 주장합니다. [영국 영국](#).
- 마틴 루터 킹 주니어(1957). *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설교* - 민주주의를 칭찬하지만 우리가 종종 다른 사람들을 억압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이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합니다. [킹인스티튜트.스탠포드.에듀](#).
- 만델라 재단(1995/2017). *국가 연설* - 넬슨 만델라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말하며 자유의 지속성을 사회의 책임 수준과 연결했습니다. [넬슨만델라.org](#) [넬슨만델라.org](#).
- Yale Law Journal(Bowie & Renan, 2021). *권력분립 반혁명* - 양극화로 인해 미국 권력분립 체제 하에서 사회 문제에 대해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 [예일로저널.org](#).
- 민주주의 기금. *우리가 배우는 방식* - 민주주의 지원 작업에서 시스템적 사고와 적응을 옹호하며, 민주주의를 복잡하고 변화하는 시스템으로 인식합니다. [민주주의 기금.org](#) [민주주의 기금.org](#).
- Yallo(2023). *투명한 거버넌스를 위한 블록체인* - 블록체인이 정부를 위한 투명하고 변조 불가능한 원장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며, 온두라스와 조지아의 토지 기록 사용과 두바이의 조달 사용을 인용합니다. [알로닷컴](#) [알로닷컴](#) [알로닷컴](#)
- TechBullion(2022). *투표 및 거버넌스의 블록체인* - 선거 보안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 투표의 잠재력에 대해 논의합니다. [알로닷컴](#).
- CIGI(2023).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 재건: AI 활용* - AI가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보스턴의 CityScore) [cigionline.org](#), 서비스 제공(AI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에스토니아의 전자 정부) [cigionline.org](#), 효율성(자동화가 수백만 시간을 절약한다는 Deloitte 연구) [cigionline.org](#), 및 사기 감지 [cigionline.org](#).
- OECD/U4(2021). *부패 방지에 있어서 AI* -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공 조달의 불규칙성을 표시하고 부패를 조기에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포노](#).
- 호주 정부(ANZSOG, 2019). *신뢰의 문제* - 신뢰가 사회를 하나로 묶고 정책 실행의 핵심임을 반복합니다. [안즈소그.에듀.오](#).
- 극심한 고통 예방을 위한 조직(2023). *연민의 거버넌스* -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연민을 우선시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 집회와 같은 메커니즘을 제안합니다. [예방합니다](#). [예방합니다..](#)

Prompt 8: 법치주의 2.0

법치주의 2.0은 인간의 재량보다는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규칙에 따라 작동하는 **완전히 규칙 기반의 법률 시스템**을 구상합니다. 이 연구는 그러한 시스템에 적합한 수학적 프레임워크를 탐구하고, 알고리즘 법률의 역사적 및 현대적 사례를 검토하고, 법적 자동화의 성공적인 사례 연구를 조사하고, 순전히 규칙 기반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의 과제를 논의합니다. 목표는 **순수한 계산 논리**를 통해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접근 방식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규칙 기반 법률 시스템을 위한 공식 프레임워크

형식 논리와 계산 논리는 완전히 규칙 기반 방식으로 법률을 모델링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여러 프레임워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식 논리(술어/1차 논리): 법적 규칙은 특정 조건이 특정 법적 결과로 이어지는 시점을 정의하는 논리적 명제(예: 함축, 양화사)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형식 논리를 사용하여 일련의 법률을 작성하고, 법률을 논리적 시스템의 공리처럼 취급할 수 있습니다. writings.stephenwolfram.com 철학.스택익스체인지닷컴. 예를 들어, 라이프니츠는 수세기 전에 인간의 법률을 계산 연습으로 바꾸는 것을 구상했습니다. writings.stephenwolfram.com 현대의 노력은 모호성을 제거하고 수학적 정확성으로 법률 용어를 정의하려는 시도를 통해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의무 논리(규범 논리): 의무 논리는 의무, 허가, 금지를 다루는 모달 논리의 한 분야입니다. "X는 의무적이다" 또는 "X는 금지되어 있다"와 같은 진술에 대한 형식주의를 제공하며, 법적 규범을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ko.위키피디아.org](https://ko.wikipedia.org). 의무 논리는 규범적 개념의 논리적 특징을 포착하려고 시도하며 법률 코드에서 의무와 권리를 모델링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 의무 논리만으로는 구현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일 수 있으며, 법률에서 일반적인 조건부 의무와 예외를 처리하기 위해 확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ko.위키피디아.org](https://ko.wikipedia.org).

집합 이론과 온톨로지: 집합 이론은 법적 주체, 사례 또는 조건(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시민 집합)의 컬렉션을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논리와 결합하여 집합 이론은

범주(예: 법적으로 정의된 사람 또는 행동 집합)를 정밀하게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대 법률 정보학은 종종 **온톨로지** (구조화된 어휘)를 사용하여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법적 개념과 그 관계를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법적 온톨로지(OWL 또는 LegalRuleML 과 같은 표준 사용)는 용어 정의를 인코딩하고 해당 용어에 규칙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세르-ws.org](http://seer.ws.org). 이는 계산 규칙이 법적 개념(예: 구역법에서 "차량" 또는 "건물"로 간주되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의미적 기초를 제공합니다.

논리 프로그래밍(규칙 기반 시스템): 아마도 가장 실용적인 프레임워크는 *논리 프로그래밍 형태의 계산 논리* 일 것입니다. 논리 프로그래밍 언어(예: **Prolog**, Datalog 또는 도메인별 규칙 언어)는 컴퓨터가 사실에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if-then 절(Horn 절)로 법적 규칙을 인코딩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선언적입니다. 즉, 시스템의 규칙을 지정하고 추론 엔진이 결론을 도출합니다. 논리 프로그래밍은 **실제 법률을 인코딩하는 데 성공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실제 법률을 실행 가능한 규칙 세트로 변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률.스탠포드.에듀](#). 전형적인 예로는 1986 년 연구에서 Prolog 프로그램으로 완전히 공식화된 **1981 년 영국 국적법이 있습니다**. [법률.스탠포드.에듀](#) 연구자들은 중첩된 조건과 예외를 포함하는 해당 법안의 문구가 자연스럽게 누가 시민인지를 결정하는 논리적 절로 번역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법률.스탠포드.에듀](#). 이 연구는 **법률 텍스트가 종종 암묵적인 논리적 구조** (예: "조건 1 또는 조건 2 이고 예외가 아닌 경우 결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규칙 기반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으로 포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논리 프로그래밍은 다음을 지원하기 때문에 법률에 적합합니다. (a) 조건 규칙을 인코딩하기 위한 **혼 절** (암시), (b) 규칙 적용 가능성을 찾기 위한 백트래킹 검색, (c) 부정 실패 또는 명시적 우선 순위 규칙을 통해 기본값 및 예외를 처리하는 기능. 사실, 많은 법적 결정(적격성 검사, 규칙 트리거 등)은 사실 및 규칙의 지식 기반에 대한 *쿼리*처럼 작동합니다. 바로 논리 프로그래밍이 탁월한 부분입니다. [법률.스탠포드.에듀](#) [법률.스탠포드.에듀](#).

제안된 프레임워크 - 법적 확장이 있는 계산 논리: 위의 내용을 결합하면 **법치주의 2.0**에 적합한 프레임워크는 *계산 형태로 인코딩 된 형식 논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논리 프로그래밍 엔진을 통해 구현된 **1차 논리와 무효화 가능한 논리** (예외 처리)의 하이브리드는 강력한 후보입니다. 즉, 법률은 잘 정의된 의미론을 가진 구조화되고 정확한 구문(프로그래밍 코드와 매우 유사)으로 작성됩니다. 각 법률 또는 규정은 일련의 규칙(if-then 절 또는 논리적 공리)이 됩니다. 규범적 진술의 경우 의무와 금지를

구별하기 위해 의무 연산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Prolog 또는 기타 규칙 엔진과 같은 도구는 주어진 사실(특정 사례 또는 상황을 나타내는 사실)에 대해 이러한 규칙을 실행하여 **결정론적이고 투명하게** 법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Rules as Code** 운동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반영합니다. 즉, 정부가 컴퓨터가 일관된 방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 및 규정의 공식적인 기계 소비 가능 버전을 초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디지털 정부 허브.org](http://digital.gov.org). 계산 논리를 기반으로 모든 법적 결정은 명확한 전제(법률 + 사실)에서 논리적으로 추론한 결과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전 결정된 규칙의 우월성으로서 법치주의를 상징합니다.

알고리즘 규칙 시행의 역사적 및 현대적 사례

역사와 현재의 관행은 규칙 기반 프레임워크가 법적 추론과 집행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예를 제공합니다. 아래에서는 알고리즘적 법적 집행, 공식화된 법적 정의, 그리고 실제 **규칙 기반 의사 결정 시스템의 주요 사례를 살펴봅니다.**

법률 분야의 초기 전문가 시스템: 알고리즘에 법률을 인코딩한다는 아이디어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0 년대의 영국 국적법 프롤로그 프로젝트 외에도 [법률.스탠포드.에듀](http://law.stanford.edu), 연구자들은 의사 결정을 지원하거나 자동화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 학자들은 세법, 이민법 및 사회적 혜택 규칙의 일부를 의사 결정 트리 또는 규칙 기반 소프트웨어로 인코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시스템은 종종 프로토타입이었지만 실행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변호사와 프로그래머가 복잡한 법률 텍스트를 정확한 규칙 논리로 번역하는 데 협력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TurboTax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구현할 수 있는 의사 결정 표로 미국 세법 코드와 규정을 공식화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20 세기 후반에는 많은 정부 기관이 복지 자격 계산, 자녀 부양비 계산 또는 연금 혜택 결정과 같은 작업에 **비즈니스 규칙 엔진을 사용하여 본질적으로 서면 규정을 코드로 변환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알고리즘이지만 AI 기반이 아니며 하드코딩 된 논리를** 따릅니다. 이 시대의 주목할 만한 관찰은 **법률 언어가 코드로 번역되기 전에 종종 명확히 하고 모호성을 해소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법률의 많은 모호성과 불일치가 식별되었고, 이는 공식화 과정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철학.스탠포드.에듀](http://law.stanford.edu).

계산적 법적 정의 및 온톨로지: 규칙 기반 처리를 가능하게 하려면 법적 개념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계산법 분야**의 프로젝트는 법적 용어에 대한 공식적인 표현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OASIS LegalRuleML 표준은 RuleML(규칙 마크업 언어)을 법적 규범에 특화된 기능으로 확장합니다. docs.oasis-open.org. 관할권, 권한 및 시간적 타당성과 같은 메타데이터로 규칙을 태그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적 온톨로지(예: LKIF 또는 **교통법 온톨로지** 와 같은 도메인)는 알고리즘이 규칙의 각 용어가 무엇을 참조하는지 "알 수 있도록" 구조화된 정의(클래스, 관계)를 제공합니다. 간단한 예: 교통 코드에서 "차량"으로 간주되는 것(자동차, 트럭 등 포함)을 분류법에서 정의하면 컴퓨터가 차량으로 분류된 모든 객체에 "*차량은 60km/h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라는 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적 법적 정의**는 Akoma Ntoso(입법 문서 구조화용)와 같은 마크업 시스템과 법률이 수반되는 *논리적 공식* 과 함께 게시되는 이니셔티브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노력은 법률을 더 **모호하지 않고 정확하게** 만들어 자동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알고리즘적 법적 집행 도구: 알고리즘이 법률이나 규정을 자동으로 집행하는 실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로는 **교통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속도 카메라와 신호등 카메라는 위반 사항을 자동으로 감지하고(센서와 타이밍 규칙을 사용) 인간의 개입 없이 티켓을 발급합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차량 속도가 제한보다 높으면 위반 사항을 기록하고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미리 정의된 규칙(물리 및 이미지 처리 제외)에 따라 순전히 작동하며 일관되고 법치주의에 기반한 집행의 예입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플랫폼은 **규칙의 알고리즘적 집행**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YouTube 의 콘텐츠 ID 와 같은 저작권 필터는 보호된 자료와 일치하는 콘텐츠를 자동으로 제거하거나 플래그를 지정하여 소프트웨어를 통해 효과적으로 저작권법을 집행합니다. [법률.스탠포드.에듀 lawreview.uchicago.edu](https://www.lawreview.uchicago.edu). 콘텐츠 ID 는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지나치지만, 규칙(일치 = 삭제)을 따르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대규모로 합법적인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예는 금융입니다. 자동 회로 차단기로 구현된 주식 거래 규정(*Y 시간 내에 시장이 X% 하락하면 거래 중단*)은 거래소 소프트웨어에서 규제 정책을 즉시 균일하게 시행하기 위해 실행하는 성문화된 규칙입니다.

정부에서의 "코드로서의 규칙": 현대 정부는 법률이 초안되거나 적어도 인간 언어와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코드의 두 가지 형태로 발표되는 **코드로서의 규칙** 접근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은 특정 규정(예: 건축법규 또는 세무 규칙)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코드로 인코딩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했습니다. OECD는 2020년에 정부가 적용의 일관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식적인 기계가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의 법률을 만들 것을 권고했습니다. [디지털 정부 허브.org](https://digital.govt.nz/). 법률의 권위 있는 코드 버전을 보유함으로써 모든 소프트웨어(법원, 기관 또는 시민이 사용하든)는 법률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많은 거버넌스가 이미 소프트웨어(혜택 시스템, 라이선싱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법률을 **코드로 투명** 하게 만들면 오류를 줄이고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 서비스 자격 계산기**는 종종 법률의 복잡한 자격 규칙을 해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이 표준화된 코드 형태로 제공된다면 여러 부서 또는 관할권에 걸쳐 다른 계산기가 동일한 결과를 생성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정부 허브.org](https://digital.govt.nz/) [디지털 정부 허브.org](https://digital.govt.nz/). 또한 대중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데이터를 오픈소스 법률 규칙 엔진에 입력하고 법이 자신의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불확실성이나 관료적 지연을 없앨 수 있습니다.

행정 결정 시스템: 많은 행정 결정은 이제 규칙 기반 IT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확인됩니다. 세무 신고는 세법의 수천 가지 규칙을 적용하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처리됩니다. 이민 신청은 종종 자동화된 체크리스트로 분류됩니다(모든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 주목할 만한 예는 **복지 혜택 계산기**입니다. 정부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규정(소득, 가족 규모 등)에 따라 자격 금액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과 다른 국가는 신청자가 정보를 입력한 후 *자격과 혜택 수준을 계산하는 온라인 양식*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프로그램으로 바뀐 법적 규칙입니다. 빠르고 일관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규칙 세트가 얼마나 복잡한지 보여줍니다(종종 법률이 변경될 때마다 유지 관리가 필요함). 주의할 만한 사례는 복지 과다 지불 회수를 위한 호주의 **"Robodebt"**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간단한 규칙 기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부채를 탐지하고 집행했지만(소득 데이터의 평균을 내고 보고된 혜택과 비교), 이 기계적 접근 방식은 결함이 있었고 **약 400,000명** [로이터닷컴](https://www.royalcommission.gov.au/). 규칙 시행은 일관적이었지만, 지속적으로 잘못된 논리를 적용하여 *규칙의 신중한 설계와 검증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Robodebt의 실패는 AI 편향이 아니라 정책 논리 오류 때문이었습니다. 인코딩된 규칙이 나쁘거나 너무 엄격하면 비 AI 알고리즘도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엄중히 상기시켜줍니다.)

요약하자면, 역사와 현재의 관행은 모두 **초기 학문적 프로토타입** (논리로 법령을 공식화하는 것)에서 **일상 생활에 내장된 규칙 기반 시스템** (집행 카메라, 자동화된 결정 포털)에 이르기까지의 스펙트럼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례는 **법적 규칙을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법적 정의의 명확성과 신중한 규칙 설계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성공적인 법률 자동화 사례 연구

여러 실제 사례 연구에서는 순전히 계산적이고 규칙 기반 시스템을 통해 법적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구현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례는 계약 집행에서 분쟁 해결 및 거버넌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법치주의 2.0*의 잠재력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여줍니다.

스마트 계약 및 블록체인 시행

규칙 기반 법률 자동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발전 중 하나는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스마트 계약**이 등장한 것입니다. *스마트 계약*은 기본적으로 미리 정의된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 조건을 자동으로 시행하는 자체 실행 프로그램**입니다. [인베스토피디아닷컴](#). 이것들은 분산 네트워크(예: 이더리움)에서 실행되며, 계약을 집행하기 위해 인간 판사나 중개자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코드 자체가 집행 메커니즘입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에 인코딩 된 간단한 임대료 지불 계약을 생각해 보세요. 만기일까지 디지털 지불이 수신되지 않으면 *임대한 부동산의 스마트 잠금 장치가 자동으로 비활성화되도록 작성될 수 있습니다. 코드의 조건이 트리거 되면 작업이 즉시 취소 불가능하게 발생합니다.* [인베스토피디아닷컴](#). 이것은 **코드에 의한 문자적 법치주의**와 유사합니다. 규칙은 주관적인 관대함이나 자연의 여지가 없이 정확히 쓰여진 대로 실행됩니다. "스마트 계약"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낸 닉 사보는 이를 " *계약 조건을 실행하는 컴퓨터화된 거래 프로토콜* "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베스토피디아닷컴](#). 고전적인 비유는 자동판매기입니다. 계약 조건(품목 가격)은 자동판매기의 메커니즘에 고정되어 있으며, 귀하가 귀하의 측면(돈을 넣음)을 충족하면 자동판매기가 자동으로

제품을 분배합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 계약은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자금이나 자산을 이체합니다.

사례 - 분산형 금융(DeFi): DeFi 플랫폼에서 스마트 계약은 대출이나 거래와 같은 금융 계약을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MakerDAO** 는 담보 및 청산 규칙이 스마트 계약에 인코딩된 분산형 대출 시스템입니다. 대출인의 담보 가치가 임계값 아래로 떨어지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당 담보의 청산을 트리거하여 대출을 상환합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플랫폼의 금융 "법률"을 시행하는 코드만 있습니다. 결과는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합니다(사용자는 오픈 소스 코드를 읽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음). 투명성이 높습니다. 모든 규칙과 실행은 블록체인의 공개 원장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또한 과제를 보여줍니다. 코드에 허점이 있거나 시나리오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도 여전히 실행됩니다(*The DAO 해킹*과 같은 사건으로 이어짐, 계약 코드의 악용으로 인해 사용자가 자금을 인출할 수 있음 - 코드에서 허용했지만 작성자의 의도에 반함).

전반적으로 스마트 계약은 법적 계약이 코드로 완전히 구현되고 자동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사례입니다. *모든 당사자를 프로그래밍된 규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달성합니다. 편애나 편견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컴퓨터는 신원을 알지 못하고 입력만 알 뿐입니다. 규칙이 잘 정의되고 합의되는 한, 이는 일종의 **알고리즘적 신뢰**를 만듭니다. 따라서 스마트 계약은 법치주의 2.0 원칙을 구현합니다. "법"(계약 규칙)은 최고이고 비인격적이며, 이러한 환경 내에서 *코드는 법입니다*.

온라인 분쟁 해결 시스템

규칙 기반 법률 자동화의 또 다른 성공적인 영역은 **온라인 분쟁 해결(ODR)** 로, 특히 대량, 저가치 사례에 적합합니다. 획기적인 예는 **eBay** 와 같은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ODR 시스템입니다. eBay 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수백만 건의 분쟁(예: 품목을 받지 못함, 품목이 설명과 다름)에 직면했으며, 이는 법원이나 수동 중재를 압도했습니다. 대신 eBay 는 **알고리즘 분쟁 해결 프로세스**를 구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를 구조화된 해결 워크플로로 안내하고 간단한 의사 결정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많은 경우 분쟁은 자동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유료 품목에 대한

배송 추적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은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구매자에게 유리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공의 규모는 주목할 만합니다. 한때 eBay 는 **ODR 을 통해 연간 6,000 만 건 이상의 분쟁**을 해결했으며 이는 미국 민사 법원 시스템 전체의 처리량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pewtrusts.org. 이는 **최소한의 인적 감독과 규칙 기반 프로세스** (응답 마감일, 표준화된 구제책 등)를 결합하여 달성되었습니다. 알고리즘은 마감일(X 일 내에 응답이 없으면 사건 종결)을 시행하고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공정하다고 여겨지는 미리 정해진 규칙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를 결정합니다. 그 결과 더 빠르고 일관된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모든 사용자는 동일한 분쟁 규칙의 적용을 받았고 결과는 매우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eBay 외에도 **모듈형 ODR 플랫폼** (예: 나중에 Tyler Technologies 에서 인수한 Modria)이 일부 정부 소액 소송 및 교통 위반 티켓 시스템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의사 결정 트리와 비즈니스 규칙**을 사용하여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거나 간단한 사례에서 자동으로 책임을 결정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 ODR 시스템을 사용하면 사람이 티켓에 대한 사실을 입력한 다음 교통 코드를 적용하여 결과를 제안하거나 결정할 수 있습니다(준수 증빙이 업로드되면 수수료 면제 등). 이러한 시스템의 **일관성과 속도**는 유사한 사례가 자연이나 법원 미처리 없이 유사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 법치주의 가치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더 간단한 사례에 사용됩니다. 복잡한 사실 집약적 분쟁에는 여전히 인간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eBay 사례 연구는 **규칙 기반 의사 결정 시스템**이 대규모 법적 분쟁을 처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공의 핵심은 비교적 제한된 도메인(전자상거래 거래)과 일반적인 분쟁에 대한 명확하게 정의된 규칙이었습니다. 법치주의 2.0 이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추구함에 따라 ODR 은 **의사 결정 기준을 체계화**할 수 있는 경우 시스템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블록체인과 분산형 거버넌스

개별 계약이나 분쟁을 넘어 **전체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규칙 기반일 수 있습니다. 분산형 자율 조직(**DAO**)은 규칙 기반 거버넌스의 최첨단 사례로, 종종 디지털 법치

실험으로 설명됩니다.DAO 는 조직의 규정과 의사 결정 절차를 인코딩하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운영됩니다.예를 들어, DAO 는 코드로 된 헌법을 가질 수 있으며, 여기에는 모든 자금 지출은 투표를 통해 토큰 보유자의 최소 60%가 승인해야 하며, 이 투표 및 실행 메커니즘은 스마트 계약에 내장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제안이 필요한 투표(모두 블록체인에 기록됨)를 받으면 스마트 계약은 *자동으로 자금을 해제하거나 변경 사항을 구현합니다*.규칙을 무시하는 CEO 나 중앙 기관은 없습니다.코드의 조건이 최종 결정입니다.

구체적인 사례 - 온체인 투표 시스템: Aragon 또는 Compound 와 같은 플랫폼은 온체인 제안을 통해 거버넌스 결정(프로토콜 매개변수 변경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규칙(누가 제안할 수 있는지, 투표 수 계산 방법, 통과 임계값)은 모두 명시적이고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제안의 투표 기간이 끝나면 코드 자체가 투표를 집계하고 결과가 기준을 충족하면 코드가 제안을 제정합니다(예: 프로토콜의 매개변수 업데이트).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투명성*이 제공됩니다. 모든 사람이 규칙과 투표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측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정의된 프로세스 외부에서 임의의 변경이 발생할 수 없으며 규칙에서 통과해야 한다고 명시한 결정에 아무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례 - 클레로스 "분산된 정의": 클레로스는 분산된 중재를 위한 플랫폼이며, 사실상 블록체인 세계를 위한 법원 시스템입니다. 클레로스에는 인간 배심원이 참여하지만(클라우드소싱된 배심원이 토큰을 걸고 사건에 투표함), 프레임워크는 규칙 기반이며 스마트 계약으로 시행됩니다. [법률.스탠포드.에듀.](#) 예를 들어, Kleros 는 프리랜서 계약의 분쟁을 판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양측이 스마트 계약에 자금을 입금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Kleros 가 무작위로 배심원을 선정하고 증거를 제시합니다. 배심원은 사전 정의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표합니다. 스마트 계약은 다수결로 투표한 배심원에게 자동으로 보상을 지급하고(올바른 결과를 반영한다고 가정) 승소 당사자에게 보증금을 이체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배심원 선정에서 결과 실행까지 **전체 사법 절차가 코드에 의해 관리되어** 외부의 영향이 절차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AI"가 아니지만(여전히 결정은 인간이 내립니다) *법적 절차적 측면* (법원 절차, 증거 제출 기한, 판결 집행)을 엄격한 규칙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례 연구는 규칙 기반 법률 시스템이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도메인에서 적극적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마트 계약은 계약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ODR 플랫폼은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며, 블록체인 DAO는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거버넌스와 판결을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각각의 성공에는 설계에 대한 교훈이 따릅니다. 즉, 처음부터 규칙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시스템이 규칙을 철저히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잘 수행되면 공정성(모든 사람이 코드에 따라 평등함), 투명성(규칙과 프로세스는 모든 사람이 검토할 수 있음), 예측 가능성(입력 X가 주어지면 출력은 항상 Y임)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2.0의 실제 핵심 약속입니다.

순전히 규칙 기반 법적 프레임워크의 과제

AI가 아닌 완전한 규칙 기반 법률 시스템(법치주의 2.0)을 구현하는 것은 야심 찬 일이며 몇 가지 고유한 과제가 따릅니다. AI 기반 시스템과 달리 여기서의 문제는 통계적 편향이나 불투명한 머신 러닝 모델이 아니라 *모든 법률을 결정론적 규칙으로 인코딩하는 데 있어서의 실질적, 개념적 한계*에 관한 것입니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적 범위 대 복잡성: 모든 법적 규범을 명시적 코드 규칙으로 작성하면 매우 복잡한 규칙 기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에는 종종 광범위한 표준이나 정의되지 않은 용어(예: "합리적", "중요한", "성실한")가 포함되어 있어 직접 코딩하기 어렵습니다. 규칙 기반 시스템은 이러한 개념을 *정확한 기준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이는 다양한 해석과 예외를 포괄하기 위해 규칙의 조합적 폭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코드가 시나리오를 포괄하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결정을 내릴 수 없으므로 초안 작성자는 엄청난 범위의 가능성을 예상해야 합니다. 현대 법률은 이미 매우 자세하며, 이를 인코딩하면 논리적 간극이 드러나거나 입법자가 의도적으로 남겨둔 모호성을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철학.스택익스체인지닷컴](#). **규칙의 양과 복잡성**은 관리 및 업데이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로스쿨정책리뷰닷컴](#) [로스쿨정책리뷰닷컴](#). 실제로 학자들은 지나치게 엄격한 규칙 체계가 "위험한 법률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사람들이 합리적인 해석의 여지가 없는 자동 기계처럼 규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로스쿨정책리뷰닷컴](#). 따라서 코드의 구체성과 일반성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과도한 복잡성은 또한 **유지 관리 문제**를 일으킵니다. 의회가 법률을 개정할 때마다 코드를 신중하게 업데이트하고 재검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이 오래된 규칙을 시행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행 일관성 및 엄격한 정의: 잘 설계된 계산 법률 시스템은 법률을 일관되게 실행합니다. 동일한 사실이 주어지면 항상 동일한 결과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일관성은 강점(인간의 불규칙성이나 편견 제거)이지만, 작성된 규칙이 특정 예외 사례에서 부당한 결과를 낳는 경우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 판사는 때때로 예외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형평성*이나 재량권을 행사하지만, 하드코딩된 시스템은 그러한 예외가 자체적으로 코딩되지 않는 한 그럴 수 없습니다. 과제는 *일관된 실행이 일관되게 공정한 실행과 동일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규칙이 약간 잘못되었거나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컴퓨터는 맹목적으로 규칙을 적용하여 우리의 직관적 정의 감각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Robodebt 사건**은 경고 이야기입니다. 이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소득 평균화 규칙을 적용하여 과불입을 식별했지만, 규칙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아 수천 건의 허위 부채가 발생했습니다. [로이터닷컴](#). 이 시스템은 재량권이나 상위 수준 판단이 없어서 "이 결과는 비합리적으로 보인다"는 플래그를 지정할 메커니즘이 없었습니다. 실패 없이 정확히 지시받은 대로 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법률 코드의 **테스트와 검증**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하며, 규칙 기반 체제에서도 예상치 못한 사례에 대한 *항소 또는 인적 검토 메커니즘을 허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적응성과 법의 진화: 사회와 그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며, 법은 종종 적응해야 합니다. 순전히 규칙 기반 법률 시스템에서 적응성은 코드를 업데이트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는 인간의 해석적 진화보다 느리거나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법치주의에 따라 판사는 새로운 상황에 맞게 법령을 "확장"하거나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예: 유추를 통해 오래된 법률을 새로운 기술에 적용). 따라서 새로운 법률을 기다리지 않고도 법률의 관련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산 시스템은 **이러한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규칙을 *인코딩된 대로만 정확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이 코드로 빠르게 오래되거나 새로운 시나리오를 처리할 수 없게 될 위험을 높입니다. 코드에 대한 빈번한 입법적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많은 시스템에 없는 입법적 민첩성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처음부터 법을 코드로 작성하는 것은 **과도한 세부화**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법 이론가 풀러가 지적했듯이 언어와 삶의 "개방적인 질감"으로 인해 거의 불가능한 모든 사례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이를 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은 모듈식이고 업데이트 가능한 코드를 구축하고 일몰 조항 또는 알고리즘의 주기적 검토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과제는 법치주의 2.0이 *실리콘에 고정된 법률*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통제되고도 반응성 있는 방식으로 규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합니다.

계산 효율성: 컴퓨터는 빠르지만 논리로 인코딩된 국가 법률 시스템은 엄청나게 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법적 추론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수행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법적 질문은 하위 쿼리로 나눌 수 있지만(논리 프로그래밍이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작업), 최악의 경우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계산 집약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천 개의 규정과 교차 참조를 검색해야 하는 쿼리는 복잡한 데이터베이스 조인 또는 그래프 탐색 문제와 유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성능에 최적화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특히 **실시간 의사 결정** (예: 교통법 규칙에 따른 자율 주행 차량의 주행 결정은 거의 즉시 이루어져야 함)을 처리하는 경우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최신 계산은 잘 설계된 경우 방대한 규칙 세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예: 세무 소프트웨어는 몇 초 내에 방대한 규칙 기반을 적용). 규칙 인덱싱, 추론 캐싱, 병렬 처리와 같은 컴퓨터 과학 기술은 효율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 엔진의 **확장성**은 기술적 과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적용하면 잠재적으로 수백만 건의 사례나 질의를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모든 시민이 다양한 허가나 검증을 위해 법률 시스템을 끊임없이 질의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복잡성으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려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엄격성과 법적 추론을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이 필요할 것입니다.

투명성과 이해성: 역설적으로, 규칙 기반 시스템은 투명해야 하지만(코드는 검토 가능), 코드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코드가 IT 전문가의 영역이 되면 **일반 시민이나 변호사조차도 법률을** 작동 형태로 읽을 수 없을 위험이 있습니다. 해석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이 시스템은 대부분에게 블랙박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는 코드와 평행한 자연어와 코드가 주어진 결과를 생성한 이유를 일반 언어로 설명하는 도구(설명 시설)를 유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논리 프로그래밍의 한 가지 장점은 종종 설명 추적(결론으로 이어지는 규칙)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자동화된 결정을 *설명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합법성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시스템은 모든 결과에 대한 명확한 추론 체인을 제공해야 합니다(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과 비슷하지만 여기서는 적용된 규칙 목록이 됩니다). 이를 통해 신뢰를 쌓고 설명이 사회적 기대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오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수용 및 객관성: 비기술적 과제는 사회가 **기계가 내린 결정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치주의 원칙은 자동화를 지지하지만(규칙에 구속되기 때문), 사람들은 특히 민감한 문제(형사 사법, 가족법)에서 인간의 판단력 부족에 대해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정의가 어려운 사건에 대한 인간의 공감과 도덕적 추론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 2.0은 이해 관계자에게 **객관성과 공정성이 적어도 법률 시스템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에 의해 더 잘 제공된다는 것을** 확신시켜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성과 공정성이 입증됨에 따라 신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규칙 **자체가 공정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코드가 설계상 편향되거나 불공정하다면 계산적 객관성은 무의미합니다. 법을 인코딩하는 과정에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중의 감독이 필요합니다. *알고리즘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가치를 물려받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알고리즘의 규칙은 단순히 기존 편견이나 정책 선택을 강화하는 경우 *업그레이드된, 보다 합리적인 법치 2.0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메이드인치나저널닷컴](#) 따라서 진정한 객관성을 달성하려면 인간 중재자를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코딩한 규칙의 내용을 신중하게 조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순전히 규칙 기반의 법률 시스템은 **전례 없는 일관성, 예측 가능성, 투명성**을 약속하지만, 설계 및 구현의 과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명확하고 잘 만들어진 규칙은 기반입니다. "쓰레기 넣으면 쓰레기 나온다"는 속담이 적용됩니다. **결함이 있는 규칙은 끊임없는 일관성으로 결함이 있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은 적응성을 위해 설계되어야 최신 상태를 유지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산의 효율성과 명확성은 자동화가 법률 시스템을 침체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과제가 충족된다면 법치주의 2.0은 모든 결정이 논리와 코드에 근거하는 법적 질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알려진 법률에 따라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고 임의성을 제거하는 법치주의의 가장 높은 이상과 일치하는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향한 여정에는 정의를 희생하지 않고 접근 방식을 진정으로 일반화하기 위해 법적 전문성, 수학적 엄격성 및 기술 설계를 신중하게 통합해야 합니다.

참고문헌:

- Wolfram, Stephen. *계산법, 상징 담론 및 AI 헌법* - 법률을 형식화하는 역사적 비전(라이프니츠)에 대해 논의합니다. writings.stephenwolfram.com 그리고 인간의 법을 공식화하기 위해 계산을 사용한다는 아이디어 writings.stephenwolfram.com.
- Goodenough, IBM 등 - *보험 계약 자동화에 논리 프로그래밍 접근 방식이 효과적인 이유* - 논리 프로그래밍이 자연스럽게 법적 규칙 구조에 어떻게 적합한지 설명하고 영국 국적법 서문 구현을 참조합니다. [법률.스탠포드.에듀](https://www.law.stanford.edu).
- OECD(2020). *Cracking the Code: Rulemaking for Humans and Machines* - Advocates **Rules as Code**, 일관성과 투명성을 위해 기계가 소비할 수 있는 형태로 공식 법률을 제안 [디지털 정부 허브.org](https://www.digital.gov.hk).
- Made in China Journal(2018). *법치주의 대 알고리즘의 지배* - 알고리즘적 거버넌스가 자동적으로 개선된 "법치주의 2.0"이 아니라는 점을 경고하고 알고리즘에서 공정성과 인간적 가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메이드인치나저널닷컴](https://www.madeinchinajournal.com).
- Pew Charitable Trusts(2019). *온라인 분쟁 해결이 전자상거래에서 법원으로 이동* - 콜린 룰과의 인터뷰에서 eBay의 ODR 시스템이 구조화된 알고리즘을 통해 매년 6,000만 건의 분쟁을 해결한다고 언급 [pewtrusts.org](https://www.pewtrusts.org).
- Investopedia(2022). *스마트 계약이란 무엇인가?* - 스마트 계약을 외부 집행 없이 계약을 자동화하는 자체 실행 프로그램으로 정의합니다. [인베스토피아닷컴](https://www.investopedia.com) 그리고 조건이 충족되면 코드 항목을 수행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인베스토피아닷컴](https://www.investopedia.com).
- Stanford Journal on Dispute Resolution(2022). *Kleros: 분산형 정의에 대한 사회법적 사례 연구* - 스마트 계약과 클라우드소싱 배심원을 사용하는 Kleros 블록체인 중재 시스템을 설명합니다. [법률.스탠포드.에듀](https://www.law.stanford.edu) 분산형 규칙 기반 분쟁 해결의 한 예입니다.
- 로이터(2022). *호주 로보데브트 스캔들은 알고리즘에 의한 통치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 알고리즘의 결함 있는 규칙으로 인해 부채를 잘못 발행한 복지 자동화 계획(로보데브트)의 실패에 대한 보도 [로이터닷컴](https://www.royal.gov.au) 올바른 논리와 감독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 로스쿨 정책 리뷰(2025). *규칙으로서의 코드, 법의 지배, 복잡한 법률의 문제* - 기계 판독 가능한 법률이 복잡성을 해결하고 권리에 대한 대중의 지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법률주의에 대해 경고하고 재량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로스쿨정책리뷰닷컴](https://www.roskulpolicyreview.com) [로스쿨정책리뷰닷컴](https://www.roskulpolicyreview.com).

Prompt 9: 개인 법률 세트(PLS) - 분산된 법률 및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수세기 동안 통치는 어떤 한 기관이 권한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세 가지 부문으로 **권력을 분리하는 데 의존해 왔습니다.**

[ko.위키피디아.org](https://ko.wikipedia.org). 몽테스키외가 처음으로 완전히 구체화한 이 **삼인조 정치** 모델은 정부를 분할하여 각 부서가 다른 부서를 견제하고 어떤 단일 기관도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 견제가 있더라도 전통적인 거버넌스는 국가 기관 내에서 **중앙 집권화 되어 있습니다. 법률은 중앙 입법부에서 만들고, 중앙 행정 기관에서 시행하고, 중앙 사법부에서 해석합니다. 개인 법률 세트(PLS)**는 이러한 전통적 구조를 넘어 분산화를 추진하는 제안된 법률 및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입니다. 그것은 권력이 정부 부서 간에 분리될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자율적 기관 자체에 분배되는** 세상을 구상합니다. PLS 시스템에서 각 개인(또는 법인, 또는 AI 에이전트)은 하나의 영토적 법률 코드에 획일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운영되는 자체적인 법률 규칙 세트인 "개인 법률 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챕터는 PLS 를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로 자세히 살펴봅니다. **PLS 를 정의**하고 핵심 원칙을 설명하면서 PLS 가 개인 자율성을 위한 법적 틀로 기능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 **이론적 기반과 실제 구현** 전략을 논의하여 PLS 가 실제 거버넌스나 새로운 분산형 커뮤니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PLS 를 **기존 모델** (특히 분산형 자율 조직(DAO), 블록체인 기반 거버넌스 메커니즘, 전통적인 법률 시스템)과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PLS 가 중앙 권한 없이 규칙을 시행하는 도구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및 스마트 계약과 같은 **분산형 기술과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중요한 질문은 독립적이고 분산된 법적 대리인이 어떻게 여전히 **협력하고 통합된 사회로** 기능할 수 있는가 이므로 PLS 기반 명령에서 조정과 집단 행동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상의 어려움과 법적 갈등에서 사회적, 기술적 장애물에 이르기까지 **과제와 고려 사항을** 다루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논의합니다. 목표는 접근 가능한 학술 수준의 분석이며, 기술적 아이디어를 명확한 용어로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는 Personal Legal Set 이 무엇을 수반하는지, 어떻게 거버넌스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길에 어떤 실질적인 장애물과 기회가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 법률 세트(PLS) 정의

개인 법률 세트(PLS)는 각 개인(또는 자율적 실체)이 자체적인 통치 규칙과 법적 원칙 세트를 소유하는 법적 틀을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법은 개인화되고 비영토적이 되며** 지리적 관할권이 아닌 개인에게 부착됩니다. 중앙 집권적인 입법부가 모든 사람을 위한 법률을 만드는 대신, 각 개인이나 실체는 따로 규칙을 정의하거나 선택할 자율권을 갖습니다. 이러한 개인 법률 코드는 집단적으로 분산된 법률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여기서 상호 작용은 당사자의 각 법률 세트 간의 계약에 따라 관리됩니다. PLS 개념은 권력을 근본적으로 분산시킵니다. 입법, 행정 및 사법 권한은 더 이상 국가의 세 부문에 의해 독점되지 않고, 개인 관할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하도록 **각 법적 대리인**에게 분배됩니다.

PLS 는 법적 틀로서 몇 가지 **핵심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개인적 주권: 개인(및 법적 권리/의무를 지닐 수 있는 다른 실체)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스스로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헌법"**, 즉 자신의 행동과 의무를 지배하는 규칙을 선택하거나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각 개인이 이전할 필요 없이 정부를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범정부주의 와 같은 정치 이론에서 유래합니다.* 독립.org. 범정부주의적 관점에서 정부는 **영토적이지 않고** 사람들은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하는 것처럼 자신이 선호하는 법률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PLS 는 각 개인이 자신의 법률 세트를 가진 소규모 정치 조직으로 효과적으로 행동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구현합니다.

비영토법: PLS 의 법적 권한은 토지나 지리적 위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법률은 영토 내에 적용되며 해당 지역의 모든 사람은 동일한 코드를 따라야 합니다. 반면 PLS 는 **폴리스테이트** 사고 실험에서 설명한 *개인 국가*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즉, 같은 공간에 여러 정부가 겹치고 각각은 해당 법률에 동의한 개인으로 구성됩니다.워싱턴월간닷컴. 폴리스테이트에서 두 이웃은 같은 거리를 공유하면서도 서로 다른 법률 체계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PLS 에서 주어진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률은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법적 체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여러 법적 틀이 같은 커뮤니티에서 동시에 운영되고 각 개인의 지위는 그들이 지닌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치 각 사람이 각자의 개별화된 "국가"(폴리스테이트 이론에서는 때때로 **anthrostate** 라고 함)의 시민인 것과 같습니다. 워싱턴월간닷컴.

권력의 분산화: PLS 는 입법, 집행 및 분쟁 해결 기능을 분산시킵니다. 각 개인은 제한된 의미에서 자신의 입법권 (규칙을 수립하는 권한), **행정권** (자신의 삶에서 규칙을 집행하거나 준수하는 권한), 심지어 **사법권** (자신을 위해 또는 합의된 중재자를 통해 규칙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단일 중앙 기관도 모든 개인에 대한 이러한 권한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관할권에서 국가의 법률 시스템만 인정되는 국가의 "법의 독점"과 대조적입니다. PLS 는 여러 법률 제공자 또는 시스템이 공존하고 겹치는 **다중심법**의 개념과 일치합니다. 다중심법 이론에서 하나의 주권적 법률 출처 대신 다양한 출처(커뮤니티, 사적 협회 등)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듭니다. ko.wikipedia.org PLS 는 다중심법의 극단적인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개인이 잠재적으로 법 생산의 중심이 됩니다.*

자발적 연합과 계약 질서: 모든 사람이 각자의 법적 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질서는 이러한 개인과 각자의 법적 시스템 간의 **자발적 합의 와 계약을 통해** 나타납니다. 사람이나 조직이 상호 작용할 때, 그들은 상호 작용이 어떤 규칙에 따라 발생할지 확립해야 합니다. PLS 에서 이는 *법적 세트의 교차점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거나 모든 차이점을 해결하는 계약을 명시적으로 협상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지침 규범은 상호 작용이 모든 당사자의 규칙 세트에 따라 합법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아무도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법을 위반하지 않음)

worldbuilding.stackexchange.com. 여기에는 높은 수준의 **협력과 협상**이 필요하며, 계약법(또는 개인 법률 시스템 간의 조약)을 분산형 네트워크를 하나로 묶는 접착제로 효과적으로 만듭니다. 이런 방식으로 PLS 는 **합의된 법적 질서**에 의존합니다. 즉, 국가가 모든 사람을 획일적으로 강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수락하기 때문에 법이 준수됩니다. 이는 국제법이나 개인 간 협정이 작동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서로 다른 당사자(개인만큼 작을 수 있음)가 특정 관계에 대한 규칙에 동의합니다.

상호 운용성 및 공통 프로토콜: PLS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다양한 개인 법률 세트가 원활하게 **상호 운용** 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합니다 . 모든 사람의 규칙이 전적으로 독특하다면 협력이나 기본적인 거래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PLS 는 많은 개인이 채택하거나 갈등을 처리하기 위해 개인 법률 위에 위치할 수 있는 몇 가지 **공통 표준 또는 프레임워크**를 구상합니다. 여기에는 **공유된 분쟁 해결 방법, 공통 정의(예: 도난이나 피해를 구성하는 것), 법률 세트 간의 차이점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메타 규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개인 법률 세트는 법률 갈등을 처리하는

방법을 명시적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호 합의된 중재자에게 위임하거나 상호 작용에 대한 널리 받아들여진 원칙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핵심 거버넌스는 개인 수준으로 분산되어 있지만 독립적인 법률 대리인이 만날 때 허용되는 것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호환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프로토콜의** 생태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프로토콜(기술적 및 사회적)의 예는 이후 섹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PLS 가 반드시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전체 법률 코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은 **기존 법률 프레임워크에서 선택하거나 사용자 정의하여** 개인 세트를 구성할 가능성이 더 큼니다. 예를 들어, 잘 알려진 오픈 소스 법률 코드를 기준으로 채택한 다음 몇 가지 개인 규칙이나 선호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자발적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DAO 또는 자발적 국가에 가입하는 것과 매우 유사) 개인 법률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참여가 *개인적이고 자발적*이라는 것입니다. 정부 영토 내에 거주하기 때문이 아니라 *선택한 세트에 있기 때문에 규칙에 구속됩니다*. 이를 통해 경쟁적이고 혁신적인 법적 환경이 조성됩니다. 법률 시스템은 시장의 공급자와 유사하게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켜 "시민"을 유치해야 합니다. [ko.위키피디아.org](https://ko.wikipedia.org) 지리적으로 단순히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대신.

요약하자면, Personal Legal Set 프레임워크는 사회를 하나의 법적 체제 하에서 단일체로 보지 않고, 동의를 통해 상호 작용하는 **수많은 미시 체제** (각 개인 또는 단체)의 네트워크로 봅니다. 이는 각 개인에게 입법/사법 권한을 효과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고전적인 3 부 분리를 넘어 권력을 분산시킵니다. 이 패러다임 전환은 많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국가 또는 블록체인 거버넌스 구조와 같은 현재 모델과 공존하거나 대체할 수 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다루며 이론과 실재를 모두 살펴봅니다.

PLS 의 이론적 기초와 실제 구현

PLS 는 급진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분산적이고 비영토적 거버넌스를 실험하는 정치적, 법적 사고의 계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기초를 이해하면 PLS 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개념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개인화 또는 다중심적 거버넌스 개념을 뒷받침하는 정치 이론, 법률 및 경제학의 아이디어인 이론적 토대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실제 고려 사항으로 넘어갑니다. 실제 세계에서 PLS 를 구현하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배울 수 있는 선례나 프로토타입이 있습니까?

이론적 기초

PLS 의 한 기동은 19 세기에 폴 에밀 드 푸이트가 공식화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확장한 **범정부주의** 개념입니다. 범정부주의는 *개인이 이웃과 독립적으로 정부를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는 전혀 선택하지 않아도 됨). 완전히 실현된 범정부주의에서 "모든 정부는 영토적이지 않아야 하며, 각 개인이 한곳에서 다른곳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자신의 정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독립.org](#). 이는 정부가 영토적 주권자라기보다는 회원 조직과 같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서로 다른 정부의 시민들이 섞여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영토적 독점 국가는 극단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불법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시스템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독립.org](#). PLS 는 개인 선택에 대해 비슷한 입장을 취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정부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효과적으로 자신의 소규모 정부 *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법적 집합은 실제로 더 큰 통치 프레임워크와 제휴하기로 선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파나키가 교회나 클럽을 선택하는 것처럼 정부를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나키는 **비영토적이고 개인 기반 거버넌스**의 철학적 기반을 제공하며, 이는 PLS 를 직접적으로 예고합니다.

또 다른 관련 이론은 우리가 앞서 언급한 **다중심법**입니다. **다중심법은 단일 중앙집권적 법적 권한과는 대조적으로 여러 법 체계가 겹치고 동일한 사회적 공간에서 경쟁하는 법적 질서의 개념**입니다. 다중심법에 따라 다양한 제공자(사법원, 지역 코드 등)가 법적 규칙과 분쟁 해결을 제공하며, 사람들은 그 중에서 선택하거나 자연스럽게 다른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ko.위키피디아.org](#). 역사적으로 이는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현대 국가가 공고화되기 전에는 법률 시스템이 종종 계층화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 유럽에서는 상인 길드가 자체 규칙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에는 교회법이 있었고, 지방 영주에게는 영주령법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모두

공존했습니다. 톰 W. 벨, 브루스 L. 벤슨, 데이비드 프리드먼과 같은 학자들이 주장한 다중심적 법률 이론은 법 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입법이 아니라 **관습과 경쟁에서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ko.위키피디아.org ko.위키피디아.org. PLS 는 매우 다중심적인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모든 개인을 법률 시스템의 "제공자"로 전환합니다(적어도 자신에게는). 그것은 다중심성을 개인화함으로써 논리적인 한계까지 확장합니다. 이는 다중심법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많은 주장(예: 더 나은 규칙으로 이어지는 경쟁 또는 규범을 통해 커뮤니티가 자체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이 이론적으로 PLS 를 뒷받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다중심 시스템의 알려진 과제(나중에 논의할 조정 및 집행 등)도 PLS 에 적용됩니다.

사회 계약 이론은 PLS 맥락에서 재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회 계약 사상(홉스, 로크, 루소 등)은 개인이 질서와 보호를 위해 국가에 일부 자유를 양도하는 데 동의(명시적 또는 암묵적)하여 국가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을 상상합니다. PLS 에서 모든 사람을 단일 주권자에게 구속하는 하나의 거대한 사회 계약이 아니라, 각 개인은 효과적으로 자신의 사회 계약을 만듭니다. (개인 헌법에 대한 내부적 헌신을 상상한다면) 자신과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을 통해 다른 사람과도 맺습니다. PLS 는 **수많은 미시 사회 계약** 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호 작용 또는 커뮤니티는 관련된 개인 법적 집합 간의 계약에 의해 관리됩니다. 이는 일부 경제학자가 조직의 "**계약의 연결점**" 비전이라고 설명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특히, 젠슨과 메클링의 회사 이론은 회사가 명확한 경계를 가진 구체적인 개체가 아니라 개인 간의 계약의 연결점일 뿐이라고 가정합니다. [스탠포드-jblp.pubpub.org](http://stanford-jblp.pubpub.org). 그들은 이러한 관점을 취하면 *조직의 내부 거버넌스와 외부 계약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관찰합니다.* 즉, 모두 계약 [스탠포드-jblp.pubpub.org](http://stanford-jblp.pubpub.org). 이를 사회 전체로 확장하면, 사회는 계층적 구조가 아니라 **자치하는 개인들 간의 계약의 그물** 로 볼 수 있습니다. PLS 는 그 비전을 구현합니다. 우리가 "법"과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단일 주권적 명령이 아니라 무수한 자발적 합의에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관점과 게임 이론 관점도 분산형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뒷받침합니다. 메커니즘 설계 및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 분야는 독립적인 에이전트가 중앙 컨트롤러 없이 어떻게 최적 또는 협력적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종종 인센티브를 정렬할 수 있다면(계약, 평판 시스템 또는 반복적 상호 작용을 통해) 분산형 에이전트는 상호 이익을 위해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반복된 게임 시나리오는 당사자가 장기적인 관점과

이탈을 처벌할 방법(예: 미래 거래 거부)이 있는 경우 **협력이 자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PLS 는 이러한 자체 시행 인센티브에 크게 의존합니다. 누군가의 개인 법률로 인해 처리하기 너무 어려운 경우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상호 작용을 피하고 개인에게 신뢰를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인 규칙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따라서 **반복된 죄수의 딜레마, 평판 균형 및 자발적 표준 설정** 과 같은 개념은 모두 독립적인 법적 에이전트 그룹이 여전히 질서 있는 시스템을 형성하는 방법을 뒷받침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리 관점에서 PLS 는 다양한 자유주의 또는 무정부주의 철학에서 옹호되는 개인 주권과 자기 소유의 개념과 연결됩니다. 일부 급진적 자유주의적 관점(예: 무정부 자본주의)은 모든 법률, 보호 및 정의 서비스가 자유 시장에서 개인이 국가에 의존하는 대신 보호 기관과 중재자를 고용하여 제공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PLS 는 *단일 의무적 입법자가 없다*는 개념을 공유하지만 완전히 시장 주도적 접근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PLS 에서 비영리 또는 커뮤니티 기반 법률 시스템도 상상할 수 있음). 공통점은 **동의**에 대한 강조입니다. 법은 순수한 권위가 아니라 구속받는 사람의 동의에서 정당성을 얻습니다. PLS 에서 이 원칙은 극단적인 수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상적으로는 사람이 구속받는 *모든 것은* 사람이 동의한 것입니다(자신을 위해 그 규칙을 선택하거나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 동의함으로써).

요약하자면, PLS 에 대한 이론적 사례는 **거버넌스에서의 선택의 자유(범정부주의)** , **여러 중복되는 법률 시스템(다원주의법)** , **계약 질서와 부상하는 조직** , 그리고 **개인 주권** 이라는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은 분산된 법적 질서가 상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선례(중세 법 상인, 종교 법원 등)와 유리한 논리적 주장이 있다고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론은 현실과 맞아야 합니다. PLS 를 구현하면 이론만으로는 답할 수 없는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PLS 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실험에서 그 실행 가능성을 암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구현 전략

실제 세계에서 Personal Legal Set 을 구현하는 것은 점진적이고 실험적인 과정이 될 가능성이 큼니다. 국가와 그들의 법률 시스템이 깊이 자리 잡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PLS 는 **기존 거버넌스가 이미 약하거나 없는 도메인**이나 기존 시스템을 중첩하는 병렬

구조에서 먼저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PLS 구현을 위한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과 PLS와 유사한 기존 사례를 설명합니다.

1. 특별 관할권 및 커뮤니티: PLS를 실험하는 한 가지 방법은 법적 자율권을 가진 **특별 경제 구역, 현장 도시 또는 의도적 커뮤니티**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사적 도시 프로젝트와 마이크로네이션은 주민들이 다른 법적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모색했습니다. 개인법-개인별 모델을 완전히 실현한 사람은 없지만, 때때로 중재법이나 유연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통제된 커뮤니티는 기본 기준을 충족하는 대체 규칙 세트가 있는 경우 주민들이 특정 지역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장 도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 법률 코드를 따를 수도 있고, 자신의 행동 강령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원칙(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음, 계약 존중 등)을 고수하고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있는 한, 개인 코드가 인정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같은 도시 내에서 다양한 코드에 따라 살 수 있는 PLS의 축소판이 만들어집니다. **의도적인 커뮤니티** (생태 마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도 PLS와 유사한 내부 규칙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멤버십은 기본 프레임워크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투명하게 선언하는 경우 개인적인 차이가 허용됩니다.

2. 분산형 온라인 플랫폼: 현재 PLS에 가장 적합한 토양은 아마도 온라인과 분산형 디지털 플랫폼일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은 본질적으로 국경이 없으며**, 많은 온라인 상호작용은 이미 "누구의 법률이 적용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전통적으로 답은 서버 또는 사용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률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과 분산형 네트워크에서는 활동이 종종 한 국가의 관할권에 명확하게 속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제공하려는 프로젝트가 생겨났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례 중 하나는 2014년 블록체인에서 "분산형 국경 없는 자발적 국가"로 설립된 프로젝트인 **Bitnation**입니다. [ko.위키피디아.org](https://ko.wikipedia.org/wiki/Bitnation). Bitnation은 개인이 **신원, 결혼, 사업 계약을 기록하고 심지어 Ethereum의 스마트 계약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이 모든 것이 어떤 국가적 후원 없이도 가능합니다. [ko.위키피디아.org](https://ko.wikipedia.org/wiki/Bitnation). 그것은 *시민들이 시민이 되기를 선택하고*, 거버넌스 서비스(신분증, 공증인, 중재인 등)가 피어투피어로 제공되는 자발적인 국가로 자신을 설명했습니다. 본질적으로, Bitnation은 **법률 서비스를 위한 시장**과 사람들이 자신의 소규모 국가 또는 법적 집합을 형성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Atlantic 기사는 Bitnation의 비전을 "출생의 임의성을 시민권

결정자로 대체하는 '피어투피어 자발적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설명했으며, *가상 시민권과 영토* 국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ko.위키피디아.org](https://ko.wikipedia.org). Bitnation 이라는 조직은 이제 없어졌지만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PLS의 핵심 측면**, 즉 자체 주권 신원, 사용자가 선택한 거버넌스, 선택한 규칙의 스마트 계약 시행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블록체인 세계의 또 다른 예는 Ulex 와 같은 오픈소스 법률 프로토콜의 개발입니다.

Ulex 는 특수 관할권과 블록체인 커뮤니티를 위해 만들어진 오픈소스 법률 시스템으로, 기본적으로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의 사법 및 절차 세트입니다.

Journalofspecialjurisdictions.com. 국제 상업 규범, 모범 사례 및 중재 기준의 규칙을 편집하여 누구나 채택할 수 있는 "플러그 없는" 법적 코드를 제공합니다. Ulex 의 동기는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커뮤니티(예: 전 세계 구성원이 있는 분산 DAO)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립적이고 비영토적 규칙 집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Journalofspecialjurisdictions.com Journalofspecialjurisdictions.com. 각 분쟁이 법률 충돌 문제(어떤 국가법이 적용될까?)로 전락하는 대신, 참여자는 Ulex 를 관할 법률로 사용하기로 미리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PLS 와 매우 일치합니다. 블록체인 커뮤니티의 개인은 "이 플랫폼에서 모든 상호 작용에 대한 개인 법률 세트의 일부로 Ulex 를 사용하기로 선택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들은 (동의에 의해) 개인적이지만 공통 선택에 의해 공유되는 **분산된 법적 관할권**을 효과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Ulex 는 "테스트되고 신뢰할 수 있는 민간 및 비정부 소스"에서 가져온 실질적 규칙(재산, 계약, 불법 행위 등)과 절차적 규칙(중재 방법)을 제공합니다. Journalofspecialjurisdictions.com. **PLS 시스템의 개인이 다른 사람과의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기본 법적 템플릿**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Ulex 의 존재와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의 사용은 실용적인 경로를 보여줍니다. 개인이나 DAO 가 선택할 수 있는 기성 법적 세트를 제공하여 개인 법률을 실행 가능하게 만들고 각 개인이 처음부터 규칙을 만드는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3. 스마트 계약 및 자동화: PLS 의 핵심적인 실용적 도구는 **스마트 계약**입니다.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실행되는 자체 실행 계약입니다. 스마트 계약은 중앙 기관이 필요 없이 규칙 시행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PLS 맥락에서 개인의 법적 집합의 많은 측면은 상호작용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계약으로 인코딩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앨리스의 PLS 가 "지속 가능한 관행을 약속하는 공급업체와만 거래합니다."라고 말하고 밥의 PLS 가 "30 일 이내에 요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모든

구매자에게 환불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앨리스와 밥이 사업을 하고 싶다면 이 두 가지 규칙을 모두 포함하는 스마트 계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에스크로에서 지불을 보류하고 밥의 일부 지속 가능성 인증서를 검증하고, 앨리스가 만족하지 않을 경우 30 일 이내에 환불을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은 **개인 규칙의 교차점**을 자동으로 시행합니다. 더 큰 규모로, PLS 사용자의 전체 조직은 **분산 애플리케이션(DApps)**을 사용하여 복잡한 거버넌스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룹은 각 기여자의 PLS 제약 조건에 맞는 조건에 따라서만 자금을 해제하는 스마트 계약에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자동화는 **신뢰에 대한 의존도를 줄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개인 법률을 존중할 것이라고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요구 사항을 코드에 빌드할 수 있습니다. Wright 와 De Filippi 가 언급했듯이, 블록체인 기술은 **"자동화되고 신뢰할 수 없는 거래 시스템"** 과 **"자체 시행 스마트 계약"**을 제공합니다. 즉, 사람들은 외부 시행에 대한 필요성이 훨씬 적은 계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즈코인스닷컴](#). 이 기술적 역량은 PLS 에 필수적입니다. 계약 위반이 코드 실행으로 완화될 수 있다면(예를 들어, 누군가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지불이 자동으로 되돌아가므로 소송이 필요 없음) 개인의 자율성을 허용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스마트 계약은 당사자가 동의한 조건을 실행하는 **개인 법 집행 기관 역할을 합니다**.

4. 사적 중재 네트워크: 스마트 계약이 있어도 모든 분쟁을 미리 코딩할 수는 없습니다(특히 주관적 판단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관련된 분쟁). 따라서 PLS 구현은 법원의 역할을 대체하기 위해 **분산형 중재 및 판결** 메커니즘에 의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의 초기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Kleros** 와 같은 플랫폼은 분쟁 해결을 위한 분산형 온라인 배심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바넷.org](#). Kleros 에서 토큰을 보유한 사용자는 분쟁의 증거를 평가하고 결과에 투표하는 배심원으로 무작위로 선정될 수 있으며, 스마트 계약이 이를 시행합니다(예: 승자에게 지불금 지급). 이는 법원과 매우 유사하게 기능하는 **블록체인 기반 중재 DApp** 의 예이지만 국가는 없습니다. [이바넷.org](#). 중재 계약은 처음부터 스마트 계약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바넷.org](#), 따라서 당사자들은 무언가 잘못되면 Kleros(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사용하여 결과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시스템이 국제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이 특정 법률을 선택하지 않는 한 특정 국가의 법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선택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lice 와 Bob 의 PLS(앞서 예로 들었음)에 스마트

계약에서 다루지 않는 갈등이 있는 경우(예: Bob의 제품이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 특정 **분산 법원이** Alice의 PLS의 표준에 따라 판결을 내리기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중재 플랫폼은 현재 개발 초기 단계이지만, PLS 시스템에서 **사법부의 패치워크가** 단일 통합 사법부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사소한 문제에서 스스로 판사 역할을 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임명할 수도 있지만, 더 큰 분쟁의 경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인 중재자가 선호될 것입니다.

5. 기존 시스템의 계약을 통한 점진적 채택: 단기적으로 PLS 측면을 구현하는 한 가지 실용적인 방법은 **계약 및 법적 중재를 통한 기존 법률의 틀 내에서**입니다. 대부분의 주 법률 시스템은 이미 계약법을 통해 많은 자유를 허용합니다. 당사자는 공공 정책이나 특정 의무적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거의 모든 조건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관할하는 법률을 선택할 수 있으며(준거법 조항) 법원에 가는 대신 완전히 사적 중재에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뉴욕 협약과 같은 조약 덕분에 중재 판정이 국제적으로 집행 가능). 즉, **지금도** 다른 국가에 있는 두 개인이나 회사가 **상호 작용을 위해 효과적으로 다른 법률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국가의 두 기업이 어느 곳이든 스위스법과 파리 중재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규모 PLS의 실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해당 관계에서 기본값(국가 법원)에서 벗어나 선택한 일련의 규칙과 사법 법원을 선택했습니다. PLS를 점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개인은 이 원칙을 사용하여 **자치 공간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그룹은 특정 코드(예: Ulex 또는 맞춤형 헌법)에 따라 커뮤니티나 프로젝트를 통치하는 데 동의하는 다자간 계약에 서명하고 모든 문제를 내부적으로 중재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이 주최국에서 불법화되지 않고 일종의 사적 질서로 간주되는 한 PLS 원칙이 적용되는 법적 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관행이 일반화되면 국가법과 공존하는 개인 법적 집합의 새로운 질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전히 주법에 따라 살지만 **삶의 많은 측면에서 대체 규칙**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온라인 플랫폼이나 가입한 클럽의 규칙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는 때때로 기본법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에서 주에서는 허용하는 특정한 발언을 내부적으로 금지하고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준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기술 인프라: PLS를 구현하려면 신원, 신뢰 및 규칙 배포를 위한 강력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각 개인의 법적 집합은 **문서화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검증 가능**

해야 합니다. 이는 분산형 신원 시스템을 통해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체 주권 신원(SSI)* 과 같은 개념이 관련성이 있습니다. SSI 는 블록체인과 암호화를 사용하여 개인이 중앙 레지스트리 없이 검증 가능한 자격 증명과 신원 속성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쉬닷컴](#). 사람은 PLS 세부 정보(또는 코드에 대한 링크와 같은 참조)를 포함하는 디지털 ID 프로파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호 작용할 때마다 이 정보(또는 관련 부분)를 안전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lice 가 Bob 과 거래를 위해 만나면 Alice 의 기기는 자동으로 **"PLS 인증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관리 규칙 또는 특정 법률 커뮤니티의 멤버십에 대한 서명된 진술입니다. Bob 의 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다음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를 사용하여 규칙의 교차점을 빠르게 계산하거나 비호환성을 표시합니다. 비호환성이 발생하면(예: Alice 의 규칙이 Bob 의 규칙에서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조정을 협상하거나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앱으로 간소화될 수 있으므로 참가자는 매번 수동으로 약관을 초안하지 않고 개인 에이전트가 이를 수행합니다. 또한 개인 법률 세트에 대한 **버전 제어 및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법률 세트에도 업데이트 또는 버그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져올 수 있는 오픈 소스 법률 저장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가 사용되는 방식과 유사). 사실, 여기서 "법률은 코드다"라는 비유는 매우 문자 그대로입니다. PLS 는 법률이 공식화되고 공유 가능하며 수정 가능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이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유사합니다(이러한 아이디어는 때때로 *"법은 코드다"* 또는 *스마트 계약*을 라고도 함) [이바넷.org](#).

아직 완전히 실현된 PLS 세계는 없지만, 이러한 구현 지점은 퍼즐 조각들이 이미 다양한 도메인에서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토큰과 스마트 계약을 통해 운영되는 블록체인 커뮤니티는 **분산된 거버넌스를 입증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논의할 DAO 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Ulex 와 같은 사적 중재와 개방형 법률 코드는 **비국가 분쟁 해결 및 법률 제정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개인이 자격 증명과 선호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 주권 신원이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은 PLS 의 요소입니다. 초기 구현에 대한 가능한 시나리오는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초기 채택자(아마도 기술에 정통한 커뮤니티 또는 국제적 그룹)는 스마트 계약과 사법 법원에 의존하면서 그룹 내 상호 작용에 개인 법률 세트를 사용하기 시작하지만 외부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가 법률을 따릅니다. 성공을 입증하면(예: 더 빠른 분쟁 해결, 필요에 더 잘 맞는 법률, 평화로운 공존) 더 많은 사람이 이러한 네트워크에 가입하거나 모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PLS 사용자 네트워크가 성장하여** 잠재적으로 국가와 인터페이스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국가는 PLS 기반 계약을 인정하거나 집행을 위해 법원에서 PLS 중재 결정을 수용할 수 있음). 궁극적인 시나리오에서 국가는 시민이 대체 법률 시스템을 채택할 수 있는 법적 경로를 법전화 할 수도 있습니다(일부 국가에서 토착 사회가 특정 문제에 대해 관습법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처럼). 그것이 먼 일이더라도 실제적인 단계는 우리가 현재 있는 곳에서 PLS 접근 방식으로의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기존 모델과의 비교

Personal Legal Set 은 진공 상태에서 출현한 것이 아닙니다. 거버넌스를 분산화하고 법적 구조를 재구성 하려는 기존 모델과 운동이 있습니다. 여기서 PLS 를 몇 가지 주요 모델과 비교합니다. **분산 자율 조직(DAO), 블록체인 기반 거버넌스 메커니즘, 전통적인 법적 프레임워크** (국가 및 기타 다중심적 배열 포함).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PLS 를 독특하게 만드는 요소와 이러한 모델과 공유할 수 있는 과제 또는 이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PLS 대 분산형 자율 조직(DAO)

분산 자율 조직(DAO) 은 블록체인 프로토콜에서 운영되는 조직으로, 일반적으로 중앙 리더십 없이 합의를 통해 구성원이 의사 결정을 내립니다. DAO 는 암호화폐와 Web3 공간에서 프로젝트나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토큰 보유자 등)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DAO 는 종종 공통의 목적(투자, 프로토콜 관리, 보조금 지원 등)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그룹이며,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여 의사 결정 및 운영 규칙을 인코딩합니다*. 한 정의에 따르면, *"DAO 는 중앙 관리 기구가 없고 구성원이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 구조입니다... DAO 는 하향식 관리 방식을 사용하여 의사 결정을 내립니다."* [인베스토피디아닷컴](#) 실제로 DAO 의 결정은 토큰 가중 투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제안이 제출되고 멤버가 체인상에서 투표하고 제안이 통과하면(스마트 계약에 코딩된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또는 지정된 에이전트가 실행합니다. corpgov.law.harvard.edu.

표면적으로는 PLS 와 DAO 모두 분산화와 중앙 권한 제거를 우선시합니다. 그러나 주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집단적 vs. 개인적 초점: DAO 는 근본적으로 집단적 노력입니다. 공유 리소스나 목표에 대한 그룹 거버넌스에 관한 것입니다. 반면 PLS 는 개별 거버넌스에 관한 것입니다. 각 개인이 스스로를 거버넌스합니다. DAO 에서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규칙 세트 (DAO 의 스마트 계약 및 규정)를 집단적으로 준수합니다. corpgov.law.harvard.edu. PLS 에서 각 참여자는 서로 다른 규칙 세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DAO 는 한 조직의 구성원 간에 수평적으로 거버넌스를 분산시키는 반면, PLS 는 각 개인에게 수직적으로 거버넌스를 분산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큰 보유자의 DAO 가 거버넌스하는 Uniswap 과 같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생각해 보세요.

corpgov.law.harvard.edu corpgov.law.harvard.edu. Uniswap DAO 는 수수료나 업그레이드에 대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플랫폼의 분산형 거버넌스입니다. 하지만 Uniswap 사용자는 여전히 자국의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불법 자산을 거래하는 경우 DAO 규칙과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음). PLS 는 각 사용자가 Uniswap 을 사용하는 데 대해 자체 법률에 따라야 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분산화의 더 넓은 범위입니다.

거버넌스 범위: DAO 는 일반적으로 특정 범위 또는 목적을 갖습니다. 즉, 정의된 목표를 가진 프로토콜, 재무부 또는 커뮤니티를 관리합니다. PLS 는 사회의 모든 거버넌스와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PLS 세계 내에 많은 DAO 가 존재한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 법적 집합을 가진 개인은 공동으로 일을 하는 방법(예: 인프라 구축 또는 사업 운영)으로 DAO 를 형성할 수 있지만 이러한 DAO 는 각 구성원의 PLS 의 보호 아래 있는 도구가 됩니다. 반대로 오늘날 DAO 는 여전히 궁극적으로 어떤 일에는 국가의 법률 시스템에 의존합니다(예: 많은 DAO 는 DAO 가 통제하는 LLC 를 설립하는 것과 같은 법적 래퍼를 사용하여 현실 세계와 인터페이스합니다. legalnodes.com). PLS 는 개인 대 개인 수준에서 국가 법률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시 말해, DAO 는 기업 거버넌스를 분산화하는 반면 PLS 는 공공 거버넌스와 법률 자체를 분산화합니다.

규칙 균일성 대 다양성: DAO 에서 일반적으로 DAO 의 헌법이나 스마트 계약 규칙을 수락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DAO 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패키지입니다(역할 등이 있을 수 있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토큰을 판매하거나 커뮤니티를 떠남). PLS 에서 모든 사람은 고유한 규칙 조합을 가질 수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균일한 규칙책이 적용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규칙이 충돌하는 경우 사전 설정된 조직 전체 규칙을 따르기 보다는 그 자리에서 협상하거나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즉, PLS 는 단일 DAO 가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다양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DAO 는 내부적으로 일관성이 더 뛰어납니다.** 알려진 규칙이 있는 클럽과 같고 PLS 사회는 많은 관습이 있는 야외 시장과 같습니다. *유사한 집합을 채택하는 PLS 사용자 클러스터를* 볼 수 있습니다 (예: 한 클러스터는 효과적으로 DAO 커뮤니티처럼 동작하고 다른 클러스터는 다르게 동작). 그러나 PLS 는 별도의 조직을 형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사용자는 독립 노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자율성과 집행: DAO 는 종종 외부 세계와 교차합니다. 예를 들어, 집행을 위해 중앙 집중식 서비스에 의존하거나 정보를 위해 오라클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PLS 는 개인 간의 계약 집행을 중앙 조직이 필요 없이 개인 법적 메커니즘(스마트 계약, 중재)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DAO 는 **내부 문제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 자율적이지만 DAO 구성원이 DAO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DAO 는 시스템 내에서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토큰 삭감, 구성원 추방 등).** 다른 DAO 간 또는 DAO 구성원과 비구성원 간의 상호 작용에서 발생하는 일은 다루지 않습니다. PLS 는 **모든 당사자 간의 법적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즉, 커뮤니티 간 상호 작용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PLS 는 DAO 사이와 위의 계층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개체(집단적 개체인 DAO 자체 포함)가 법적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사실, DAO 자체는 PLS 시스템에서 법적 집합을 갖춘 "사람"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AO 는 자체 신원의 일부로 관할 법률 집합을 선언할 수 있으므로 개인과 상호 작용할 때 개인의 PLS 와 DAO 의 PLS(규정과 유사)를 조정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PLS 는 DAO 보다 더 광범위하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DAO 는 분산된 거버넌스의 단일 섬과 같습니다. PLS 는 그러한 많은 섬이 떠 있는 바다이며, 아마도 각 사람이 섬일 수 있습니다. 둘 다 계층 구조보다는 하향식 의사 결정과 커뮤니티 합의의 이상을 공유하지만, PLS 는 거버넌스의 위치를 *각 개인*으로 옮기는 반면, DAO 는 여전히 공유된 규칙이 있는 집단을 가정합니다. 성숙한 분산된 사회는 **둘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 PLS 를 가지고 협업 프로젝트를 위해 DAO 를 구성하거나 가입합니다. PLS 는 그러한 DAO 가 존재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제공합니다. DAO가 코드와 투표를 통해 자금과 결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반면, PLS는 그 교훈을 사회 전체에 적용하여 *전체 법적 질서가 국가 명령 대신 자발적인 연합, 코드 및 계약을 통해 기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PLS 대 블록체인 기반 거버넌스(온체인 거버넌스)

조직과 같은 DAO 외에도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가 어떻게 진화하고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한 의미에서 **블록체인 거버넌스**도 있습니다 (종종 프로토콜에 대한 온체인 거버넌스라고 함). 일부 새로운 블록체인 플랫폼(예: Tezos, Polkadot, Cosmos 등)에는 암호화폐 보유자가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또는 매개변수 변경에 대해 투표하는 명시적인 온체인 투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 규칙을 결정하는 중앙 기관이 없는 분산형 거버넌스의 한 형태입니다. 사용자와 검증자 커뮤니티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Tezos는 하드 포크와 중앙 집중식 개발 제어를 피하기 위해 온체인 투표를 통해 블록체인 코드를 수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Polkadot에는 거버넌스 위원회와 토큰 보유자 국민투표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혁신적이지만 PLS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블록체인 프로토콜 거버넌스에서 의사 결정은 분산화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블록체인의 관심사* (예: 블록 크기, 수수료 조정 또는 새로운 기능 채택)로 제한됩니다. 네트워크 규칙만 처리하는 전문화된 DAO와 유사합니다. 반면 PLS는 **모든 사회적 문제의 거버넌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술적 네트워크 매개변수뿐만 아니라 모든 법적 문제(계약 분쟁, 범죄, 행동 규정 등)를 다룹니다. 블록체인 거버넌스는 몇 가지 관련 사항을 보여줍니다. 대규모 커뮤니티(수천 명의 참여자가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중앙 정부 없이도 투표와 제안을 통해 규칙 변경을 관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유권자 무관심**이나 대규모 이해 관계자의 지배와 같은 몇 가지 함정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소수의 대형 토큰 보유자가 많은 투표를 통제하는 경우 거버넌스가 플루토크라시가 될 수 있습니다. PLS는 투표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경우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야 합니다. 하지만 PLS는 반드시 대규모 투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PLS는 더 개인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모든 사람이 한 가지 법률에 대해 집단적으로 투표할 필요가 없이, 발로 투표하거나 법률을 선택함으로써 동의를 얻어 투표합니다).

"코드가 법이다" vs. "법은 코드다": 블록체인 커뮤니티에서는 코드(스마트 계약, 프로토콜 규칙)가 실제로 해당 시스템의 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유명하게도, 2016년

이더리움 DAO 해킹 이후, 일부 사람들은 코드가 자금 유출을 허용한다면 시스템의 "법률"에 따라 그 행동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코드가 법이다"). [첫 번째 월요일.org](http://www.firstmonday.org). 다른 사람들은 익스플로잇을 수정하기 위해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믿었고, 거버넌스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PLS 는 **자동화된 규칙과 인간의 판단** 사이의 균형이 필요할 가능성이 큼니다.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여 규칙을 시행하는 정도(lex cryptographia)로 "법은 코드"를 수용하지만, 포괄적인 법률 시스템으로서 엄격한 코드가 실패할 수 있는 형평성, 윤리 및 예상치 못한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블록체인 거버넌스 실험은 **수정 가능성 및 분쟁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PLS 는 이러한 것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Tezos 와 같은 시스템은 사람들이 선택한 규칙이 진화할 수 있도록 수정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점은 PLS 가 사람들을 하나의 블록체인이나 플랫폼에 묶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약을 지원하는 모든 기술을 사용하여 크로스 플랫폼 또는 오프체인일 수 있습니다. 통합 측면에서(다음 섹션에서 논의) 블록체인은 **PLS 계약에 대한 기록 보관 및 시행 계층**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커뮤니티를 PLS 원칙에 따라 내부적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국가 또는 특별 관할권 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어느 정도 자치적입니다. 자체 규칙(합의 알고리즘, 커뮤니티 표준)이 있으며, 종종 내부적으로 또는 코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실제 법원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스마트 계약을 속이려고 하면 계약의 코드 자체가 속이는 것을 방지하여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는 PLS 의 자체적인 법적 질서라는 목표와 공명합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일반적으로 **각 참여자가 자체 규칙을 갖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프로토콜 규칙은 해당 네트워크의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합니다. PLS 는 다른 사용자가 개인 규칙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블록체인이나 다른 스마트 계약 조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요약하자면, **블록체인 기반 거버넌스** (온체인 투표 및 "코드가 법" 실행과 같은)는 PLS 를 향한 기술적, 이념적 발판을 제공합니다. 이는 분산화된 규칙 제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일반적으로 개인 수준이 아닌 집단적 수준(네트워크 전체 규칙)에서 이루어집니다. PLS 는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지만 보다 세분화되고 개인화된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이 비교는 PLS 가 이러한 아이디어의 상위 집합과 같을 것임을 강조합니다. 즉, 합의에 의해 하나의 프로토콜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와 코딩된 규칙의

별자리로 *사회*를 관리합니다. 범위가 더 야심적이며, 이는 더 많은 복잡성을 의미합니다. 블록체인 거버넌스의 성공 사례(일부 프로젝트에서 원활하게 관리되는 업그레이드와 같은)와 실패 사례(거버넌스 공격 또는 커뮤니티 분열과 같은)는 모두 PLS 설계자에게 투표권, 소수자 권리 및 "**포크**" 옵션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PLS 에서 누군가와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당 사람과의 상호 작용을 철회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 용어로 포킹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PLS 대 전통적인 법적 구조

PLS 를 전통적인 국가 법률 시스템 과 비교하면 그것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지 강조됩니다. 전통적인 시스템에서 입법권은 영토 내 모든 사람을 위한 통일된 법률을 만드는 입법부(예: 의회 또는 의회)에 부여됩니다. 행정 기관은 이러한 법률을 시행하고 법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법률이나 법적 선례를 적용하여 분쟁을 판결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한 번에 한 주권의 시민 또는 거주자입니다. 권력이 주 또는 지역 간에 분산된 연방(미국 또는 어느 정도 EU 와 같은)에서도 각 사람은 여전히 영토에 따라 정의된 법률 집합(주법과 연방법 등)에 따라야 하며 개인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시스템에는 선택의 측면이 있지만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때로는 **다른 도시/국가로 이사하여 관할권을 선택**하거나 앞서 언급했듯이 **계약으로 법률을 선택**할 수 있지만 주 영토 내에서 법률이 *없거나* 완전히 자체적으로 선택한 법률에 따라야 할 수는 없습니다.

PLS 가 기존 방식과 다른 점

분권화와 분배: 기존 시스템은 입법 활동을 한 기관에 집중시키고(민주적으로 선출되더라도 중앙 출처임) 마찬가지로 집행 활동을 국가 기관(경찰, 규제 기관)에 집중시킵니다. PLS 는 *입법 활동을 모든 개인에게 분권화* 하고 집행 활동은 국가 경찰이 아닌 피어 투 피어 메커니즘이나 커뮤니티에서 선택한 중재자에게 분권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PLS 는 **권력을 최대한 분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 권력 분립은 권력을 소수 기관에만 분산시킵니다. 즉, PLS 는 폭정을 부릴 수 있는 단일 기관이 없기 때문에 권력 남용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권력은 너무

분산되어 있어 자발적인 조정만이 대규모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PLS가 국가가 가질 수 있는 즉각적인 응집력과 행동의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집단적 문제나 비상 상황을 해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법적 획일성 대 다원주의: 국가 법률 시스템은 명확성과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획일적인 법률** (일부 지역적 차이 있음)을 부과합니다.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 규칙을 알고 있으며 표면적으로 모든 사람이 해당 규칙에 따라 평등합니다. PLS는 **다양한 법률**을 만듭니다. 즉,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규칙을 따릅니다. 이는 국가 간에 국제법이 작동하는 방식(각 국가는 상호 작용을 관리하는 자체 법률과 조약을 가지고 있음)이나 역사적으로 다원적인 사회에서 법이 작동하는 방식(예: 서로 다른 종교 공동체가 자체 민사 문제를 관리하는 오스만 제국의 밀렛 시스템)과 더 유사합니다. 전통주의자들은 공정성과 질서를 위해 획일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PLS 지지자들은 *법률의 다양성이 사람들의 가치에 더 잘 맞춰지고 법적 솔루션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응답할 것입니다. 또한 상호주의와 상호 존중의 원칙이 획일성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대할 때 당신의 법률 세트를 존중하고 당신이 나를 대할 때 나의 법률 세트를 존중하는 한, 우리는 여전히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사람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다국어 사회와 같지만, 필요할 때는 번역본을 찾거나 링구아 프랑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링구아 프랑카는 갈등에 대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정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모델의 분산화: 오늘날의 구조에도 PLS와 유사한 것이 몇 가지 있지만 제한적입니다. **연방주의**가 그 중 하나입니다. 다른 주/도에는 다른 법률이 있으며 사람과 기업은 때때로 유리한 법률에 따라 위치를 선택합니다(이것은 영토에 묶여 있지만 법률을 선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 다른 유사점은 **사법 국제법(법률 충돌)**입니다. 다른 법률 시스템의 사람들이 상호 작용할 때(프랑스 회사와 일본 회사 간의 계약처럼) 어떤 법률을 적용하거나 서로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PLS는 법률 충돌을 보조 메커니즘에서 주요 메커니즘으로 격상시킵니다. 모든 상호 작용은 잠재적으로 다른 법률 시스템(각 개인의)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법률 충돌 규칙(또는 PLS 충돌 프로토콜)이 끊임없이 적용됩니다. 일부 국가에서 **인격의 법적 개념**은 역사적으로도 공감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식민지 시대나 근대 이전 환경에서는 다른 민족이나 종교 공동체의 사람들이 특정 문제에 대해 자체 법률에 따라 살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예: 인도의 다른 종교에 대한 결혼/상속에 대한 개인법). 여전히 어느

정도 국가가 감독했지만, 이는 다중 법적 틀이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PLS 는 *모든 문제와 모든 사람* 에게 그 개념을 확대합니다.

책임과 권리 보호: 통일된 법률 시스템을 갖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주장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책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헌법과 인권 규범에 따라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일을 한다면 그 권리가 안전할까요? PLS 는 모든 개인 법률 세트가 존중하는 **기본적 권리 또는 가치에 대한 기본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협력이 불가능 해집니다. PLS 사회는 살인, 폭행, 절도 등에 대한 금지와 같은 *널리 받아들여진 기본 규칙*을 여전히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도 살인이나 도둑질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과 합리적으로 교류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법"을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불편적으로 외면당하거나 강제로 고립될 것입니다. 따라서 PLS 에는 단일 헌법 문서가 없지만 상호 필요성을 통해 **사실상의 일반법 또는 핵심 원칙의 헌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렉스 메르카토리* 아(상인법)가 서로 다른 중세 커뮤니티 간의 무역에 대한 공통 원칙을 개발한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Law Merchant 는 *"다양한 지역 법률에서 비롯된 마찰을 완화하고 자발적으로 제작, 판결 및 집행되는 통합 법률 기관"*으로 , 다양한 배경을 가진 상인을 위한 공통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ko.위키피디아.org](https://ko.wikipedia.org). **계약상의 자유와 재산권**을 강조했으며 왕이 아닌 상인 법원에 의해 시행되었습니다. [ko.위키피디아.org](https://ko.wikipedia.org) [ko.위키피디아.org](https://ko.wikipedia.org). 이 역사적 사례는 국가가 없더라도 비교적 균일한 법률이 필요할 때 분산된 방식으로 출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PLS 는 많은 주변 세부 사항이 개인마다 다르더라도 (반복적인 상호 작용에서 출현하는 관습법을 통해) 공통된 핵심 규칙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법률 질서와의 통합: 가까운 미래에 PLS 는 기존 법률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공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PLS 에 따라 운영되는 개인은 여전히 주법을 탐색해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사람들이 상호 합의한 수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많은 법원이 이미 중재 조항을 시행하여 그렇게 하고 있음). 하지만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항소 감독을 유지합니다. 일부 국가는 법적 다원주의를 보다 명확하게 실험하여 커뮤니티 또는 개인에게 특정 **옵트아웃 권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래에 정부가 누군가가 "거버넌스 제공자"를 선택하도록 허용하고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제공자가 법치를 보장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한 국가는 물러설 수 있습니다(이는 추측이지만 국가 간 경쟁이 증가하거나 국가가 거버넌스를 아웃소싱하는 데 이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적으로 터무니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일부 특별 경제 구역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서로 다른 상법에 따라 운영되는 방식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역이 늘어나고 개별화되면 PLS 논리에 더 가까워집니다. PLS와 기존 모델 간의 상호 작용은 복잡합니다. 처음에는 PLS가 국가 집행에 편승할 수 있습니다(예: 중재 조약에 따라 주 법원에서 PLS 중재 판정을 집행할 수 있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 PLS 네트워크가 내부적으로 판결과 규범을 집행할 수 있다면 주 법원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PLS를 완전히 구현하려면 국가가 특정 법적 기능에 대한 독점을 포기해야 하며,** 이는 심오한 정치적 변화입니다.

PLS를 기존 시스템과 비교해보면 중요한 점이 하나 드러납니다. **협력 대 강압입니다.** 기존 법률에는 강압의 요소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벌금이나 강제를 통해)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따릅니다. PLS는 **상호 합의를 통해서만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즉, 동의한 규칙을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합의된 방법을 사용하여 위반 사항을 해결합니다. 유일한 강압은 방어적이거나 합의된 집행(예: 누군가가 따르겠다고 약속한 규칙을 위반하면 중재자가 계약에 따라 일부 처벌을 승인할 수 있음)입니다. 국가 권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는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누군가가 규칙을 따르기를 거부하거나 강제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다른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PLS도 **범죄와 침략**을 처리해야 합니다. 협력적 방어 협정이나 보험 기반 집행을 통해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민간 보호 기관이 경찰의 역할을 유추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만 정치적 과정이 아닌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함). 이는 여러 방위 기관이 운영되고 경쟁하는 무정부 자본주의 이론가들의 제안과 유사해집니다. [미세스.org](http://mises.org). PLS는 본질적으로 방어 메커니즘을 규정하지 않지만 분산형 철학과 일치해야 합니다. 즉, 커뮤니티 감시, 상호 방위 조약, 첨단 기술 감시를 결합하면 합의된 규칙 밖에서 다른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진정으로 침해하는 사람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모든 사람의 PLS가 중단하도록 허용하는 공격자로 취급).

결론적으로 **PLS는 법을 만들고 집행할 권한이 있는 사람(국가에서 개인으로)을 근본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기존 모델과 다릅니다.** 연방이나 연합(단위가 권한을 갖지만 각 단위 내의 개인이 단위의 법을 개별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보다 분권화 측면에서 극단적입니다. 역사적 복수 법률 시스템과 일부 특성을 공유하지만 이를 증폭합니다. 자발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사상과 철학적으로 일치하지만, 대규모로 구현하는 데는 기존 시스템이 중앙 조정을 통해 처리하는 상당한 과제에 직면합니다. 통합과 협력에 대한

다음 섹션에서는 PLS 사회가 어떻게 응집력 있게 기능할 수 있는지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비교를 위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기존 국가가 지휘자가 있는 오케스트라와 같고 DAO가 민주적으로 잼 세션을 하는 밴드와 같다면 PLS는 각 개인이 자신의 곡을 연주하지만 어떻게든 즉흥적인 규범을 통해 함께 연주하기로 선택할 때 조화를 이루는 음악 축제와 같습니다.* 창의성과 자유의 잠재력은 높지만, 새로운 형태의 조정에 대한 필요성도 그만큼 높습니다.

분산 시스템(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등)과의 통합

Personal Legal Set 이 이론에서 실제 현실로 이동하려면 현대의 **분산형 기술**을 활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록체인과 관련 기술은 분산 방식으로 신뢰, 집행 및 조정을 구현하는 도구를 제공하며, 이는 PLS 목표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PLS가 블록체인 시스템, 스마트 계약 및 기타 분산형 메커니즘과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시너지와 필요한 적응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신뢰 인프라로서의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본질적으로 분산원장입니다. 여러 노드에 복제된 데이터베이스로, 암호화와 합의 프로토콜로 보호됩니다.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여러 당사자가 중앙 권한 없이 단일 진실 출처(예: 거래 내역)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속성은 PLS에 매우 유용합니다. PLS 세계에서는 설계상 신뢰할 **중앙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참여자는 암호화 증명과 합의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수행할 수 있는 한 가지 역할은 **법적 사건에 대한 기록 보관**입니다. 신원, 계약, 재산 소유권 및 판결은 모두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변경 불가능한 공개 증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앨리스의 개인 법적 세트가 토지 소유권을 부여하는 경우 전통적으로 정부 등록부가 이를 보장합니다. PLS에서 소유권 증명은 PLS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블록체인 토큰 또는 NFT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블록체인에서 토큰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부 증서 등록부가 없더라도 앨리스의 주장은 변조 방지 기록으로 뒷받침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개인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블록체인에 계약(해시된 형식 또는 전체 텍스트)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두 사람 모두 특정 조건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은 부정직과 오해의 가능성을 줄입니다.

게다가 블록체인은 많은 사람이 신경 쓸 수 있는 **상태에 대한 합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산에 대한 법률을 고려하세요. Bob의 PLS가 "나는 X개의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으며 내 법에 따라 내 것"이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지만 Bob과 거래하는 경우 실제로 그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Bitcoin이나 Ethereum과 같은 블록체인은 누가 어떤 코인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관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PLS는 특정 사실(예: 토큰 소유권 또는 분산 투표 결과 등)을 정의하기 위해 퍼블릭 블록체인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블록체인은 **분산된 공개 기록** 역할을 합니다. 정부 기록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네트워크에서 유지 관리합니다. 이는 이미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자체는 중개자를 신뢰할 필요가 없고 코드와 네트워크만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종종 "신뢰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위즈코인스닷컴](#).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PLS는 **신뢰할 수 없는 규칙 시행**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에 규칙이 인코딩된 경우 블록체인은 누구도 임의로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대로 실행되도록 보장합니다(계약이 올바르게 코딩되었다고 가정). 한 출처에서 언급했듯이 *"블록체인 기술은 개인 간에 자체 실행 가능한 규칙을 설정하거나 코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은 게임 규칙을 다시 쓸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바넷.org](#). 이것이 바로 PLS에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 규칙을 공정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암호 코드를 통해 구현된 법률이라는 개념인 Lex Cryptographia는 개인이 규칙을 준수하고 해당 규칙이 유지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PLS와 맞물립니다. [이바넷.org](#).

스마트 계약 및 법률 자동화

스마트 계약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블록체인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PLS를 구현하는 데 초석이 되는데, 이는 **계약이 자체적으로 시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법적 설정 맥락에서 당사자 간의 "법률"의 대부분은 스마트 계약 논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당사자가 베팅이나 보험 계약에

동의하면 스마트 계약은 지분을 보유하고 오라클 입력에 따라 지불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법원이 필요 없습니다. 코드가 처리합니다.

스마트 계약은 "자율적 법적 대리인"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지치거나 편향되거나 부패하지 않습니다. 코드를 따릅니다. 이는 일상적인 거래에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지불, 판매 에스ক্র로, 라이선스 수수료는 모두 자동화할 수 있으므로 누군가가 버그를 찾지 않는 한 위반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블록체인에서 **분산 금융(DeFi)**이 존재한다는 것은 중앙 집중식 감독 없이 스마트 계약으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관리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수십억 달러가 Ethereum 에서 이러한 계약을 통해 흐르고 대출, 거래 등을 제어합니다). DeFi 에서 차용인의 담보가 임계값 아래로 떨어지면 스마트 계약이 자동으로 담보를 청산하여 대출자에게 상환합니다. 법원이나 은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개념은 일반법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개인법에 "나는 명예 훼손한 사람에게 100 달러의 벌금을 지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누군가는 일부 자금을 에스ক্র로할 수 있고 스마트 계약은 명예 훼손이 발생했다는 합의된 중재 결정에 따라 해당 벌금을 피해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공상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합니다. 요령은 오라클(실제 사실의 입력)이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이는 분산 오라클 네트워크나 배심원(예: Kleros)의 인간 입력을 통해 논의된 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자동화될 수 있거나 자동화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잡한 인간 분쟁이나 범죄에는 판단, 증거 평가 및 코드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형평성에 대한 고려 사항이 필요합니다. 스마트 계약은 **결과 실행**을 처리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결과를 결정하려면 인간 주도 프로세스(분산될 수도 있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재와의 통합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계약의 **중재 조항**은 분쟁 플래그가 발생하면 계약이 일시 중지되고 알려진 중재 DApp 에 결정을 제공하도록 요청한 다음 계약이 해당 결정을 시행한다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모든 법률 시스템의 초석인 **적정 절차와 공정성**이 존중되도록 합니다. lex cryptographia 분석에서 지적된 한 가지 과제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적정 절차 원칙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 계약이 처벌이나 결과를 실행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바넷.org](http://ibn.net) [이바넷.org](http://ibn.net) 당사자들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갖도록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아마도 체인상에서 무언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하거나, 코드가 과격한 조치를 확정하기 전에 항소에 대한 내장된 지연이 있을 수 있음).

스마트 계약은 또한 **법률의 모듈성**을 허용합니다. 사용자는 다양한 법률 기능에 대한 모듈을 플러그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재산에 대한 "상속 스마트 계약", 파트너십에 대한 "사업 조직 계약" 등입니다. PLS 시나리오에서 개인은 개인 법률의 주요 계약 및 정책을 나타내는 *스마트 계약 라이브러리*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과 교류하고 싶어한다면, 그들은 그 계약을 사용하거나 참조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이 법적 상호 작용을 위한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 계약은 다른 사람들이 귀하의 개인 법률 세트와 상호 작용하는 API입니다. 엘리스가 밥에게 무언가를 판매하고 싶어한다면, 그녀는 "제 SaleContract v2.0 과 상호 작용해 주세요. 여기 주소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밥은 무언가 잘못되면 SaleContract v2.0 이 내부적으로 그의 RefundPolicy 계약을 호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상은 이러한 계약 주소를 교환하고 어느 것이 어떤 부분을 관리하는지 해시한 다음 연결하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하게 들리는 **기술-법적 안무**이지만,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앱과 권한 협상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예: "이 앱이 귀하의 연락처에 액세스하려고 합니다. 허용하시겠습니까? 거부하시겠습니까?"; PLS 로 "밥의 계약에서 귀하의 일반적인 환불 권리를 비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이 거래에 대해 허용하시겠습니까? 거부하시겠습니까?").

분산된 ID 및 자격 증명

분산형 신원(DID) 시스템과의 통합은 개인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PLS 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PLS 세계에서 각 개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규칙을 따르는지* 제시해야 합니다. **Self-Sovereign Identity(SSI)** 와 같은 프로젝트는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검증된 자격 증명(ID, 인증서 등)을 보유하고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쉬닷컴](#). PLS 의 경우 다음을 나타내는 자격 증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법률 커뮤니티의 멤버십(예: "Ethereum DAO Law" 멤버십 또는 "Ulex Law 사용자" 인증서), 신뢰하는 중재자의 자격 또는 책임에 대한 보험 증빙. 이러한 자격 증명은 신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에이전트가 PLS 에서 인간과 상호 작용하려는 경우 인간은 AI 가 알고리즘이 아시모프의 로봇 3 법칙 또는 일부 안전 규칙을 따른다는 자격 증명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AI 개발자는 감사 후 해당 자격 증명을 블록체인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인간의 에이전트가 이를 확인하고 AI 가

"친근한" PLS 를 갖도록 인증되었으므로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는 PLS 원칙과 일치하는 **기계 판독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정책/자격 증명**을 통해 비인간적 개체(IoT 장치, AI, 기업)도 통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분산형 ID 는 평판을 관리하는 방법도 제공합니다. PLS 의 시행이 평판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예: 나쁜 행위자 피하기) 블록체인 기반 평판 시스템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행된 계약 또는 참여한 중재의 내역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필요한 경우 가명 또는 제로 지식 증명을 통해 개인 정보 보호). 그런 다음 참가자는 다른 사람이 확인하는 **평판 점수 또는 배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중앙 집중형 플랫폼(예: eBay 의 판매자 평가)과 달리 분산형 평판은 이식성이 있습니다. 좋은 실적은 ID 키에 연결되어 있으며 서비스 간에 이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뢰가 없고 싶지 않은 자산이기 때문에 PLS 네트워크에서 좋은 행동을 장려합니다.

다중 분산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

PLS 의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단일 블록체인이나 기술 스택에 묶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회복성을 위해 **블록체인에 독립적이어야 하고 상호 운용 가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블록체인을 연결하여 데이터나 자산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Polkadot 이나 Cosmos 와 같은 노력을 보고 있습니다. PLS 에서는 서로 다른 기술을 선호하는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그룹은 Ethereum 기반 계약을 사용하고 다른 그룹은 다른 원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상호 작용하려면 크로스 체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Alice 의 PLS 가 Ethereum 을 사용하고 Bob 의 PLS 가 다른 체인을 사용하는 경우 브리지 방법이 필요하거나 중립 체인을 사용하여 두 체인을 정산합니다. 이는 기술적 과제이지만 블록체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작업한 과제입니다(예: 원자 스왑, 크로스 체인 메시징). 또 다른 접근 방식은 블록체인에 중립적인 **레이어 2 솔루션**이나 오프체인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보안을 위해 널리 신뢰되는 체인에 최종 앵커링을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계약과 블록체인은 **권리와 의무의 토큰화**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임이나 채무를 토큰화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특정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를 나타내는 토큰을 상상해 보세요. 거래되거나 보험에 가입하여 위험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PLS 를 중심으로 금융 상품 생태계가 성장하여 보험(중재자가 당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등)과 같은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산형 금융과 교차합니다. 사실, DeFi 는 PLS(대출, 보험, 개인 거버넌스 선택과 일치하는 투자)를 지원하는 경제적 계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통합 중 하나는 **AI 와 자동화된 에이전트**와의 통합입니다. 프롬프트는 AI 를 분산된 법적 개체로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AI 에이전트가 자체 PLS(아마도 프로그래밍된 제약)로 사회에 참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인간과 협력할까요?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은 AI 와 인간 규칙 사이의 중립적인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AI 는 블록체인 계약을 읽고 내부 규칙을 어기지 않도록 조치를 결정하는 모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AI 는 *개인 법률 세트를 초안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AI 자문을 사용하여 자신의 PLS 가 다른 사람의 PLS 와 충돌하는지 파악하고 충돌을 최적으로 해결하는 조건을 협상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분산 기술과의 통합은 PLS 의 엔진이자 유행유입니다**. 블록체인은 개인 법률 상호작용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기록하는 엔진(**실행 계층**)을 제공하는 반면, 스마트 계약은 법률의 코드(**논리 계층**)이고, 분산된 ID/평판은 신뢰와 정보를 제공하는 유행유(**ID 계층**)입니다. 이 모든 것이 PLS 가 기존 권한 없이도 기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통합에는 과제도 있습니다. 기술적 버그나 해킹으로 인해 PLS 시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으며, 복잡성으로 인해 일반인이 개인 법률을 디지털 방식으로 탐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기술의 궤적은 접근성이 증가할 것을 시사합니다(예: 사용자 친화적 지갑, 계약 템플릿, AI 지원).

사상적 리더들의 낙관적인 견해는 블록체인과 관련 기술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자체 시행 스마트 계약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해방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즈코인스닷컴](https://www.wisconsinstate.com). 이는 PLS 를 효과적으로 설명합니다. 암호화 법률을 통해 개인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실제로 PLS 는 디지털 영역에서 작은 앙클레이브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코드를 통해 대부분 자체적으로 통치하는 DAO 커뮤니티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런 다음 도구가 개선됨에 따라 확장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여러 독립적인 개인 법률 시스템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유익하게 협력하도록 보장하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분산화된 법인 간 협력 보장

PLS 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적이고 분산된 법적 실체로 구성된 사회가 어떻게 협력하고 통합된 시스템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요?* 모든 개인과 조직이 자체 법적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주권을 행사한다면, 무엇이 갈등, 교착 상태 또는 집단적 노력의 붕괴를 막을까요? 기존 시스템에서 협력은 종종 상위 기관(예: 연방이 주를 대신하거나 법원이 개인을 대신하는 경우)에 의해 보장(또는 시행)됩니다. PLS 프레임워크에서 우리는 **중앙 집행자 없이** 질서와 협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체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러한 여러 메커니즘과 그것이 사람, 회사, 커뮤니티 또는 AI 에이전트와 같은 분산된 실체가 효과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자발적 표준 및 메타 규칙

고도로 분산된 환경에서도 *공통 표준은 종종 모든 사람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등장합니다.* 인터넷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넷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이지만, 모두 공통 프로토콜(TCP/IP, HTTP 등)을 사용하여 데이터가 보편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단일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프로토콜을 부과한 것은 아니며, 상호 운용성의 가치 때문에 채택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PLS 생태계에서는 상호 작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발적인 법적 표준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표준은 본질적으로 많은 개인 법적 세트가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통합하는 *공유 규칙 또는 관행*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개인 및 기업이 특정 **분쟁 해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 거래 네트워크의 모든 사람이 중재 서비스 X를 사용하고 해당 규칙을 따릅니다). 또 다른 표준은 계약 형식이나 주요 용어의 정의(예: 많은 PLS 사용자가 비상 시 모든 사람이 의무를 비슷하게 해석하도록 포함하는 "불가항력"의 표준 정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메타 규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규칙 세트에도 불구하고 상호 작용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입니다. 우리가 언급한 간단한 메타 규칙 중 하나는 *"상호 작용은 모든 당사자의 PLS 에 따라 합법적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서로의 법을 고려하고 본질적으로 그 참여에 대한 그들 사이의 더 엄격하거나 더 구체적인 조항을 준수하도록 강요합니다. worldbuilding.stackexchange.com. 이는

계약의 다중 서명과 유사합니다. 모든 당사자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결과(최소 공통 분모)로 기본 설정될 수 있지만, 실제로 자주 상호 작용하는 당사자는 PLS 를 공통점에 맞춰 조정하여 이 조건을 충족하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 경우(예: 한 사람의 법이 다른 사람이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메타 규칙에서 **미리 합의된 타협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중간 지점으로 기본 설정하거나 양측이 이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동의한 경우 해당 시나리오에 대해 한 쪽의 규칙을 선택).

산업 그룹이 기술 표준을 설정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표준 설정 조직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PLS 세계에서는 권장되는 법적 표준(계약, 재산권, 디지털 자산 처리 등)을 게시하는 비정부 기구(아마도 DAO 자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이를 자발적으로 PLS 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널리 채택된 표준은 사실상의 법률이 되는데, 이는 특정 무역 관행이 상거래에서 법률이 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글로벌 거버넌스 문헌에서 학자들은 **규범과 표준이 다중심** 시스템 언급했습니다. academic.oup.com academic.oup.com – 즉, 단일 행위자가 이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질서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국제 인도주의 활동에서 적십자 행동 강령을 따르는 규범은 세계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시하지 않고도 NGO 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cademic.oup.com academic.oup.com. 유추적으로, 대부분의 PLS 사용자가 "방관자에게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또는 "데이터 공유에서 개인 정보를 존중하십시오"와 같은 규범을 채택하면 이러한 규범은 모든 사람의 기본 기대와 지침 행동의 일부가 되어 기본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협력에 대한 평판과 인센티브

분산형 시스템에서 **평판**은 강력한 규제자입니다. 나쁜 행위자를 처벌할 중앙 경찰이 없다면 커뮤니티의 집단적 대응은 종종 나쁜 평판을 얻은 사람을 배척하거나 거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판매자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구매자는 평가가 좋은 사람을 신뢰하고 평가가 나쁜 사람을 피합니다. PLS 사회에서 모든 개인의 협력 및 다른 사람과의 사업 수행 능력은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계약을 위반하거나 악의적으로 행동하면 소문(또는 암호화된 서명 증거)이 평판 시스템을 통해 퍼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미래의

상호 작용에서 단순히 배제합니다. 이는 **협력하고 자신의 약속을 지키려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만듭니다. 게임 이론은 반복적인 상호 작용에서 미래에 외면당할 수 있다는 위협이 현재의 부정 행위를 억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종종 "미래의 그림자"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를 기술로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언급했듯이 블록체인 기반 평판 원장은 검증된 성과 기록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PLS 사용자 커뮤니티는 행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에서 신용 점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는 eBay/Amazon 리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은 중앙 집중화된 버전이지만 분산화된 유사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예: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보증하는 *Web-of-trust* 모델). Alice 가 Bob 과 계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Bob 이 연루된 분쟁이 있는지 물어보거나 분산된 레지스트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그가 거래를 어기고 그에게 불리한 중재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녀는 Bob 에게 더 엄격한 조건이나 담보를 요구하거나 그를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Bob 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협조하려는 동기를 갖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설계를 통한 인센티브의 정렬입니다. 많은 상호작용은 올바르게 수행하면 윈윈으로 구조화될 수 있습니다. PLS 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창의적인 배열을 장려합니다. 예를 들어 잠재적인 외부성(예: 밥의 공장이 앨리스를 오염시키고 해를 끼칠 수 있음)이 있는 경우 밥과 앨리스(및 주변의 다른 사람들)는 모든 사람을 보장하기 위해 오염에 대한 한도 또는 보상에 대해 *사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 시스템에서 회사는 법이 중단될 때까지 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PLS 에서 이웃은 해당 회사와 거래를 거부하거나 자동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조항(예: IoT 센서로 측정된 오염이 X 수준을 초과하면 이웃에게 지불하는 에스프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은 계약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협력하거나 자동적인 결과 또는 사회적/사업적 고립에 직면하게 됩니다.

메커니즘 설계는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각 당사자가 결별하는 것보다 함께 함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다자간 계약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개념은 *상호 보험 또는 보증*입니다. 당사자는 각자 자금이나 자산을 보증으로 넣을 수 있으며, 어떤 것이 특정 핵심 협력 규범을 위반하면 다른 당사자가 보증을 받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인질이나 담보를 교환하여 동맹을 확보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여기서는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자동화합니다.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피어 프로덕션 프로젝트가 운영되는 방식에서도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상사가 없지만, 사람들은 협력하여 복잡한 것(예: 위키피디아나 리눅스)을 만듭니다. 이들은 **공통 목표, 투명성, 규범에 대한 커뮤니티의 집행**에 의존합니다. PLS 에서 커뮤니티는 여전히 공통 관심사(환경 보호, 도시 계획 등)를 중심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DAO 나 어셈블리를 통해 조정할 수 있지만 참여는 자발적입니다. 기여하는 사람들은 명성과 영향력을 얻습니다. 무임승차자는 특정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는 계약을 통해 도로 유지 관리 기금에 기여하는 사람만 사유 도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학의 클럽 상품과 비슷합니다. 협력자에게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협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갈등 해결 및 중재 네트워크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발생할 것입니다. 핵심은 *강제력을 가진 중앙집권적 사법부가 필요 없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논의된 대로 분산 중재는 핵심입니다. 앨리스와 밥이 분쟁이 있는 경우 이상적으로는 계약서에 중재 방법을 미리 선택했어야 합니다(이는 오늘날에도 국경 간 계약에서 일반적입니다). 해당 중재자(또는 패널 또는 알고리즘)가 개입하여 공정하게 결정할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결과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큼니다. 결과의 집행은 자동화될 수 있습니다(예: 자금 해제) 또는 사회적(준수하지 않으면 평판에 타격을 입힘)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 예를 들어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규칙을 어기거나 사전 합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PLS 용어로 기본적으로 "불법자") 협력을 위한 한 가지 메커니즘은 집단적 집행입니다. 누군가가 알려진 공격자라면 다른 사람들이 모여 배상을 강요하거나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국적 사회에서 연합이 규범을 집행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예: 전통적인 씨족 기반 사법에서 여러 가족이 연합하여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PLS 는 **보호 협회**를 통해 이를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구성원의 합법적 청구를 집행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네트워크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앨리스가 누군가에게 강도를 당하면 그녀의 보호 협회(일종의 분산형 보험/보안 DAO)가 조사를 하고 청구를 확인하면 앨리스에게 보상하고 강도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아마도 물건을 반환하거나 손해 배상을 지불할 때까지 그 강도와 거래하지 말라는 경고를 발령함으로써). 강도는 본질적으로 준수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단절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어떤 단일 경찰력이 지배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왜냐하면 공통 프로토콜을 통해 협력하는 여러 보호 협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오늘날 다양한 기관 간의 **상호 지원 협정이** 작동하는 방식과 유사하지만, 여기서 회원 자격은 개인적이고 자발적입니다).

실제 세계의 유사점은 어느 정도 **국제 법 집행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세계 경찰은 없지만 국가는 범죄자를 잡기 위해 조약(범죄인 인도 조약, 인터폴 통지 등)을 통해 협력합니다. PLS 에서 "소국"(개인 또는 그들의 협회)은 유사한 **상호 운용 가능한 집행 조약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중 관할권 환경에서는 포럼 쇼핑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사람들은 유리한 관할권에서 사건을 심리하려고 시도합니다). PLS 에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중재자를 선택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계약은 명확해야 하며 중재자는 양측이 승인한 중립적인 제 3 자여야 합니다. 또한 **항소 및 감독은** 분산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는 결정이 더 많은 배심원 풀이나 커뮤니티에서 선택한 존경받는 법학자 패널에 항소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과 같은 기능을 하지만 국가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명성을 통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99%의 판결 수용률을 보이는 경험 많은 중재자가 어려운 사건의 항소 패널에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 에는 또한 공공 인프라, 환경, 공중 보건과 같은 **집단적 상품과 외부성**을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모든 사람을 조정하는 분야입니다(도로 건설을 위한 세금, 오염을 줄이기 위한 법률 등). PLS 에서 조정은 **의향이 있는 사람들의 연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공공재에 관심이 있는 경우 DAO 또는 계약을 구성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접근 권한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예: 커뮤니티 공원에 기부하지 않았다면 열쇠 고리가 문을 열지 못할 수 있음 - 이는 무임승차를 피하기 위한 배제로 일종의 클럽 상품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과 같은 사항의 경우 오염자에 대한 사회적 압력과 보이콧을 사용할 수 있으며 창의적인 재산권 솔루션(개인이 배출권을 소유하고 거래하는 것과 같이 정부가 배출량 제한 및 거래 시스템에서 수행했지만 PLS 에서 산업이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음 - 모든 공장이 특정 오염량에 대한 토큰을 보유한다는 데 서명하면 해당 시장에서 서로를 규제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와 자율 에이전트의 역할

사용자 프롬프트는 구체적으로 AI 엔티티를 언급합니다. AI와의 협력을 보장하려면 AI가 상호 작용에서 규칙을 따르고 인간과 AI가 공통된 이해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접근 방식은 AI를 법적으로 법인과 유사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즉, 책임이 있는 법적 주체로 취급하지만, "현장"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제약 조건입니다. 인간은 AI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특정 제약 조건(예: 윤리 지침)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사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컴퓨팅 모듈을 통해 검증할 수 있습니다(예: AI가 안전한 정책의 인증된 버전을 실행하고 있음을 암호화하여 증명할 수 있음). 그런 다음 협력은 부분적으로 설계에 의해 시행됩니다. AI는 특정 프로토콜을 위반하지 않도록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AI 택시는 항상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교통 규칙 프로토콜을 준수합니다). AI가 벗어나면 다른 AI가 연결을 끊거나 차단합니다(네트워크의 불량 노드가 샌드박스되는 방식과 유사). 분산 AI 시스템에서는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이를 제어합니다. [아카이브](#) 이는 인간의 협력이 이탈자를 고립시키는 합의에 의존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질서 있는 혼돈" - 다중심적 체계에서의 새로운 질서

다중심적 거버넌스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표면적으로는 혼돈처럼 보이는 것이 관계 네트워크, 공유 규범, **메타 거버넌스** (비공식적 조정) 로 인해 근본적인 질서를 가질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academic.oup.com](#) [academic.oup.com](#). PLS에서 모든 사람이 독립적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맥락을 제공하는 문화와 경제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 전반적인 사회적 가치가 인권으로 기울어지면, 개인 법률조차도 그러한 가치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고, 도덕적 규범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영리 단체나 종교 단체와 같은 **초개인적 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은 개인의 행동을 정렬하는 배경을 제공합니다. International Studies Review의 한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다중심적 거버넌스에서 더 깊은 질서는 여러 행위자가 모두 암묵적으로 따르는 규범, 관행 및

프레임워크에서 비롯됩니다. academic.oup.com academic.oup.com. PLS의 경우, 이는 널리 받아들여진 인권 규범, 선의에 대한 비공식적인 기대 또는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공통 법률 언어 (말 그대로의 프로그래밍 언어 또는 단순히 법률 에스페란토)와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점은 접착제 역할을 하므로 공식적인 법률이 다르더라도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PLS 시스템은 또한 특정 기능을 위한 일종의 연방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은 **신원에 대한 중앙 등록부** (분산되어 있지만 합의에 의해 통합됨, PLS 사용자를 위한 블록체인의 글로벌 전화번호부처럼) 또는 대규모 위협에 대한 **공동 방위 협정** (어떤 그룹이 폭정을 수립하려고 하면 다른 그룹이 이에 저항하기 위해 연합)을 공동으로 보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정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때로는 계층 대신 *이질 계층*이라고도 함)을 만드는데, 이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여러 개의 겹치는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각 네트워크는 구성원이 목적을 위해 부여하는 제한된 권한을 갖습니다(예: 보험 네트워크는 규칙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고 청구금을 지불할 권한이 있지만 누군가를 감옥에 가두거나 무작위 법률을 만들 권한이 없음).

마지막으로 **확장성**을 고려하세요. 수백만 개의 독립적인 법률 세트가 실제로 조정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수 있지만 시장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수백만 명의 독립적인 소비자와 생산자가 중앙 계획자 없이 가격 신호와 계약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PLS 사회는 넓은 의미에서 "가격 신호"를 통해 법적 기대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평판은 그러한 신호 중 하나이고 위험 프리미엄이나 보험 비용은 또 다른 신호입니다. 누군가의 규칙이 너무 위험하면 다른 사람들이 처리하도록 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규칙을 조정하게 됩니다). **신뢰와 이기심의 보이지 않는 손**은 일종의 법 질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과 경제학자들은 종종 특정 법 질서가 어떻게 자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좌초된 섬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재산 규범이나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상인법과 같이). 앞서 언급했듯이 중세 시대의 상인들은 국가법이 국제 무역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 규칙과 법원을 제정했고, 이는 *Lex Mercatoria*. [위즈코인스닷컴](http://www.wisconsin.edu) [위즈코인스닷컴](http://www.wisconsin.edu). 그들은 **공유된 관습**과 지역 사회의 압력을 통한 집행을 통해 협력했습니다(상인 법원 판결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상인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위즈코인스닷컴](http://www.wisconsin.edu) [위즈코인스닷컴](http://www.wisconsin.edu)). 이는 분산화 된 법적 협력의 실제 사례입니다. 이는 *민간 주문*이 기존

당국이 무역을 촉진할 수 없거나 촉진하지 않을 때 격차를 메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위즈코인스닷컴](#) [위즈코인스닷컴](#) PLS 는 그 아이디어를 사회 전체로 일반화합니다.

결론적으로 PLS 프레임워크에서의 협력은 공유 표준, 상호 합의, 평판 시스템, 자발적 집행 연합, 기술로 강제된 정직성 **이라는 메커니즘의 망**에 의해 보장됩니다. 독립적인 개체는 협력 규범을 채택할 강력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협력 규범이 없다면 고립되고 불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협력하는 사람들은 유익한 상호 작용을 통해 번창하며, 다른 사람들이 따를 만한 모범을 만듭니다. 이상적으로는 **"좋은 행동은 보상을 받고 나쁜 행동은 처벌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단일 권한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의 집단적 행동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정치학자 제임스 매디슨은 다른 맥락에서 단편화된 시스템이 "야망이 야망을 상쇄"하도록 만들어 단일한 학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PLS 에서 **집단적 이익(스마트 계약 및 평판을 통해)과 일치하는 이기심**은 반사회적 이기심을 상쇄합니다.

물론, 이러한 질서 있는 협력은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기관의 의식적인 설계와 문화적 성숙이 필요합니다. 공정성 보장, 자경주의 회피, 공모 방지와 같은 과제가 존재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과제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제 및 고려 사항

개인 법률 세트 프레임워크를 구현하는 것은 수많은 과제에 직면한 대담한 노력입니다. 이는 기존 거버넌스의 많은 가정을 뒤집기 때문에 잠재적 장벽을 파악하고 해결책이나 완화책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법적, 기술적,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포함한 몇 가지 주요 과제와 고려 사항을 강조합니다.

1. 법적 정당성과 국가 저항

아마도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존 국가가 PLS 시스템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거나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자국 영토 내에서 **주권과 입법 독점권**을 주장합니다. 개인이 국가가 아닌 자국의 법을 따를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는 국가 권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율 구역이나 사법 시스템을

수립하려는 역사적 시도는 종종 법적 장애물이나 억압에 부딪혔습니다. 예를 들어, Bitnation 과 같은 암호화폐 기반 프로젝트는 대부분 정부에서 결과물(블록체인 결혼이나 ID 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틈새 시장으로 남았습니다.

장벽: 주는 특정 측면을 불법화할 수 있습니다(예: 주법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모든 계약은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하거나 모든 중재가 궁극적으로 주 법원에 위임되도록 요구). 또한 PLS 기반 계약을 집행하거나 인정하지 않기로 하여 참여자가 더 넓은 사회에서 운영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예: 은행이 정부 검증 없이 블록체인 토지 소유권을 수락하지 않을 수 있음). 극단적인 경우, 주는 개인이 주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기소할 수 있습니다(누군가가 "내 개인 법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허용합니다"라고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주는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잠재적 해결책: 가능한 경로는 **점진적 통합과 하이브리드 모델**로, PLS 는 처음에는 주법과 공개적으로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은 PLS 를 비공개로 사용하지만 공공 요구 사항(세금 납부, 형법 준수 등)에서는 여전히 주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PLS 조치가 *공존할 수 있고 심지어* 주에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예: 커뮤니티가 자체 분쟁을 평화롭게 처리하는 경우 주 법원에서 소송이 줄어듭니다). 일부 주는 법적 다원주의에 더 개방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혁신을 유지하는 경우(일부 관할권이 블록체인 기업에 우호적인 법률을 만든 방식과 유사). 이미 분산형 구조에 대한 인식이 일부 보입니다. 예를 들어, 와이오밍 주는 DAO 회사에 LLC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스틴슨닷컴](#). 그것은 PLS 그 자체는 아니지만, 입법자들이 분권화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PLS 를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질서 *있는 자유* 로 규정할 수 있다면, 아마도 국가들은 PLS 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어떤 국가들이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가족법에 대한 종교 법원을 허용하는 것처럼).

법적으로 PLS 는 기본 권리인 결사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확장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성인이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방법에 동의할 수 있다면, 그것을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공적인 PLS 관행은 법학자와 아마도 판사가 판결에서 개인 법적 세트에 무게를 두도록 영향을 미치는 실적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예: 둘 다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는 경우 PLS 코드를 참조하는 조건을 시행). 중재에도 유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100** 년 이상 전에 법원은 사법권자에게 관할권을 내주는 것을 꺼렸습니다. 지금은 중재 조항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법원은 일반적으로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정을 유지합니다. 이는 국제 조약(뉴욕 조약)과 중재의 신뢰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 법적 계약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 이해나 조약이 있다면 PLS 를 법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울지 몰라도, **국제 사법**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계약에서 외국법과 외국 법원의 선택을 특정하고 이를 존중할 수 있다는 개념은 수 세기 전만 해도 명확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표준이 되었습니다.

2. 집행 및 보안

중앙집권화된 경찰이나 군대가 없다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고의로 침해하는 사람에 대한 규칙을 어떻게 시행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논의는 합리적이고 협력적인 행위자를 가정합니다. 하지만 평판에 관심이 없거나 지역 사회의 압력을 무시할 만큼 강력한 악의적인 행위자(예: 대기업이나 PLS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는 불량 국가 행위자)는 어떨까요? 그들은 통일된 집행의 부족을 악용하여 처벌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장벽: 모든 사람이 매우 독립적이라면 무력에 대한 대응을 조정하는 것이 느리거나 약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인 평화유지군이 없다면 파벌 간의 **사적 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권력의 공백은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군벌이나 지배적인 기업에 의해 채워질 수 있습니다(비평가들이 무정부 상태에 대해 종종 제기하는 시나리오 - 힘이 곧 정의로 전략한다는 것입니다). 분산된 방식으로 물리적 보안(폭력, 도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의 보호)을 보장하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잠재적 해결책: *예방적으로*, 대부분의 인센티브가 평화롭고 합법적인 행동(논의된 대로)을 선호하도록 PLS 를 설계하면 심각한 위반의 발생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치에 대비해야 합니다. 분산된 보안에는 **보호 협회 또는 보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방어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보복하는 데 동의하는 보안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러한 협회가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로를 돕거나 연방 방식으로 영토를 분할하기로 동의) 법 집행에 상응하는 통일된 전선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또 다른 강압적인 세력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은 구성원과 경쟁 서비스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한 기관이 권한을 넘어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시작하면 다른 기관이 그 기관에 맞서거나 고객이 더 정의로운 공급자에게 떠날

수 있음). 섬세한 힘의 균형 시나리오입니다. 브루스 벤슨과 같은 일부 학자들은 중세 시대나 미국 서부에서 사적 경찰과 정의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연구하여 *평성과 동맹이* 생각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제스.org. *그러나* 그 사회는 또한 불화를 겪었고 때로는 결국 정부가 개입해야 했습니다. PLS 커뮤니티는 "**상호 방위 조약**" 과 유사한 것을 만드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구의 침략이든 다른 모든 사람의 집단적 제재로 대처한다는 합의입니다. 잘 무장한 단체가 이를 안다면 공격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NATO 가 집단적 대응으로 모든 회원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 이는 많은 PLS 세트에 인코딩 된 원칙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발 없이 치명적인 힘을 사용하면 누구든지 나를 막기 위해 힘을 사용할 수 있음을 수락합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각 개인법에* 안전 장치로 내장된 거의 사회적 계약입니다.

기술적으로 **감시와 투명성** 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센서의 분산 네트워크(커뮤니티 CCTV 또는 착용형 카메라 등)는 범죄를 기록할 수 있고, 분산 스토리지는 증거가 파괴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여론(또는 분산 배심원)이 공격자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기록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숨길 수 없다면 사기꾼으로 행동하기가 더 어렵습니다(하지만 개인 정보 문제가 발생합니다). 직관에 반하는 듯하지만,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고도로 연결된 세상은 그림자 속에서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폭력적인 범죄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외부성과 공공재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염 통제, 인프라 또는 전염병 대응과 같은 문제에는 중앙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의 이익이 자연스럽게 일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PLS 에서 누가 공기가 깨끗한지, 팬데믹이 억제되는지 보장할까요?

장벽: 무임승차 문제(공헌 없이 공동의 이익을 누리는 것)는 세금 없이는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각 개인의 법률에 다른 한계나 정책이 있을 경우(한 사람의 PLS 가 "저는 백신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의 PLS 가 "저 주변의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공중 보건 위기를 일관되게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후 변화와 같은 외부 효과는 개별 계약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몇몇 저항(예: 배출량 감소를 거부하는 회사)은 노력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 해결책: 클럽과 공동체적 접근 방식은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협동조합이나 DAO**를 구성하여 특정 공공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DAO는 지역 공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 자격은 자발적이지만 회원만이 공원 규칙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여를 어떻게 동기 부여할 것인가입니다. 이는 사회적 규범(기여자 칭찬, 무임승차자 비난) 또는 마이크로트랜잭션(유지 관리 자금을 제공하는 소액 사용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팬데믹과 같은 경우 분산형 솔루션에는 **정보와 합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뢰 네트워크와 평판이 강하면 커뮤니티가 자발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COVID-19에서 많은 개인과 기업이 사회적 압력과 안전에 대한 상호 이익으로 인해 의무화 전에도 조치를 취했습니다. PLS를 사용하면 일부 커뮤니티가 네트워크 내에서 더 엄격한 조치를 시행하고 준수하지 않는 사람과의 상호 작용을 정중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단일 규칙이 없다면 까다로울 수 있지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다른 국가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지만 정보 공유 및 여행 계약(또는 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협력 처리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세요. PLS는 이를 미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위험 허용 범위는 다르지만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협상합니다(예: 누군가의 PLS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경우 최근 검사 또는 마스크 착용 요구 등). 기술은 **검증**(블록체인에 대한 건강 자격 증명 등)을 지원하여 중앙 명령 없이도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기후와 같은 글로벌 이슈의 경우, 한 가지 전략은 **계약적 거버넌스**입니다. 기업과 개인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구속력 있는 계약에 서명하고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예: IoT로 측정한 특정 발자국을 초과하면 일부 기금을 "탄소세"로 자동 상환). 주요 참여자가 충분히 이를 수행하면 규제가 원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PLS는 외부성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 *모여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압력을 받거나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가 녹색 약속 네트워크에 있는 회사의 제품만 구매할 수 있음 등). 이는 확실히 어려운 일이며 정부조차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PLS는 의무에 대한 대안으로 창의적인 시장 메커니즘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이론가들은 **다중심적 거버넌스**가 단일 규모 접근 방식보다는 여러 규모에서 솔루션을 허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유지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맥기니스.페이지.iu.edu](http://mckinstry.iu.edu). 엘리노어 오스트롬의 공유지 통치에 대한 연구는 종종 부과된 규칙을 능가하는 지역적이고 하향식 기관을 발견했습니다. PLS 는 이러한 하향식 시도를 배가시킬 것입니다. 일부는 실패하고 일부는 성공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패턴은 널리 모방될 수 있습니다.

4. 복잡성과 접근성

매우 실용적인 문제: 모든 사람이 각자의 법적 세트를 가지고 있는 세상을 항해하는 것은 당혹스러울 수 있으며, 특히 변호사나 기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와 상호 작용할 때 무엇에 동의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인지 과부하**의 위험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면 사람들은 몇 가지 템플릿 시스템만 기본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일부 다양성 목적을 어김) 또는 실수를 저지르고 누군가의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여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장벽: 법률 시스템은 이미 복잡하지만 적어도 관할권별로 비교적 균일합니다. PLS 는 복잡성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규칙이 계약서나 소프트웨어에 인코딩된 경우 코드의 오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유명한 DAO 해킹에서 허점으로 인해 누군가가 자금을 빼돌릴 수 있었던 것처럼 의도치 않은 자산 손실을 일으키는 버그와 같음). 사람들은 또한 **의사 결정 피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즉, 삶의 모든 측면에서 어떤 법률 템플릿을 채택할지, 어떤 중재자를 신뢰할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PLS 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규칙만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재적 해결책: **후드 아래의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 과 표준화를 강조합니다. 각 개인이 고유한 규칙을 가질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은 잘 검토된 소수의 법률 템플릿 중에서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평판이 좋은 조직에서 제공하는 "Standard Civil Code v5.2"를 기반으로 선택한 다음 자신에게 중요한 몇 가지 규칙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배포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이 OS 를 처음부터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Linux 나 Windows 등을 선택하고 설정을 사용자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률 기술 회사나 커뮤니티는 다양한 철학에 대한

패키지 **개인 법률 세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예: 생태 규칙에 초점을 맞춘 "Green PLS" 또는 최대 자유에 초점을 맞춘 "Libertarian PLS" 등). 사람들은 공감되는 것을 선택하고 원하는 경우 미세 조정할 수 있는 옵션(또는 미세 조정할 법률 프로그래머를 고용)이 있습니다.

AI 법률 보조원 과 같은 도구는 이 과정을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AI 는 주어진 개인 법률 코드의 의미를 평범한 언어로 설명하고, 갈등에 대해 경고하고("X 조항을 포함하면 Y 조항을 가진 사람들이 당신과 상호 작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심지어 당신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의 AI 와 협상하여 양측을 만족시키는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개인은 모든 기술적 세부 사항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대리인이 그렇게 합니다. 이미 법률 기술은 자동화된 계약 분석 및 초안 작성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전부인 PLS 에서 이러한 도구는 필수적이고 매우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법률의 **모듈식 설계**는 복잡성을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호작용과 관련된 모듈에 대해서만 걱정하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단지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그들의 계약/거래 모듈만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이나 상속에 대한 그들의 개인적인 규칙은 그 맥락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은 필터링하여 주어진 거래에 대한 관련 부분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투명성 은 또 다른 해결책입니다. 개인 법률 세트를 공개하거나 쉽게 쿼리할 수 있도록(아마도 표준화된 언어로) 요구하여 두 당사자가 어디에서 일치하거나 충돌하는지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인 법률이 불투명하면 신뢰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PLS 문화의 일부는 귀하의 법률(또는 적어도 개요)을 공개 레지스트리에 게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검색 엔진이나 호환성 검사기**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기 전에 당사자의 ID 와 활동을 입력하고 "90% 호환됨. 이 두 가지 사항은 협상이 필요합니다."라는 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개인의 정신적 부담을 줄입니다.

5. 공정성, 형평성, 권력 불균형

모든 사람이 자신의 법을 정한다면, 그 법이 부당하거나 권력 불균형으로 인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불공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대기업은 PLS 를 통해 책임을 크게 제한하거나 상호 작용하는 사람의 특정 권리를 거부할 수 있으며, 개인은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해당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오늘날 우리가 쓰지 않은 긴 서비스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클릭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PLS 는 강력한 플레이어가 가혹한 조건을 지시하고 약한 당사자는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호에 대한 **경쟁이 바닥으로** 치닫고 저항하는 데 필요한 단결이 분열될 위험이 있습니다(노동자가 단결하지 않으면 대안이 부족하여 열악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과 유사).

장벽: 노동법이나 소비자 보호와 같은 정부 규제가 없다면 취약 계층이 착취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개인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매우 비자유주의적인 규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예: 커뮤니티가 내부적으로 차별이나 불평등을 허용할 수 있음). PLS 는 이론적으로 억압적인 미시 정권도 "자발적"인 한 존재하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특정 PLS 가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나 사회적 압력을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권력 역학이 왜곡되면 자발적인 것과 강요된 것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잠재적 해결책: PLS 사용자 대부분이 준수해야 할 **권리의 기준** 이 여전히 필요할 가능성이 높으며, 권리장전과 유사하지만 부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예 제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는 "어린이는 성숙하면 자신의 PLS 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규범이 그러한 근본적인 규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범은 커뮤니티에서 시행될 수 있습니다(이를 위반하려는 모든 그룹은 보편적인 반발에 직면합니다). 본질적으로, 특정 *불가침 원칙은 도덕적 합의를 통해 거의 모든 사람의 개인법에 짜넣어질 것입니다. 이는 완벽하게 시행되지는 않더라도 오늘날 인권이* 보편적으로 여겨지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PLS 는 본질적으로 인권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문화와 네트워크가 인권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권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집단 협상과 약한 당사자를 위한 네트워크**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우리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인하는 판매자의 PLS 를 집단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협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개인법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유지하도록 시장 압력을 가합니다. 근로자는 고용 계약에 대한 공정한 최소 기준을 게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회사에 배지를 제공하는 DAO 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불공정한 규칙을 부과하려고 시도하고 이러한 감시 DAO 로부터 나쁜 평판 점수를 받으면 인재는 이를 피하거나 그곳에서 일하기 위해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은 **거버넌스 제공자 간의 경쟁**입니다. 회사 A 에 엄격한 규칙이 있는 경우 회사 B 는 더 공정한 규칙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유치할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정성과 일치하는 개인 법률을 가진 사람과 거래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오늘날 일부 소비자가 윤리적 관행을 가진 회사를 선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따라서 일종의 *거버넌스 시장*이 등장합니다. 일부(경제학자 폴 로머의 "헌장 도시"와 같은)가 옹호하는 개념입니다. PLS 는 이를 가속화합니다. 단순히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 살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어느 개인 또는 회사의 법률에 따라 계약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좋은 법률(공정하고 효율적)이 판매 포인트가 되고 나쁜 법률은 경쟁에서 불리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법률을 만들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를 법률 전문가나 커뮤니티에 아웃소싱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문가와 커뮤니티는 공정성 원칙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nstitute for Decentralized Governance** 와 같은 조직은 균형 잡히고 공정한 "Model Personal Code"를 발표할 수 있으며, 많은 개인이 이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성에 대한 광범위한 균일한 표준이 보장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연히 또는 의도치 않게 가혹한 조건에 처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6. 문화적, 심리적 적응

덜 구체적이지만 중요한 점은 PLS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급진적인 문화적 변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부와 명확한 법률이라는 개념에 익숙합니다. PLS 는 일반인이 법률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그 개념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법은 정부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혼란이나 두려움을 이용하여 잘못된 정보를 퍼뜨릴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현직자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혼란이 지배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지를 얻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장벽: 처음에는 이 아이디어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분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소수만이 PLS 를 사용한다면, 그들은 더 큰 시스템 내의 고립된 지역과 같아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마찰이나 불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그 사람은 왜 같은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는 법 위에 있는 걸까?").

잠재적 해결책: 교육 및 점진적 개념 증명. PLS 는 이미 대안적 거버넌스(기술 커뮤니티, 자율 커뮤니티 등)에 열려 있는 커뮤니티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면(예: "보세요, 우리 커뮤니티는 일반 법원보다 분쟁을 더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했고 모두가 결과에 더 만족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더 수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교육(아마도 학교에서 기본적인 법적 문해력과 갈등 해결을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은 차세대가 개인 거버넌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PLS 는 절대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특정 도메인에서 PLS 를 사용하는 반면 다른 도메인에서는 전통적인 구조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사업 거래에는 PLS 계약을 신뢰하지만 심각한 범죄에는 주법을 선호하거나 폭력 범죄 처리에는 주 경찰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한 측면에 익숙해지면 다른 측면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 기관이 PLS 네트워크보다 덜 효율적이거나 더 부패하다고 여겨지면 여론이 자연스럽게 바뀔 것입니다.

또한 PLS 가 개인과 커뮤니티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을 강조할 수 있으며, 많은 문화권에서 소중히 여기는 자유와 자율성의 가치와 일치합니다(특히 자유주의 또는 민주주의 전통이 있는 지역에서). *자유*뿐만 아니라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따라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PLS 는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투표하는 대신,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치하는 규칙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불만이 있으면 소속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더 직접적인 권력입니다.

법학자와 윤리학자의 참여는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완전히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미성년자,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사람 등)을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PLS 는 여전히 그러한 개인이 특별 보호를 받거나 보호자가 널리 받아들여진 규칙에 따라 특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이론적으로 이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구축하면 불쾌한 놀라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7. 기술적 과제

기술 측면에서는 블록체인의 **확장성** (수백만 개의 계약을 처리할 수 있을까?), **개인정보 보호** (블록체인에서 계약을 공개하면 사업 비밀이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음), **버그 또는 취약성** (결함이 있는 스마트 계약으로 인해 중요한 사항이 시행되면 사람들의 삶이 파괴될 수 있음)과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장벽: 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진화하고 있지만 속도와 비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복잡한 스마트 계약은 실행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거나 숨겨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암호화 기술(예: 제로 지식 증명)로 프라이버시가 개선되고 있지만 투명성과 기밀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까다롭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은 신뢰를 위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이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잠재적 해결책: 기술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최신 블록체인과 2 계층 솔루션은 더 높은 처리량과 더 낮은 수수료를 약속하여 일상적인 사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스마트 계약의 감사 및 공식 검증이 개선되어 버그가 줄고 있습니다.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항상 인적 폴백(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가 버그가 감지되면 무언가를 중지하기 위해 작동할 수 있는 코드의 탈출구와 같음 - 하지만 중앙 신뢰가 도입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택적 공개를 통해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것을 공개하지 않고도 누군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영지식 준수 증명). 예를 들어 암호화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전체 신원이나 법률 세트를 공개하지 않고도 "저는 18 세가 넘었고 제 개인 법률에는 규칙 X가 포함됩니다"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는 법률 변경에 있어 보수주의 원칙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자동화하지 마세요. 아마도 더 간단한 계약으로 시작해서 자신감이 커짐에 따라 점차 더 자동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 법률 시스템이 수세기 동안

개발된 것처럼 PLS 도 진화할 것입니다. 초기에는 사람들이 계약에 수동 개입 권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정말로 잘못된 일이 발생하면 중재자가 스마트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코드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이러한 보조 바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평가해 보면 PLS 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하룻밤 사이에 뒤집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기술, 문화, 기관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시행, 공정성, 복잡성 등 각 과제에는 잠재적인 해결책이 있지만, 그 해결책 자체도 테스트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학문적 비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평가들은 다국가적 사상이 외부성을 무시한다고 말합니다. [워싱턴월간닷컴](#), 그리고 실제로 PLS 는 이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그러한 비판을 인정함으로써(예: Weinersmith 의 "많은 인간 활동이 외부성을 가지고 있어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 [워싱턴월간닷컴](#)), PLS 지지자들은 분산된 방식으로 외부 효과를 관리하는 메커니즘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순수한 PLS 세계는 유토피아적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지만, 그 요소들은 기존 시스템 내에서도 거버넌스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PLS 를 향한 여정은 최종 상태가 모든 것에 대한 100% 개인법이 아니더라도 가치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최소한 PLS 관점에서 생각하면 특정 권한을 중앙 집중화하는 이유와 분산된 대안(DAO, 커뮤니티 중재 등)이 어떤 경우에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결론

Personal Legal Set(PLS)는 법률 및 거버넌스 시스템에 대한 혁신적인 비전을 나타냅니다. 이는 권한의 위치를 중앙 집중화된 국가 기관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과 단체로 전환합니다. 이는 법이 주권자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전통적인 교리에 도전하고 대신 상호 합의, 공유 프로토콜 및 신뢰의 기술적 집행으로 묶인 자치적 대리인의 네트워크 질서를 가정합니다. 이 연구 전반에 걸쳐 PLS 개념을 정의하고 이것이 원칙적으로 어떻게 기능하는지 탐구했습니다. 각 개인이 자신의 법적 "헌법"을 유지하고 자발적 계약

및 공통 표준을 통해 다른 사람과 협력합니다. 우리는 PLS 에 지적 무게를 부여하는 범정부주의와 다중심법의 이론적 기초를 살펴보고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및 새로운 분산 기관을 통한 구현을 위한 실용적인 경로를 고려했습니다.

PLS 를 DAO 및 국가법과 같은 기존 모델과 비교하면서 PLS 가 현재 추세를 기반으로 하고 급진적으로 확장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PLS 는 DAO 및 블록체인 거버넌스와 중앙 집중식 명령보다 코드와 합의에 의존하지만 거버넌스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개인화하고 세분화함으로써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 비교는 PLS 가 현재 시스템에 대한 전부 아니면 전무의 적대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를 **통합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개인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백본으로 사용하거나 DAO 가 PLS 프레임워크 내에서 집단 행동을 위한 도구로 운영되도록 허용함으로써 말입니다. 중요한 점은 분산된 법적 질서가 질서 있게 유지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탐구했다는 것입니다. 평판 시스템, 자발적 표준화, 분산된 중재 및 네트워크화 된 시행은 새로운 형태이기는 하지만 한때 정부가 맡았던 역할을 채울 수 있습니다. Law Merchant 와 같은 역사적 선례와 블록체인 중재와 같은 현대적 실험은 *적절한* 조건이 을 보여줍니다. ko.위키피디아.org 이바넷.org.

우리는 또한 PLS 가 극복해야 할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법적 인정, 판결 집행, 공공재 처리, 참여의 복잡성, 권력 불균형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제 중 어느 것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각각은 신중한 설계와 시스템의 진화 및 혼성화 기간이 필요합니다. PLS 아이디어를 일찍 도입한 사람들은 분산형 거버넌스가 *기존 거버넌스만큼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더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더 적응적이고, 더 합의적이며,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합니다.* 성공하면 이러한 방법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커질 것입니다. 반면에 실수(PLS 체제 하에서 주요 보안 실패 또는 남용 사례)가 원인을 후퇴시키고 회의주의를 고착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PLS 의 초기 구현은 통제되고 신중하게 고안된 맥락, 아마도 오픈인 커뮤니티 또는 특정 도메인(예: 온라인 거래 또는 기존 법적 범위가 이미 제한되어 있는 국제 상거래)에서 수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PLS 의 언어는 때때로 매우 기술적이고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핵심 약속은 매우 인간적이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삶을 지배하는 규칙에 대해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전해진 법률의 수동적인 주체가 되는 대신, PLS 시스템의 개인은 적극적으로 법적 관계를 형성합니다. 기관에 대한 신뢰가 도전 받고

기술이 새로운 조직 모드를 가능하게 하는 시대에 PLS 는 거버넌스를 원격 관료제가 아닌 개인적 자율성과 커뮤니티 합의의 확장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이는 금융 분야의 암호화폐에서 정보 공유 분야의 P2P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다른 분야에서 볼 수 있는 분산화 흐름과 공명하며, 모두 "허브"(중앙 기관)가 아닌 "노드"(개별 참여자)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일반 대중에게 PLS 의 세계는 시민 생활에서 더 큰 선택과 맞춤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맞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거버넌스 서비스나 법적 제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문제에 열정적인 사람은 회원에게 엄격한 환경 기준을 적용하는 법적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해당 네트워크 내에서만 거래하거나 연합하여 해당 국가보다 더 강력한 규칙에 따라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최소한의 규칙이 있는 네트워크에 가입하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기본 규칙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플랫폼에 의해 촉진되고 아마도 **제 3 자 등급 및 인증**에 의해 안내될 것입니다 (제품에 대한 소비자 보고서나 보험인 연구소가 있는 것처럼 다양한 PLS 템플릿의 공정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등급 기관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PLS 는 무법 세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강압이 아닌 협력을* 통해 법이 만들어지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법치주의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은 하나가 아닌 여러 출처에서 나오는 **다원적 법치주의** 입니다. 이는 세계화된 디지털 사회의 다양성을 더 잘 수용할 수 있는 풍부한 거버넌스 태피스트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잘못 처리하면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그것을 구현하려는 사람들의 지혜, 창의성 및 선의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PLS 가 보편적일 필요는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국가 내에서도 일부 부문에서 PLS 원칙을 채택하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사회는 지역 규정에 준 PLS 방식을 채택하여 시민 참여를 늘릴 수 있습니다. 국제 기관은 PLS 와 유사한 협정을 사용하여 기업이나 NGO 가 국경을 넘어 규제 체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특정 산업 표준이 전 세계적으로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방식과 다소 유사). 이러한 부분적 적용은 주법이 느리거나 유연하지 않은 경우 안전 밸브뿐만 아니라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Personal Legal Set 프레임워크는 분산형 거버넌스가 의미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넓혀줍니다. 이는 3 부 모델 너머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 번째 부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모든 개인을 그들만의 거버넌스 부처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심오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이를 실현하려면 기술이나 법률 이론뿐만 아니라 자유와 질서가 서로를 지원하는 상호 존중과 책임의 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과제는 중요하지만 잠재적 보상도 중요합니다. 보다 자유주의적이면서도 협력적인 사회, 변화하는 세상만큼 빠르게 적응하는 법,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정의를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권한 부여입니다. 어떤 면에서 PLS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궁극적인 약속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즉,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분권화된 극단으로 끌어올려 "국민"이 단순히 유권자나 신민이 아니라 입법의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우리 각자를 포함합니다. 그 극단에 도달할 수 있거나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실제 실험과 시간만이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연구와 토론은 그러한 여정의 첫 걸음이며, **개인 수준에 법을 분산시키는 것이** 거버넌스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상상하면서 가능성과 함정을 매핑합니다.

Prompt 10: 사회적 이익과 개인의 이익의 일치

19 세기 영국, 죄수를 호주로 유배하는 과정에서 **높은 사망률**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당시 정부는 배에 태운 죄수의 수를 기준으로 선주(배 운전자)에게 보상을 지급했는데, 이는 선주가 **죄수를 살아서 도착시키는 것보다 최대한 많이 태우는 것에만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었다. 그 결과, 죄수들은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었고, 항해 중 **최대 30%가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 방식을 "**태운 수**"에서 "**살아서 도착한 수**"로 변경하자, 상황은 극적으로 개선되었다. 선주들은 이제 죄수를 최대한 건강하게 호송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사망률이 1% 이하로 급감**했다.

이 사례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한 정책 변화가 **사회 전체의 행동 패턴을 변화**시키고,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일치할 때 가장 효율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2.0 에서는 이 원리를 확장하여,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인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것**을 핵심 기제로 삼는다. 즉, **부패를 감시하는 것이 이익이 되고, 범죄자를 교화하는 것이 수익이 되며, 공공의 손실을 줄이는 것이 개인의 보상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사회적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일치하도록 설계된 인센티브 시스템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2.0 을 실현하는지**를 다룬다.

이익 중심의 사회적 재할

재할을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

한 가지 초점은 불우 계층(빈곤층 또는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이 수익성이 있도록 경제를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재할 및 재통합을 자선 또는 정부 자금 지원 사업으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가능한 사업**으로 구상합니다. 실제로 이는 개인 투자자, 회사 또는 개인이 위험에 처한 집단을 위한 교육, 직업 훈련 또는 상담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이 성공하면 수익을 기대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영향 채권**은 사적 자본이 재할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고

사회적 목표가 충족될 때 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영국의 피터버러 시범 사업에서 투자자들은 수감자 재범 감소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재범률은 8.4% 감소하여 해당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상황을 유발하는 목표에 근접했습니다. 록펠러재단.org. 이 선구적인 프로젝트는 예방적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민간 투자가 투자자에게 **재정적 수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사회적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록펠러재단.org. 이러한 모델은 "선행"을 경제적으로 매력적으로 만들어, 기업이 빈곤하거나 범죄화된 개인을 생산적이고 "문명화된" 사회 구성원으로 변화시키는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장려합니다.

선순환 설계

성공적인 재활에 대한 보상을 통해 시스템은 **선순환**을 만듭니다. 서비스 제공자와 투자자는 참여자(전과자 또는 빈곤층)가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때 재정적으로 이익을 얻습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이익은 유사한 프로그램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여 도달 범위를 확대합니다. 한편, 사회는 범죄 감소, 복지 부담 감소, 생산적인 시민 증가의 혜택을 받습니다. **경제적 인센티브**는 재활 프로그램이 일회성 시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확장되도록 보장합니다(수익성 있는 사업과 매우 유사).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피드백 루프는 사회적 재통합을 자립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삶이 변화함에 따라 결과는 다음 단계의 개입을 자금 지원하는 경제적 가치를 생성합니다. 요약하자면 **사회적 재활을 수익성 있게 만드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혁신되어** 이전에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경제로 다시 통합하는 동시에 이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수익을 제공합니다.

공공 감독 및 고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공공 피해를 폭로하는 데 대한 금전적 보상

이 모델의 또 다른 기둥은 부패, 횡령, 세금 회피, 낭비적 지출 또는 공공 이익을 해치는 기타 범죄와 같은 **공공 피해를 보고하는 데 대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여 시민에게 감시자로서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고발자 인센티브를 제도화하고

확대하여 정부와 기업의 잘못을 감시하는 것이 시민 생활의 일부가 되고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보상 가능성에 동기를 부여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의 고발자 보상법은 이미 이 접근 방식의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국세청(IRS)은 사기 또는 세금 불이행을 폭로하는 데 도움을 준 개인에게 각각 **10 억 달러** 이상의 보상을 지급했습니다. [주커맨로닷컴](#) [국세청\(IRS.GO\)](#). 이러한 프로그램은 벌금과 세금에서 그 금액의 몇 배를 회수했으며, **시민들에게 벌금이나 절감액의 일부를 지불하는 것이** 대중이 잘못을 폭로하도록 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시민 감시자 격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2.0은 내부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부정 행위를 보고하고 이를 바로잡는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을 만들 것입니다. 여기에는 뇌물 수수, 비효율적인 공공 프로젝트 또는 기업 부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는 플랫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구가 확인되면(예: 부패한 공무원이 유죄 판결을 받거나 낭비된 자금이 절약됨) 보고를 시작한 시민은 절약된 공적 자금이나 예방된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자동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감독을 설계함으로써 공공 감시는 자체적으로 감시가 가능해집니다.** 사람들은 상당한 개인적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독 활동(예: 지방 예산 감사, 공무원 조사 또는 범죄 증거 수집)에 참여하게 됩니다. 차례로 노출 및 처벌의 위험이 높아지면 행위자가 처음부터 부패나 사기에 관여하지 않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부패와 낭비는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센티브를 받은 시민 군대가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어 대중에게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억제 인센티브와 투명성과 책임에 대한 긍정적 강화 루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PLS, AI, 블록체인을 활용한 인센티브 자동화

자체 실행 인센티브 구조

이러한 보상 메커니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확장하기 위해 이 모델은 기술(특히 이 민주주의 프레임워크의 핵심인 **PLS 및 AID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체 인센티브 프로세스를 자동화합니다. 목표는 인센티브 구조를 투명하고 자체 실행 프로토콜로

인코딩하여 보상 분배에서 발생하는 마찰, 지연 및 잠재적 편견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은 여기에서 이상적인 도구로, 변경 불가능한 원장과 계약의 자동 집행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계약은 재할 프로그램에 대해 설정될 수 있으며, 특정 지표(예: 전과자가 3년 동안 고용되고 무죄 판결을 받음)가 검증되면 사전 할당된 자금이 프로그램 운영자 또는 투자자에게 보너스 지급으로 지급됩니다.

마찬가지로, 고발자를 위한 계약은 보고된 사기 사건으로 인해 합법적인 벌금이나 회수된 자산이 발생하면 해당 가치의 고정된 백분율이 자동으로 보고자에게 이체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블록체인에서 실행되므로 거래가 투명하고 변조 방지되어 **보상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보장합니다. 본질적으로 **규칙이 설정되면 시스템은 인간 관리자가 필요 없이 트리거가 충족될 때 인센티브를 "자동으로" 지급하여** 보상 프로세스에서 지연이나 부패를 제거합니다. xoxoday.com.

첨단 기술 활용

이 연구는 또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인공 지능(AI)** 과 데이터 기반 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AI는 **위험 평가 및 프로그램의 동적 조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신 러닝 모델은 참여자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재할 프로그램에서 성공하기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예측하거나 어떤 고발자 보고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지 감지하여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지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은 또한 어떤 인센티브 금액이 가장 좋은 사회적 결과를 가져오는지 조사하여 보상 수준을 최적화하여 시스템이 비용 효율적이고 영향력이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xoxoday.com. 한편,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 (PLS 시스템의 일부)는 기록 보관 및 실행을 뒷받침합니다. 이는 결과 및 지불금에 대한 공유되고 **투명한 원장**을 제공하므로 모든 이해 관계자가 보상이 공정하게 획득되었고 합의된 규칙에 따라 분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탐구 중인 주요 기술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블록체인 및 스마트 계약: 모든 작업(재할 결과, 보고된 사건 등)을 기록하는 분산 원장과 중개자 없이 사전 정의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보상 지급을 실행하는 스마트 계약을 제공합니다. xoxoday.com xoxoday.com 이를 통해 인센티브 관리에 있어 투명성, 보안성 및 일관성이 보장됩니다.

인공 지능: 데이터와 머신 러닝을 사용하여 프로그램 성과와 위험을 평가합니다. AI 는 패턴(예: 성공적인 재할이나 유효한 사기 보고서의 공통적인 특성)을 식별하고 실시간으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조정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보상의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해 청구의 신뢰성이나 영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xoxoday.com.

PLS 와 AID 시스템 통합: 자유민주주의 2.0 의 PLS (공공 원장 시스템?) 와 AID 프레임워크는 위의 기술을 거버넌스에 통합합니다. PLS 는 사회적 기여와 청구를 기록하는 기본 원장 역할을 할 수 있고, AID(아마도 자동화된 인센티브 분배 시스템)는 보상의 할당을 조율합니다. 이들은 함께 **경제적 인센티브가 시스템 아키텍처 자체에 의해 자동으로 트리거되고 전달되도록** 합니다. 이 통합은 인센티브 모델이 단순히 서류상의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플랫폼에 내장된 **보상의** 활성적이고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엔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

위의 구성 요소를 연구하고 구현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모델에서 경제적 자기 이익과 공익은 신중하게 고안된 인센티브를 통해 정렬되고, 첨단 기술은 이러한 인센티브가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기능하도록 보장합니다. **빈곤, 범죄, 부패와 같은 사회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투자자는 효과적인 사회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여 이익을 얻고, 시민은 공동 이익을 보호하여 보상을 받으며, 전체 사회는 불의와 비효율성이 감소하여 이익을 얻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접근 방식은 거버넌스가 시장 역학과 혁신(AI 및 블록체인을 통해)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는 "2.0" 버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결과는 *이상적으로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긍정적인 사회 변화가 스스로를 영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개선을 위한 길을 여는 자체 강화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Prompt 11: 위험 기반 보험 가격 책정 및 개인 법률 세트(PLS)

개인 법률 세트(PLS)는 다중 중심 법률 시스템 내에서 개인(또는 단체)이 따르기로 선택한 개별화된 법률 프레임워크 또는 규칙 세트를 나타냅니다. 보험사는 보험 수학 및 위험 모델을 활용하여 개인의 PLS 위험 프로필에 따라 보험료를 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에서 가격은 과거 데이터와 일반화 선형 모델에 입력된 정적 위험 요소(예: 연령, 위치, 운전 기록)에 의존합니다. [Insurancethoughtleadership.com](https://insurancethoughtleadership.com).

대조적으로, 동적 가격 책정 방식은 개인의 행동과 법적 선택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지속적으로 통합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PLS가 통계적으로 더 높은 손실과 관련된 활동(예: 위험한 운전이나 폭력적 자기 방어에 대한 비정상적으로 관대한 입장)을 허용하는 경우, 보험 수학 모델은 해당 개인에게 더 높은 예상 청구 비용을 할당합니다. 텔레매틱스 및 AI 기반 예측 분석과 같은 최신 기술 덕분에 이러한 개인화된 실시간 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Insurancethoughtleadership.com](https://insurancethoughtleadership.com) 예를 들어 강화 학습 모델은 가격을 순차적 의사 결정 프로세스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PLS에 따른 보험 계약자의 행동에서 새로운 행동 데이터가 제공됨에 따라 보험료를 업데이트합니다. [Insurancethoughtleadership.com](https://insurancethoughtleadership.com). 이는 보험료가 위험을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과 일치하여 보험자에게 정확한 가격 신호를 보냅니다. [esg.위튼.유펜.에두](https://www.esg.위튼.유펜.에두).

행동 경제학 관점에서 이러한 가격 신호는 개인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높은 보험료는 매우 위험하거나 특이한 법적 틀을 유지하는 데 재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개인의 PLS에 일반적인 규범을 크게 벗어난 규칙이 포함되어 있으면(따라서 갈등이나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보험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여 처벌합니다. 이는 다른 도메인에서 위험 기반 가격 책정이 위험한 행동을 억제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에서 사고가 잦거나 교통 위반을 자주 하는 운전자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 더 안전한 운전을 장려합니다. 마찬가지로 개인 법률에서 극단적으로 벗어나면(예: 결투를 허용하는 규칙 또는 매우 느슨한 계약 책임) 예상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경제 이론은 이 메커니즘을 뒷받침합니다. 사전 도덕적 위험은 사전 가격 책정을 통해 완화될 수 있으며, 더 높은 보험료는 *위험* 감수 [fdic.gov](https://www.fdic.gov). 근본적으로 일탈적인 PLS를 채택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는 대부분의 개인은 과도한 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개인

법률을 완화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적 위험 기반 가격 책정은 법적 선택과 경제적 비용 사이에 피드백 루프를 만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구는 *덜 위험하고 규범에 더 수렴하는 PLS* 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는 보험료가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행동적 인센티브와 결합된 보험 수학적 위험 평가는 개인이 개인적 법적 선택의 위험을 내면화하도록 보장합니다. PLS 가 분쟁의 확률 또는 심각성을 높이는 경우 비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개인적 규칙을 광범위하게 수용되는 규범과 일치시키려는 지속적인 경제적 압력이 발생합니다.

갈등 해결 메커니즘으로서의 보험

복수의 법적 틀이 있는 사회에서, 서로 다른 PLS 에 의해 관리되는 개인들이 상호작용할 때 갈등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보험 회사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면(예를 들어, 한 당사자의 PLS 는 소송을 허용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반면 다른 당사자는 그렇지 않다고 간주하는 경우) 각 당사자의 책임 보험은 해당 정책에 따라 손해나 법적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발동됩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상황이 장기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강력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 소송이나 중재는 더 높은 청구금 지급과 법적 비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시스템에서 책임 보험사의 역할에는 이미 방어를 통제하고 *소송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청구를 해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옹호매거진닷컴](#). 두 법률 시스템 간의 분쟁이 비용이 많이 드는 재판(또는 더 나쁜 경우 폭력으로 변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을 허용하는 대신, 보험사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합의 또는 중재를 추진할 것입니다. *합의를 통해 당사자는 예측할 수 없는 법원 결과를 피하고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옹호매거진닷컴](#).

더욱이, 다중심적 법률 환경에서 운영되는 보험사는 PLS 간 갈등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선제적 합의*를 수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 보험사가 때때로 분쟁에 대한 중재 조항을 포함하는 것처럼, PLS 맥락에서 여러 보험사는 사전에 중립적인 중재 프레임워크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A(PLS-A 포함)와 클라이언트 B(PLS-B 포함)가 충돌하는 경우, 보험 제공자는 두 프레임워크 모두에서 허용되는 사적 중재자를 임명하여 두 PLS 가 모두 용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동일한 이익 동기에 의해 추진됩니다. 보험사가 위험을 인수하면 *처음부터 청구*

가능성을 줄이고 청구가 발생할 경우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모든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법률.유텍사스.에듀.](#) 책임 보험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보험사는 청구에 반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손실을 방지하고 분쟁을 완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손실을 지불하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유텍사스.에듀.](#) 실제로 이는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충돌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하는 것(예: 다른 PLS 에 따라 누군가와 계약을 맺을 때 법적 지침 제공) 또는 갈등의 첫 징후에서 중재자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보험사는 공식적인 법적 판결에 도달하기 전에 **신속한 합의나 해결**을 시도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갈등은 청구 금액을 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 책임 보험사가 종종 법원 비용을 피하기 위해 보험자를 대신하여 제 3 자 청구를 해결하는 방식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역동성은 PLS 갈등에서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어떤 구제책이 공정한지** 결정하는 데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최종 결과는 보험사가 시스템에서 **사실상 평화 유지 및 중재 세력** 으로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청구를 최소화하려는 재정적 자기 이익은 PLS 간 의견 불일치를 효율적이고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사회적 이익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보험 메커니즘은 분산된 법적 질서에서 마찰을 줄이는 일종의 사적 분쟁 해결 인프라를 뒷받침합니다.

시스템의 법적 실체로서의 AI

시스템 프레임워크(자발적이고 다원적인 법률 시스템) 내에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도 자신의 개인 법률 세트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AI 를 PLS 의 참여자로 취급한다는 것은 AI 가 본질적으로 **법적 주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AI 는 자신의 행동을 지배할 일련의 규칙을 선택하고 인간과 마찬가지로 계약이나 상호 작용을 체결합니다. 이는 AI 법적 인격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AI 또는 자율 시스템에 법적 인격성을 확장하는** 것을 고려하는 새로운 법적 이론과 선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 년 유럽 의회는 가장 정교한 자율 로봇에 대해 **"전자 인격"**의 지위를 만들고 특정 권리와 의무(손해에 대한 책임 포함)를 부여하는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ko.위키피디아.org](http://ko.wikipedia.org). 그 이유는 AI 가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고 해를 끼칠 수 있다면 법인과 유사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인(비인간적 실체)이 법적 성격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고, 재산을 소유하고,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의 맥락에서 PLS 를 갖춘 AI 는 계약 및 법적 제도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자산을 소유하고, 선택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을 구매할 수 있으며, PLS 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개념은 AI 를 전지전능한 심판자라기보다는 인간 법적 행위자와 *동등한 위치에* 놓입니다. AI 의 PLS 는 AI 가 따르기로 약속한 코드화된 행동 규칙 또는 윤리 지침 세트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AI 는 아시모프 스타일의 법률이나 인간 대응자에게 허용되는 프레임워크를 채택할 수 있음). 비인간이 법적 지위를 갖는 비유가 현실 세계에 이미 있습니다. **법인과 조직은 법적으로 "법인"이며**, 일부 관할권에서는 강이나 생태계조차도 법적 인격을 부여받았습니다. AI 의 법적 인격은 마찬가지로 AI 가 자치적 개체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계약 및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보험 및 법률 시스템은 선택한 법률에 따라 구속되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AI 를 취급합니다. 이론적 선례 중 하나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작동하는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개념입니다. 특정 관할권(예: 미국 와이오밍)에서는 DAO 를 LLC 와 유사한 법적 실체로 인정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알고리즘 실체에 일종의 법적 지위가 부여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엘레븐저널닷컴](#). AI 가 DAO 를 운영하거나 그 자체가 DAO 로 구조화되어 있는 경우, 효과적으로 운영 규칙을 "소유"하고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 를 자치하는 법적 참여자로 인정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법학자들은 AI 를 기업과 동일시하는 데 잠재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업의 법적 인격은 궁극적으로 인간 소유자나 이해 관계자에게 귀속되는 반면, 진정한 AI 사람은 직접적인 인간 주체 없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프론티어신.org](#).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내에서 AI 에 PLS 를 부여한다는 것은 AI 가 일련의 규칙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I 는 특정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을 준수하도록 프로그래밍될 수 있습니다. 해를 입힌 경우 해당 법에 따라 손해를 "보상"할 계약상 의무가 있습니다(아마도 보험사를 통해). 이는 EU 제안이 전자 인물에 대해 제안한 것과 같습니다. [ko.위키피디아.org](#). 우리는 이미 이 방향으로 아기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유명하게도, 소피아라는 이름의 AI 로봇은 2017 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홍보 실험으로 **시민권을 부여받았습니다**. [프론티어신.org](#).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인간에게만 맡겨진 역할에서 AI 가 점점 더 수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약하자면, 시스템 내에서 AI 는 판사로서 법 위에 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AI 는 비슷한 법적, 재정적 의무(예: 보험 가입, 계약 이행, 분쟁 해결)를 지닌 법(자체적으로 선택한 법) *에 따라*

인간과 나란히 서 있습니다. "전자적 인물"에 대한 법적 사고의 진화는 AI가 다원적 법적 시장에서 완전한 참여자로 통합될 수 있는 길을 시사합니다.

사례 연구 및 실제 세계 응용 프로그램

PLS와 시스템의 개념이 대체로 이론적이기는 하지만, 분산형 보험 모델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금융 메커니즘에 이르기까지 이 퍼즐의 조각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실제 개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관련 예와 사례 연구입니다.

분산형 보험 프로토콜(Nexus Mutual) – *Nexus Mutual*은 스마트 계약 실패와 같은 위험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Ethereum 기반 상호보험입니다. DAO(분산형 자율 조직)로 운영되며, 회원들이 자금을 모아 청구에 대해 투표합니다. 주목할 점은 **청구가 중앙 조정자가 아닌 회원들에 의해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회원이 청구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투표할 수 있으며, 정직한 투표는 보상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반면 사기성 투표는 지분 토큰 손실로 처벌을 받습니다. [넥서스뮤추얼.io](https://nexusmutual.io) [넥서스뮤추얼.io](https://nexusmutual.io). 이 모델은 분산된 위험 분담 및 갈등 해결을 보여줍니다. 뮤추얼 회원은 집단적으로 지급을 결정하고 재정적으로 인센티브가 부여된 투표 시스템을 통해 분쟁(예: 주어진 해킹 이벤트가 적용되었는지 여부)을 효과적으로 중재합니다. Nexus Mutual은 이 커뮤니티 중심 프로세스를 통해 지금까지 1,800만 달러 이상의 청구를 성공적으로 지급했습니다. [넥서스뮤추얼.io](https://nexusmutual.io) [넥서스뮤추얼.io](https://nexusmutual.io) 전통적인 회사 없이 코드로 정의된 계약 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보험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스마트 계약을 통한 매개변수 보험(Lemonade Crypto Climate Coalition) – 매개변수 보험은 조정자 판단이 아닌 **객관적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사전 정의된 트리거 이벤트에 따라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실제 적용 사례는 아프리카의 자급 농가에 **비용 대비 작물 보험**을 제공하는 **Lemonade Foundation의 Crypto Climate Coalition**입니다. 이 정책은 날씨 데이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날씨 위험을 정량화하고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여 강우 데이터를 기반으로 청구를 자동화합니다." boltinsight.com. 실제로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오라클이 가뭄 조건(특정 강우량 임계값 미만)을 감지하면 스마트 계약이 농부에게 청구할 필요 없이 고정 금액을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까지 케냐의 약 7,000명의 농부가 이 시스템을 통해 보장을 받고 작물 손실에 대한 지급을 받았습니다. boltinsight.com. 이 사례는 금융 위험 구조(보험)가 어떻게 재난 영향을 직접 중재하고

분쟁을 피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합의된 조건이 충족될 때 지급이 알고리즘화되기 때문에 논쟁이나 법적 갈등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매개변수 설계는 소송이나 청구 마찰을 크게 줄여 금융 계약 자체에 갈등 해결을 포함시키는 아이디어와 일치합니다.

보험 중심 갈등 해결(Kleros 분산 법원) - Kleros는 그 자체로 보험 플랫폼이 아니라 게임 이론과 재정적 지분을 사용하여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는 분산 **분쟁 해결 프로토콜**입니다. Kleros 에서 분쟁 당사자(종종 전자 상거래 또는 블록체인 거래)는 증거를 제출하고 무작위로 선정된 사용자 배심원이 사건을 결정합니다. 문제는 배심원이 참여할 권리를 위해 프로토콜의 암호화폐 토큰(PNK)을 지분으로 내야 하고, 배심원은 **다수** 판결 것입니다. [중재블로그.kluwerarbitration.com](https://www.kluwerarbitration.com). 배심원이 다른 대부분의 배심원이 투표한 것(즉, 아마도 "올바른" 결정)에 반대표를 던지면, 그들은 베푼 토큰을 잃게 됩니다. 다수결로 투표하면, 패배자의 베푼에서 보상을 얻게 됩니다.

[중재블로그.kluwarbitration.com](http://www.kluwarbitration.com). 이는 정직하고 합리적으로 투표하려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만들어냅니다(셀링 포인트 역학). 왜냐하면 트롤링이나 부주의하게 투표하려는 시도는 재정적으로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클레로스는 *재정적 위험에 의해 중재되는 갈등 해결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돈을 잃을 위험은 배심원을 정직하게 유지하고, 집단적 지분 시스템은 실제로 견고한 것으로 입증된 해결책을 도출합니다. 보험 컨소시엄이 PLS 분쟁을 중재하는 데 유사한 접근 방식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중재자 패널은 양측의 법적 규범에 공정한 합의를 찾기 위해 경제적으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매개변수 플랫폼(Etherisc) – Etherisc 는 매개변수 보험 상품을 생성하기 위한 개방형 플랫폼을 제공하는 분산형 보험 프로토콜입니다. [빌트인닷컴](#). 예를 들어, Etherisc 는 항공편이 지연/취소될 경우 자동으로 지급되는 항공편 지연 보험(공개 항공편 데이터를 트리거로 사용)과 날씨 피드를 사용하는 작물 보험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청구 처리 및 지급을 자동화함으로써 Etherisc 의 템플릿은 보험이 투명하고 저렴한** 방식으로 청구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빌트인닷컴](#). 이는 조건이 모호하지 않고 스마트 계약을 통해 실행되기 때문에 분쟁 가능성을 줄입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Etherisc 는 **분산형 위험 풀과 사전 정의된 트리거가** 기존 보험을 대체하거나 증강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금융 중개자가 코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조건이 충족되면(예: Xmm 미만의 강수량) 농부가 돈을 갚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은 계약을 통해 즉시 해결됩니다. 분산형 금융에서 이러한

프로토콜의 성장은 보험 및 법적 청구 처리의 많은 측면을 인코딩하여 주관적인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경제 기관이 중앙 권한 없이 합의된 규칙에 따라 청구를 중재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시스템 아이디어에 대한 기술적 개념 증명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각 사례는 PLS 기반 사회의 구성 요소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Nexus Mutual과 Kleros는 **피어 투 피어 거버넌스와 경제적 인센티브**가 청구 및 분쟁을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주며, 이는 보험 회사 또는 풀이 비용 최소화에 의해 주도되는 중립적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아이디어와 일치합니다. Lemonade의 이니셔티브와 Etherisc는 **매개변수 설계**의 힘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보험 지급은 자동으로 트리거되는 계약적 갈등 해결의 한 형태이므로 논쟁을 배제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보험 및 분쟁 해결을 위한 분산되고 시장 중심적인 메커니즘이 단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테스트되고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정 도메인에서이기는 하지만요. 이러한 사례는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의 실행 가능성에 신빙성을 부여하는데, 여기서 개인화된 법적 규범은 균형을 이루고 재무 및 보험 수학 프레임워크에 의해 상호 운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격 책정을 통한 시장 주도적 도덕성

위험 기반 개인화 가격 책정의 흥미로운 의미 중 하나는 시장 주도적 도덕성의 형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에서는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을 지시하는 단일 권위가 없습니다. 대신 대다수의 감정이 보험 시장을 통해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정 행동이나 규칙을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여전히 그 길을 선택하는 개인은 엄청난 보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실제로 군중의 집단적 도덕성과 위험 판단은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이는 오늘날 미묘한 방식으로 이미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에서 크게 못마땅해하는 활동(무모 운전, 약물 남용, 사기)은 더 높은 위험과 관련이 있으며 보험사는 이러한 개인에게 엄청난 요금을 부과하거나 보장을 거부하여 사실상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PLS 맥락에서 커뮤니티가 극악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예: 결투 또는 일종의 노예 제도 실행)을 허용하는 개인법을 상상해 보세요. 해당 개인의 사법에서 합법적이더라도 **커뮤니티 전체는 이를 보조하지 않습니다.** 풀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보험사는 그러한 사람을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거나 과도한 위험에 상응하는 엄청난 보험료를 책정할 것입니다. 사실상 어떤 보험사도 해당 활동을 보장하려 하지 않는다면, 특정 현대 사례에서 일어났듯이 "실질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예: 보험사가 집단적으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여 중국 외부의 새로운 석탄 발전 프로젝트가 사실상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됨) [로이터닷컴](#). 이런 방식으로, 시장의 위험 가격 책정은 사회적 수용 가능성에 대한 판단으로 두 배가 됩니다. 위험하거나 부도덕하다고 널리 여겨지는 행동은 재정적 비용이 너무 높아서 강력히 권장되지 않거나 비실용적으로 여겨집니다.

보험과 외부 효과에 대한 경제 이론은 이러한 새로운 도덕적 규제를 뒷받침합니다. 위험 기반 가격 책정을 통해 한 사람의 행동의 부정적 외부 효과는 보험 비용으로 내재화됩니다.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예상 피해를 입히는 PLS 를 고집하는 경우, 그 개인은 추가 위험에 대해 미리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피구세 와 유사하지만 보험사가 개인적으로 관리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칙적인 행동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만이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행동을 조정할 것입니다. 대부분은 특정 위험한 행동을 높은 요금을 보장하는 것으로 집단적으로 취급함으로써 본질적으로 규범을 설정합니다. 학자들은 보험 가격 책정이 실제로 행동을 형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높은 보험료는 "**위험 감수를 처벌**" 하여 도덕적 위험을 억제하고 회사나 개인이 더 안전해지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fdic.gov](#). 우리의 시나리오에서 "**더 안전한**"은 또한 다른 사람들의 법적 기대에 더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현상은 시장 주도적 규범 집행 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기준을 집행하는 데 경찰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험 시장은 이러한 기준이 보험 수학적 위험 평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를 수행합니다.

피드백 루프도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극단적인 PLS 편차를 피함에 따라 전체 문화의 법적 규범이 수렴되고 진정으로 기이한 PLS 선택은 통계적으로 더욱 위험해집니다(실천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이상치입니다). 이는 주변적 법률 세트에 대한 높은 보험료를 더욱 정당화하여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표준을 준수해야 하는 압력을 강화합니다. 어떤 면에서 시스템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은 위험 평가와 정책 선택으로 "투표"하여 **분산된 윤리적 감독**을 만듭니다. 행동이나 규칙이 보편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것으로 여겨지면 저렴한 보험은 이를 보장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해당 규칙이 실제 사용에서 배제됩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같은 법과 경제학의 고전적 사상가는 이를 자발적 질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시스템은 상향식 통제 없이 사회적 협력을 촉진하는 규칙(이 경우 가격 책정 규칙)을 유기적으로 생성합니다.

물론 복잡성과 잠재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시장 주도적 도덕성이 지나치게 징벌적이거나 개인법의 합법적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수자 커뮤니티 간의 상호 지원 또는 위험 공유가 다수의 가격 책정력을 상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다수의 폭정을 방지하기 위해). 그러나 전반적으로 위험 기반 보험으로 뒷받침되는 PLS 시스템은 사회적 거버넌스를 위해 *"군중의 지혜"*를 활용할 것입니다. 집단적 위험 판단(사회의 도덕성과 안전 가치를 내재화)은 무엇을 하기 쉽고 어려운지 결정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개인법을 설계할 자유가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잘 작동하는 시장에서 이는 일종의 도덕적 균형으로 이어집니다. 극단적인 해악은 시장에서 가격이 책정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유익하거나 양성적인 행동은 낮은 보험료로 보상받습니다. 요약하자면, 보험 가격은 사회적 규제의 도구가 되어 개인의 인센티브를 공동체 윤리와 일치시킵니다. 다수는 강제로 가치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자신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보증하지 않음으로써 *악덕을 비싸게 만들고 미덕을 싸게 만듭니다*.

결론

개인화된 법률 시스템과 위험 기반 보험 메커니즘의 융합은 자체 규제되고 분산된 법적 질서의 그림을 그립니다. 동적 보험 가격은 개인의 법적 선택에 대한 실시간 척도 및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높은 위험을 초래하는 규칙을 재정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익 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보험 회사는 평화 유지군 및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여 손실을 피하기 위해 서로 다른 법률 시스템 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합니다. AI 에이전트와 같은 비인간 참여자조차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필요한 재정적 책임(보험)을 지는 경우 자체 PLS가 있는 법인으로 이 프레임워크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매개변수 보험 스마트 계약에서 토큰화된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기술과 DeFi(분산 금융) 애플리케이션은 이러한 아이디어 중 다수가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시장 주도적 도덕성의 개념은 사회적 규범이

칙령이 아니라 개별 위험 평가와 경제적 결정의 집계 효과에 의해 시행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본질적으로 시스템 모델은 **보험 수학 알고리즘, 경제적 인센티브, 자발적 제도를** 활용하여 법적 다원주의의 풍경 속에서 질서와 공정성을 유지합니다. 이는 법, 경제, 기술의 학제 간 종합을 나타냅니다. 보험 수학은 개인 법률의 비용을 정량화하고, 행동 경제학은 이러한 비용이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합니다. 위험 공유 제도는 갈등을 완화하고 이익을 조정하여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여전히 과제(예: 형평성 보장 및 이 시스템의 남용 방지)가 남아 있지만, 이 연구는 자유 사회가 법에 대한 독점 없이 스스로를 조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유망한 방향을 보여줍니다. 개인은 도덕적, 법적 선택에 대한 주권을 유지하지만, 보험 시장의 균형 잡힌 힘을 통해 시스템 전체가 안정을 유지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실제 세계의 유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시스템의 많은 구성 요소는 이미 초기 형태로 존재합니다. 향후 실증 연구에서는 PLS 기반 커뮤니티의 시뮬레이션이나 소규모 사회(또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시범 프로그램을 탐색하여 이러한 개념을 추가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다면, 위험 기반의 개인화된 보험 가격 책정과 개인 법률 세트가 **시장 매개 법률**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즉, 위험과 보상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인도되는, 수많은 개인의 거래와 계약에서 정의와 질서가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참고문헌:

- Tom Baker & Kyle D. Logue, *보험과 법률* : 손실 방지에 있어서 보험사의 인센티브에 대한 논의 [법률.유택사스.에듀](#) [법률.유택사스.에듀](#).
- 유럽 의회, 로봇공학에 대한 민법 규칙에 대한 보고서: AI 전자적 인격성에 대한 제안 [ko.위키피디아.org](#).
- *Nexus Mutual 문서*: 분산형 보험 및 커뮤니티 청구 투표의 예 [넥서스뮤추얼.io](#) [넥서스뮤추얼.io](#).
- 레모네이드 재단, *크립토 기후 연합*: 농부를 위한 블록체인 매개변수 보험 [빌트인닷컴](#).
- Bruce Greig, "중재자는 Kleros 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Kleros 배심원 지분 투자 및 게임 이론 설명자 [중재블로그.kluwarbitration.com](#).
- Omri Ben-Shahar & Kyle D. Logue, *아웃소싱 규제: 보험이 도덕적 위험을 줄이는 방법*. 규제 도구로서의 위험 기반 보험료 [fdic.gov](#).
- 로이터, "보험사, 석탄 프로젝트 보장 거부..." (2022): 시장 합의로 인해 산업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 사례 [로이터닷컴](#).

Prompt 12: 명예와 유산을 위한 자선 활동

역사를 통틀어 많은 부유한 개인들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명예, 유산 또는 영향력** 과 같은 무형의 보상을 얻기 위해 재산의 상당 부분을 기부했습니다. **도금 시대의 거물에서 현대 기술 억만장자에 이르기까지 자선 활동은 종종 긍정적으로 기억되거나** 사회에서 명예를 얻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iu.pressbooks.pub. 이러한 기부자들은 재정적 수익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이 공공 인프라, 교육, 건강 및 사회적 목적에 투자하며, 자신의 부를 **공익과 개인적 유산**을 위한 도구로 여깁니다. 이 분석은 존 D. 록펠러, 앤드류 카네기,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등을 포함한 주목할 만한 사례 연구를 조사하고 그들의 기부가 부의 분배와 권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봅니다. 또한 제안된 "자유 민주주의 2.0" 거버넌스 모델에서처럼 인정에 대한 욕구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이나 역사적 메커니즘이 그러한 명예 중심의 관대함을 장려했는지 고려합니다.

사례 연구: 명예와 유산을 위해 기부하는 부유한 개인들

많은 저명한 자선가들은 직접적인 재정적 이득보다는 주로 **무형의 혜택** (명성, 명예, 영속적인 이름)을 위해 막대한 부를 기부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몇 가지 사례 연구입니다.

존 D. 록펠러(1839–1937) – 석유 재벌이자 미국 최초의 억만장자였던 록펠러는 평생 동안 약 **5억 4천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자선 라운드테이블.org](http://자선라운드테이블.org), 대학(시카고 대학 등)과 의학 연구 기관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는 말년에 무자비한 재벌이라기보다는 자선적인 공적 후원자로 더 잘 알려졌으며, **"수백만 달러를 과학, 교육, 자선 사업에 바쳤습니다"** 빌모이어즈닷컴. 록펠러 재단 기부에서 흑인 학교와 공중 보건 지원에 이르기까지 그의 자선 활동은 사회적 필요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대중 이미지를 크게 향상시키고 자선가 **로서의 그의 유산을 확보했습니다**. 빌모이어즈닷컴.

앤드류 카네기(1835~1919) - 강철 제국을 건설한 후 카네기는 은퇴하고 자신의 재산(약 3억 5천만 달러, 오늘날 100억 달러 이상)의 **거의 90%를 자선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ko.위키피디아.org 그는 **"이렇게 부자로 죽는 사람은 불명예스럽게 죽는다"** 고 유명하게 주장했습니다. [디지털 역사.uh.edu](http://디지털역사.uh.edu), 부유층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과도한 부를 재분배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카네기의 기부금은 전 세계적으로 **2,500 개가 넘는 공공 도서관** 과 대학, 문화 기관(예: 카네기 홀), 과학, 교육, 세계 평화를 위한 신탁을 설립했습니다. [도서관.컬럼비아.에듀 디지털 역사.uh.edu](#). 그의 자선 활동은 사회적 명예와 유산에 대한 열망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그는 사회를 개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실제로 카네기의 이름은 그가 세운 많은 기관에서 살아 있으며, 그는 다른 황금기 백만장자들 사이에서 "자선 활동의 물결"을 불러일으킨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ko.위키피디아.org](#).

빌 게이츠(1955 년생) -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립자는 2000 년대에 기술 CEO 에서 풀타임 자선가로 전향했습니다. 게이츠는 현재 세계 최대의 사립 자선 단체인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ko.위키피디아.org](#), 그리고 수천억 달러를 기부하여 세계적 건강 위기에 맞서고 교육을 개선했습니다. 특히, 게이츠 재단은 아프리카에서 야생 소아마비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백신 접종 캠페인을 주도했습니다.

[ko.위키피디아.org](#). 2010 년 게이츠(버핏과 함께)는 또한 *Giving Pledge* 를 시작했으며, 억만장자들에게 재산의 절반 이상을 자선 단체에 기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o.위키피디아.org](#). 게이츠의 자선 활동은 그에게 인도주의자로서의 엄청난 인정을 안겨주었고, 1990 년대의 경쟁적인 사업가에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문제 해결사로 그의 대중적 이미지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삶을 개선하는 데 동기를 부여받았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선가 중 한 명이라는 명예는 그의 기부에서 비롯된 지속적인 유산입니다.

워렌 버핏(1930 년생) -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투자자 중 한 명인 버핏 역시 자신의 재산의 **99%**를 자선 활동에 기부했으며,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자신의 행복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givingpledge.org](#). 버핏은 개인 기념물을 만드는 대신, 수십억 달러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운영하는 재단(주로 게이츠 재단)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 겸손함은 그의 명성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버핏은 그의 관대함과 지혜로 널리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이 가족의 계좌에 있는 것보다 고통을 덜어주는 데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합니다. [givingpledge.org](#). 그의 헌신은 대체로 가치 중심적이지만, 그것은 또한 부의 **자선적인 관리자로서의 그의 유산을** 확보합니다. Giving Pledge 의 공동 창립자로서, 버핏은 억만장자들이 대규모로 *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알프레드 노벨(1833-1896) – 유산을 위해 기부하는 역사적 사례인 노벨은 다이너마이트와 무기 제조를 발명하여 부를 축적한 화학자였습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유산** (프랑스 신문이 실수로 노벨의 부고 기사를 실어 폭발물로 이익을 취한 *"죽음의 상인"* 이라고 부름)에 직면한 그는 자신이 기억되는 방식을 바꾸도록 자극을 받았습니다. [역사닷컴](#). 노벨은 유언장에서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노벨상 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노벨상은 과학, 문학, 평화 분야에서 인류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을 기리는 상입니다. [역사닷컴](#) [역사닷컴](#). *"그의 유산을 보장하기 위해"* 수행된 이 특별한 행위 [역사닷컴](#), 훼손된 명예를 **영원한 명예**로 바꾸었습니다. 오늘날 노벨상은 노벨이 인류에게 준 선물로 여겨지며, 긍정적인 유산에 대한 열망이 자선적 기부에 얼마나 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다른 주목할 만한 사례 - 다른 많은 부유한 개인들이 명예나 기념을 목표로 공공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실 로즈는 아프리카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얻은 재산을 사용하여 1902년에 로즈 장학금을 만들어 "자신을 국가에 유용하게 만들고"** 옥스포드에 이름을 딴 유산을 남겼습니다. 최초의 미국 자선가 중 한 명인 **조지 피바디** (1795-1869)는 빈곤층을 위한 교육과 주택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자선 활동에 대해 국제적으로 영예를 얻었고(심지어 의회 금메달을 수상하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됨) 20세기 후반에 기업가 **테드 터너**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계 자선 활동의 리더로 여겨지기 위해 부분적으로 유엔에 10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마이클 블룸버그** (공중 보건과 교육에 수십억 달러를 기부했으며, 존스홉킨스 대학의 공중 보건 대학원은 그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바꿈)와 같은 기부자들은 **명명권과 명예**가 여전히 강력한 인센티브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례는 모두 공통적인 패턴을 반영합니다. *지속적인 존경, 영향력 또는 기억을 얻기 위해 사적 부를 공익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의 순환과 권력 분산에 미치는 영향

부유층의 대규모 자선 활동은 부가 사회를 흐르는 방식과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례 연구에서 몇 가지 영향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재분배와 공익: 록펠러와 카네기 같은 거물들이 재산을 자선 재단, 대학, 도서관, 건강 이니셔티브로 돌렸을 때, 그들은 사실상 엄청난 양의 부를 사적 금고에서 공공 서비스로

웁졌습니다. 예를 들어, 카네기가 죽을 무렵, 그는 도서관에서 세계 평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을 위해 *"재산의 95% 이상을 처분" 했습니다.* [디지털 역사.uh.edu](https://digitalhistory.uh.edu). 이는 한때 한 개인의 손에 집중되었던 자원을 수천 개의 지역 사회(도서관, 학교 등의 형태)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제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록펠러의 5억 4천만 달러 기부금은 사회에 계속 이로운 의학 및 교육 분야의 지속적인 기관을 설립했습니다. [블로MBER즈닷컴](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9-09-11/rochester-foundation-donates-100-million-to-advance-research-in-ai) [자선 라운드테이블.org](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9-09-11/rochester-foundation-donates-100-million-to-advance-research-in-ai). 현대에 빌 게이츠가 세계적 건강에 투자한 수십억 달러는 개발도상국의 백신, 의학 연구, 시스템 개선에 사용되었으며, 투자 계좌에 남아 있지 않고 빈곤 지역의 **경제와 건강 인프라로 직접 부를 순환시켰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돈은 축적에서 꺼내져 교사와 의사의 급여, 시설 건설, 서적, 연구 보조금 등에 사용되어 더 광범위한 경제로 다시 흘러들어갑니다.

경제력 분산: 이 자선가들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나누어줌으로써 *자신의 경제력도 분산시켰습니다.* 그들은 재산에 대한 왕조적 통제를 영속시키기보다는 그것을 분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카네기는 대부분의 돈을 상속인에게 남기지 않았습니다(그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는 독립적인 신탁과 공공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유한 엘리트가 그 자원을 통제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지은 도서관은 지역 사회가 소유하여 **대중에게 지식을 제공했습니다.** 록펠러가 록펠러 재단과 같은 기관을 만든 것은 막대한 금액에 대한 결정이 결국 록펠러 가족만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사명을 수행하는 이사회와 전문가에 의해 내려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엄청난 부에 따르는 일부 권한은 공공 영역의 *새로운 관리자*에게 넘겨졌습니다. **기회와 자원이 더 광범위하게 분배되어** 경쟁 환경을 약간이나마 평준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무료 카네기 도서관을 이용하면 가난한 아이도 스스로 교육하고 이전에는 부유한 사람만이 접할 수 있었던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권한 부여를 통한 미묘한 권력 이동입니다. [디지털 역사.uh.edu](https://digitalhistory.uh.edu).

영향력 있는 기관의 설립: 흥미로운 역설은 개인의 부가 분산된 반면, *자선 기관* 자체가 새로운 권력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비록 공공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러한 부유한 기부자들이 기부한 재단과 대학은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들은 연구 일정, 사회 정책, 교육 기회를 형성합니다. 20세기 초, **재단 자선 활동의 이 "영웅적 시기"**는 현대 사회의 핵심 기둥을 탄생시켰습니다. *"연구 대학, 전문 의대, 공공 도서관 - [모두] 카네기와 록펠러와 같은 기부자들의 위대한 재단 덕분에 존재했습니다."*

시티저널.org. 이러한 기관은 지식과 서비스를 민주화했지만, 또한 공적 목적에 전념하는 일종의 사적 권력을 나타냅니다. 중요한 점은, 이들은 일반적으로 단일 거물이 아니라 수탁자와 여론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의 보다 분산된 거버넌스로의 전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평가들은 대형 자선 단체가 창립자의 비전에 따라 정책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비선출 권력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고전적 자선 기부의 순 효과는 개인의 부를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추세입니다.

부의 불평등에 대한 비판 완화: 자선 활동을 통한 부의 순환은 또한 사회적 정치적 효과를 낳습니다. 도금 시대에 엄청난 불평등은 "강도 남작"에 대한 대중의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부유한 산업가들이 자선 활동에 눈을 돌리면서 재산이 *사회에 재투자*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계급적 적대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록펠러와 카네기의 자선 활동 평판은 어느 정도 그들의 사업 관행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의 반발을 상쇄했습니다. 빌모이어즈닷컴 빌모이어즈닷컴. 이는 극단적인 부가 결국 대중에게로 향할 것이라는 기대를 설정했는데, 이 아이디어는 나중에 재산세와 Giving Pledge 운동에 의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선 활동은 **도덕적, 사회적 압력 해소**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더 과격한 강제 재분배를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부를 재분배합니다. 장기적으로 이는 모든 부를 사유 재산에 남겨 두는 것보다 (다양한 자선 단체, 대학, NGO 에 걸쳐) 부를 보다 분산적으로 보유하는 데 기여합니다.

요약하자면, 대규모 자선 활동은 **부**를 더 광범위한 사회로 순환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단일 혈통에 자원과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공 도서관을 짓거나 백신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 1 달러는 억만장자의 포트폴리오에서 복리로 계산되지 않는 1 달러입니다. 이는 정부의 재분배와 같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사적 부를 공공재로 전환*한 평행 메커니즘입니다. 과제는 이 과정이 단순히 기부자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진정으로 분산시키고 많은 사람에게 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적 재단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사회가 씨름해 온 균형입니다.

명예를 동기로 삼다: 명예를 위해 부를 쓰려는 의지

개인이 정말로 인정이나 유산을 위해 힘들게 번 재산을 내놓으려 할까요? 역사와 현대적 추세는 적절한 조건 하에서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무형의 보상을 위해 엄청난 돈을 쓸 것이라고 시사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인센티브에 의해 깊이 움직이며, 개인적으로 필요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존경, 존중, 영구적인 유산에 대한 욕구가 더 많은 부에 대한 욕구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세요.

- **명예 중심 기부의 역사적 선례:** 명예를 위해 기부한다는 생각은 오래되었습니다. 사실, **명예를 향한 길로서의 자선 활동**은 수천 년 iu.pressbooks.pub. 다양한 문화권에서 부자들은 부를 공유함으로써 명예를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에서는 부유한 시민들이 대중의 명예를 위해 공공 사업과 축제(*전례*라고 불리는 관행)에 자금을 지원해야 했습니다. 한 역사가가 지적했듯이 *전례 집전자의 동기는 종종 "자비, 공공 의무감, 그리고 중요하게도 명예와 위신의 보상"* [에온닷컴](#). 삼단노선(전함)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연극 경연 대회를 후원한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는 것을** 보았고, 때로는 관대한 마음으로 "영웅적 지위"를 얻기도 했습니다. [에온닷컴](#). 이는 **사회적 존중이 강력한 통화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유한 아테네인들은 영광과 대중의 감사를 소중히 여겨 무거운 세금을 자발적으로 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에 엘리트들은 *euergetism* (자선)에 참여하여 시민들 사이에서 명성과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목욕탕, 사원 또는 게임을 도시에 기부했습니다. 이러한 예는 문화가 공공 후원자를 소중히 여길 때 부유한 개인이 실제로 가장 관대한 사람 또는 시민 의식이 강한 사람으로 여겨지기 위해 경쟁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 **현대적 증거 - 유산으로서의 자선 활동:** 오늘날로 넘어가면 의미 있는 유산에 대한 비슷한 갈증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억만장자들은 사업적 성공을 거둔 후 자선 활동을 인생의 *"다음 장"*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종종 **보답하고 세상을 개선한 공로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유명 자선 사업에 수반되는 대중의 칭찬과 찬사는 중요한 동기 부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나 프로그램에 자신의 이름이 있는 것은** 일반적인 인센티브입니다. 기부자는 명명권을 대가로 대학, 병원 또는 박물관에 많은 금액을 기부하여 효과적으로 지속적인 인정을 사들입니다. 많은 캠퍼스 건물, 콘서트 홀, 심지어 공원에

후원자의 이름이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선가가 기부를 통해 *정치적 또는 사회적 영향력*을 얻기도 합니다. 공공의 대의에 대한 입증된 헌신으로 인해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거나 명망 있는 위원회와 협의회에 가입하도록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주된 목표는 이타주의적일 수 있지만, 자선 활동에 수반되는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은 의심할 여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의 일부입니다. 미디어와 사회에서 "자선가 억만장자"에게 주어지는 찬사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들은 종종 순위가 매겨지고 칭찬을 받으며, 이는 *경쟁적인 명예* 인센티브를 만들어냅니다.

- **심리적, 도덕적 인센티브:** 공공연한 명예를 넘어 부유한 기부자는 종종 선행을 하는 무형의 개인적 만족을 추구합니다. 이는 냉소적이지 않은 관점입니다. 재정적 성공을 이룬 많은 개인은 소득보다는 영향력으로 삶의 가치를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개인에게 다른 사람을 돕는 *감정적 보상* 과 도덕적 자부심은 투자 수익의 한 형태가 됩니다. 워런 버핏은 수십억 달러를 간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농담조로 언급하면서, 결코 쓸 수 없는 돈을 간직하는 것은 "노후를 위해 섹스를 저축하는 것" 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그는 지금 그것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기쁨을 찾습니다. 버핏은 기부 서약서에서 자신의 재산의 1% 이상을 자신에게 사용한다면 "우리의 행복이나 웰빙은 향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나머지 99%는 다른 사람의 건강과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givingpledge.org. 그 진술은 이타주의와 변화를 만드는 자부심을 모두 반영합니다. 마찬가지로 빌 게이츠는 종종 자신이 구하거나 개선한 생명으로 성공을 측정한다고 언급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인정이 항상 대중의 명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자존감이나 자신의 가치에 부응하는 삶의 성취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인정(상, 긍정적인 미디어, 역사 속의 확실한 명성)은 종종 이러한 동기와 함께합니다.
- **의지의 증거:** 오늘날 자선 활동의 엄청난 규모는 의지를 강조합니다. *Giving Pledge* 에는 현재 수백 명의 억만장자가 최소한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o.위키피디아.org.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평생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더 큰 선을 위해 *절반 이상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러한 약속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매력의 일부가 자선가들의 존경받는 "클럽"에 가입하고 관대함의 리더로 여겨지는 것을 암시합니다. 서약에 서명하지

많은 사람들조차도 사회적 기대로 인해 상당한 기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산업(예: 기술)에서는 큰 성공은 결국 큰 자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새로운 규범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가를 위한 유산 구축의 일부입니다. 자선 활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진정한 공감에서 자존감 향상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동기를 발견하지만, 거의 모든 주요 기부자는 선의의 힘으로 기억된다는 생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iu.pressbooks.pub.

요약하자면, 많은 부유한 개인들은 무형의 보상만을 위해, 특히 자신의 물질적 필요가 충족될 때, 공적 목적에 자신의 부를 쓰려고 합니다. 그들은 명예(동료와 대중 사이의 명성), 유산(역사 속의 영속적인 이름), 심지어 영향력(사회를 형성하는 소프트 파워)에 대한 약속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추진력은 여러 시대와 문화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모든 시스템의 핵심은 기부자가 실제로 그들이 추구하는 존경과 유산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익에 대한 지출이 부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의 일 중 하나가 되도록 사회를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자선 활동이 명성과 같을 때, 부유한 사람들은 참여할 강한 인센티브를 갖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2.0 에서 명예 중심의 자선 활동 활용

명예와 유산이 자발적인 재산 기부를 동기부여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논리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공익을 위해 이러한 인간의 욕구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자유 민주주의 2.0"이라는 개념은 개인이 공동체의 필요에 자유롭게 기여하고(의무적인 세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명예나 영향력과 같은 비금전적 혜택으로 보상받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역사는 이것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을 제공하며, 몇 가지 현대 정책은 이미 명예 중심의 기부를 장려합니다.

고대 템플릿 - 예배와 시민적 의무: 논의한 대로, 고대 아테네의 예배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엘리트의 허영심과 의무를 공공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공식화된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부유한 시민들에게 군함, 드라마 축제, 인프라와 같은 중요한 공공 비용을 지원하도록 할당했고, 그 대가로 후원자는 축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공공 서비스에서 성공하면 정치적 직책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세금"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테네에서 *"법에 의해 시행되지 않고... 전통과 대중 감정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부자들은 종종 자존심 때문에 필요 이상을 제공했습니다. [에온닷컴](#). 현대적 거버넌스 모델은 이것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병원이나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자금 지원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후원자로서 공개적으로 영예를 얻는 자발적인 공공 기여*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후원자는 재정적 보상 대신 직함, 상 또는 공공 기념물(예: 프로젝트에 이름, 국가 등록부에 영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영예의 보상이 제도화된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전례자들이 비문과 대중의 박수로 영예를 얻었던 것처럼 현대의 후원자는 공식적으로 사회의 영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 유산 동기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관대함을 중시**하는 문화적 규범을 장려합니다.

현대의 영예와 인센티브: 오늘날 많은 국가가 자선 활동과 연계될 수 있는 영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상당한 자선 기부자에게 기사 작위를 주거나 작위를 수여하기도 합니다. 정부와 NGO는 메달, 상, "올해의 자선가" 상을 수여합니다. 이는 부유한 개인이 기부하도록 장려하는 **저렴하고 명성 있는 인센티브**입니다. 체계적인 모델은 이를 확장하여 정부가 민간 기부자와 협력하여 공공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공식적인 인정과 아마도 협의적 영향력을 부여**하는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 민주주의 2.0"은 시민들이 세금 청구서의 일부를 선택한 승인된 공공 프로젝트에 할당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자발적 세금 지시의 통제된 형태). 최고 기부자는 공개적으로 인정받습니다. 또는 지역 사회 개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주요 기여자들의 지역 의회를 설립하여 지역 사회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대한 보상으로 거버넌스에서 발언권(단, 단독 권한은 아님)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플루토크라시(돈이 정치적 권력을 직접 사서는 안 됨)로 변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데 주의해야 하지만, 지불한 정책 형성에 대한 *비공식적인 영향력*은 합리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부유한 후원자는 종종 정치적 호의를 얻었습니다. 공식 모델은 그러한 영향력을 투명하게 만들고 긍정적인 결과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매칭 및 챌린지 보조금: 리더로 여겨지고자 하는 욕구를 활용하는 또 다른 메커니즘은 **챌린지 보조금 또는 매칭 기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선가들은 다른 사람들이 기부하도록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향력과 인정을 증폭시킵니다. 거버넌스 맥락에서 국가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공 서비스(예: 학교

또는 다리)에 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개인 시민은 그들의 기여금이 공공 기금과 그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명명된 프로젝트와 1:1 로 매칭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부자는 그들의 돈이 두 배나 더 많이 쓰인다는 것을 알고 개선을 시작한 공로를 인정받습니다. 이 접근 방식에는 선례가 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의 도서관 프로그램도 비슷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는 지역 사회가 운영을 지원하는 데 동의하면 도서관을 짓기 위한 기금을 제공했고, 이는 효과적으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카네기에게 수천 개의 도서관에 대한 공로를 인정한 매칭 제도였습니다. [도서관.컬럼비아.에듀.](#) 정부는 이 개념을 여러 부문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민간 부문이 기업뿐만 아니라 *개별* 후원자에 의해 주도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입니다. 예를 들어 부유한 사람이 공공 주택 블록에 자금을 지원하고 도시가 토지나 인프라에 투자하여 후원자의 이름을 건물에 기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를 환영하도록 예산을 구성함으로써 "자유 민주주의"는 부유층의 명예에 대한 지불 의지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납세자의 부담을 줄입니다.

세금 인센티브 대 명예 인센티브: 현재 정책은 종종 세금 공제를 사용하여 자선 기부를 장려합니다. 본질적으로 금전적 인센티브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명예를 위해"라는 접근 방식은 금전적 뒷돈을 최소화하고 도덕적 보상을 강조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세금 정책은 명예 중심의 기부를 강화하도록 설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책은 익명 기부에 대해 더 작은 세금 혜택을 제공하지만 공개적이고 상당한 기부에 대해 더 큰 대중적 찬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단계 접근 방식은 자선가들이 나서서 눈에 띄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미묘하게 유도합니다(심리적 보상은 사적 세금 감면이 아니라 대중의 칭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부자는 이미 세금 공제보다 인정에서 더 많은 만족을 얻습니다. 정책은 대중의 인정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만 하면 됩니다. 일부 국가는 *공공 기부자 명예 명단*을 유지하거나 주요 기부자의 이름을 따서 중요한 국가 프로그램을 명명하여 그들의 기여를 국가의 이야기에 포함시킵니다. 이는 정부와 사회가 대규모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행동을 강화합니다.**

기부 서약과 그 너머에서 배우기: 기부 서약은 동료의 인정을 활용하는 민간 부문 혁신으로, 억만장자들이 관대함을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도덕적 지위를 가진 엘리트 집단으로 칭송받습니다. 거버넌스 모델은 더 광범위한 사회를 위한 자체 버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국가에서 "후원자 서약"을 상상해보세요. 예를 들어, 순자산의 20%를 공적 목적에 기부하는 시민은 **시민 후원자 훈장**에 가입하고 대통령으로부터 메달을 받으며

국가 기념일에 공개적으로 영예를 얻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명예* 측면이 제도화됩니다. 나아가 후원자들은 기부한 기금을 최대한 공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협의하도록 초대될 수 있습니다(거버넌스에서 행위와 파트너십 감각을 느끼도록 보장). 자선가를 **공공 프로젝트의 이해 관계자**로 만들고 감사를 포함으로써(하지만 자문 역할을 넘어서는 법적 특권은 아님) 이 모델은 개인적 유산을 민주적 필요와 일치시킵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종종 비공식적으로 발생하던 일, 즉 부유한 후원자들이 사회에 기여하고 존경을 얻는 일을 공식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를 수행합니다.

모방할 기존 메커니즘: 고대 전례와 현대적 서약 외에도 이러한 추진력을 활용하는 다른 정책이 있습니다. 어떤 시기에 정부는 **공채 또는 전쟁 채권을 발행하고 명예를 수반했습니다 (예: 2차 세계 대전에서 지역 사회와 개인은 채권 매수 목표를 달성한 것에 대해 명예를 수여받았습니다. 이는 전쟁 노력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및 명예적 인센티브의 혼합입니다).** 또 다른 예는 "경쟁적 자선 활동"이라는 개념입니다. 도시나 기관은 때때로 가장 큰 기부자의 이름을 따서만 물건의 이름을 지어 부유층 사이에서 그 명예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만듭니다(예: 대학 학과에 기부금을 기부하기 위해 경쟁). 이는 비영리 부문에서 발생하지만, 정부는 특정 시민 개선을 위한 자금 조달 경쟁을 운영하여 프로젝트에 우승자의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국가는 정부에 주요 기부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자선 위원회*나 자문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기부자가 기부금으로 발언권을 얻을 수 있다고 느끼도록 보장). **공공-민간 파트너십 법률**을 조정하여 기업뿐만 아니라 개별 기여자에게 더 많은 공로와 가시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시민 프로젝트를 위한 크라우드펀딩(기부자에 대한 인정 단계 포함)과 같은 것조차도 이 아이디어의 풀뿌리 형태로, 일반 시민도 인정에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부자 명판에 이름이 있는 것만으로도 소액을 기부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에 충분합니다. 완전한 거버넌스 모델은 이를 대형 플레이어와 대형 프로젝트로 확장할 것입니다.

공공재에 대한 자발적 기여에 의존하는 "자유 민주주의 2.0"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는 부자들이 평등이나 민주적 의사 결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계몽된 자기 이익(그들의 유산)으로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는 명예와 자문적 영향력을 부여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정치적 권력은 1인 1표로 유지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기부자만이 정책을 결정하는 시스템은

원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수행한다면, 명예에 대한 타고난 인간의 욕망은 실제로 학교, 병원, 공원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으며, 전통적인 세금과 지출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 - 고대 후원자들의 기록 [에온닷컴](#) 카네기와 게이츠에게 - **많은 사람이 사회에서 명예로운 자리를 보상으로 받는다면 그 자리에 부응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를 거버넌스 구조에 구축함으로써 우리는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를 만듭니다. 대중의 요구가 더욱 충족되고, 부가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며, 후원자는 그들이 추구하는 존경을 얻습니다. 이는 체계화된다면 보다 참여적이고 자선적으로 추진되는 민주주의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원-원" 이타주의의 모델입니다.*

결론

부유한 개인이 명예와 유산을 위해 기부하는 것은 새롭거나 드문 현상이 아닙니다. 역사의 구조에 짜여 있습니다. 황제와 산업가에서 기술 거물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대중의 이익에 투자하여 **경제적 자본을 사회적 자본으로 전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자신의 이름이 존중받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록펠러, 카네기, 게이츠, 버핏, 노벨 등의 사례 연구는 이러한 자선 활동이 달성할 수 있는 영향력의 규모와 그 배후에 있는 깊은 인간적 동기를 모두 보여줍니다. 그들의 자선 활동은 부를 사회의 손에 돌려주었고, 종종 권력의 집중을 완화했으며, 그들에게 지속적인 **명예**를 부여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사례는 미래에 대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사회가 자선을 축적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인정하고 보상한다면, 부유층의 야망을 공적 목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를 제도화하는 거버넌스 모델(실제로 "대중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영예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함)은 수십억 달러의 잠재적 자선 활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인정이 의미 있고 대의가 가치 있는 한 인정과 유산을 위해 자신의 **부를 기꺼이 쓸** 것 같습니다. 과거의 메커니즘(고대 전례, 명명권, 서약)에서 배움으로써 [에온닷컴](#) ko.위키피디아.org 그리고 이를 확대하면, 우리는 전통적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자발적이고 명예에 기반한 재분배*의 형태를 장려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적 동기를 공적 이익과 일치시키면 강력한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사회는

번영하고 불평등은 줄어들고, 후원자는 **좋은 이름의 불멸**을 얻습니다. 많은 부유한 개인이 기꺼이 했고, 앞으로도 기꺼이 할 트레이드오프입니다. iu.pressbooks.pub.

참고문헌:

- 자선 활동과 명예에 대한 역사적 동기 iu.pressbooks.pub
- 록펠러의 자선적 명성과 기여 빌모이어즈닷컴 자선 라운드테이블.org
- 카네기의 "부의 복음"과 95%의 재산이 기부됨 디지털 역사.uh.edu ko.위키피디아.org
- 게이츠 재단 규모 및 기부 약속 작성 ko.위키피디아.org ko.위키피디아.org
- 버핏의 99% 공약과 부의 유용성에 대한 인용문 givingpledge.org
- 알프레드 노벨의 유산에 따른 노벨상 기금 역사닷컴
- 고대 그리스 전례: 부자들은 명예를 위해 공공사업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에온닷컴
- 초기 재단이 공공 기관에 미친 영향 시티저널.org.

Prompt 13: 행정 LLC, 공공 프로젝트에 대한 분산화된 접근 방식

공공 프로젝트(지역 도서관에서 글로벌 과학 노력까지)는 전통적으로 정부가 주도하거나 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 유한 책임 회사(Administrative LLC)**는 사적 조직이나 파트너십이 분산된 방식으로 이러한 공공 역할을 수행하는 개념을 나타냅니다. 본질적으로 행정 유한 책임 회사는 중앙 정부 통제 대신 사적 이니셔티브, 자발적 협력 및 혁신적인 거버넌스를 활용하는 **공익 기관**으로 기능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시민 자선 활동의 역사적 전통과 분산 자율 조직(DAO)과 같은 현대적 추세를 반영하여 공익을 위해 커뮤니티 리소스와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분석은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범위, 자금 조달 방법,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프레임워크, 실행 가능성과 과제를 뒷받침하는 역사적/이론적 맥락을 살펴봅니다.

행정 LLC의 범위: 로컬 및 글로벌 프로젝트

행정 LLC는 소규모 커뮤니티 개선에서 대규모 글로벌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요구 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동일합니다. 분산되고 종종 자발적인 개인 또는 단체 협회가 공공 또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법적 조직(예: LLC, 재단 또는 협동조합)을 형성합니다.

지역 프로젝트(커뮤니티 규모): 마을이나 동네 수준에서도 민간 이니셔티브가 공공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고 관리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자선가들이 **공공 도서관**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산업가 앤드류 카네기는 민간 보조금을 통해 영어권 전역에 2,509개의 공공 도서관을 건설하는 데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도서관.컬럼비아.에듀.](#) 이러한 "**카네기 도서관**"은 지역 사회가 소유하고 운영했지만 개인의 사적 부와 비전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지역 공공재(무료 도서관 접근)가 지방 자치 단체가 아닌 사적 조직적 노력에서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다른 지역 사례로는 자원 봉사 소방서와 주민 협회가 관리하는 커뮤니티 공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렉시 드 토크빌과 같은 19세기 관찰자는 미국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인 협회**를 결성하여 교회, 학교, 심지어 교도소를 건설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유럽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부나 귀족이 주도했습니다.

자유주의.org. 이러한 시민 연합의 전통은 소규모 공공 프로젝트(도서관, 학교, 인프라)가 비정부 단체에 의해 대중의 이익을 위해 시작되고 관리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글로벌 또는 대규모 이니셔티브: 분산형 공공재 프로젝트는 지역적 필요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글로벌 과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예로는 소행성 충돌 위협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책임으로 간주됩니다(예: NASA가 지구 근처 물체를 모니터링). **B612 재단**은 이러한 글로벌 공공 안전 역할에 뛰어든 민간 기관을 보여줍니다. B612는 과학자와 전직 우주인이 이끄는 비영리 단체로, 행성 방어에 전념합니다. 위험한 소행성을 탐지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전 세계 정부가 실질적인 행성 방어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B612는 2012년에 지구 근처 소행성을 지도화하기 위해 약 4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을 가진 민간 자금으로 운영되는 우주 망원경(센티넬 임무)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ko.위키피디아.org. 기금 모금이 부족했고 프로젝트 범위가 재조정되었지만, 비정부 기관이 민간 주도로 대규모 글로벌 프로젝트(행성 보호)를 시도한 주목할 만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Planetary Society의 LightSail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는 태양 항해를 시연하기 위한 시민 자금 지원 우주선입니다. LightSail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자금이 조달*되었습니다. 전 세계 40,000명 이상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원을 모아 우주 탐사를 발전시키는 기술 임무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행성.org. 이는 전통적으로 국가 기관의 영역이었던 최첨단 항공우주 프로젝트조차도 NGO로 조직된 열광자와 전문가의 분산된 연합에 의해 추진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례는 Administrative LLC 개념과 일치합니다. 즉, **정부 외부에서 관리되는 공공-민간 이니셔티브**이지만 공공 이익을 목표로 합니다. 도시의 문해력을 향상시키거나 소행성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든 이러한 프로젝트는 분산된 협력에 의존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프로젝트가 종종 정부의 축복이나 파트너십(예: 지방 정부가 결국 카네기 도서관을 운영하거나 B612 재단이 유엔의 소행성 경고 네트워크와 협력)으로 운영되지만 정부 명령에 의해 *직접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ko.위키피디아.org. *이 모델은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확장으로 볼 수 있으며, 주도권과 거버넌스가 공공 기관이 아닌 민간 행위자(개인, 법인 또는 자발적 협회)에서 주로 나오는 분권화의 한 극단으로 나아갑니다.*

경제 및 재정 구조

공공 지향 프로젝트에 대한 중요한 질문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세수입이나 정부 지원이 없는 행정 LLC 및 이와 유사한 조직은 자원을 유지하는 **지속 가능한 재무 모델을** 고안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대적 관행에서 자금 조달 접근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되었으며, 종종 이타주의적 방법과 인센티브 중심 방법을 결합했습니다.

자선 사업과 자선 기금: 한 가지 모델은 부유한 후원자나 자선 재단의 기부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앤드류 카네기의 도서관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카네기는 부자들이 과도한 부를 공공의 이익에 쓸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믿었고("부의 복음"), 그에 따라 그는 도서관을 짓기 위해 5,600 만 달러(20 세기 초 달러) 이상을 기부하여 민간 자금을 통해 공공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구축했습니다.

[도서관.컬럼비아.에듀](#) [도서관.컬럼비아.에듀](#). 많은 박물관, 병원, 대학은 사적 자선 활동에서 비슷한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 기금 제공자에 대한 보상은 재정적 수익보다는 **명예, 유산 또는 윤리적 성취**가 대부분입니다. 기부자는 인정(예: 건물이나 프로젝트에 이름 표시)과 사회에 기여하는 개인적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제 역사가들이 지적하듯이 기부자는 자신이 관심 있는 대의를 지원하고 공동체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격려하는 "도덕적 규칙"에서 **유용성을 얻습니다**. [카토.오오그](#). 이 "명성 경제"는 많은 공공재 제공의 기반이 됩니다. 사람들은 명예, 명성 향상 또는 단순히 선행에 대한 욕구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으며, 이는 강제적인 과세 없이 프로젝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 붙은 카네기 이름이나 무료 교육 플랫폼에 자금을 지원하는 현대 기술 자선가는 이를 자신의 유산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회원비와 지역 사회 기금: 또 다른 메커니즘은 회원 또는 기초 기부금을 통해 프로젝트에 기금을 지원하여 공공재를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클럽과 유사한 것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민 단체가 이러한 기반에서 운영됩니다. 1876 년에 설립된 Appalachian Mountain Club(AMC)는 민간 비영리 단체로서 광범위한 공공 하이킹 코스와 보호 구역을 유지 관리합니다. 운영 자금(연간 예산 약 2,900 만 달러의 98%)은 대부분 민간 재원을 통해 조달합니다. 회원비, 기부금, 프로그램 수익의 조합입니다. [카토.오오그](#). AMC 의 83,000 명 이상의 회원은 연회비를 내고, 그 대가로 트레일 유지 관리(공공재)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클럽 시설 이용 및 회원 할인과 같은 선택적 혜택도 받습니다.

[카토.오오그](#). 이러한 **선택적 인센티브**는 무임승차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은 독점적인 혜택을 받기 때문에 가입하고 기여하며, 이를 통해 광범위하게 접근 가능한 리소스(잘 관리된 자연 산책로) 제공에 자금이 지원됩니다. [카토.오오그](#). 마찬가지로 행성 협회는 전 세계 우주 애호가들로부터 소액 기부금과 회원 자격을 요청하여 우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각자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수천 명의 개인이 힘을 합치는 모델입니다. [행성.org](#). **현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으로 인해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극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LightSail**과 같은 프로젝트 또는 **ConstitutionDAO**와 같은 일회성 노력 (분산형 그룹이 개인으로부터 암호화폐를 통해 4,000만 달러 이상을 모아 미국 헌법 원본을 경매에 부친 것)은 **공익적** 목표를 의 힘을 보여줍니다. [스틴슨닷컴](#).

수익 창출 프로젝트(사회적 기업가 정신): 일부 공공 프로젝트는 수익을 창출 하도록 구조화될 수 있으며, 투자자 또는 기여자가 수익을 얻거나 적어도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재와 사적재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종종 전형적인 공공재로 언급되는 등대조차도 19세기 영국에서 사적으로 건설되었으며, 운영자는 세관 당국을 통해 수집된 선박 도킹 수수료를 청구하여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카토.오오그](#). 현대의 행정 LLC 맥락에서 커뮤니티는 LLC를 구성하여 다리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전기를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투자자 간에 수익을 공유하거나 커뮤니티에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본질적으로 **공공-민간 기업**입니다. 사명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기부금이 아닌 사업과 같은 수익 흐름으로 유지됩니다. 또 다른 현대적인 예는 **사회적 영향 채권** 또는 인프라에 대한 커뮤니티 투자 개념으로, 민간 자본이 프로젝트(예: 공공 주택 개발 또는 재생 에너지 설비)에 자금을 지원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프로젝트의 절감액 또는 수익에서 상환됩니다. 순수한 이익이 주된 동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지속 가능한 재정적 수익에 대한 전망은 사회적 혜택이 있는 프로젝트에 자본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일부 행정 LLC는 공공 사명과 상업적 전략의 균형을 이루는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및 혁신적 인센티브 모델: 실제로 많은 분산형 공공 프로젝트 조직은 **다양한 자금원을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AMC는 회비와 기부금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수익의 거의 절반을 창출하는 롯지와 가이드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본질적으로 보 존 활동을 지원하는 상업적 부문입니다. [카토.오오그](#).

마찬가지로, 프로젝트는 종자 자선 활동으로 시작한 다음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멤버십 또는 수수료 지원 모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맨커 올슨의 집단 행동 이론에서 얻은 핵심 통찰력은 대규모 노력에는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카토.오오그](#). 이는 *물질적 인센티브* (독점적 접근, 할인, 배당금) 또는 *무형적 인센티브* (명성, 이타적 만족, 커뮤니티 소속감)일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분산형 프로젝트는 종종 커뮤니티 의식과 공유된 목적을 촉진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시간이나 돈을 기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이 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커뮤니티는 좋은 비유입니다. 전 세계의 프로그래머가 중앙 권한도 없고 급여도 없이 Linux 나 Wikipedia 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개발합니다. 근본적으로 분산된 노력이지만, 그들은 평판 보상, 개인적 열정, 공공재에 기여하고 있다는 지식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관리 LLC 는 기여자에게 비금전적 방식(인정, 의사 결정에서의 영향력, 커뮤니티 내 사회적 지위)으로 보상하여 유사한 역학 관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자금 조달을 보완합니다. 간단히 말해, **이러한 조직의 재정 구조는** 순수 자선에서 준상업적까지 다양하며, 종종 창의성과 신뢰성이 필요하여 정부 외부의 공공 프로젝트에 기여하면 실제로 투자할 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운영 및 법적 프레임워크

분산형 접근 방식에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거버넌스** 입니다. 중앙 권한 없이 대규모 협력을 조직하고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방법입니다. 관리 LLC 및 유사한 법인은 종종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법적 프레임워크와 책임을 보장하는 내부 규칙에 의해 가능한 대체 거버넌스 구조에 의존합니다. 운영 및 법적 프레임워크의 주요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산형 거버넌스 메커니즘: 계층적, 상향식 통제 대신 이러한 조직은 일반적으로 **집단적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회원 중심 비영리 단체와 협동조합은 1인 1표 원칙에 따라 운영되며, 이사회를 선출하거나 회원 총회를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의 새로운 영역에서 **분산형 자율 조직(DAO)**은 토큰 가중 투표 또는 스마트 계약에 인코딩된 합의 규칙을 통해 거버넌스를 구현합니다. DAO(디지털 시대의 행정 LLC로 간주될 수 있음)에서 제안은 토큰 보유자 커뮤니티에서 투표에 부쳐지고, 제안이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 스마트 계약이 자동으로 결정을

실행합니다. [스틴슨닷컴](#). 이를 통해 자금이나 행동을 지시할 단일 리더가 필요 없이 의사 결정이 투명하고 사전 합의된 규칙을 따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신은 참여자가 민주적 투표, 토큰 스테이킹 또는 기타 참여 메커니즘을 통해 스스로를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투표를 기록하고 결과를 시행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지만, **자치**의 개념은 오래된 맥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 협회가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해 정관과 위원회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명확한 거버넌스 구조가 중요합니다. 참여자는 어떻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하며, 거버넌스 규칙은 혼란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관리 LLC 스타일 프로젝트는 의사 결정 권리, 역할 및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헌장이나 헌법을 만듭니다. 이는 LLC의 공식 운영 계약(회원 간의 의사 결정 및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설명) 또는 특정 의사 결정을 선출된 이사회에 위임하고 다른 의사 결정을 회원 국민투표에 위임하는 비영리 단체의 정관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유한책임: "행정 LLC"의 LLC (**유한책임회사**)는 법적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LLC(또는 재단, 신탁, 협동조합 등)로 조직함으로써 프로젝트는 개별 구성원과 별개의 법적 정체성을 얻습니다. 이는 대규모 사업에 중요합니다. 즉, 조직이 재산을 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개별 *참여자가 부채나 법적 청구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보호는 자원봉사자 또는 기부자가 참여할 때의 위험을 낮춥니다. 여러 관할권에서 명백히 분산된 조직을 수용하기 위해 법률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와이오밍은 2021년에 DAO가 **DAO LLC**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선구적인 법률을 통과시켜 이를 새로운 유형의 LLC로 인정했습니다. [스틴슨닷컴](#). 이러한 법률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 커뮤니티는 법의 관점에서 전통적인 회사와 매우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분산된 관리 구조가 있습니다. 버몬트도 마찬가지로 관리가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지 지정해야 하는 "블록체인 기반 LLC"를 허용합니다. [스틴슨닷컴](#). 이러한 법적 혁신은 행정 LLC가 분산된 의사 결정을 허용하도록 조정함으로써 기존 기업 법률 프레임워크 내에서 운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블록체인 맥락 밖에서도 재단이나 비영리 법인을 사용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비슷한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카네기는 각 자선 기관에 대해 자체 수탁자가 있는 독립적인 신탁을 설립했습니다. [도서관.컬럼비아.에듀](#), 효과적으로 한 사람의 통제를 넘어선 자치적 실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법은 기업적 인격과 책임 보호막을 제공함으로써 분산형 프로젝트를 위한 **발판**을 제공하는 반면,

내부 거버넌스 규칙(전통적인 규정이든 스마트 계약이든)은 일상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운영 체제를 제공합니다.**

책임성과 투명성: 프로젝트의 목표를 감사하거나 시행할 중앙 정부 기관이 없다면, 행정 LLC 는 내부에서 **책임성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종종 투명성에 대한 높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여자와 이해 관계자 간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 결정 및 결과를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는 이 부분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공개 원장에 기록된 거래와 투표를 통해 누구나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틴스닷컴](#). 하지만 전통적인 비영리 단체조차도 연례 보고서를 발행하고, 독립적인 감사를 거치고, 이해 관계자를 회의에 초대합니다. 운영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분산형 프로젝트는 정부 감독이 필요할 수 있는 자금 오용이나 임무 이탈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과 협정**은 집행에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조직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입법할 권한이 없지만 상호 협정을 통해 참여자를 구속합니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 토지 신탁은 토지 사용 규칙을 준수하도록 재산 소유자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요구할 수 있고, 사립 공원은 특정 규정을 준수하도록 회원 자격을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합의된 규칙을 위반하면 이러한 계약을 통해 결과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예: 회원 자격 박탈 또는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사적 거버넌스 시스템은 프로젝트에 대한 자체 "미시 법률"을 만듭니다. 필요한 경우 계약을 집행하기 위해 법률 시스템에 의존하지만,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더 일반적으로 **명성과 집단 모니터링**에 의존합니다. 규칙을 어긴 참여자는 그룹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AO 는 악의적인 행동에 대해 구성원의 토큰을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고, 커뮤니티 협회는 공동 시설을 남용하는 사람의 권한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참여는 자발적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강제는 그룹에서 추방 위협이며, 프로젝트가 귀중한 혜택이나 사회적 지위를 제공하는 경우 협력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확장 및 조정: 중앙 지시 없이 어떻게 대규모 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현대의 사례는 다 **중심적 또는 네트워크화된 접근 방식**이 복잡성을 관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나의 단일 기관이 아닌 여러 자율적 행정 LLC 또는 그룹이 큰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재난 대응은 종종 정보 공유 및 협정을 통해 노력을 조정하는 자체 거버넌스를 갖춘 NGO 연합에 의해 처리되며, 단일 세계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소행성 방어 사례에서 B612는 특정 기술 프로젝트를 주도했지만 국제 네트워크(예: 유엔이 승인한 국제 소행성 경고 네트워크)와 통합하여 노력이 상호 보완되도록 노력했습니다. ko.wikipedia.org. 분산화는 무질서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공식적인 명령 대신 합의, 커뮤니케이션 및 상호 조정을 통해 조정이 달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신 커뮤니케이션 도구(인터넷 포럼, 협업 플랫폼, 분산 원장)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참여자 간의 이러한 수평적 조정을 크게 용이하게 합니다. 수천 명의 기여자로 구성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커뮤니티가 효과적으로 자체 조직화하여 엄청나게 복잡한 시스템을 생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규모 관리 LLC 프로젝트는 유사한 협업 플랫폼을 채택하여 작업을 분할하고, 우선순위에 대해 투표하고, 지식을 집계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구성원이 존중하는 **강력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본질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헌법)와 모든 사람이 사명에 맞춰 일치하도록 인센티브와 투명성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프레임워크가 잘 수행되면 정부 프로그램과 비슷한 규모로 자원과 인재를 동원할 수 있지만, 의무가 아닌 자발적이고 기업가적인 에너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역사적 및 이론적 배경

공공 프로젝트를 정부에서 민간 또는 기초 통제로 전환한다는 아이디어는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수세기 동안 정치 철학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면 분산형 거버넌스의 **잠재력 과 피해야 할 함정** (예: 공유지 무시)에 대한 조명이 비춰집니다.

민간 자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사업의 역사적 사례: 현대 국가가 현재의 역할을 맡기 훨씬 전에, 지역 사회는 종종 스스로를 부양했습니다. 1835년에 글을 쓴 알렉시 드 토크빌은 미국인들이 자발적 연합을 통해 *"공동으로 욕망하는 대상을 추구하는 기술"*을 *완성했다고 유명하게 관찰했습니다.* [카토.오오그](#) 그는 유럽인이 정부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을 기대하는 반면 미국인은 교회나 학교를 짓는 것부터 대중 축제를 조직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사적 협회를 결성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자유주의.org](#). 이는 미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 영국에서는 도로, 운하, 그리고 물론 등대와 같은 많은 인프라 프로젝트가 종종 정부의 헌장에 따라 민간 회사나 협동조합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는 **1800년대 많은 영국 등대가 민간에서 건설 및 운영되었으며**, 항구에 있는 배에서 징수한 수수료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기록했습니다(수수료 징수에는 정부 지원이 있었지만 건설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카토.오오그](#).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는 민간 자금으로 운영되는 유료 도로 신탁이 여행객에게 통행료를 부과하여 도로를 건설하고 유지 관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민간 유료 도로 회사와 철도 회사가 19세기 교통 인프라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으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주 헌장에 따라 운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적절한 제도적 조치가 주어진다면 **민간 주도로 공공재가 제공될 수 있고 제공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선 활동은 또한 오랫동안 준공공 사업에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서 논의한 **카네기 도서관**이 한 사례이고, 또 다른 사례는 19세기 후반에 부유한 산업가들이 대학, 병원, 박물관을 만든 것입니다(예: 존스홉킨스 대학과 병원은 개인 유산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민간 자금이 당시 정부가 해결할 수 없거나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격차를 메웠습니다. 예를 들어, 런던의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 어린이 병원은 공적 의료가 초보적이었던 1852년에 주로 자선 기부를 통해 설립되었습니다. 과학과 탐험 분야에서는 민간 사회가 주도했습니다. 왕립지리학회(1830년 설립)와 내셔널 지오그래픽 협회(1888년)는 본질적으로 대중 지식에 전념하는 NGO였으며 탐험과 연구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국가 방위**에서도, 표면적으로는 핵심적인 공공재이지만, 사략선(전시 중에 선박을 방어하도록 허가받은 개인 소유 선박)과 같은 이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국가와 사적 행동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선례를 살펴보면, **분산형 공공 프로젝트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시민 사회가 나중에 정부가 맡은 업무를 맡았던 이전의 거버넌스 모드를 부활시키고 업데이트한 것입니다.

분산형 거버넌스에 대한 정치 철학: 중앙 정부와 독립적인 그룹/개인 간에 권력과 책임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고전적인 논쟁입니다. 자유주의 사상가와 자유주의 사상가는 많은 기능이 먼 국가보다 자발적 연합, 자유 시장 또는 지역 사회에서 더 잘 처리될 수 있다고 종종 주장해 왔습니다. 정치 이론의 **보충성 원칙** (가톨릭 사회 교리와 연방주의 시스템에서 두드러짐)은 가장 작고 가장 유능한 기관에서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앙 집중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한 효과적으로 지방/자치 정부를 장려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작가는 생활에서 **실험**을 허용하는 것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서로 다른 커뮤니티가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 LLC와 같은 자율적

기관을 갖는 것과 일치합니다. 더 근본적으로, 무정부주의 철학자(예: 1902 년의 피터 크로포트킨의 *Mutual Aid*)는 협동 집단이 상호 지원과 자발적 합의를 통해 국가 기능 대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견해는 무리도적 조직에 대한 현대의 열광을 예고한다. 미국적 맥락에서 **시민 사회**의 전통 (토크빌이 관찰한 바와 같음)과 이후 로버트 니스벳과 로버트 퍼트넘과 같은 학자들의 옹호는 건강한 사회가 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강력한 중간 기관(가족, 교회, 클럽, 협회)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기관은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고 종종 관료제보다 더 빠르고 창의적으로 필요에 대응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와 블록체인 거버넌스의 부상은 이러한 이론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분권화 지지자들은 기술이 이제 개인이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로 조정할 수 있게 해주므로 더 많은 작업을 사람들의 네트워크(플랫폼, DAO 등을 통해)에 맡기고 중앙 집중식 국가 프로그램에 덜 의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행정 LLC 또는 DAO를 프로젝트 관리를 "*민주화*"하고 이해 관계자에게 직접적인 발언권을 부여하고 기여를 개인적 선택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봅니다.

그러나 정치 이론가들은 또한 **분권화의 한계와 위험**에 대해 경고합니다. 가장 큰 우려 사항은 *무임승차 문제*와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감독 없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면 공유 자원이나 필요한 재화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과도하게 착취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렛 하딘의 1968 년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유명한 에세이는 중앙 규제나 사유화가 없다면 공유 자원(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목초지와 같은)은 각 사용자가 과도하게 사용할 인센티브가 있고 아무도 보존할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결국 망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역사적으로 공유지를 보호하고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나 소유권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비극은 **불가피하지 않습니다**. 커뮤니티는 공유지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해 자체 조직화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노벨상 수상자 엘리노어 오스트롬의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의 어업, 산림, 관개 시스템 및 기타 공유 자원에 대한 수많은 사례를 연구했으며 사용자 커뮤니티가 종종 상향식 권한 없이도 자원 붕괴를 방지하는 **정교한 거버넌스 방식을 개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블로그.lse.ac.uk](http://blog.lse.ac.uk) [블로그.lse.ac.uk](http://blog.lse.ac.uk). 그녀는 성공적인 자치적 공유지가 공유하는 핵심 원칙을 파악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자원과 커뮤니티의 명확한 경계(누가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알 수 있도록) tn.boell.org; 지역 상황에 맞춰 집단적으로 합의된 규칙; 참여적 의사 결정(규칙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규칙을 설정하는 데 도움)

tn.boell.org; 사용량의 효과적인 모니터링 tn.boell.org; 위반자에 대한 점진적 제재(엄격한 처벌 없이 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가벼운 것부터 시작) tn.boell.org; 저비용 갈등 해결 메커니즘 tn.boell.org; 그리고 지역 사회의 조직화 권리에 대한 인정(즉, 상위 기관이 지역 규칙을 훼손하지 않음) tn.boell.org.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커뮤니티는 공유지의 비극을 피하고 장기적으로 자원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tn.boell.org. 이는 행정 LLC와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분산된 그룹이 자체 소규모 기관을 설립하여 공유 리소스나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행정 LLC는 Ostrom의 원칙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재산권이나 사용권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 관리 어업 협동조합은 각 구성원에게 할당량(명확하게 정의된 몫)을 제공하고 언제/어떻게 어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시행하여 커뮤니티에서 시행하는 제재로 과도한 어업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분산된 거버넌스는 개별 인센티브를 그룹의 목표와 일치시키기 위한 신중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는 Ostrom의 연구와 Mancur Olson의 이론이 모두 강조하는 것입니다. [카토.오오그](http://kato.o.o.g) 잘 구성된 행정 LLC는 운영 계약 또는 스마트 계약에서 이러한 규칙을 공식화하여 공유지의 남용이나 자원봉사자 피로를 방지합니다.

분산화의 또 다른 위험은 매우 대규모의 요구에 대한 자원이나 조정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규모 성공 사례가 많이 있지만 회의론자들은 막대한 자본(기초 과학 연구나 대규모 인프라 네트워크 등)이 필요한 프로젝트가 자발적 노력의 모금 능력을 초과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B612의 센티넬 망원경 캠페인의 부분적 실패 - 인지도는 높였지만 필요한 4억 5천만 달러는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ko.wikipedia.org - 일부 프로젝트는 여전히 특별한 개인 기부자나 정부 자금이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형평성과 적용 범위 문제도 있습니다. 정부 프로그램은 (적어도 원칙적으로) 모든 시민에게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 사적 이니셔티브는 관심이나 부가 있는 곳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유한 지역 사회는 사적 수단을 통해 호화로운 공원과 학교에 자금을 지원하는 반면, 가난한 지역 사회는 자선 재분배 메커니즘이 발생하지 않는 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존 롤스와 같은 정치 철학자는 정의를 고려하면 자발적인 자선이 제공하는 것 이상의 안전망이 필요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형 접근 방식은 자선적 교차 보조금(예: 부유한 구성원이 빈곤 지역의 지원 프로젝트에 더 많이 기여하는 글로벌 기금)을 통합하거나 순전히 사적인 노력으로는 부족한 지원을 위해 공공 기관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역사적, 이론적 맥락은 균형 잡힌 행동을 보여줍니다. **분산되고 개인 중심의 거버넌스는 혁신, 책임성, 지역적 지식을 발휘하여** 종종 엄격한 중앙 시스템보다 성과가 좋지만, 집단 행동 문제를 완화하고 포용성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행정 LLC의 개념은 공공재의 사적 제공에 대한 오랜 전통과 협력적 거버넌스의 현대적 도구의 어깨 위에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사적으로 유지되는 공유지와 자선 기관과 같은)과 실패(통제되지 않는 공유지의 비극이나 불평등한 서비스 분배와 같은)에서 배우면서 행정 LLC의 지지자들은 정부 조치에 대한 실행 가능한 *평행 또는 보완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모델은 신중하게 실행된다면 커뮤니티와 시민 연합이 도서관과 공원을 짓는 것부터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사회에서 "거버넌스"하는 사람과 사회에서 공공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개념을 효과적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카토.오오그](#) [카토.오오그](#).

결론

공공 프로젝트를 위한 분산형 수단으로서의 행정 LLC는 오래된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의 혁신적인 융합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상호 지원과 시민 연합(토크빌이 지적한 바와 같은)의 오래된 관행에서 영감을 얻고 LLC 법, 비영리 구조, DAO 플랫폼과 같은 현대적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중앙 통제 없이 행동을 조직합니다. 경제적으로는 기부, 회원 자격 또는 자립형 수익을 통해 공공재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이타주의와 영리한 인센티브를 혼합하는 데 의존합니다. 운영상으로는 상향식 권한 대신 참여적 거버넌스와 투명성을 강조하여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함정을 피하기 위해 강력한 규칙 제정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많은 노력이 사적으로 유지되는 자연 산책로에서 크라우드펀딩 위성에 이르기까지 번창하여 정부가 공동체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행성.org](#) [카토.오오그](#). 그러나 행정 LLC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지역 사회 정신이 높고 더 광범위한 공공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격차를 메우거나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척하는) 맥락에서 가장 잘 작동합니다. 앞으로 분산형 엔터티(예: DAO LLC)에 대한 법적 인정 확대와 대규모 협동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성공은 이 모델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큼니다. 성공한다면 행정 LLC와 유사한 이니셔티브는 **공공 프로젝트 관리의 환경을 상당히**

분산시켜 시민들이 모퉁이에 있는 지역 도서관에서 지구 전체를 보호하는 것까지 원하는 세상을 직접 구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Prompt 14: 자유민주주의의 2.0 단계별 로드맵

1 단계: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과 퀘스트 시스템 시범 도입

미국과 대한민국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테스트베드로 삼아,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과 '퀘스트' 방식 법률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스마트 계약은 합의 내용을 자동으로 실행하여 계약 위반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퀘스트' 기반 시스템은 법률 준수나 공적 임무를 **게임의 퀘스트처럼 설계**하여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일정한 법적 의무나 사회봉사활동을 **퀘스트**로 만들어 완료 시 보상(포인트나 평판 등)을 주면 시민들이 즐겁게 법규 준수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지방자치단체** 일부에서는 지역화폐를 암호화폐로 발행하거나 **블록체인 투표로 정책을 결정**하는 실험을 진행한 사례가 있으며 techm.kr, **블록체인 기술의 탈중앙화 구조가 민주주의의 수평적 참여와 투명성을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taejaefci.org. 또한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퀘스트를 통해 이용자에게 네트워크 참여를 유도**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데, 예컨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면 거버넌스 투표에 참여할 권한이나 보상이 주어지는 식**이다 trustwallet.com. 이러한 개념을 법률 시스템에 적용하면, 시민들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션을 수행하며 법치에 기여하는 참여자**가 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소규모 커뮤니티나 지방자치 수준**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예를 들어, 한 도시의 주민 자치회에서 **블록체인 기반 시민참여 앱**을 만들어 주민들이 지역 조례 제정 퀘스트, 불편사항 신고 퀘스트 등을 수행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초기에는 **기존 법률을 직접 변경하지 않고도 가능한 영역**(예: 주민 예산배정 투표, 자율적인 규범 준수 캠페인 등)부터 시작하여 시스템의 **안정성과 유용성**을 입증한다. 이를 통해 얻은 성과 데이터(참여율 향상, 처리 속도 개선 등)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 확산의 기반을 마련한다.

2 단계: 개인법률세트(PLS)를 통한 법치 2.0 기반 구축

초기 시스템이 정착되면, 참여자 각각의 **'개인법률세트'(Personal Legal Set, PLS)** 개념을 도입하여 **법치주의 2.0**의 토대를 마련한다. **PLS**란 개인이 자신의 생활에 적용될 세부

규칙들을 하나의 세트로 구성한 것으로, 일종의 **맞춤형 법률**이다. 예를 들어 개인별로 추가적인 행동 규범이나 계약 조항을 스마트 계약 형태로 설정해두면, 국가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각자에게 최적화된 규율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다. 법률의 **개인 맞춤화** 아이디어는 이미 학계에서도 논의되고 있는데, 운전자의 **능력과 위험도에 따라 속도 제한을 다르게 부과하거나 소득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책정하는** 등 “사람마다 다른 규칙”의 구상도 제시된 바 있다 lawreview.uchicago.edu. 이러한 **퍼스널라이즈드 법률**은 데이터와 알고리즘 발전으로 가능성이 열리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2.0의 PLS 개념도 그 연장선에 있다.

PLS를 현실에 적용하려면 **법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 여기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근거가 된다. 개인과 민간 행정 주체가 **계약** 형태로 특정 규칙 준수를 약정하면,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유효하다 cisg-online.org. 즉, PLS는 사용자가 **민간 행정 LLC(후술)**와 체결하는 일종의 서비스 약관 또는 공동규약으로 볼 수 있으며, 현행법상 허용되는 **사적 자치 영역**에 속한다. 예컨대 PLS에는 “○○규칙을 어길 시 △△와 같은 페널티를 부과한다”거나 “분쟁 발생 시 AAA 중재기관의 중재에 따른다”는 식의 조항을 넣을 수 있는데, 이는 사인간 계약으로서 유효하고 중재 합의 역시 법원이 집행력 있는 판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모든 PLS에는 “본 세트는 현행 국가 법령을 존중하며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진다”는 기본 원칙을 명시하여, **국가법과 충돌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이런 설계를 통해 PLS는 **기존 법체계와 조화**되면서도 **개인별 미세조정된 규범**을 제공하는 **법치 2.0의 핵심 도구**가 된다.

이 단계에서는 PLS를 통해 **법치주의의 새로운 모습**이 구현된다. 과거에는 일률적인 법규를 일방적으로 적용했다면, 이제는 **개인이 합의한 규칙을 스스로 준수**하고 그 과정이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기록**된다. 규칙 위반 시에는 스마트 계약에 따른 자동 실행(예: 경고 발령, 일정 권한 일시 정지 등)이 이루어지거나 사전에 합의된 중재 절차에 따라 분쟁이 해결된다. 이는 **자의적인 집행 여지**를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법치주의를 한층 강화한다. 다시 말해, 개인별로 최적화된 법률환경 속에서도 “법에 의한 지배”라는 대원칙이 유지되며, 오히려 **각자가 동의한 법에 의해 스스로 지배됨**으로써 **자율성과 법적 안정성**이 동시에 달성된다. PLS는 이러한 **법치 2.0**의 기반으로서, 향후 제도화 과정을 통해 정식 법령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예: PLS 등록제도, 개인 맞춤형 법률 허가제 등).

3 단계: 민간 행정 LLC 설립 및 운영

자유민주주의 2.0 시스템의 운영 주체로서, **민간 행정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를 설립·운영한다. 이 조직은 PLS 시스템과 블록체인 네트워크, 퀘스트 플랫폼을 **관리하는 중앙 허브** 역할을 맡는다. 형식상 **회사 법인**이므로 법률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어, 대외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스템 운영에 **안정성과 신뢰**를 부여한다. 민간 행정 LLC는 사용자들과의 계약(PLS)을 총괄하고, **스마트 계약 개발/배포, 퀘스트 운영**(예: 새로운 퀘스트 개발, 보상 분배), **분쟁 발생 시 중재 절차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시스템 개선을 위한 **업데이트 결정**이나 **보안 관리** 등도 책임진다.

현행 **상법** 내에서 이러한 LLC를 설립·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LLC(또는 이에 상당하는 회사 형태)는 **목적 사업이 합법적이면 설립**이 허가되며, **거버넌스 구조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 델라웨어주의 LLC는 정관에 매우 유연한 내부 운영 규정을 둘 수 있고, 한국의 유한회사도 회사 내부 규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와이오밍주** 등 일부 주는 한발 더 나아가 **DAO(탈중앙화 자율조직)를 LLC 형태로 공식 인정**하는 법률까지 제정하였다 [s-space.snu.ac.kr](https://space.snu.ac.kr). 와이오밍주의 경우 2022년 DAO 보충법을 통해 **스마트 계약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조직도 LLC로 법인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했는데 [s-space.snu.ac.kr](https://space.snu.ac.kr), 이는 자유민주주의 2.0의 민간 행정 LLC 구상과 맥을 같이 한다. 한국은 아직 DAO에 대한 특별법은 없지만, 학계에서는 DAO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고 법인격 없이도 단체로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해석을 제시하기도 한다 [s-space.snu.ac.kr](https://space.snu.ac.kr). 따라서 현행법 하에서도 LLC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고, 필요하다면 해외(법 제도가 앞선 지역)에 법인을 설립한 후 국내에서 지사 또는 프로젝트로 활동하는 식으로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운영의 현실성 측면에서, 민간 행정 LLC는 **비영리재단**에 가까운 운영을 하되 회사 형태를 취함으로써 **유연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초기에는 프로젝트 투자금이나 크라우드펀딩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장기적으로 사용자들이 내는 구독료, 서비스 수수료, 또는 커뮤니티 토큰 이코노미 등을 통해 **자체 수익 모델**을 구축한다. LLC의 **지배구조**는 투명성을 위해 **DAO적 요소**를 도입한다. 예컨대, 중요한 운영 방침은 회원(토큰 보유자)의 **투표**로 결정하고, 이사회나 운영팀도 가능한 한 **선출직**으로 두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 법률상으로는 이사회 결의 등으로 처리하되, 실제 절차는 온라인 투표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도록 정관/운영규약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민간 행정 LLC의 **현실적 역할**은, 표면적으로는 “전자정부 서비스 위탁 운영 회사”나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 가깝게 보이게 함으로써 **규제 당국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다. 즉, 정부가 모든 것을 직접 하는 대신 **민간의 혁신 역량을 활용**하는 사례(예: 대민 행정 앱을 IT기업이 개발·운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LLC가 하는 일도 *IT기업이 제공하는 시민참여 플랫폼 서비스*로 이해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용자들에게는 단순 앱 이상의 **준거체계**를 제공하여 사실상의 행정 기능을 수행한다. 이중적 성격을 잘 조율하면, 현행법을 준수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 2.0의 **핵심 기능**(스마트 계약 법 집행, 퀘스트 운영 등)을 구현하는 조직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4 단계: 이용자 확대 및 입법부를 통한 법제 개혁

시스템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예를 들어 수만 명에서 수백만 명 규모로 성장하면), **공식적인 법률 개혁**을 추진할 기반이 마련된다. 많은 시민이 자유민주주의 2.0의 혜택을 누리고 있을 때, 이들의 목소리를 모아 **입법부**를 움직이는 전략을 펼친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입법 청원 및 국민 발안 활용: 대규모 사용자 커뮤니티를 조직하여 **입법 청원**이나 **국민 발안**을 추진한다. 다수 국민이 참여하는 입법 청원은 국회에 압력을 가하는 효과가 있으며, 국민 발안 제도가 있는 국가에서는 직접 법률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일부 나라에서는 일반 국민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모아 **의회에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데(EU의 **유럽시민발의제** 등), 이러한 제도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2.0의 핵심 요소들을 법제화하도록 캠페인을 벌인다 thegovlab.org. 예컨대 “스마트 계약을 공식 계약으로 인정하는 법”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블록체인 투표제를 도입하는 법” 등을 국민 발안으로 제출해 입법화 여론을 조성한다.

정치 세력화 및 연대: 이용자가 충분히 늘어나면 이를 대표할 **이해단체** 또는 **정당**의 형태로 정치권에 진입을 시도한다. 가령 “디지털 민주주의 2.0 연합” 같은 단체를 결성해 각 정당 및 의원들과 교섭하고,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공약화**를 이끌어낸다. 필요하면 직접 정당(예: *민주혁신당 2.0*)을 창당해 **의석 확보**를 노린다. 현실적으로 신생 정당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기존 거대 정당들이 이슈를 채택하게 만들어 **정책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초당적 의원 모임**을 구성하여 법률안 발의를 준비한다. (예: 국회 내 ‘블록체인 거버넌스 연구모임’ 등) 이를 통해 정치권 전반에 자유민주주의 2.0의 철학과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넓힌다.

점진적 제도 수용 유도: 전면적인 법체계 개편을 한꺼번에 요구하기보다는, **현행 제도에 부분적으로 녹여내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전자투표나 블록체인 투표**를 공식 선거나 국회 표결에 도입하도록 선거법이나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한 방향이다. 또 **스마트 계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도록 민법이나 전자문서법을 손질하고, **분산 ID(DID)** 등 새로운 신원인증방식을 공공서비스에 도입하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등 **기술 수용적인 법환경**을 만든다.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자치조례**를 통해 PLS나 퀘스트 제도를 시범 도입할 수 있다. 이렇게 개별 법률·제도들을 개선해 나가다 보면, 중국에는 **법치 2.0 전반을 포괄하는 법률**이 제정되는 토대가 마련된다.

여론 형성 및 교육: 입법부를 움직이는 힘은 결국 **국민 여론**이다. 따라서 미디어와 교육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2.0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킨다. 언론에 **시범 사업 성과**를 알리는 기사나 기획 보도를 내고,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제도의 장점을 알린다. 학계·법조계의 **전문가 집단**도 포섭하여 세미나, 공청회에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증언하도록 한다. 시민 대상 토론회를 열어 **우려 사항에 답변**하고, 참여 경험담을 공유함으로써 막연한 두려움을 줄인다. 특히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에게도 **디지털 민주주의 교육**을 실시해 세대간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러한 노력은 입법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가 있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준다.

정치적 현실성 측면에서, 이러한 법률 개혁 움직임은 초기엔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기득권 세력은 권한 이양을 꺼릴 수 있고, 일부는 새로운 시스템을 오해하여 “국가 체제 전복 시도”로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정치권은 무시하기 어려운 압력**을 느낄 것이다. 많은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책은 어느 정당이든 채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세계적으로도 기술을 활용한 시민 참여 요구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예컨대 독일 연방의회는 **전자 청원 시스템** 도입 이후 청원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이를 공식 절차로 받아들였고 thegovlab.org, EU도 시민들이 직접 입법 제안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thegovlab.org. 이처럼 **시민 참여 확대**는 시대적 대세이며, 자유민주주의 2.0은 그 첨단에 있는 구상이다. 정치 현실적으로는, 우호적인 젊은 정치인을 **선도 그룹**으로 육성하여 점차 영향력을 넓혀가는 방식이 유효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 2.0 지지 의원 연대를 만들어 공동 입법안을 발의하고, 공개 지지선언을 이끌어내는 식이다.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임계질량에 도달하면, **입법부는 변화된 현실을 수용하게 될** 전망이다. 이 단계의 목표는 **“민주주의 2.0 기본법”**과 같은 **제도적 인정**을 얻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시스템이 **공식적인 법체계의 일부**로 편입되게 된다.

5 단계: 권위주의 국가로의 장기적 적용 및 글로벌 확산

장기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2.0 시스템을 **권위주의 국가**에도 적용하여 **글로벌 확산**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민주적 혁신 기술도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정치개혁 어젠다**로 접근하기보다는 우회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을 취한다.

비정치적 기술 솔루션으로 접근: 권위주의 정부도 **행정 효율화**나 **부패 감소**에는 관심이 있으므로, 자유민주주의 2.0의 요소 중 **순수 기술적 이점**을 강조하며 도입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 기록 관리**는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해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부패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을 먼저 도입하도록 설득하면, 표면적으로는 정권의 **통치 능력 강화**로 포장되지만 결과적으로 **투명한 거버넌스 인프라**가 구축된다. 스마트 계약을 행정절차에 적용하여 **자동화와 효율화**를 이루면, 권위주의 정부 입장에서 인건비 절감과 서비스 개선을 이유로 도입할 유인이 생긴다. 이렇게 **정치색을 탈색**한 상태로 일부 기능(전자투표, 전자결재 등)을 도입해두면, 훗날 시민들이 이를 **민주적 참여**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국제 사회 및 NGO의 역할: 국제기구와 인권·민주주의 NGO를 통해 권위주의 국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국제투명성기구(TI)**나 **UNDP** 같은 기관에서 해당 국가의 반부패 사업 일환으로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도록 한다. 외부 자금과 기술로 구축된 시스템은 그 정부도 상대적으로 경계심 없이 받아들이기 쉽다. 또 **세계은행**이나 **OECD** 등에서 **거버넌스 선진 사례**로 자유민주주의 2.0 요소들을 홍보하고, 이를 채택하는 것이 국제 신인도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압력을 가한다. 이러한 **소프트 파워** 전략을 통해, 권위주의 정권도 **국제 모범**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디아스포라와 내부 개혁 세력 활용: 권위주의 국가 출신의 **해외 디아스포라**(망명자, 유학생 등)들이 자유민주주의 2.0 시스템을 먼저 받아들이고, 이를 **모국의 시민들과 공유**하도록 한다. 예컨대 망명 중인 민주화 인사들이 해외에서 그들의 모국 국민들을 위한 **온라인 자치 플랫폼**을 운영하면, 국경을 넘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블록체인의 **검열 저항성** 덕분에 정부의 인터넷 통제에도 불구하고 접속이 가능하며, 참가자 신원은 암호화되어 **익명 보호**를 받는다 web3.lifeitself.us. 이미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자산이 인플레이션이나 금융 통제에 시달리는 권위주의 국가 국민들의 탈출구**로 쓰이고 있다 web3.lifeitself.us. 이처럼 기술을 통해 **대안적 공론장과 경제수단**을 제공하면, 내부 개혁 세력과 시민사회가 숨쉴 공간을 얻는다. 장차 해당 국가에 변화의 계기가 올 때(정권 교체나 개혁 시도), 이 준비된 **디지털 거버넌스 구조**가 급속히 확산되어 민주제 정착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 등도 **블록체인 기술이 권위주의 정부의 효율성에 맞서 민주주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안전한 익명 소통과 검증가능한 투표 수단**으로서의 블록체인에 주목하고 있다 cryptoslate.com.

문화적 확산 및 모범 사례 효과: 자유민주주의 2.0 이 여러 자유국가에서 안착하여 **성공 모델**을 보여주면, 권위주의 국가 국민들에게도 큰 **심리적 파급**을 줄 수 있다. 정보화 시대에는 해외 사례가 즉각 전파되므로, 인근 국가에서 이 시스템으로 **부정부패 감소, 경제 발전** 등의 효과를 거두면 권위주의 국가의 시민들도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또한 권위주의 국가도 세계 경제체제에 편입되어 있는 이상, **글로벌 스탠다드**를 완전히 무시하긴 어렵다. 예컨대 **인터넷 표준, 금융 규범** 등을 따르듯이, **디지털 거버넌스의 국제 규범**이 형성되면 이를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가 권위주의 정권을 상대로 **자유민주주의 2.0의 핵심 가치(투명성, 참여, 법치)**를 **준수하라**는 압박을 강화하고, 이를 **외교 의제**로 삼아 지속 주장함으로써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한다. 초기에는 미미하겠지만, 냉전 시절 인권규범이 꾸준히 제기되어 결국 변화를 이끌어냈던 것처럼, **글로벌 거버넌스 규범**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 2.0 도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6 단계: 주요 도전 과제 및 극복 방안

以上的 단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정치적·기술적**으로 다양한 도전과제가 발생할 것이다. 각 영역별 핵심 문제와 구체적인 극복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적 과제: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이다. 국가만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권한(특히 형벌권 등)을 민간 시스템이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PLS 기반의 규율이나 사적 중재 결정이 어느 범위까지 국가 법원에서 인정될지 불확실하다. 아직 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개념들이므로 **법적 회색지대**에 놓일 위험도 있다.

극복: 철저히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설계하여, *“민간 계약에 의한 자치”* 수준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언급했듯 계약과 중재 등 기존에 합법적으로 허용된 틀을 활용하면 법원에서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cisg-online.org. 예컨대 PLS 간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 판정**을 통해 해결하고 이를 국가 법원이 승인(확정 판결)하도록 하면 국가 사법체계와 마찰을 피할 수 있다. 또한 혹시 위법 소지가 있는 요소는 선제적으로 제거하거나 대안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PLS 내용 중 공공질서에 반할 가능성이 있는 조항은 금지**하고, 모든 회원에게 **현행 국가법 준수**를 기본 의무로 명시하여 **국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법적 지위를 확보하겠지만, 그 전 과도기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거나 행정기관과 MOU를 맺어 한시적 실험을 승인받는 방안도 고려한다.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이 “법치를 강화하는 도구”이지 **국가를 약화시키는 위협**이 아니라는 인식을 정부와 법조계에 심어주는 일이다. 이를 위해 운영상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시 관계 당국에 **감사**를 받는 등 **신뢰 구축**에 힘쓴다. 또한 법률가, 교수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꾸려 PLS와 퀘스트 시스템이 현행 법질서 및 헌법 가치와 부합하는지 계속 점검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면, 제도권의 지원을 이끌어내 다음 단계 입법화도 순조로워질 것이다.

정치적 과제: **정치권과 대중의 저항** 가능성이다. 혁신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에 대해 일부 정치인은 **권력 약화**를 우려해 반발할 수 있고, 국민들도 생소한 제도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가질 수 있다. 특히 현재 시스템에서 이익을 얻는 집단(관료, 기존 정당 등)은 새로운 질서를 경계할 수 있다. 또한 초기에 참여자가 적거나 시행착오로 문제가 발생하면 **“실효성이 없다”**거나 **“위험한 실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정치적 지원을 잃을 위험도 있다 techm.kr.

극복: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포용과 홍보** 전략을 쓴다. 먼저 이 프로젝트를 특정 정파가 아닌 **법국민적 개혁 과제**로 프레이밍하여 **초당적 지지**를 확보한다. 정부 및 국회와도 정면 충돌을 피하고 **협력적**으로 접근한다. 예컨대 정부의 디지털정부 혁신 프로그램에 자유민주주의 2.0 요소를 포함시켜 **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면 정치적 부담이 줄어든다. 그리고 **성과 홍보**가 중요하다. 시범사업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오면 숫자와 사례로 명확히 제시하여 여론을 선점한다. “분쟁해결 기간을 X개월에서 Y주로 단축” 또는 “주민 참여율 N% → M% 상승” 등 구체적 지표를 내세워 **반대논리를 무력화**한다. 동시에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시민들의 우려를 줄인다. 예를 들어 **오남용 방지 및 피해 구제 절차**를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 **신뢰성**을 높인다.

시스템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 권한을 강화**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잠재적 정치 공격에 대한 방어인데, 자칫 이 시스템이 “국민 위에 새로운 규율을 강요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자유민주주의 2.0은 **자유·평등 등 헌법 가치의 구현 수단**이므로 헌법과 충돌하지 않는다. 오히려 표현의 자유,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하므로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이런 점을 법학자 등의 의견을 빌어 홍보하면, 정치적 정당성이 한층 공고해진다. 시간이 지나 긍정 경험이 축적되면, 정치인들도 표심을 의식해 앞다투어 지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초기에는 **무리한 추진보다 신뢰 구축과 작은 성공 축적**에 주력해야 한다.

기술적 과제: 블록체인 기술 및 시스템 구현상의 난제들이다. 대규모 국민이 사용할 경우 **확장성(Scalability)** 문제가 중요하다. 현재 퍼블릭 블록체인의 트랜잭션 처리 속도는 제한적이어서, 많은 사용자의 투표나 계약을 처리하기엔 성능 저하 우려가 있다. **보안**도 큰 도전이다. 스마트 계약 코드에 버그가 있을 경우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킹으로 인한 자산 탈취,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코드 vs 법**” 문제, 즉 기계적으로 코드가 법률을 집행할 때 예상치 못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ibanet.org. 실제로 2016년 이더리움 **DAO 해킹** 사건에서, 원칙대로라면 코드에 따라 자산 탈취를 막을 수 없었지만 결국 **인간 개입**으로 하드포크하여 피해를 복구한 일이 있었다. 이처럼 코드의 **불변성**과 현실의 형평성 사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기술적 과제이다.

극복: 기술적 문제는 결국 **지속적 R&D**와 **신중한 시스템 설계**로 풀어나간다.

확장성은 이더리움 등 주요 플랫폼의 프로토콜 개선(예: 이더리움 2.0 샤딩, Rollup 등

레이어 2 기술)으로 TPS가 향상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최신 기술을 활용하거나 **전용 사이드체인**을 구축해 보완한다. 필요하다면 일부 기능은 허가형 블록체인(private chain)으로 처리하고 결과만 공공 체인에 기록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로 설계해 성능과 탈중앙화의 균형을 맞춘다. **보안** 면에서는, 스마트 계약 코드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검증 및 감사**를 받고,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개발자 커뮤니티의 검열을 거친다. 또한 **다중서명(Multisig) 보호**, **시간 지연 트랜잭션(타임락)** 등 기술을 도입해 만일의 사태 시 피해 확산을 막는다. 개인정보는 **영지식 증명(ZKP)** 등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을 적용하여,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도 규칙 준수 여부를 검증**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어떤 퀘스트(봉사활동 등)를 완료했다는 사실만 증명하고 구체적 신원이나 활동 내역은 노출하지 않는 방식이다.

기술이 사회 제도를 완전히 대체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직성**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의 통제 장치”를 남겨두는 것으로 대응한다. 즉, 코드가 자동 집행하더라도 **이의 제기나 예외 처리를 위한 인간 심판**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평상시에는 블록체인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만약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코드 오류로 인한 피해가 생기면 **별도의 위원회나 국가 법원**에 호소할 수 있는 **항고 절차**를 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코드는 기계에 대한 법, 법은 인간을 위한 코드”라는 원칙이 유지되도록 균형을 잡는다 ibanet.org. 또한 시스템 업그레이드나 규칙 변경은 반드시 **이용자들의 투표와 충분한 숙의 기간**을 거쳐 진행함으로써, 기술 변경이 사회적 합의와 함께 가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경험(UX)** 측면의 허들도 넘어야 한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국민 다수가 쓰기 어려우면 소용이 없다**. 따라서 **모바일 앱** 등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복잡한 블록체인 용어 대신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 초기 가입 시에는 **튜토리얼 퀘스트**를 통해 자연스럽게 시스템을 익히게 하고, 고객센터 센터나 오프라인 창구도 마련하여 디지털 취약 계층도 참여할 수 있게 돕는다. 예컨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원이 주민들의 앱 가입과 퀘스트 참여를 도와주는 식이다. 이러한 **포용적 디자인**과 **지원책**을 병행하면 기술적 장벽이 낮아져 보다 많은 시민이 시스템을 받아들일게 될 것이다.

사회적/기타 과제: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에 대한 **인식과 문화적 수용**의 문제도 있다. 일부 국민은 “사법체계를 민영화하려 한다”거나 “국가 주권을 약화시킨다”는 오해를 할 수 있다. 또 각국 문화에 따라 법률에 대한 관념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시스템 보급은 반발을 살 위험이 있다.

극복: **투명한 공개와 소통**으로 신뢰를 쌓고 오해를 푼다. 시스템의 운영 규칙과 의사결정 과정을 모두 **공개**하고, 주요 변경 시에는 사전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공공의 플랫폼**임을 보여준다. 또한 제도 도입 취지를 **헌법 가치 수호와 시민 권익 증진**에 맞춰 설명하여 **정당성**을 이해시키도록 한다. 국민교육 캠페인을 전개해, 자유민주주의 2.0 이 현행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자유, 평등, 법치)를 기술로 구현한 것이지 다른 이념이 아님을 강조한다.

국제적으로는 각 지역의 **문화와 환경에 맞게 현지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한 나라에서는 퀘스트 문화가馴染み 없을 수 있으므로 **용어와 방식**을 현지 정서에 맞게 변경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법률보다 관습이 중시된다면 PLS 에 **관습법 요소**를 포함하는 식이다. 유연한 현지 적응을 통해 거부감을 줄이고 **자발적 수용**을 유도한다. 또한 초기에는 강제가 아닌 **선택적 참여**로 시작해, 희망하는 개인과 지역부터 채택하고 점차 확대하는 **풀뿌리 확산 전략**을 취한다. 이를 통해 시스템이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는 변화**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도전을 단계적으로 극복해 나간다면 **자유민주주의 2.0** 을 현실에 뿌리내리는 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이미 여러 곳에서 **블록체인과 DAO** 등이 **민주주의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taejaefci.org, 작은 커뮤니티의 성공은 더 큰 사회 변화로 이어지는 밑거름이 된다.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기존 법체계 내에서 출발**하여 **법적 승인**을 얻고,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면서, **기술을 개선**하고 **사용자 기반**을 넓혀가는 과정을 거치면,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 2.0 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새로운 거버넌스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한층 강화하면서도 법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며, 장기적으로 **권위주의를 극복**하고 **글로벌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taejaefci.org

Prompt 15: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2.0의 궁극적 비전은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시작부터 궁극의 이상은 국민이 스스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었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그 이상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다. 이제 우리는 철학적 원칙으로서의 **국민 주권**을 재확인하고, 현대 사회의 도구와 환경을 활용하여 이를 현실 정치에 더욱 충실히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단순한 이상주의적 구호가 아니라, 역사와 시대 변화에 뿌리를 둔 점진적이며 현실적인 전략이다. **국민이 국가의 진정한 주인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이에 맞게 우리의 민주주의를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

대의민주주의의 역사적 필요성과 한계

현대 대부분의 국가는 대의민주주의, 즉 대표를 뽑아 정치를 맡기는 간접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해왔다. 왜 직접 민주주의가 아닌 이런 형태가 등장했고 표준이 되었을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이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와 같이 *시민 수가 적은 작은 공동체*에서는 모든 시민이 광장에 모여 직접 투표하는 민주 정치가 가능했다. 그러나 국가의 규모가 커지고 인구와 영토가 방대해지면서, *모든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ageofrevolutions.com. 즉, 근대 사회의 탄생과 함께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대표를 통한 우회로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과거에는 **정보 전달 수단의 한계와 낮은 교육·문화 수준**도 직접 민주주의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예를 들어 18~19세기까지만 해도 많은 국민이 글을 읽지 못하거나 정치 지식이 부족했기에, *선출된 엘리트 대표들이 국민을 대신해 복잡한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편이 현실적이었다 thecrimson.com. 실제로 **문맹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민주 정치가 정착하기 어려웠고**, 반대로 **국민 교육 수준과 문화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민주주의가 성공적이었다**는 역사적 경험도 있다 thecrimson.com.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대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현실적 구현 형태로 발달**해왔다.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도 한때는 오로지 직접 통치를 의미했고, 대표를 통한 통치는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여겨졌다. 18세기 프랑스의 혁명기에도 일부 사상가들은 “국민 대표가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을 정도다 ageofrevolutions.com.

그만큼 당시에는 '대표가 대신하는 민주주의'란 생소한 개념이었다. 그러나 *로베스피에르*와 같은 혁명가들은 새로운 타협점을 제시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재정의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하고,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은 대리인을 통해 한다"고 주장했다 ageofrevolutions.com. 다시 말해, **직접 하기 어려운 일만 대표에게 맡기는 것이 참된 민주 정부**라는 철학이었다. 이렇듯 대의민주주의는 "어쩔 수 없이 대표에게 맡긴 민주주의"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면서 탄생했지만, 지난 세기 동안 현실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기본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우리는 그 한계를 인식하고,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민주주의 본연의 이상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준비를 해야 한다.

시대의 변화: 직접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

21 세기에 들어선 지금, **역사적 환경은 크게 변모**하였다. 먼저, 전세계적으로 문해율과 교육 수준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다. 오늘날 선진 민주국가들의 국민은 거의 예외 없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으며, 복잡한 사회 현안을 이해하고 토론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는 국민 각자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대부분 충족되었음을 뜻한다. 과거 민주주의 발전의 제약 요인이던 문맹과 무지는 더 이상 대의제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기 어렵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은 **국민 참여의 물리적·기술적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제 중요한 국가 의제를 국민투표에 부쳐 **순식간에 수백만 표의 의견을 집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졌고, 원한다면 국민 각자가 입법 과정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한층 현실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실제로 많은 민주주의 이론가와 개혁가들은 **디지털 기술이 대표 민주주의를 보완하거나 장기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전망한다 en.wikipedia.org. 이들은 전자투표와 온라인 공론장, AI 를 통한 정책 시뮬레이션 등 새로운 도구들을 활용하면, 과거 거대 국가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던 **상시적 국민 참여 통치**도 꿈이 아니라고 말한다. 예컨대, *스위스*와 같이 이미 국민투표와 주민발의를 활발히 활용하는 나라들은 **부분적인 직접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기술 도입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en.wikipedia.org. 물론 현재 전자 민주주의(E-democracy) 실험들은 여전히 초기 단계이고, 모든 국가의 제도적 여건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시대적 흐름은 '더 많은 직접 참여'를 향하고 있다. 이제 대의민주주의라는 틀에만 안주할 필요 없이, 새로운 도구와 방법을 통해 국민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결정권을 행사하는 영역을 꾸준히 넓혀갈 수 있게 되었다.

국민주권의 헌법적 당위성과 재발견

무엇보다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주는 일은 헌법적 당위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민주 국가 헌법은 국민주권주의를 근간 원리로 삼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만 보더라도 제 1 조 2 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elaw.klri.re.kr. 이는 선언적 문구로 그쳐서는 안 되며, 국가 운영의 실제 원리로 구현되어야 할 헌법 정신이다. 그러나 현실 정치를 돌아보면, 국민이 체감하는 주권 의식은 헌법 조문이 약속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선거 때를 제외하면 국민 개개인이 국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는 제한적이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무색하게 권력이 국민에게서 멀리 떨어져 작동하는 듯한 모습도 흔하다. 이는 헌법이 요구하는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라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2.0의 추진은 바로 이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이다. 헌법이 부여한 국민주권의 권리를 형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치 권력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 다시 말해, 국민이 헌법상 주권자로서 갖는 권위를 일상적 국정 운영에서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제도를 조정함에 있어서도 헌법적 정당성을 강력히 뒷받침받는 일이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구현하는 과정이므로, 이를 반대하기 위해서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논리를 펴야 할 만큼 도덕적 우위를 갖는 의제이기도 하다. 국민주권을 되찾는 길은 단지 정치 개혁을 넘어, 헌법에 약속된 약속을 이행하는 정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2.0: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비전과 목표

자유민주주의 2.0은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하자는 비전이다. 자유민주주의 1.0이라 할 우리의 현재 시스템은 자유권 보장, 법치, 권력분립 등의 토대 위에 국민

투표로 대표를 선출하는 형태로 굳어져 왔다. 이는 지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발전해온 값진 유산이지만, 이제는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도약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2.0 이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함의*가 있다. 첫째, **기존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개선을 더해 진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 법치주의를 확고히 지키면서도, 동시에 **국민 참여와 자기 통치의 폭을 넓힘으로써** 민주주의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한다. 둘째, **새로운 시대 환경에 부합하는 민주주의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다.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고, 국민의 높은 교육수준과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21세기에 어울리는 민주주의 작동 방식*을 정립하겠다는 목표이다. 자유민주주의 2.0의 핵심 지향점은 결국 **“국민에 의한 통치”를 최대화**하는 것이다. 이는 링컨의 유명한 말처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수사(修辭)가 아닌 현실의 정치 장면에서 구현하는 일이다. 대표를 통해 우회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능하면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 결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뜻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치학자들의 견해를 빌리자면, “시민들은 자신들이 직접 법과 정책을 결정하지 않는 한, 스스로를 통치한다고 할 수 없다”는 통찰이 자유민주주의 2.0이 추구하는 방향을 잘 대변해준다 en.wikipedia.org. 결국 우리의 목표는 *민주주의의 이름에 담긴 본래 의미 — 국민이 스스로 다스린다 — 를 기술적·사회적 조건이 성숙해진 현대에 되찾아주는* 것이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실천하는 전략: 점진적이고 현실적인 접근

이러한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점진적이고도 현실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기보다는, 단계적으로 *국민 참여의 범위와 힘을 확장*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현행 법제 하에서도 도입이 가능한 **국민투표와 국민발안 제도의 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나 지역 현안에 대해 더 자주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일정 수의 국민 동의를 얻으면 국회 입법 없이도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공 사례도 축적되고 있다. 또한 **전자 민주주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일상적인 국민 의견 수렴과 숙의를 시스템화할 수 있다. 정부나 의회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온라인 공론장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AI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여론의 흐름과 근거를 파악하는 과정을 공식 의사결정 절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플랫폼은 국민 누구나 손쉽게 접근하도록 개방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충분한 정보 제공과 토론의 장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숙의민주주의*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교육과 의식 개선** 또한 중요한 전략의 한 축이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각자가 그에 필요한 시민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자신감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미디어를 통해 정치 참여에 관한 성숙한 담론을 형성하며, **일반 국민이 국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보 공개와 소통을 혁신**해야 한다. 최근 제기되는 정책들을 보면 전문 용어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술을 활용하면 복잡한 정책 정보를 *시각화*하고 *시뮬레이션*하여 **국민이 정책 결정의 함의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도 가능하다 noemamag.com noemamag.com. 다시 말해, **기술과 참여 제도의 결합으로 국민의 정치적 판단 능력을 보조**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들이 국정 참여에 자신감을 가지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점진적 접근은 *안정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소규모 참여 실험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범위를 넓혀나가면,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 없이 체질 개선을 이룰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재의 대표 제도와 새로운 직접 참여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국민 참여가 활성화되더라도 국회와 정부의 전문성, 조정 기능은 여전히 유용할 것이다. 대신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영역에서만 *대표자들도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없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대표자들조차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집행하는 대리인으로 역할이 축소**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는 현재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재설계*되고, 국민과 대표 간의 주종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어 **국민이 실질적 결정권을 쥐고 대표**는 이를 **보좌하는 체제**로 개편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변화는 작게는 지방자치단체부터 크게는 국가 단위까지 단계별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민주 공화국을 향하여: 사고의 전환을 촉구하며

결국 자유민주주의 2.0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뿐 아니라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국민이 국가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왔지만,

이제는 이를 **구체적 현실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혁명**이 요구된다. 국민 각자가 스스로를 국가의 **주권자**로 여기고, 정치인이나 관료는 그 주권자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은 궁극적으로 “국민이 허락한 만큼만 통치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모든 공직자들에게 심어줄 것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력감*을 떨쳐내고, **내가 곧 국가의 주권자이며 변화의 주체**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 2.0의 토대가 마련된다. 이제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초심으로 돌아가 물어보아야 한다. *과연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일은 새로운 혁명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를 완성하는 과정이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시대다. 기술과 교육, 모든 면에서 과거 어느 시대보다 국민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이 성숙했다. 더 이상 국민은 *4년에 한 번 투표하고 잠잠히 있는 존재*가 아니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365일 누릴 자격이 있으며, 국가는 그것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자유민주주의 2.0은 *미래의 요원한 이상*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과제*다. 우리 앞에는 **주인의 자리**를 되찾을 기회가 놓여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수사가 아닌 현실이 되도록 만들 책임이 현세대에게 주어졌다. 결론적으로,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주는 것**,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2.0의 궁극적 목표이며 우리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국민이 국가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인공이 되는 역사*, 그 거대한 전환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사명이다. 이제는 누구나 마음 속에 각인해야 할 때다. **우리가 국가의 주인이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 말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고 있다.